



전략연구 2021-12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평가 및 대응과제 연구

박경철 · 김용현 · 전지훈 · 고승희 · 임다정

연구 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사회양극화란 사회적 자원과 가치관이 양극단으로 확대되고 고착화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사회의 갈등과 불안, 나아가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사회양극화 문제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렵고도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한국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저출생 문제 또한 사회양극화의 직접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은 젊은 부부에게 많은 경제적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 일자리부족, 저임금, 불안한 노동,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회불평등의 핵심은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 원인은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경제가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노동소득보다는 자산소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의 불평등이 사회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정책 대안들이 논쟁되고 있지만 합리적 방안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다. 국내외에서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UBS: universal basic income), 초과이득공유제(사회연대세), 기본자산제(생애주기별지원금), 국토보유세, 주4일근무제,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서비스(UBS: universal basic service), 상병(傷病)수당,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충남도는 민선7기 들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를 우리사회의 3대 핵심위기로 보고 이들 문제 해결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민선7기 충남도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사회의 3대 위기는 결국 사회양극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해 2020년부터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는 2021년 2월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분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 등의 명확한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주요 정책사례의 내용과 쟁점 분석,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사회양극화 정책 선호도 분석 등을 통해 충남도 차원의 새로운 정책 도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1) 연구 방법

(1) 문헌분석 및 통계자료 분석

사회양극화 관련 문헌분석을 통해 사회양극화의 개념, 이론, 연구동향을 분석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관련 각종 통계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실태 및 심각성을 제시했다.

(2) 국내외 사례조사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국내외 정책 사례조사를 조사했다. 특히 국내외 사회양극화 해결의 정책사례조사를 통해 충남도에 시사점 및 적용 방법을 제시했다.

(3) 설문조사

가. 도민 대상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충청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양극화에 대한 인식정도, 정책 평가, 우선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021년 6월 15일부터 7월 14일(1개월)까지 이뤄졌고 대상인원은 총 1,050명이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충청도민 대상 사회양극화 설문조사 내용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사회양극화 인식 정도	•사회양극화의 개념 •우리사회 양극화 정도 •우리사회 양극화 정도 •충남도 양극화 정도	
사회양극화 심각 부문	•소득 •자산 •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지역 •기타	
사회양극화 원인 및 배경	•임금 격차 •사회보장체계 미흡 •불안한 노동 증가 •부동산불평등 •연공서열 •교육불평등 •과학기술 및 지식격차 •수도권 위주 발전 •농촌 차별 •문화불균형 •세대 격차	
최근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소득보장부문 •사회보장부문 •부동산 및 주거부문 •일자리 및 사회혁신부문 •교육문화부문 •지역균형발전부문	부문별 3~7개 정책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중앙정부 우선 정책 •충청남도 우선 정책 •증세정책 동의 여부 •초과이익공유제 동의 여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개방형 질문	자유 서술
개인정보	•성별 •나이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계층의식 •정치성향 •거주유형 •주택유형 •거주 지역	

나. 도정평가단 대상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사회양극화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 등을 수렴하고자 도민 평가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021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16일간)까지 이뤄졌다. 대상인원은 총 183명이었고, 그 중 응답자는 84명이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충남도 도민평가단 대상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무상정책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 7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도서민 여객선 운임 무료화	
수당지급정책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농어민수당	
공제지원정책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주택지원정책	충남형 더행복주택(출산에 따라 임대료 감면 내지 면제)	

(4) 자문회의 및 FGI조사

①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사회양극화,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역개발 등 양극화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양극화관련 정책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될 만한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분석대상 정책을 도출했다.

②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의 실현 방안을 위한 서면 FGI 조사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을 크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 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충청남도에서의 실현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해 조사했다. 조사는 2021년 7월 5일에서 19일(2주간) 까지 실시했다.

③ 충청남도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를 위한 도민평가단 대상 FGI조사

충청남도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에 관한 서면 설문조사 이후 추가논의를 위해 5명의 도민평가단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주요 사회양극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조사했다.

(4) 핵심주제 콜로키움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도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와 관련한 정책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충청남도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5차례의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2) 연구 범위

(1) 내용적 범위

사회과학 영역에서의 양극화는 보통 사회양극화, 경제양극화, 정치양극화(이념 등)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양극화를 중심으로 하되 주요범위를 소득보장, 사회보장, 사회혁신, 지역균형발전 등의 영역을 다뤘다.

(2)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주요 범위로 하되 일부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다.

3. 연구 결론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양극화에 관해 개념, 원인, 양태, 정책,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과 세부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 설정은 크게 1)기본소득 보장, 2)사회보장 강화, 3)일자리 및 사회 혁신, 4)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5)부동산 및 주거 안정 등 5개 분야이다. 각 분야별 세부 정책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대응과제

기본 방향	대응과제	세부 대응과제(방안)
기본소득 보장	청년기본소득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과 서울형 청년수당을 검토 후 실시
	아동(육아)기본소득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확대
	농어민기본소득	충남도 농어민수당 확대(액수 증대, 개별 지급)
	농어촌주민기본소득	면지역부터 시범실시 후 확대
사회보장 강화	기초연금 보완	기초연금 감액분 보완(기초연금플러스사업)
	상병(傷病)수당 지급	본인 부담+지자체(시군+도) 부담 방식으로 실시
	청년사회진출금 지급	①시 3000만 원, 군20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②통장활용방식: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원 불입 시 지자체에서 640만 원 매칭해 총 1000만원 지급
	도민 고용보험제 실시	우선은 충남도 영세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일자리 및 사회 혁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형 일자리를 모델로 충남형 일자리 개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강화
	주4일근무제 실시	①공공부문 주4일근무제 정규직 채용
		②주4일근무제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①지자체 주도 리쇼어링(reshoring) 기업 유치
		②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①공동체활동 지원 중간지원조직 설립
		②공동체활동모임 공간 조성
		③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사업 지원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도립대 전액 학비 면제 및 생활비 지원
	방과후 학교 정부책임제	①지자체 방과후 학교 운영센터 운영
		②학교 및 마을돌봄센터 지원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①온종일 돌봄서비스 구축
		②학교밖 청소년의 학습 및 직업 지원
		③소외계층 직업프로그램 무상지원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①무조건적인 농촌학교 폐교 지양
		②농촌학교 전문교사 육성
		③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운영 지원
	문화·여가 기회 확대	①주민참여형 문화여가단체 육성
		②충남도 문화여가 최소기준 설정
부동산 및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①토지임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②충남형 더행복주택 확대
	청년주택 확대	①창업+거주형 오피스텔 제공
		②청년쉐어하우스 확대
		③전월세 임대료 지원

4.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정책분석, 설문 조사와 인터뷰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정책 중에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책도 있고 현재 충남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도 있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위주로 논의하고자 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만큼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정책을 같이 검토하고 향후 충남도 차원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정책들 가운데에는 기본소득(청년, 아동, 농어민, 농어촌주민), 기초연금 확대, 상병(傷病)수당제, 청년사회진출금 지급(청년기본자산제), 주4일근무제 도입 등 새로운 정책 제안도 있고 일자리와 사회혁신, 교육과 문화 부문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제시된 정책과제가 많다보니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 사실 앞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충남도에서 사회양극화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보니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소개 단계로 그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중요 정책 제시가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양극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책을 검토해 충남도에서 실행이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정책과제가 많다보니 정책의 중요도와 선명성은 미흡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에 대한 예산문제는 제외되어 실행 가능성 판단이 어렵다. 정책과제별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시하면 사업의 실행력을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 추계가 어려운 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정책과제가 실행이 된다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본질적인 정책과제 제시는 미흡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제시했듯이 현재 사회양극화의 핵심 원인은 자산과 부동산 불평등이다. 특히 부동산 불평등은 어느 불평등에 앞서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는 사회양극화 해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토지)과 조세 문제는 사회양극화 해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도 차원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1) 연구 방법	4
2) 연구 범위	8
4. 연구 분석틀 및 흐름	9
5. 타 연구와의 차별성	10
제2장 사회양극화 개념 및 특성	11
1. 개념 정의 및 의의	11
2. 사회양극화의 원인 및 특징	12
1) 사회양극화의 배경	12
2) 국내 사회양극화의 배경	15
3) 국내 사회양극화의 특성	16
4) 서구 사회양극화 배경과 특성	19
3. 사회양극화 연구의 쟁점 및 과제	24
1) 양극화 개념에 대한 연구의 쟁점	24
2) 사회 양극화의 발생 원인과 영향	25
3) 서구 사회양극화 연구의 쟁점 및 과제	25
4. 사회혁신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27
1) 사회혁신정책의 필요성과 개념화	27
2) 사회혁신의 요인과 주체	29
3) 국외 사회혁신 정책 동향	32

제3장 최근 사회양극화 대응 정책 동향 분석	33
1. 사회보장정책	33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021년)	33
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33
3)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 단계적 폐지	34
4)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	35
5) 전 국민 고용보험의 등장	36
6) 영아수당제도 도입	37
7)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37
2. 소득분배정책	38
1)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39
2) 기본(기초)자산제	40
3) 초과이익공유제	41
4) 국토보유세	41
3. 사회혁신의 정책동향	43
1) 사회혁신 지원정책	43
2)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45
3) 지역 공동체 지원 정책	49
4) 사회적금융 지원 정책	53
5) 공유경제 지원 정책	55
제4장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및 평가	58
1. 충남도 사회양극화 특징 및 정책 동향	58
1) 시도별 소득격차 현황	58
2) 충남도 사회양극화 특징	62
2.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과정 및 주요 정책	65
1)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과정	65
2)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 주요 정책	66
3. 충남도 주요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68
1) 평가 개요	68
2) 평가 결과	70
3) 요약 및 시사점	85

제5장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89
1.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개요	89
2.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분석	90
1) 응답자 일반특성	90
2) 사회양극화에 관한 인식	93
3)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선호도	112
4)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146
3. 요약 및 시사점	156
제6장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도 대응과제	158
1. 기본 방향	158
2. 부문별 대응 과제	161
1) 기본소득 보장	161
2) 사회보장 강화	167
3) 일자리 및 사회 혁신	177
4) 교육·문화 기본권 강화	191
5) 부동산 및 주거 안정	208
3. 부문별 세부 실행방안	214
1) 기본소득 보장 부문	214
2) 사회보장 강화 부문	215
3) 일자리 및 사회 혁신 부문	217
4)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부문	220
5)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부문	223
제7장 결론 및 과제	225
1. 연구 요약	225
2. 결론	229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234
참고문헌	236

부록	240
부록1. 사회양극화에 관한 충남도민 설문지	241
부록2. 사회양극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표	250
부록3.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평가 조사표	258
부록4. 사회양극화에 관한 충남도민 설문결과표	264
부록5. 사회양극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388

표 목 차

〈표 1〉 충남도민 대상 사회양극화 설문조사 내용	5
〈표 2〉 충남도 도민평가단 대상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내용	5
〈표 3〉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실현을 위한 전문가 FGI 조사 내용	6
〈표 4〉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도출을 위한 핵심주제 콜로키움 내용	7
〈표 5〉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의 개념적 비교	28
〈표 6〉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의 개념적 비교	29
〈표 7〉 사회혁신 개념의 구성요소	30
〈표 8〉 사회적경제 관련 최근 주요 정부계획	47
〈표 9〉 정부부처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48
〈표 10〉 중앙부처의 공동체 관련 지원사업의 현황	50
〈표 11〉 충청남도 공동체정책의 현황(2021년 기준)	51
〈표 12〉 충남의 사회적기금 예산확보 및 집행	54
〈표 13〉 충남 도·시군 주요 공유경제 정책사업 현황	57
〈표 14〉 시도별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가구소득 순위(2019년)	60
〈표 15〉 충남도 민선7기 사회양극화 대응 정책 추진 과정	65
〈표 16〉 충남도 민선7기 사회양극화 대응 중요 사업 및 성과	67
〈표 17〉 응답자 특성	69
〈표 18〉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평가	70
〈표 19〉 고등학교·특수학교 친환경무상급식 평가	70
〈표 20〉 친환경무상급식 대학교/복지시설 확대 의견	71
〈표 21〉 중학교 무상교복 평가 및 고등학교 무상교복 확대 의견	72
〈표 22〉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평가	72
〈표 23〉 65세~70세 버스비 무료화 의견	73
〈표 24〉 도서민 여객선 운임 무료화 평가	73
〈표 25〉 충남도 무상정책에 대한 의견	74
〈표 26〉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지급 평가	75
〈표 27〉 행복키움수당 지급 기간 확대 의견	75
〈표 28〉 농어민수당 지급	76
〈표 29〉 농어민수당 확대 의견	76
〈표 30〉 충남도 수당지급정책에 대한 의견	78
〈표 31〉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평가	79

〈표 32〉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의견	79
〈표 33〉 충남도민 안전보험 의견	80
〈표 34〉 충남도 공제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81
〈표 35〉 더행복주택사업 평가	82
〈표 36〉 더행복주택사업 확대 의견	82
〈표 37〉 충남도 주택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84
〈표 38〉 충남도민 대상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개요	89
〈표 39〉 응답자 일반특성1	90
〈표 40〉 응답자 일반특성2	92
〈표 41〉 사회양극화 의미(복수응답)	94
〈표 42〉 현재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	96
〈표 43〉 5년 전 대비 현재 사회양극화 정도	99
〈표 44〉 현재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도	102
〈표 45〉 개인 노력 시 계층이동(사회적 지위 이동) 가능성	105
〈표 46〉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10점 척도)	108
〈표 47〉 우리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복수응답)	101
〈표 48〉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소득보장정책 부문	116
〈표 49〉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사회보장 부문	122
〈표 50〉 부동산·주거부문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126
〈표 51〉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132
〈표 52〉 교육·문화부문 사회양극화 해소정책(5점 척도)	138
〈표 53〉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144
〈표 54〉 사회양극화 해소 위해 충남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_(복수응답)	148
〈표 55〉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과제	160
〈표 56〉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도입 형태	166
〈표 57〉 인천시「드림 for 청년통장」 지원내용	174
〈표 58〉 행안부 마을기업 지원 주요 정책	189
〈표 59〉 기본소득 보장 부문 세부 실행방안	215
〈표 60〉 사회보장 강화 부문 세부 실행방안	217
〈표 61〉 일자리 및 사회 혁신 부문 세부 실행방안	219
〈표 62〉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부문 세부 실행방안	222
〈표 63〉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부문 세부 실행방안	224
〈표 64〉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대응과제	223
〈표 65〉 표본 특성표	264
〈표 66〉 사회양극화 의미(복수응답)	266

〈표 67〉 현재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	268
〈표 68〉 5년 전에 비해 현재 사회양극화 정도	270
〈표 69〉 현재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도	272
〈표 70〉 개인 노력시 계층이동(사회적 지위 이동) 가능성	274
〈표 71〉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1)소득(근로소득)	276
〈표 72〉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2)소득(연금)	278
〈표 73〉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3)일자리(정규직과 비정규직)	280
〈표 74〉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4)일자리(대기업과 중소기업)	282
〈표 75〉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5)부동산(소유)	284
〈표 76〉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6)자산(현금, 주식 등)	286
〈표 77〉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7)교육	288
〈표 78〉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8)문화·여가	290
〈표 79〉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9)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	292
〈표 80〉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10)지역(도시와 농촌)	294
〈표 81〉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평균 table)	296
〈표 82〉 우리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복수응답)	298
〈표 83〉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300
〈표 84〉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청년기본소득 지급	302
〈표 85〉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근로장려금 확대	304
〈표 86〉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농어민기본소득 확대	306
〈표 87〉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최저임금 인상	308
〈표 88〉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310
〈표 89〉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	312
〈표 90〉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연금간 격차 완화	314
〈표 91〉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아동수당 확대	316
〈표 92〉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전국민 상병(傷病)수당 지급	318
〈표 93〉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청년사회진출금 지급	320
〈표 94〉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6)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322
〈표 95〉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324
〈표 96〉 부동산/주거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토지보유세 강화	326
〈표 97〉 부동산/주거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공공임대주택 확대	328
〈표 98〉 부동산/주거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청년주택 확대	330
〈표 99〉 부동산/주거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332
〈표 100〉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34
〈표 101〉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336

〈표 102〉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주4일근무제 실시	338
〈표 103〉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340
〈표 104〉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342
〈표 105〉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6)경제적 희생 지원 확대	344
〈표 106〉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346
〈표 107〉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348
〈표 108〉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	350
〈표 109〉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352
〈표 110〉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354
〈표 111〉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356
〈표 112〉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358
〈표 113〉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6)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360
〈표 114〉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국회·공공기관 지방 이전	362
〈표 115〉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	364
〈표 116〉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366
〈표 117〉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	368
〈표 118〉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370
〈표 119〉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372
〈표 120〉 사회양극화 해소위해 중앙정부 가장 먼저 해야할 일 (복수응답)	374
〈표 121〉 사회양극화 해소위해 충남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_(복수응답)	376
〈표 122〉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 가능성	378
〈표 123〉 양극화 해소위해 증세 필요성 동의정도	380
〈표 124〉 (증세 동의 시) 자신이 다소 손해 보더라도 양극화 해소위해 증세한다면 동의정도	382
〈표 125〉 심각한 양극화 해소위해 가장 많이 양보해야 할 계층	384
〈표 126〉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수익 일부를 기부(초과이익공유제)해 지역상생기금으로 활용에 동의정도	386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분석틀 및 진행 흐름도	9
[그림 2] 국민소득 중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	13
[그림 3] 토지 소유법인 백분율	18
[그림 4] 사회혁신의 개념적 맥락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	43
[그림 5] 2000년~2019년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변화	58
[그림 6] 2000년~2019년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지역총소득 변화	59
[그림 7] 2000년~2019년 시도별 가구소득 지역총소득 변화	60
[그림 8] 시도별 사회복지비 비율(2020년)	61
[그림 9] 충남 15개 시군의 GRDP 비중(2016년 기준)	62
[그림 10] 충남의 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2018년 기준)	63
[그림 11] 1분위 대비 10분위 배율(상위 10%와 하위 10%)	63
[그림 12] 충청남도 중산층비율(중위소득의 50%~150% 미만)	64
[그림 13]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전과 전략	66
[그림 14] 충남도 무상정책 평가 및 의견(5점 척도)	85
[그림 15] 충남도 수당지급 정책 평가 및 의견(5점 척도)	86
[그림 16] 충남도 공제지원정책 평가 및 의견(5점 척도)	87
[그림 17] 충남도 주택제공정책(충남형 더행복주택) 평가 및 의견(5점 척도)	87
[그림 18] 사회양극화 의미(복수응답)	93
[그림 19]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	95
[그림 20] 5년 전 대비 사회양극화 정도	98
[그림 21]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도	101
[그림 22] 계층 이동(사회적 지위 이동) 가능성	104
[그림 23] 부문별 사회양극화 인식 정도	107
[그림 24]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	109
[그림 25] 전국민 기본소득제(개인별 월 30만 원)	114
[그림 26] 청년기본소득 지급(예: 월 10만 원)	114
[그림 27] 근로장려금 확대(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 지급)	114
[그림 28] 농어민기본소득 확대(예: 월 10~20만 원)	114
[그림 29] 최저임금 인상(1시간당 1만 원 이상)	114
[그림 30] 소득보장부문 정책선호도	115
[그림 31] 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예: 월 30만 원→50만 원)	120

[그림 32] 연금 간 격차 완화(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	120
[그림 33] 아동수당 확대(예: 월 10만 원→30만 원)	120
[그림 34] 전 국민 상병(傷病)수당 지급(부상과 질환으로 일을 못할 경우 적정 수당지급)	120
[그림 35] 청년사회진출금 지급(1억 원 정도 일시 지급)	120
[그림 36]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임시직, 플랫폼노동직, 농어민 등)	120
[그림 37] 사회보장부문 정책선택도	121
[그림 38] 토지보유세 강화(세율 인상 확대)	124
[그림 39] 공공임대주택 확대	124
[그림 40] 청년주택 확대(청년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 등)	124
[그림 41] 부동산·주거부문 정책 선택도	125
[그림 4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30
[그림 43]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130
[그림 44] 주4일 근무제 실시(일자리 나눔 목적 등)	130
[그림 45]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130
[그림 46]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130
[그림 47] 경제적 희생 지원 확대(취약계층 부채 탕감)	130
[그림 48] 일자리·사회혁신부문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131
[그림 49]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136
[그림 50] 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	136
[그림 51]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136
[그림 52]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136
[그림 53] 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136
[그림 54]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136
[그림 55] 교육·문화부문 사회양극화 정책선택도	137
[그림 56] 국회·공공기관 지방 이전	142
[그림 57] 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	142
[그림 58] 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142
[그림 59]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142
[그림 60]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실시	142
[그림 61]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143
[그림 62]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중앙정부의 우선 정책(복수응답)	146
[그림 63]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충청남도의 우선 정책(복수응답)	147
[그림 64] 우리 사회양극화 해소 가능성	149
[그림 65] 부문별 사회양극화 해소 가능성(5점 척도)	150
[그림 66]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증세 필요성 동의 정도	151

[그림 67] 부문별 양극화 해소 위해 증세 필요성 동의정도	152
[그림 68] 자신은 다소 손해이지만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증세 동의 정도	153
[그림 69] 심각한 사회양극화 해소 위해 가장 많이 양보해야 할 계층	154
[그림 70] 대기업 초과이익의 지역상생기금 활용 동의 정도	155
[그림 71] 부문별 대기업 초과이익의 지역상생기금 활용 동의 정도	155
[그림 72] 충청남도 사회양극화 대응과제 기본방향	159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사회양극화란 사회적 자원과 가치관이 양극단으로 확대되고 고착화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사회의 갈등과 불안, 나아가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사회양극화 문제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렵고도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 한국 사회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사회양극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 사회양극화(일명 K-양극화)는 짧은 기간 내에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소득집중도가 세계 최고수준에 달해 중산층 이하 계층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2014년 처음으로 발표된 OECD 국가 중 한국의 소득불평등 결과를 보면, 상위 1% 소득점유율에서 한국은 12.23%로 미국 19.34%, 영국 12.93% 다음인 3위를 차지했다. 상위 10% 소득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44.87%로 미국 48.16% 다음을 차지했다.¹⁾

사회양극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현재 미국과 서구 유럽, 동아시아 국가 등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양극화는 보편적이고 안정적 사회보장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급격한 추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이혼율, 노인빈곤율, 최장의 노동시간 등의 악성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저출생 문제 또한 사회양극화의 직접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은 젊은 부부에게 많은 경제적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 일자리부족, 저임금, 불안한 노동, 치솟는 부동산가격 등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8년 30대 남성 임금근로자 혼인율 중 상위 10%와 하위 10%는 각각 92%와 57%였으나 2018년에는 86.3%와 20.3%로 격차가

1) 우리나라 소득집중도 중 소득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1996년 35.0%에서 2016년 43.3%로 10년 사이에 8.3%p가 증가했다. 소득 상위 1%의 소득집중도도 같은 기간에 7.8%에서 12.2%로 3.4%p 증가했다.

크게 확대되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저소득층이 확대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단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19의 충격은 우리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더욱 감소한 이유도 이러한 사회양극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선진국 평균 약 1.6)이었는데 이후 2019년 0.92, 2020년 0.84로 계속 감소했다. 신생아 수를 보면, 2019년에는 30만27000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27만2400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사회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불평등의 핵심은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 원인은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경제가 저성장으로 접어들면서 노동소득보다는 자산소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의 불평등이 사회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정책 대안들이 논쟁되고 있지만 합리적 방안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다. 국내외에서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UBS: universal basic income), 초과이득공유제(사회연대세), 기본자산제(생애주기별지원금), 국토보유세, 주4일근무,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서비스(UBS: universal basic service), 상병(傷病)수당,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다. 현재까지 지방정부에서는 특정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부분적(범주형) 기본소득이 실시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기본소득 성격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향후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유지 및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다. 이와 함께 최근 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 담론과 활동들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 전반의 미시적 차원에서 지역의 사회적 구조와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주민을 비롯한 주체 중심의 풀뿌리 활동 확산에 정책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는 자산불평등이고 자산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사회에서 토지 소유자들 가운데 상위 10%가 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의 지니계수가 0.811 (2019년)일 정도로 부동산 불평등도가 사회양극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마다 인식과 가치관이 다르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매우 복잡한 법과 제도가 얹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불평등에 관한 정책 수립이 어렵기도 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충남도는 민선7기 들어 저출산(생), 고령화, 양극화를 우리사회의 3대 핵심위기로 보고 이들 문제 해결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저출산(생), 고령화, 양극화 등 민선7기 충남도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사회의 3대 위기는 결국 사회양극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해 2020년부터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는 2021년 2월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분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 등의 명확한 의견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주요 정책사례의 내용과 쟁점 분석,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사회양극화 정책 선호도 분석 등을 통해 충남도 차원의 새로운 정책 도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양극화에 관한 충청도민의 인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도민이 요구하는 정책 위주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경제적, 산업적 관점보다는 사회보장, 사회혁신, 교육과 문화 기본권 보장, 부동산 및 주택 보장 관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연구 대상 및 내용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양극화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방법

(1) 문헌분석 및 통계자료 분석

사회양극화 관련 문헌분석을 통해 사회양극화의 개념, 이론,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불평등과 양극화 관련 각종 통계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실태 및 심각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사례조사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국내외 정책 사례조사를 조사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외 사회양극화 해결의 정책사례조사를 통해 충남도에 시사점 및 적용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설문조사

가. 도민 대상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충청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양극화에 대한 인식정도, 정책 평가, 우선 정책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021년 6월 15일부터 7월 14일(1개월)까지 이뤄졌고 대상인원은 총 1,050명이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 표 1〉 충남도민 대상 사회양극화 설문조사 내용

구분	세부 내용	비고
사회양극화 인식 정도	•사회양극화의 개념 •우리사회 양극화 정도 •우리사회 양극화 정도 •충남도 양극화 정도	
사회양극화 심각 부문	•소득 •자산 •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지역 •기타	
사회양극화 원인 및 배경	•임금 격차 •사회보장체계 미흡 •불안한 노동 증가 •부동산 불평등 •연공서열 •교육 불평등 •과학기술 및 지식격차 •수도권 위주 발전 •농촌 차별 •문화 불균형 •세대 격차	
최근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소득보장부문 •사회보장부문 •부동산 및 주거부문 •일자리 및 사회혁신부문 •교육문화부문 •지역균형발전부문	부문별 3~7개 정책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중앙정부 우선 정책 •충청남도 우선 정책 •증세정책 동의 여부 •초과이익공유제 동의 여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개방형 질문	자유 서술
개인정보	•성별 •나이 •직업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계층의식 •정치성향 •거주유형 •주택유형 •거주 지역	

나. 도정평가단 대상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사회양극화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 등을 수렴하고자 도민평가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021년 9월 23일부터 10월 8일(16일간)까지 이뤄졌고 대상인원은 총 183명이었고, 그 중 응답자는 84명이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 표 2 〉 충남도 도민평가단 대상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무상정책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 7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도서민 여객선 운임 무료화	
수당지급정책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농어민수당	
공제지원정책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주택지원정책	충남형 더행복주택(출산에 따라 임대료 감면 내지 면제)	

(4) 자문회의 및 FGI조사

①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사회양극화,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지역개발 등 양극화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양극화관련 정책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될 만한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분석대상 정책을 도출했다.

②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의 실현 방안을 위한 서면 FGI 조사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을 크게 3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 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충남도에서의 실현 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해 조사했다. 조사는 2021년 7월 5일에서 19일(2주간)까지 실시했다. 그룹별 정책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3 〉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실현을 위한 전문가 FGI 조사 내용

구분	부문	정책 내용
1그룹	①소득보장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예: 개인별 월 30만 원) ②청년기본소득 지급(예: 월 10만 원) ③근로장려금 확대(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 지급) ④농어민기본소득 확대(예: 월 10~20만 원) ⑤최저임금 인상(1시간당 1만 원 이상)
	②사회보장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예: 월 30만 원→50만 원) ②연금 간 격차 완화(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 ③아동수당 확대(예: 월 10만 원→30만 원) ④전국민 상병(傷病)수당 지급(부상과 질환으로 일을 못할 경우 적정 수당 지급) ⑤청년사회진출금 지급(1억 원 정도 일시 지급) ⑥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시(임시직, 플랫폼노동자, 농어민 등)
2그룹	③일자리·사회 혁신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②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③주4일근무제 실시(일자리 나눔 목적 등) ④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⑤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⑥경제적 희생 지원 확대(취약계층 부채 탕감)

	④교육·문화정책	①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②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 ③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④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⑤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⑥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3그룹	⑤부동산·주거 정책	①토지보유세 강화(세율 인상 확대) ②공공임대주택 확대 ③청년주택 확대(청년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 등)
	⑥지역균형발전 정책	①국회·공공기관 지방 이전 ②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 ③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④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⑤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월 5~10만원)

주: 기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도 병행 조사됨

③ 충청남도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를 위한 도민평가단 대상 FGI조사

충청남도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에 관한 서면 설문조사 이후 추가논의를 위해 5명의 도민평가단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주요 사회양극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조사했다.

(4) 핵심주제 콜로키움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도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와 관련한 정책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충청남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5차례의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5차례 콜로키움은 다음 [표 4]와 다.

〈 표 4 〉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도출을 위한 핵심주제 콜로키움 내용

구분	주제(전문가)	시기
1차	토지불로소득과 토지단일세(박○수)	2021년 5월
2차	부동산 불평등과 국토보유세(남○엽)	2021년 5월
3차	노동시장 불평등과 해결 방안(최○현)	2021년 6월
4차	사회불평등과 사회보장제도 개편(이○섭)	2021년 6월
5차	사회적경제와 자산공유화(전○호)	2021년 6월

2) 연구 범위

(1) 내용적 범위

사회과학 영역에서의 양극화는 보통 사회양극화, 경제양극화, 정치양극화(이념 등)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양극화를 중심으로 하되 주요범위를 소득보장, 사회보장, 사회혁신, 지역균형발전 등의 영역을 다룬다.

(2)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주요 범위로 하되 일부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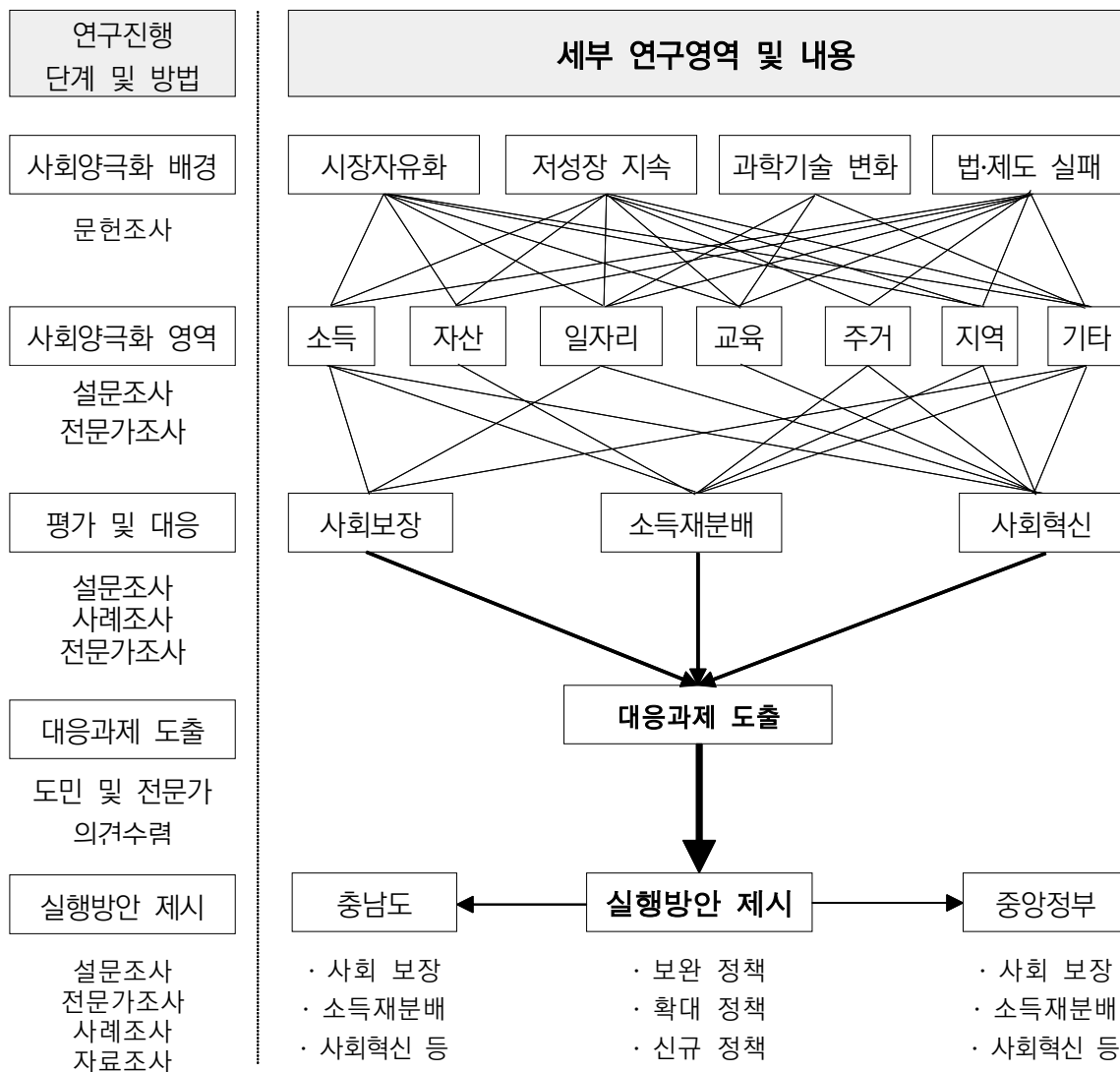
(3) 시간적 범위

중기, 장기 정책으로 나본 연구는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난이도에 따라 단기,뉘 제시한다.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일지라도 사회양극화 해소에 방향성이 옳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다.

4. 연구 분석틀 및 흐름

본 연구는 사회양극화 배경을 크게 시장자유화, 저성장 지속, 과학기술 변화, 법·제도 실패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득, 자산, 일자리, 교육, 주거, 지역 등의 영역으로 분석한다. 또한 연구는 사회양극화 배경, 사회양극화 영역, 사회양극화 대응, 비전 및 목표 설정, 전략 및 과제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눠 진행한다. 본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분석틀 및 진행 흐름도



5. 타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타 연구에 비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 번째는 민선 7기 충청남도 사회양극화 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그동안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사회양극화 정책을 펼쳐 왔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없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도민평가단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주요 사회양극화 정책을 평가했다.

두 번째는 사회양극화 실태와 해소정책에 대한 충남도민의 객관적 인식과 평가이다. 그동안 충청남도 사회양극화 관련한 연구는 있었지만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양극화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해소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민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했다.

세 번째는 비교적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해소정책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은 물론, 상병(傷病)수당, 주4일근무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청년 사회진출금(청년기초자산제) 등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고 충남도에서의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제2장 사회양극화 개념 및 특성

1. 개념 정의 및 의의

양극화(polarization)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된다. 남찬섭(2006)은 양극화의 개념은 사실상 잘 정의되어 있지만 많은 논의들이 양극화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불평등이나 빈곤심화를 양극화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polarization)는 기본적으로 특정 값의 분포가 집락화 하는지와 관련된 변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값의 불평등한 분포 자체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했다.

남기철 외(2006)는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상대적 빈곤의 심화에 따른 경제적 조건의 불평등이나 박탈이 심화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경제적 영역에만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개인, 가족, 집단, 이웃, 주거, 시민권, 고용 등과 같은 사회적 기회와 주요한 사회적 과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다차원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구조화되어 사회적 기능수행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세대 간으로 전승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양극화는 경제적 조건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여러 조건들과의 단절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이러한 고립이 고착화되어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문조(2008)도 양극화란 사회적 자원이 이원적으로 편중되어 고착된 상황을 의미하며 결국 사회가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들로 양분되고 그들 상호 간에 물질, 정신적 소통이 단절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김성근, 2014 재인용).

결국 양극화(polarization)는 그 대상에 따라 다른 함의를 갖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집단이 서로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원식, 2013; 장한익·최울, 2006; 김성근, 2014 재인용). 나아가 경제적 혹은 사회적 양극화란 어떤 경제적(흔히 소득 혹은 소비), 또는 사회적(교육, 주거, 고용)인 측면에서 한 사회 내부를 바라볼 때 중간층이 소멸하고 상층과 하층이 분리되고 분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양극화에 대한 개념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양극화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사회양극화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 사회양극화의 개념

사회적 자원과 가치관이 양극단으로 편중되고 고착된 상태, 또는 그렇게 진행되는 상태를 뜻한다. 이로 인해 빈부 격차 심화, 사회계층 이동의 단절, 이념 간 대결 격화, 사회 불안정 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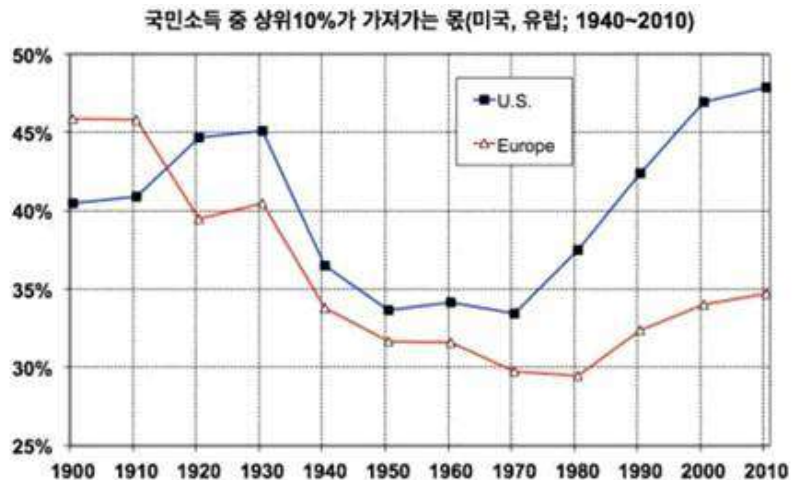
2 사회양극화의 원인 및 특징

1) 사회양극화의 배경

불평등과 양극화는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 100년 동안 서구 주요국가의 소득 세 자료를 통해 불평등을 연구한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저서 <21세기 자본>은 보면, 대략 19세기 초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불평등이 심했다. 그 후 불평등과 양극화는 완화를 보이다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는 1980년대 무렵부터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특히 미국의 불평등 수준은 19세기 초반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자본의 수익률(r)이 노동 소득 수익률(g)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인구증가의 둔화 등의 원인으로 낮아짐에 따라 노동소득의 수익률은 낮아지는 반면 자본소득(주식, 부동산, 채권 등)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r 과 g 의 갭이 계속 커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본소득을 한번 획득한 사람들은 그들의 부를 자식세대로까지 증여를 하면서 부의 대물림, 즉 세습자본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케티가 지적했듯이 이것이 현재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국민소득 중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

출처: 토마 피케티(장경덕 외 역). 2014. 21세기 자본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 배제(social and economic exclusion)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김흥중 외, 2005). 소득분포의 양극화는 저소득층이 소득순환체계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산업 간, 기업 간, 지역 간 양극화는 각각 저부가가치 전통산업, 중소기업, 침체지역에 속하는 사회구성원이 그 사회의 선 순환적 경제체제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과정을 의미한다. 경제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경제 내에서 특정 부문에 대한 구조적인 소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극화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일까? 선진국에서 1970년대 이후 양극화가 진전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 주요한 원인은 무역자유화, 기술변화, 자본자유화, 고령화,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김흥중 외, 2005).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선진국에서 단순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둘째, 기술의 급격한 진보는 개인 또는 경제의 신기술 적응도에 따라 양극화를 유발한다. 셋째,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선진국 내 자본자유화는 자본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자본자유화의 확산은 개발도상국의 양극화를 양산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와 대규모 실업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어렵게 한다.

남기철 외(2006)는 사회양극화는 빈곤문제의 심각성, 특히 상대적 빈곤 관점에서의 빈곤문제에 대한 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남찬섭(2006)은 우리사회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심각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양극화 문제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남찬섭에 의하면 양극화의 원인은 세 가지이다. 첫째,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둘째,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 및 고용인프라 등 사회안전망 미흡과 같은 구조적 요인, 셋째, 내수부진 등의 경기적 요인이다. 이들 세 가지 양극화 요인 중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와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은 양극화를 초래하는 근원적인 요인이고 사회안전망 미흡이나 내수부진 등은 양극화의 경감 및 해소대책과 관련한 요인인데 전자의 요인과 후자의 대책 미비가 합쳐져서 양극화 심화가 지속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성근(2014)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양극화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심화되었기 때문에 사회양극화의 원인이 외환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도 사회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조세와 재정을 통한 소득분배 효과가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에 조사된 2인 이상 도시 거주 가구의 지니계수는 0.25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는 0.2888로 상승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도 지니계수는 하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한 것을 미루어볼 때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은 외환위기보다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의 재분배효과는 서구 복지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OECD(2008)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 22개 회원국 평균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는 0.078Gp 수준이며, 조세의 재분배효과는 0.032Gp로 우리나라에 비해 그 효과가 월등히 높다. 이는 일차적으로 공적이전소득과 조세가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OECD회원국(22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공적이전소득 비중은 21.4%, 조세 비중은 28.3%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덴마크와 스웨덴과 같은 선진 복지국가의 공적이전소득 비중(덴마크 25.6%; 스웨덴 32.7%)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10%를 크게 밑도는 우리나라는 공적이전 급여의 수준이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다.

2) 국내 사회양극화의 배경

사회양극화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정책적 관심을 환기시킨 것은 서구에서 1980년대 이후 가중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에서 촉발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이다. 우선 경제적 양극화는 복지국가가 쇠퇴하는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라는 상호 유사한 개념들의 관계 속에서 증대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들을 통해 확산된 전 세계적인 현상은 경쟁의 심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경제 주체들 간 무한 경쟁을 유발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이나 주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 점을 지적한다(김성근, 2014).

특히 후발 경제주체의 추격 형태로 인해 선진국의 기업들은 끊임없이 생산체계를 효율화하여 구조조정, 아웃소싱 등을 확산시켰는데 이는 노동 및 일자리의 감소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 것이다(금재호, 2001).

남춘호(2003, 2011) 또한 국내에서 사회양극화의 관심은 1990년대 경제적 성숙기 진입이후 관심이 확대되었고, 국내 경제상황 역시 중국 등 후발국 추격으로 생산비용절감을 위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여 일자리가 감소해 결국 국내 노동시장이 대다수의 나쁜 일자리로 구성되는 이중노동시장의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양극화는 노동시장과 일자리에서 불평등이 촉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자리의 감소 및 질적 약화가 우리사회 양극화 배경의 핵심 요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문조(2008)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정부는 경제적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중산층을 사회안정 세력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는 중산층의 귀속의식은 사회적 안정을 판단하는 지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이 결과로 1990년대 초반에는 전 국민의 68%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파악하는 의식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는 실업, 부도, 자산과 소득감소, 신용불량, 가족해체 등을 유발하여 특별히 중산층의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는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촉진시킨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거론된다(홍두승·김병조, 2006; 남은영, 2010).

이러한 차원에서 김문조(2008)는 경제적 양극화도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경제적 양극화가 야기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사회적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분석적인 사회과학의 개념이라기보다 2000년대 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만연하게 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집중하게 된 개념이다.

결국 소득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심화된 사회적 문제는 사회양극화를 야기하게 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성근(2014)은 교육 수준, 주거의 형태, 고용과 노동 형태를 거론하고 있고 토지 등 부동산, 문화예술, 복지 및 사회서비스, 지역차원도 대표적인 사회양극화의 형태로 거론된다고 주장했다.

3) 국내 사회양극화의 특성

국내에서 사회양극화의 개념이나 영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원식, 2013) 우선 한국사회에서 양극화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소비, 의식 등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를 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분리시키는 현상을 야기한다. 특히 양극화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 모두에 걸쳐 나타나지만 주로 국내에서는 소득, 자산, 고용기회, 고용의 질, 소비, 교육, 주택 등 경제적 재화에 걸쳐 강조되는 내용이다(송호근 외, 2006). 결국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양극화는 단순히 사회 전체를 몇몇 경제적 집단으로 구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분들이 고착화 되어 완전히 상이한 구조를 형성하게 하는 현상²⁾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양극화의 이론적 논의에 따르면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은 이분법처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양극화의 정도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특성이 있다(금재호, 2011; 김원식, 2013). 특히 국내의 특징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이 점진적 변화를 겪은데 비해, 1990년대 이후 국내 제조업의 하락과 서비스업의 확대가 급속하게 진행된 점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제조업이 높은 생산성은 보장되지만 다양한 계층의 고용창출이 축소되고 있으며 이질적인 기업들이 모여있는 서비스업 고용에서는 저임금과 고임금 일자리가 혼재되어 고용구조의 양극화가 초래되었다(신명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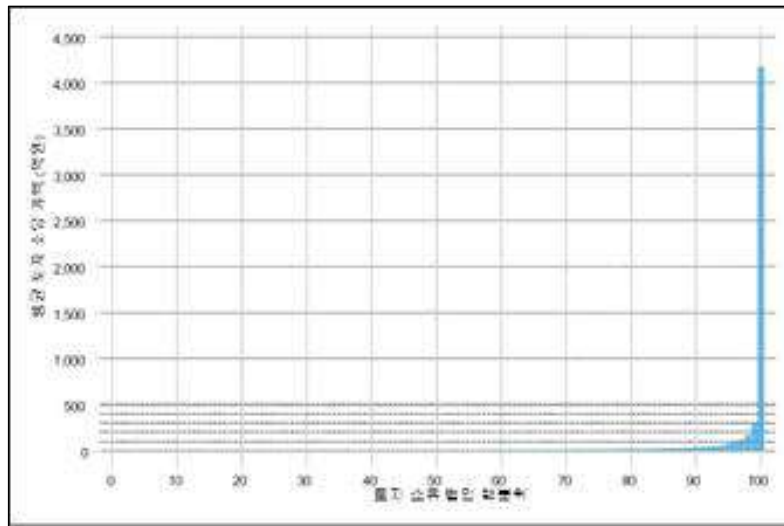
2) 2005년 진보정치연구소에서 실시한 빈곤층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 양극화와 빈곤층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분석했다(남기철 외, 2006 재인용): 1) 지속적인 다차원적 빈곤 구조화, 2) 교육적 배제, 3) 주거의 비공식성과 열악성, 4) 직업적 불안정성과 소득수준의 저열함, 5) 공식적 정치, 금융 및 관련 체계로부터의 배제, 6)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취약성, 7) 공공서비스로부터의 배제, 8) 빈곤의 여성화, 9) 건강권으로부터의 배제, 10) 지속적 배제와 가속화에 대한 무력감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 시장의 취약성이 증대된 점을 거론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생산적 복지)은 고용증대에 집중하여 고용의 질적 측면에 한계를 보이게 되어 결국 임금이나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 측면이 있다(주은선, 2009). 이와 같은 국내에서 3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경제와 소득의 양극화 심화의 현상은 자본주의 자체의 구조적 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만연하게 된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 등장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불평등 해소가 우리사회 양극화의 핵심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남기엽(2021)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토지소유 법인 270,286개 중 상위 1%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3.3%로 2018년 70.5%보다 2.8%p 증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9년에 916조 원으로 2018년 738조 원에 비해 178조 원이 증가했다. 특히 상위 1개 법인의 평균 소유가액은 2019년 4,176억 원으로 2018년 3,613억 원으로 563억 원이 증가했다. 부동산 소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각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남기엽(2019)은 불평등 소유 불평등을 부동산 지니계수로 계산해 발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세대 중 38%는 무토지 세대이며 2019년 부동산 지니계수는 0.811로 나타났다. 보통 우리나라 근로자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0.34 정도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더욱이 토지소유세대 중 상위 4%가 민유지 면적 70%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년간 연평균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 대비 16.2%였으며 2019년 부동산 불로소득은 353조원, GDP의 18.4%를 차지했다. 소득원천별 불평등 기여도는 부동산소득>임금소득>사업소득으로 부동산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도 요원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토지 소유법인 백분율

출처: 남기업(2021)

또한, 우리나라 사회양극화의 특징은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산층과 저소득층에서의 빠른 결혼 감소, 그로 인한 출산 감소로 인해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어느 순간 부는 대물림되어도 가난은 대물림조차 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즉, 가난한 사람은 자식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양극화로 인해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남성의 약 5분의 1이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힘겹게 결혼을 해도 가난을 물려주기 싫고 아이가 자라서 나만큼의 삶도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보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2009년 48.3%에서 2019년 28.9%로 감소했다. 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2년 동안 분만 건수는 감소했지만 그중 저소득층 비중이 뚜렷이 줄어든 반면 상위 30% 이상 고소득층의 비중은 증가했다. 이제 결혼도 출산도 고소득층이 누리기 쉬운 사치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2021.4.6, “가난은 대물림조차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와 소득의 불평등 개선 없이는 결혼과 출산의 개선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양극화 문제는 우리사회의 생존(지속성)을 위해서도 핵심문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4) 서구 사회양극화 배경과 특성

(1) 서구사회 사회양극화의 역사적 배경

신분이나 계급을 차별 이후 근대 서구에서는 자본에 의한 사회양극화가 심화됐다.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을 비롯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도시로 유입된 수많은 임노동자들은 도시의 빈곤층이 되었고 지주 및 자본가들과 양극화가 심화됐다. 도시 노동자들의 노동착취와 생활환경의 악화는 기대수명과 삶의 질을 극단적으로 하락시켰고 산업화 혜택을 독점한 자본가 계층과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난 시기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영국에서는 16세기의 구빈법(Poor law)을 비롯하여 19세기 들어서 공장법(Factory Act) 제정, 1883년 의료보험법, 1889년 노령연금보험법을 제정하고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국가의 복지정책이 등장했다.

19세기 자본주의의 등장과 성장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비판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대해 Polanyi(1944)는 ‘희소성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통한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형식적 경제는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매우 축소시켜 일반화하는 오류인 경제주의의 오류를 야기하며 신고전학과 이후의 경제학은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추상적, 초월적 원리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Polanyi, 1977).

구체적으로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는 의식변화도 수반되었는데 기계의 작동원리가 산업경제에 도입되면서 합리성과 효율성 극대화가 경제적 과정의 우선적 조직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인간과 자연 및 사회적 가치는 부차적 요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국부 증강을 위한 중상주의와 산업혁명의 결합은 19세기에 경쟁적 생산과 부의 축적만을 고려한 자본 중심의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는데 이는 부의 소수 집중화의 극단적 양극화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을 노정하게 되었다.

근대 시장자본주의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상적, 현실적 움직임들이 존재했다. 19세기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와 양극화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연대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적 전통이 나타났다(장원봉, 2006).

특히 시장자본주의의 폐단과 부작용 극복을 위한 무브먼트로 사회주의 사상이 19세기에 출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공상적 사회주의(Ideal Socialism)를 거론할 수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본가나 국가의 개입을 받지 않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이상적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향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 바베프, 생시몽, 푸리에, 오웬을 거론할 수 있다.

바베프(Babeuf)는 사유재산의 철폐와 재화 및 노동 공동체의 건설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비밀결사 조직을 통해 집단주의적 국가체제 형성을 주창하였다. 비록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상적으로 머무르던 재화 공동체 구성을 혁명을 통해 분출한 최초의 사상가이다. 생시몽(Saint-Simon)은 노동자에 의한 산업사회를 주창하며 산업 공동체 건설을 강조하였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순수 산업체계의 사회건설을 주목하였으나 방식으로는 사유 재산과 공공이익을 모두 인정하고 폭력혁명을 거부한 차이가 있다. 푸리에(Fourier)는 초기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의 소외현상을 부추기는 노동의 속성과 함께 인권, 자유와 같은 혁명적 구호들을 함께 비판하였다. 그는 노동을 인간의 열정에 의한 해방적 관점을 제시하며 팔랑주(Phalange)라는 공동체로 구체화하였다. 오웬(Owen)은 기업가정산과 사회주의 구성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한 실천적인 활동가로 공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혁신적인 실험을 통한 노동행위의 합리화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뉴라나크)의 건설을 실행하였다. 비록 실험은 실패하였지만,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노동자들의 교육, 복지, 삶의 질을 강조하여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던 사회혁신의 실험은 의의가 크다.

시장자본주의의 확대에 의한 19세기 사회주의의 등장은 시장실패에 의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개입을 유인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한 과학적 사회주의의 등장은 유물론적 변증법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몰락을 주장하였고 이는 1917년 볼셰비키혁명으로 현실화되었다. 이후 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의 움직임은 제1섹터인 국가의 개입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되었고 20세기 케인즈 주의는 시장경제의 체제에서 공공정책을 통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경태 (2014)는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 논쟁을 정리하면서 서구 사회 양극화의 원인을 다음의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등장, 세계화의 심화, 노동집약적, 노동 대체적 기술의 진보가 바로 그것이다.

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등장

197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과도한 복지지출로 이른바 복지병이 유행하여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이 약화되고,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며 경제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영국병, 네덜란드병, 유럽의 병자독일, 유럽비관주의 등의 용어가 유행할 만큼 문제점이 나타났고, 미국에서도 생산성 향상의 부진, 경제성장률의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등장하였다. 유럽각국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감세, 복지지출 합리화, 과도한 노조운동 억제 등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친화적 성격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경제성장이 고용과 소득의 증가로 파급되는 낙수효과(trickle down)가 제한되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1980년대 이후 양극화현상의 특징은 중산층의 특징은 중산층이 얇아지고 빈곤층이 동시에 늘어난다는 점으로, 중산층에서 벗어나는 인구 중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계층 보다는 하류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 결과 상대적 빈곤층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절대적 빈곤층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이하의 실질소득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고 이는 성장의 과실이 상위소득자에게 대부분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1945년에 총소득의 7.4%를 차지하는데 그쳤던 소득 상위 1%의 소득이 2007년에는 23.5%로 증가하여, 1928년의 19.1%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OECD).

나. 세계화 심화

자유무역의 확대와 자본시장 개방 확대를 통해서 재화와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이동하는 제2의 세계화 현상이 급진전되었다. 대외개방이라는 정책적 효과에 더하여 IT 기술과 운송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기술적 효과가 결합됨으로써 100년 전의 제1차 세계화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였다. 특히 해외투자의 자유화가 확대되어서 기업들은 비용절감, 시장개척, 자원 확보를 위해서 해외생산과 아웃소싱(outsourcing)을 확대하였다. 무역과 해외투자의 확대는 비교우위구조를 변화시켜, 선진국의 경우 단순노동, 저기술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노동소득 분배율을 감소시켰다.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져 세제인하, 임금상승 억제, 규제완화 등이 국제적으로 전개되었고, 이는 복지재원을 제약하고 기업 및 자본에

친화적이며 노동에 불리한 정책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자본시장의 통합은 재테크의 기회를 확장하여 자본이득이 유리해졌다.

다. 노동집약적, 노동대체적 기술의 진보

기계의 발명이 블루칼라(공장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단계를 지나서 정보처리 기술의 발전은 화이트칼라(사무실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의 주요 원인은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의 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고도기술자와 지식집약 노동은 위협을 받지 않지만 이러한 직업의 수는 다수 노동력을 흡수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은 저임금의 단순서비스업에 취업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 여성 노동력의 활용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잠재력의 하락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은 남성들과 같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고, 능력에 있어서도 사회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다. 또한 맞벌이를 통해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부지출은 복지정책일 뿐 아니라 성장정책의 주요한 투자이다. 따라서 출산 및 육아비용의 지원은 여성들을 가정과 육아에서 풀어줌으로써 이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필수적이다.

(2) 서구 사회양극화 특성

김흥종 외(2005)는 서구 국가의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사회경제적 배제(social and economic exclusion)에서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먼저, 소득분포의 양극화는 저소득층이 소득순환체계로부터 배제됨을 의미한다. 산업 간, 기업 간, 지역 간 양극화는 각각 저부가가치 전통산업, 중소기업, 침체지역에 속하는 사회구성원이 그 사회의 선 순환적 경제체제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과정을 뜻한다고 저자들은 파악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경제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 경제 내에서 특정 부문에 대한 구조적인 소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흥종 외(2005)는 소득 불균형의 확대는 경제체제의 특징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다. 앵글로색슨 유형은 1970~80년대 소득불균등 확대되었다(영국의 경우 1978년 기준 1990년 지니계수 10포인트 상승, 미국의 경우 1968년 기준 1992년 지니계수 5포인트 상승). 반면, 노르딕국가 유형은 1990년대 이후 소득불균등 심화되었다(스웨덴은 1990년 기준 1997년 지니계수 3포인트 상승, 핀란드 1993년 기준 2000년 5포인트 상승). 유럽대륙 유형은 모든 국가에 부합하는 일관된 유형은 발견되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도의 상승이 가속화되었고 1990년대 이후 특히 심화되었다.

사회구조와 생산방식의 변화로 서구사회에서 노동은 더 이상 사회의 중심적인 위치를 갖지 못하게 된 것도 불평등 확산의 이유이다(김교성, 2016). 기존의 서구 복지국가가는 노동중심사회의 핵심기제였던 노동 중심적 복지제도에서 소비의 대중화와 함께 노동자는 소비자로 변화되어 갔다. 사회구성원은 이제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닌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구분된다. 소비사회에서 역할이 없거나 ‘쓸모’ 없는 사람은 소비를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소비할 능력이 없는 청년과 빈곤층이 ‘부수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소비 중심의 불평등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과 빈곤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기본소득이야말로 지구화 시대에 글로벌 부정의의 문제를 극복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3. 사회양극화 연구의 쟁점 및 과제

1) 양극화 개념에 대한 연구의 쟁점

일반적으로 양극화의 개념적 접근은 사회적 영역에서 두 집단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이에 대한 의미 탐색은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정책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즉, 양극화의 용어는 이론적, 개념적으로 확립된 사회과학의 용어라기보다 일반적인 분열의 극대화된 양상을 나타내는 현상적 의미라는 점에서 매우 다양한 개념과 논의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김성근, 2014).

이러한 점에서 특히 사회양극화 연구의 쟁점은 보편적 논의보다 연구를 수행하는 지역사회의 관점에 기반을 두어 개념을 규정하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과 요인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강조하는 사회문제와 양극화의 영역들에 대한 해결을 위한 초점에 따른 정책대안들의 도출의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양극화 연구는 진단보다 사회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의 탐구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양극화의 의미 탐구와 확산에 따른 영향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미와 거리두기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성근(2014)은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와 같은 격차를 모두 부정적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특히 사회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경제 및 산업간 격차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의 발견이 중요할 것이다. 즉, 사회양극화는 어느 시기에나,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악영향을 포착해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양극화는 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대표적이지만 정작 소득 양극화의 측정하는 방법 또한 대단히 제한적이며 지니계수, 소득분배율이 주로 활용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들 방법은 전체 평균으로부터 차이만을 강조하는 불평등지수에 해당되어 집락화의 양극화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신동균, 2006). 따라서 통계수치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 이유를 밝혀내는 능력 또한 중요하고 할 수 있다.

2) 사회 양극화의 발생 원인과 영향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미시적 요인과 함께 국내 및 국제적인 거시적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요인을 규명할 수 있다(남은영, 2008; 김성근, 2014). 사회양극화는 지역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근본적 이유는 국가적, 국제적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20세기 이후 신자유주의 확대에 따른 복지국가의 후퇴와 공공정책의 효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의 약화의 사회적 측면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탈규제화의 물결이 거세지는 환경에서 양극화라는 사회적 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양한 연구에서 제기된다(김병준, 2009; 홍현호, 2010).

국내에서도 양극화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 및 국가주의 약화를 통한 세계화 확산 등으로 인해 전 사회적인 불평등이 강화되고 양극화의 심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 자동화, 플랫폼경제 등 첨단 과학기술과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동환경 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이 급격히 분화되면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서구 사회양극화 연구의 쟁점 및 과제

서구 사회양극화 연구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서구사회는 복지국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서구 복지국가의 가시적인 후퇴는 눈에 띄지 않는다(폴 피어슨, 2005). 폴 피어슨은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 기간 동안에 나타난 복지국가의 변화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80년대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화한 레이건과 대처 정부 시기에는 복지정책의 대폭적인 축소와 사회지출 삭감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복지정책과 예산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축소되었을 뿐 대부분 원래의 복지시스템 구조를 유지하였다. 오히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나 공공사회지출 분야는 증가되었던 것이다. 일부 복지 프로그램 축소가 있었지만 복지 제도의 축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 때문에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토대는 바꾸지 못하였다. 복지국가 축소를 지향하든 확대를 지향하든, 이 책은 그러한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런 문제가 정책과 제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례와 정책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피어슨의 주장대로 서구의 복지국가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지만 80년대 이후 불평등의 증가로 인하여 유럽 복지국가의 조정이 불가피하였다(이승협, 2008). 불평등 대두로 인한 유럽 복지국가의 조정이 여타 다른 지역과 다른 서구 양극화 연구의 쟁점 및 과제라 할 수 있다. 유럽 복지국가의 조정의 대표적인 현상은 의료보험, 교육, 산재보험 등에 시장원리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원리가 도입으로 기존의 복지수혜의 내용이 축소되고 동시에 공공과 민간의 이중체제로 복지제도가 이원화되었다. 시장원리의 도입과 함께 사회정책이 방향역시 근로연계복지(Workfare)로 패러다임 전환되었다.

근로연계복지는 실업급여 수급층에 대한 강제적 제재의 강화라는 의미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기간의 감축, 기존의 숙련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일자리에의 유인, 장기 실업자에 대한 제재 등을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삼는다. 그 결과로 정규직 노동시장이 급격히 줄어들고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9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확대되었다. 유럽복지국가의 조정이 본격화된 90년대 중반과 2000년 사이에 대부분의 유럽 복지국가에서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셋째, 세대 내 불평등에 전문가들은 주목한다. 복지국가 연구의 권위자인 에스핑-안데르센은 서구 복지국가의 조정이 세계화나 인구 고령화 등의 외적인 환경의 변화보다 세대 내 불평등이라는, 더욱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고 분석한다(에스핑-안데르센, 2014). 대부분 논쟁에서 많은 이들이 주장한 바와 달리 고령화의 진짜 딜레마는 세대 간 충돌가능성이 아니고 더욱 중요한 이슈인 세대 내 불평등을 해결하는 개혁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불평등 연구의 대가인 앤서니 앳킨스 역시 불평등에는 소득, 성별, 인종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는 것은 세대 간의 불평등이라고 설파한다(앤서니 B. 앳킨스, 2015).

우선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년 세대가 이전보다 많이 일하게 돼 청년들은 이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계가 인간이 하던 일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 젊은 세대의 부담은 이전과 비교하면 더욱 커진 셈이다. 또 노년 인구가 많아서 이를 받치기 위한 청년들의 세수 부담 역시 커지는 추세이다. 미래의 세대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년층을 부담해야 하는 불평등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부담은 출산을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고 앤서니 앳킨스는 전망한다.

4. 사회혁신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1) 사회혁신정책의 필요성과 개념화

사회혁신 등장배경을 살펴보면 사회혁신은 사회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작동하는 아이디어를 의미하며 특히 양극화 해결 등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로 유발되며 행위 자체가 사회적 목적달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Mulgan(2006)은 사회혁신의 분야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들이 악화되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사회조직(공공조직)들의 방향성이 과거를 지향할 때 사회혁신의 과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회혁신 활동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영역들이 사회양극화,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도시와 농촌 양극화, 불평등, 인간의 행복추구 및 인권 추구하고 같은 문제들이며 이는 기존의 과거 사회정책 모델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위와 같은 문제해결은 기존 사회적 모델과 정책들이 과거부터 경로의존성을 내포한 경직적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상상력이나 이상향 추구를 위한 유연성과 변화에 매우 취약한 특징이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사회양극화 대응전략에서 사회혁신은 정부와 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풀뿌리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주도의 지역문제해결 접근의 또 다른 방향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사회양극화라는 기존의 정책들이 통용되지 않으며 복잡적이고 사회종합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사회혁신의 다양한 시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회적으로 만연한 사회양극화의 해결을 위해 거시적 차원의 제도적인 변화의 모색과 함께 미시적, 풀뿌리 차원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주체들의 노력을 추동할 요인으로 사회혁신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사회혁신정책의 효시로 인정받는 현재사회에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회정책 및 제도들도 과거에는 급진적인 사회혁신으로 시작된 것들이며 증명되지 못한 사회문제해결의 아이디어들로 출발하였다.

16세기 구빈법이나 19세기 의료보험법의 제정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주도한 사회혁신의 형태이며 18세기의 노예해방운동, 19세기 상호공제조합이나 협동조합운동 확산 등도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사회혁신은 그 시대의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추동하는 활동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이러한 활동은

정부의 공공정책이나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다. 사회혁신은 경제적 가치 대신에 사회적인 문제해결과 발전을 위한 가치창출이나 사회비용 감소 등을 도모하는 행위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천적 활동이라는 다소 폭 넓은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Phills, 2008; Mulgan, 2006).

구체적인 관점에서 Phills(2008)는 기존 해결책보다 효율적,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방법들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 창출된 가치를 토대로 몇몇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혜택을 받는 결과를 기인하는 행위로 사회혁신을 바라보고 있다. 보다 좁은 범위에서 Mulgan(2006)은 일차적 목적이 사회적인 기관들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확대된 사회적 요구들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움직이는 혁신적인 행동과 서비스로 정의한다. 사회혁신의 개념화는 과거의 경제적 의미에서 혁신과 비교를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는데, 경제혁신은 기술혁신이나 조직혁신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사회 혁신은 장소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 영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표 5 〉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의 개념적 비교

구분	과거의 경제혁신	새로운 경제혁신	사회혁신
추진요인	주주가치	시장지위	사회적 복지(웰빙)
공간	회사	산업/지역	장소/사람
리더십	회사 엔지니어	산업집단/클러스터	중재자
아이디어 원천	전문가	네트워크	커뮤니티
활동	연구, 개발	발명, 확산, 채택	상호간 네트워크 형성
관계	소유권	상호 이익	신뢰
중재	보조금, 세금 우대조치	인큐베이터/인프라	네트워크형성 촉진, 계획
거버넌스	라이선스, 특허권	파트너십	지식공유

자료: Adams & Hess(2008); 박민진(2018) 재인용

2) 사회혁신의 요인과 주체

사회혁신의 개념화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사회혁신을 구성하거나 특징적인 지점들에 대한 요인들을 통해 정책적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Kathrin et al(2013)은 사회혁신의 4가지 목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혁신은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둘째, 사회혁신은 사회정책이나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추동한다. 셋째, 사회혁신은 도시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다. 넷째, 사회혁신은 업무과정을 혁신적으로 재편한다. 이와 함께 Caulier-Grice et al(2012)은 사회혁신의 5가지 핵심 요인과 8가지 특성을 다음 [표 6]과 같이 제시하였다.

〈 표 6 〉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의 개념적 비교

구분	요 인	의 미
핵심 요소	새로움	사회혁신은 분야, 부문, 지역, 시장 및 사용자들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것
	아이디어 실행 (실천력 강조)	사회혁신은 창조(아이디어 개발)와 혁신(아이디어 실행)과 구별하는 것
	사회적 수요 충족	사회혁신은 사회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
	효과성	사회혁신은 기존의 해결책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결과 관점에서 구체적 개선을 가져오는 것
	실천을 위한 사회적 역량	사회혁신은 새로운 역할이나 관계를 만들어내고 개발된 자산이나 역량을 보다 나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수혜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공통 특성	영역 초월	사회혁신은 영역사이에 상호교류가 일어나고 활동가들이 영역을 교차하여 관여하는 것
	새로운 역할과 관계 형성	사회혁신은 사용자들을 위해 사용자들에게 전달되기보다 사용자들과 함께 사용자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
	개방성과 협력	사회혁신은 집단적인 프로젝트에 대해 정형화 된 시장구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생산과정
	생산-소비 연계와 공동생산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함
	풀뿌리 운동 및 상향	혁신과 새로운 시도가 주변부로 확산되고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는 분배시스템
	상호부조	개인과 집단의 보다 나은 삶은 오직 상호의존에 의하여 구현 가능
	효율적인 자산과 자원 활용	잠재된 자산을 인지하고 발굴하고 조화롭게 활용
	자산과 역량 개발	수혜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참여적 접근방식

자료: Caulier-Grice et al(2012); 송석휘(2015) 재인용

사회혁신의 개념구성을 위해 요인구성의 측면을 제시한 한국행정연구원(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혁신의 구성요소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① 정부의 문제해결 방식이 실효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맹점에 놓여 있는 난제들(wicked problem)
- ② 정책현장에서 가까운 행위자들(당사자들)과의 참여와 협조
- ③ 규제나 유인책 등 기존 정책에서 탈피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솔루션
- ④ 장래의 지역사회 문제해결능력의 강화(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의 측면)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사회혁신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종합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사회혁신의 정의는 다음의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표 7 〉 사회혁신 개념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설명
공공문제 해결을 목적	공공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사회혁신의 정체성에 해당
참여적 공동 문제해결	공공문제 해결 모색에서 직간접의 이해당사자 견해의 상호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현장에 가까운 니즈 중심의 문제해결 모색
실험적 문제해결	작은 단위에서 모색된 솔루션을 실험적으로 적용해보고, 실패발생시 빠른 교정과 현실화를 전제함
창의적 문제해결	기성화, 전형화 된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자유롭게 모색함
정책동형화와 확산 지향	한 지역의 성공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여 사회의 거시적 탐색비용을 효율화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성	참여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험에 함께 참여하고 학습하여 사회행태와 관계를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문제의 문제해결 역량을 키워감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8) 참조

이와 함께 주체적 측면에서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서구에서 지난 2세기 동안 다양한 사회정치적 제도들이 변화하면서 수많은 사회혁신의 실천들이 주류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나 사회복지정책, 사회보험의 확장 등을 통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해소의 노력들을 거론할 수 있다.

[사회운동] 다양한 시민들에 의한 사회운동들도 사회혁신을 이끄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18세기 후반 영국의 노예제 반대운동을 시초로 여성참정권 등을 거론할 수 있고 1960년대 이후 환경, 페미니즘, 시민권 분야의 활발한 사회운동은 시대의 사회혁신을 주도한 활동들이었다. 특히 19세기까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사회운동은 사회 전반에 걸쳐 등장하였고 로버트 오언이 추구한 뉴라나크, 푸리에의 팔랑주와 같은 이상적 공동체 구성과 실천의 노력들을 거론할 수 있다.

[시민사회] 조직화된 관점에서 시민사회 영역은 19세기 산업화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혁신을 견인하였는데 노동조합, 협동조합운동을 비롯해서 사회적기업 비영리비정부조직 등이 수행하였던 상호자조금융, 사회적주택, 지역공동체개발, 사회적돌봄 등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들의 모델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조직화된 주체들의 혁신적 행위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가장 주요한 사회혁신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테면 사회적은행인 그라민뱅크, 라보뱅크나 기업의 차원에서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유럽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는 미그로, 레가코프 등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을 거론할 수 있다.

[공공영역]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사회혁신을 주도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세계대전 이후 정부가 국가복지, 교육, 돌봄,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을 정책적으로 실천한 복지국가의 시기를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도에 대해 과도한 사회의 정부개입과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복지국가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공주도의 사회혁신의 세계적 모델이 되었고 이는 공공조직의 비효율성이 문제시된 1980년대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이후 1980년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비대해진 정부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강조한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차원의 또 다른 사회혁신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많은 공공기관 및 조직들은 민영화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시장경제 형태의 경쟁과 효율성의 가치를 강조하게 되었다.

3) 국외 사회혁신 정책 동향

국외의 사회혁신 정책동향으로는 우선 유럽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회혁신을 통한 사회 문제와 사회양극화의 해결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Bassi et al., 2016).

[영국] 카메론 총리 이후 Big Society 관점에서 사회혁신을 통합하고 정부중심으로 고령화, 건강, 기후변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조직인 네스타(NESTA)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핀란드] 2003년 연구 및 혁신위원회에서 사회혁신의 정책기획과 담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초기 기술혁신의 논의에서 시작되어 사회분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는 사회혁신을 기업과 정부의 사회투자 개념으로 활용하며 핀란드 혁신기금(SITRA)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공리더십, 랜드마크 운영, 기후변화 등에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한다.

[독일] 독일에서 사회혁신은 사회서비스 보장(보건, 돌봄, 간호서비스 등)과 기업의 사회혁신,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으며 공공 규제 및 규범적 영역의 변화를 통해 사회혁신을 유인하고 사회투자의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다.

[스웨덴] 사회혁신을 청년이나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혁신전략을 활용하며 복지 서비스와 사회투자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행하는 방향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재원을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민간기반 혁신과 혼용되는 특성이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 시기 ‘사회혁신 및 시민참여국’이 설립되어 사회혁신 지원을 위한 공공과 민간 활동을 조정하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가 협력을 촉진하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특징적이다. 또한 사회혁신기금을 마련하여 교육, 의료, 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혁신 정책을 지원하였다.

제3장 최근 사회양극화 대응 정책 동향 분석

1. 사회보장정책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며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1인당 30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을 2020년 12월 28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실업부조 제도로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4년 만에 새롭게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되었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2014.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로 근로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이 계속 이뤄지도록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현금급여가 증가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부양의무자인 소득이 331만 원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생활하였지만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344만 원으로 완화되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 원, 의료급여를 받는다. 7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주 근로소득 270만원이 유일한 소득원임에도 기존 제도에서는 7인 가구 최저생계비 25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지만 '15년 7월부터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어 주거급여 8.5만 원을 받는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79만원 소득의 3인 가구는 자활소득공제 금액 23만 7천 원(79만 원×0.3)을 자활장려금으로 받고 생계급여 17만 1천원,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14만 원, 교육급여까지 받는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 단계적 폐지

2021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이 확대되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아야 할 노인 그리고 한 부모 분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0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며,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게 되면 자녀들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 가구인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하여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포함됨으로 해서 약 40만 명이 추가로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도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4월 15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상병수당제도 기획자문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상병수당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한겨레, 2021.04.15).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이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재원 마련 곤란 등의 이유로 도입이 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있다(한겨레, 2021.04.06). 보건복지부는 △재원 조달 방법과 대상자 선정 △보장 기간과 급여 수준 △보장 질환 범위와 인증 체계 △사후관리 등을 주요 논의 과제로 꼽았다. 재원 조달·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선 조세와 사회보험 중 어떤 것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지, 또 임금·비임금 근로자를 모두 대상으로 포괄할지, 한쪽만 선택적으로 선정할지 등이 포함된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추계에 따르면 상병수당 도입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0.04%(8천55억 원)에서 최대 0.1%(1조7천718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집계 나온 바 있다. 또 보장 기간과 급여 수준 부분에서는 상병수당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대기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기존 소득의 대체율은 어느 정도로 산정해야 할지 등의 논의 과제가 남아있다. 대기기간은 상병수당 지급에 앞서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로 길지 않은 경증 환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도덕적 해이를 막도록 한 장치다. 대부분의 국가가 상병수당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지원 기간과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국내에서는 이처럼 대기기간을 산출할 기준이 마땅하지 않게 때문에 이를 상병수당으로 모두 포괄할지, 또는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15일부터 올 12월까지 매월 1회씩 9차에 걸쳐 자문위 회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논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5) 전 국민 고용보험의 등장

고용보험은 '95년 도입된 이후 '98년 외환위기와 '09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왔다. 2017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등 보장성을 한층 강화하고 10인 이하 사업장 등 취약계층 가입확대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 가입률 (피보험자/임금근로자): 42.9%('98) → 50.1%('04) → 62.8%('12) → 63.2%('14) → 67.0%('19)

10인 이하 사업장 가입률: 47.8%('16) → 50.5%('17) → 51.4%('18) → 51.4%('19) → 53.3%('20)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2조1천억 원을 지급하여 근로자 76만 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 구직급여 10조9천억 원을 지급하여, 생계유지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OECD 국가, EU도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해 고용보험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자리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위기시 안전망에서 배제되어있는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이다.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

'21년 9월 8일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의무 적용대상에 특고 종사자(특수형태근로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수형태근로자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이 해당한다. 플랫폼 종사자 및 기타 특수형태근로자는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2025년까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6) 영아수당제도 도입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년 12월 15일에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에서 심의·확정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행 아동수당(7세 미만에게 지급)과 별도로 영아수당을 2022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영아수당이란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첫째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인상된다.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 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2만49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7) 어르신,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어르신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도 보장된다.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 명 대상으로 확대하고, 2만49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동·청장년의 생활 지원을 위해 소득지원 제도가 개편된다. 아동수당 확대 방안과 0~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22년)을 검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22년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등 소득지원 제도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2. 소득분배정책

소득은 불평등의 핵심요인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부동산 불평등이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요인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소득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보여주는 척도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신동균·장지연(2010)은 “소득재분배정책이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소득 불평등 완화정책으로 알려진 조세와 공적소득이전제도가 양극화 해소에도 같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복지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소득재분배정책은 소득불평등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그 크기는 복지국가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영어권 국가의 재분배정책이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정도에 비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도는 훨씬 작는데 비해 북유럽국가나 서유럽국가에서 재분배정책의 효과는 지니계수 감소와 양극화지수 감소에 대해 비슷한 정도로 작동하였다.

둘째, 소득이전정책은 조세정책보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간에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셋째, 공적소득이전을 소득 최하위계층에 집중시키는 잔여주의적 복지국가의 재분배정책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함의를 발견하였다.

반정호(2013)는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창출의 악화,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및 가족구조의 빠른 변화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분배악화 요인을 파악하고 재분배가 집중되어야 할 계층(대상)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분배지표(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를 파악하고 공적이전과 조세(사회보장부담금 포함)의 재분배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집중계수(concentration coefficient) 지표를 이용하여 재분배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는지 혹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누진성(progressiveness) 정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수년간의 양극화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우리나라의 분배구조 악화가 빈곤화, 즉 빈곤의 규모와 심도의 증대로만 국한되어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증대하고 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산층의 인구비중과 소득점유비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강신욱 외, 2008). 따라서 분배구조의 악화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확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설정하려면 무엇보다도 논의의 초점과 대상을 빈곤 및 빈곤층에서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이 경험하는 소득지위 악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소득재분배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노동여부와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말한다. 여기에는 모두에게 주는 보편성, 개인에게 주는 개별성, 조건 없이 주는 무조건성, 정기적으로 주는 정기성,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는 현금성 등 5대 원칙이 있다.

백승호(2020)는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분석했다. 분석결과,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의 소득보장 시스템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게 나타났고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했다. 기본소득 모델 중에서 빈곤 감소효과가 큰 것은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으며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가 큰 것은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다. 기본소득 모델이 현행 시스템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론’을 확인해 주는 결과이다.

이처럼 보편복지 성격의 기본소득이 선별복지보다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단위 혹은 지역단위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실험들이 있어왔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이미 지역의 석유자원을 활용해 기본소득의 형태인 시민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이 활발하다. 2010년대 초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 시작된 이후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 전체로 확대되었다. 문재인정부에 들어와서는 아동수당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충남도와 강원도에서는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전남 해남에서 농민수당이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2년에는 전국 농어촌지역 지자체 전역에서 농(어)수당, 농민기본소득이 도입될 예정이다. 나아가 농민기본소득은 농촌기본소득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촌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암튼 기본소득은 현재 정치권에서 여야, 좌우를 막론하고 관심을 갖는 정책이기 때문에 향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기본(기초)자산제

기본(기초)자산제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정책이다. 이 제도는 불평등과 양극화와 심각한 상태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약간의 소득지원만으로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일정한 자산을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제도이다.

기본자산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계층이동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돈을 한 번에 지급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자는 제도이다. 장기적인 역사자료를 통해 불평등을 연구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기본자산 중에서도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사회의 평균자산의 60%를 기본자산으로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의 불평등, 특히 세대 간 부의 불평등으로 세대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일정한 자산을 보장해 공정한 사회진출을 돕자는 취지이다.

기본자산제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연구는 거의 없고 현재 정치권에서 일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회토론회에서 김 모 의원은 저출생 문제 또한 사회양극화의 결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에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신생아 기본자산제를 주장했다. 신생아가 태어날 때 2,000만원을 적립하고 이후 성장기에 높은 이자를 보장해 청년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청년의 사회 진출과 결혼 그리고 출산은 어렵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집권당의 한 관계자는 출생 시 매월 30만 원을 적금 형식으로 저축해 성년이 되는 시기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무튼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기본자산제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3) 초과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는 상위 개념인 이익참가제(利益參加制)에서 비롯된 성과배분제와 이익배분제 가운데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2005년 시작되고 있는 성과공유제는 성과배분제의 하위개념으로서 그 외연을 협력기업 혹은 하도급기업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위평량, 2011).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시행되었다. 대기업의 막대한 수익을 중소기업, 특히 하도급업체와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업 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성과가 극명하게 나뉘게 되어 이익이 나는 기업들, 특히 의료계통, IT기업, 인터넷 플랫폼기업, 물류기업 등에서는 막대한 수입을 내는 만큼 이들 기업의 수익을 그렇지 못한 기업과 함께 나누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이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입장에 따라 선호도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4) 국토보유세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으로 일컬을 정도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다. 주기적으로 아파트값과 전·월세값이 폭등해 집이 없는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부동산 불평등의 핵심은 소수가 너무도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불로소득도 고스라니 소수 부동산 부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 고착화된 부동산 불평등은 세대를 이어 진행되기 때문에 부모세대에서 부동산이 없는 경우 자식세대까지 그 영향을 미쳐 우리사회 계층사다리의 붕괴를 가져오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공유적 개념 논의가 확대되고 있고 과잉 보유된 토지에 대해 세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로 국토보유세이다.

국토보유세는 사람이 만든 자본과는 달리 토지, 자연자원, 환경 등은 천부자원으로 사람의 힘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유자산으로 취급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관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도 토지공개념 조항(122조)을

두어 토지의 특별한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 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대가를 징수할 경우 토지와 부동산에서 생기는 불로소득과 특권 구조를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토지가치세에 가장 가까운 세금은 토지보유세이다(전강수·강남훈, 2017).

자산불평등의 핵심 요인 중의 하나는 부동산 불평등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정책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참여정부 시기에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도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 입안 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정책 실현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국토보유세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형 복지지원에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세목의 목적은 기본소득 지원으로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국토보유세의 징수목적에 목적세로 명확히 하고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본소득형 복지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의 귀속주체는 경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목은 지방세이고 그 중에서도 광역세인 도세·광역시세가 된다고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형 복지지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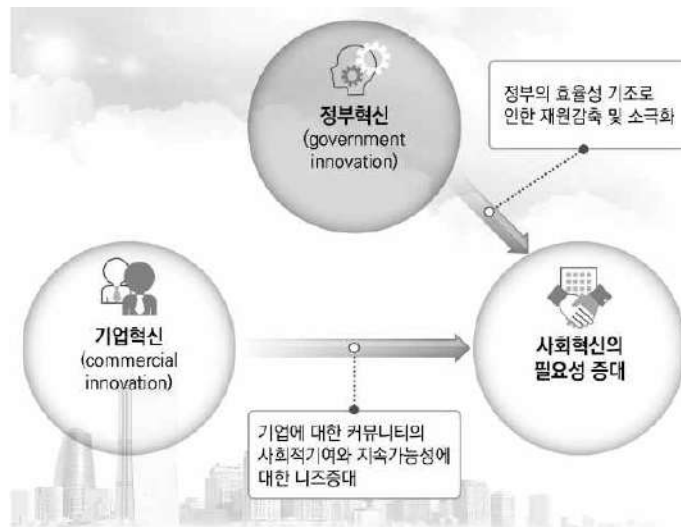
또한, 기본소득 지원 규모가 확대될수록 단일 세목으로 충당하거나 재원부담으로 시·군 동참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도세인 취득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이현우 외, 2019).

3. 사회혁신의 정책동향

1) 사회혁신 지원정책

(1) 사회혁신 지원정책의 배경

사회혁신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정부혁신과 기업혁신 이후 지속적인 사회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분야의 혁신이 요구된 정책적 배경에 있다. 우선 정부 혁신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대두된 정부(공공)부문의 혁신을 의미한다. 특히 기업들에 대해서는 20세기 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면서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게 된 시대적 흐름이 있다.



[그림 4] 사회혁신의 개념적 맥락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8)

또한 정부는 사회 전반적으로 다차원의 거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 하며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윤창출이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과제해결에 한계가 내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국가나 기업 같은 외부의 지원으로 해결하기 힘든 난제(wicked problem)되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부문에서 지역주민과 같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정의하는 사회혁신의 개념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사회혁신으로 보고 있다.

(2) 중앙정부의 사회혁신 지원정책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인 사회혁신의 관심은 2000년대 후반 사회적경제의 정책지원 활동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소셜벤처의 정책적 주목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한국전쟁 이후 시민들의 어려운 삶의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홍성, 목포 등에서 촉발된 소비협동조합운동을 거론할 수 있으며 1960년대 부산, 원주 등에서 발원한 신용협동조합 설립으로 인한 사회적 금융의 활동도 사회혁신정책의 효시로 거론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정부의 사회혁신정책의 태동은 뒤에서 서술할 사회적경제 정책발달과정과 함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혁신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사회혁신 파크를 조성하여 소셜벤처의 입주를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과 생태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혁신프로젝트를 통해 소셜벤처 발굴 및 투자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사회혁신정책의 거시적 방향은 사회적경제 지원정책과 유사하게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새로운 규제 및 법률 프레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센티브와 조세혜택 등을 통해 사회혁신 활동이 발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박민진, 2018). 실제 소셜벤처의 발굴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지원 과정에서도 사회적기업과 함께 정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발굴된 소셜벤처 조직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 및 연계를 지원하는 등의 긴밀한 정책연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적 측면에서 소셜벤처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및 지역공동체의 비영리조직들도 포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주가 현재 사회혁신 활동 및 정책들의 주체라 할 수 있다.

(3) 충청남도의 사회혁신 지원 정책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는데 지역 내 사회적 자본과 주체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체계에 있어서 어떤 주체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남창우·최화식, 2005). 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속성상 지역주민의 선호와 지역의 다양성에 민감하고 정책형성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시작하는 과정을 실현하기에도 적합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청남도 또한 사회적경제, 지역공동체와 함께 주민주도의 사회혁신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충남의 사회혁신 정책은 주로 공동체정책과와 충남공익활동지원 센터에서 기반구축과 인재양성부문에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청년 공익활동지원 ‘청춘작당’ 지원 사업이 있으며 충남사회혁신실험실 ‘달콤LAB’ 지원 사업을 거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출범한 충남사회혁신센터 또한 사회혁신의 정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주체로 거론할 수 있다. 충남 사회혁신센터는 현재 (주)로모, (사)천안YMCA가 컨소시엄으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2020.11~2022.12)되고 있으며 디지털혁신팀, 콘텐츠사업팀, 기획운영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사회혁신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리빙랩 지원, 사회혁신 국제 네트워킹,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1) 사회적경제 정책의 배경과 등장

제도적으로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1960년 신용협동조합의 등장과 1961년 농업협동조합이 조직화되면서 등장하였다. 농민중심의 협동조합과 함께 마이크로크레딧과 같은 사회적 금융기반의 신용협동조합이 출현하였다. 하지만 제3공화국 이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는 농협법 제정 등으로 급속한 관제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은 그 본래 목적인 시장으로부터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기보다는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형 사회적경제’조직(관료조직화)에 보다 가깝게 그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도래한 한국의 사회적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일자리, 사회적 일자리, 생산적 복지 등의 개념 등이 강조되면서 양극화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방향으로 사회적경제가 제도적으로 관심을 받고 설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7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도입된 이후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2010년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핵심 역량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분야가 등장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일반협동조합의 확대를 규정한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여 사회적경제에 부합하는 경제주체의 설립이 제도화 되었다. 이후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영역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국내 사회적경제의 조직규모는 대폭 확대되었다.

정부의 부처별로 분절되어 정책이 실행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본법을 통한 종합화의 제도적 움직임은 2014년부터 존재하였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2014년(19개 국회) 총 142명이 발의한 이후 2021년까지 총 11회 국민의 힘(새누리당 포함)과 민주당,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그리고 2021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70명의 의원에 의해 공동발의 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현재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자리·금융·창업·인재육성 등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수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여 정책추진의지를 드러냈다. 2017년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거시적 정책방향부터 사회적 금융, 인재육성 등의 세부 분야까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2017년 10월에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은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 금융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국가의 가치인 포용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여, 지역 현장의 공동체가 정부 유관정책에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정책·사업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 표 8 〉 사회적경제 관련 최근 주요 정부계획

주요정책	소관부서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 10. 18)	일자리 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수립 사회서비스, 소별벤처 등 사회적경제 진출분야 확대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지역기반 연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 2. 8)	국정현안 점검회의, 관계부처 합동	사회가치기금 설립(5년간 3천 억 규모), 사회적금융기관 육성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대출보증정책자금 확대 지원)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 (2018. 5. 16)	일자리 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마련 청년 소셜벤처 집중지원 허브 구축(창조경제혁신센터 주축) 소셜벤처 청년창업 활성화, 소셜벤처 평가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2018. 7. 3)	관계부처 합동	인재유입 활성화(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신중년 진출 확대) 전문인재 육성(대학 내 전문교육 확대, 리더 육성, 전문성 강화)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2018. 11. 9)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사회적기업 투명성 제고 및 국제협력 확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판로지원법 신설,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추진 전략 발표 (2020. 1. 15)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 가치 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조직기반 정비 사회적 가치책임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인사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공동체 역량 제고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의 사회적 가치의 민간 확산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이러한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의 각 부처들도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 있다.

〈 표 9 〉 정부부처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정부부처	담당사업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선정 지원, 창업 지원, 판로지원특별법 제정, 통합 플랫폼 구축 등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마을기업(청년참여형) 육성 지원, 예비마을기업 지원 및 컨설팅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소셜벤처 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소셜임팩트 투자펀드 조성 지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협동조합 지원,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등
보건복지부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커뮤니티 케어 추진 등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교육, 컨설팅, 중간지원조직 등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공동체회사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 사회적농업 조직육성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경제기업 기술기반 성장 지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협동조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및 협동조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주민 주도형 관광창업(관광두레) 모델사업 지원
금융위원회	사회적 금융	사회가치기금 설립, 사회투자펀드 조성 등
기타	부처형 사회적기업 지원	농림부, 문화재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여성가족부, 통일부, 환경부, 국토부 등에서 별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이러한 다양한 정책지원 사회적경제 기반구축을 확산하였지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정부의 부처별로 구분되어 육성되고 지원받는 칸막이 구조에 의한 한계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3)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정책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의 정책 사업은 본격적으로 2010년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민선 5기의 충남도정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대안 경제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였고 사회적경제는 이에 부합하는 경제적 사고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2012년에는 전국 최초로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사회적경제 정책 기획단 및 특별위원회와 같은 상시적인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운영하였다.

2012년에는 향후 5년간(2013-2017) 충남의 사회적경제 육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충남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계획은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2017년도에 수립된 ‘제2차 충남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은 ‘사람중심의 사회혁신을 통한 포용성장 실현’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충남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이와 같은 1,2차 5개년계획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실행되고 있다.

3) 지역 공동체 지원 정책

(1) 중앙정부의 공동체 지원정책

2017년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역공동체과를 신설하여 2017년 ‘지역공동체 활력제고’를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지역공동체 육성과 지역별 맞춤형 정책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2018년 이후에는 ‘공동체 기반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 표 10 〉 중앙부처의 공동체 관련 지원사업의 현황

부처	목적	내용	근거
행정 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읍면동 기능을 혁신하여 주민자치제도를 기반으로 주민 관점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행정자치부 마을기업육성 사업 지침
고용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의 인증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법
기획 재정부	협동조합 지원	협동조합의 경제적 활동지원	협동조합 기본법
보건 복지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의 다양한 복지문제 해결하기 위한 민간 네트워크 지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지 발굴에 관한 법률
	자활기업 육성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기업 참여로 탈 빈곤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토 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 기업, 지자체등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주민 주도의 종합적 도시재생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 관광부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화예술 프로그램 통한 공동체 형성을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관광두레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진흥법

자료: 인천연구원(2020)

(2) 충청남도의 공동체 지원정책

충청남도에서 공동체 지원정책 또한 다양한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으나, 2018년 신설된 공동체정책관이 2020년에 확정된 ‘공동체지원국’에서 공동체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공동체, 공익활동, 자원봉사, 사회적경제, 청년공동체와 같은 주요한 공동체 지원정책 활동이 공동체지원국에서 수행되고 있다. 충남 공동체정책은 10개 부서에서 공동체 관련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중간지원기관도 7개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1 〉 충청남도 공동체정책의 현황(2021년 기준)

영역	주요 정책 영역	담당국(담당과)	중간지원기관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지원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
주민자치 활동	충남형 주민자치 모델발굴 확산 주민참여 혁신모델 지원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
사회혁신	지역밀착 생활실험 확산 (리빙랩프로젝트)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	충남 사회혁신지원센터
청년공동체	청년 마을만들기 지원 및 청년공동체 발굴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	-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공동체지원국 (사회적경제과)	충남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공유경제기업 발굴 지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충남마을기업지원단
농촌 마을 공동체	농촌 마을만들기 지원정책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업정책과)	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농업 공동체 지원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예술 공동체	충남 예술동아리 지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어촌공동체	내륙어촌(강마을) 재생사업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	충남어촌특화지원 센터
도시재생 공동체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충남도시재생지원 센터
산촌마을	산촌공동체활성화 지원 산촌생태마을지원	농림축산국 (산림지원과)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 정책활동에서도 충청남도에서 핵심적인 주민주도의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사업은 사회적경제(마을기업), 주민자치, 마을만들기의 3가지 영역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전지훈, 2018).

현재 충청남도의 공동체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청년 등 대상별 공동체 발굴육성 지원의 보조사업 형태가 대표적이다.

우선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소규모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이며 2019년부터 매년 20여개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1,000만원 범위 내 소액 활동비 지원을 수행하고 있고 2021년에도 15개 시군에서 22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전문가 컨설팅 및 활동비 지원과 우수사례발표 등의 정책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은 충남교육청과 연계하여 수행하며 지역자원 활용 체험활동, 우리고장 알리기, 마을학교 운영, 학습매니저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협의회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지원사업도 공동체정책과에서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모델 지원사업의 마중물 지원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충남은 도내 207개 주민자치위원회 중에서 67개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고 2021년 내 104개소(50%)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4) 사회적금융 지원 정책

(1) 중앙정부의 사회적금융 지원정책

문재인정부는 2018년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계획을 발표하였다. 사회적금융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수요충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경제적 목적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속성으로 인해 재정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기존 용자 등 금융지원에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계획은 사회적 금융시장의 조성을 위해 기금의 마련과 공급과 관련되어 다음의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t Fund) 설립을 지원한다. 둘째,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여 사회가치기금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추진하는 것으로 사회적 성과의 측정과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사회적 금융시장 구성에 우선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특히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지원채널과 규모확충을 위한 신탁, 새마을금고 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

(2) 충청남도의 사회적기금 지원정책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는 2010년 이후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재정적 어려움과 금융접근성에 한계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정책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결국 이러한 요구에 따라 충청남도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를

제시하였으며 2018년 이후 사회적기금의 조성과 활용을 위한 자체적인 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2018년 충남의 사회적경제 기금을 설계하고 2019년에는 사회적기금의 구축 및 운영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된 조례를 제정(충남형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19.10.30.)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기반을 두어 2020년에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충남형 대출운용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실제 기금의 운영을 위해 기금운용기관을 산정하여 2021년부터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한 기금활용이 수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기금의 확보를 위한 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 표 12 〉 충남의 사회적기금 예산확보 및 집행

구분	투자 계획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재원별 내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18년	-	-	-	-	-	-	-	-
19년	-							
20년	5,500	20,550	550	20,550		550		20,000*
21년	1,500	550	550	550		550		
22년	1,500							
23년~	1,500							
총계	10,000	21,100	1,100	21,100		1,100		20,000

*기타: 신탁중앙회(운용기관)기금의 운용예산
자료: 충청남도(2021)

충청남도의 사회적 기금은 충청남도의 전출금으로 조성되며 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기금 융자 및 비용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최대 신용 1억 5000만 원, 담보 2억 원 한도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금리는 사회적가치의 평가결과에 따라 실제 1%대의 초저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충청남도 사회적기금의 운용을 포함하는 사회적금융의 특징은 손실보전제도를 전국최초로 시행하였고 3000만 원 이내 긴급자금수요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융자 프로그램의 운영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기금을 운영하면서 2021년 1월 기준으로 93개 기업이 102억 원의 기금활용을 신청하였고 이중 52개 기업, 32억 원이 승인되어 충남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에게 활용되었다. 이는 조직 당 평균 5800만원 규모로 구체적으로 기금 활용 조직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46개소, 마을기업 3개소, 협동조합 13개소 등이다.

5) 공유경제 지원 정책

(1) 공유경제 정책의 배경과 도입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는 지역사회 유휴자원의 사회적인 활용을 통한 효과적 이용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21세기 이후 IT, 사물인터넷 등 정부기술의 발달은 소유경제에서 공유경제의 실행가능성과 필요성을 촉진시켰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포디즘 패러다임에서 기존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성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공유 경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부상과 정책적 관심의 배경에는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저성장 진입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면서 교환 및 협력적 소비에 대한 문화적 확산을 거론할 수 있다. 또한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자원의 순환과 협력적 소비가 가능하도록 IT기술의 진보와 발달을 통한 다양한 공유플랫폼의 등장도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공유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공유경제활동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정책 및 제도의 접근이 형성되었다.

(2)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우리나라에서 제도적 움직임으로는 2018년 3월에 「공유경제기본법」이 발의되었다. 전반적인 공유경제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이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유경제 정책과정을 살펴보면, 2018년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로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이 제시되었고 2019년 1월에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들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과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정부는 과세체계의 정비, 공급자와 소비자 보호, 공유경제기업 혁신지원의 측면에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관련 과세기준 마련, 공유경제 납세 가이드라인의 제시를 비롯해 공급자 이용자를 위한 산재보험 확대, 선재보험 부과 및 징수체계 구축과 카셰어링 등 서비스 공급자가 별도 신고 없이 전자상거래 가능하도록 신고의무 부담 완화 등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정책추진의 방향은 서비스의 새로운 시장개척의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동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로 공유경제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적 기반의 마련과 규제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3) 충청남도의 공유경제 정책

충청남도 또한 정부의 공유경제 정책추진과 부합하여 2010년 후반부터 충남형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아래 표처럼 경제발전전략이나 업무계획 등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 공유경제 정책 주목의 시점이 다소 늦었고 그동안 물리적 공간이나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 단발적 정책행위로 한계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충청남도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유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2019년 하반기에 「충남형 공유경제 모델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되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 사업들은 초기의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공공이나 민간이 보유한 일부 유휴공간이나 물품공유사업이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교통수단(차량, 자전거) 공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표 13 〉 충남 도·시군 주요 공유경제 정책사업 현황

사업주체	사업명	공유 유형	진행 현황
도	민간주도형 취·창업 카페	취·창업활동 관련 협업공간 공유	6호점까지 선정 완료 - 1~3호점까지는 운영 중(2019.07.)
교육청	유희물품·악기나눔 플랫폼 운영	교육청 홈페이지에 유희물품 및 악기나눔 플랫폼 운영	현재 운영 중이나 활성화 상태는 낮은 편
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공간 공유 플랫폼 공유로(路)	학습공간 공유	홈페이지 운영 중 - 15개 지자체 46개 공간 등록·운영
아산시	산업단지 출퇴근 카풀 지원	차량 공유	시범사업 실시(2018) 후 종료
천안시	공유문화공간 B HOUSE	문화공간 공유,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 대관 운영 중
아산시	공유주차제	주차장 공유	주차장 381면 조성(2019.07.)
논산시	타요자전거	공유 자전거	2021년 도입 예정 - 사전 조사 중
청양군	공동육아나눔터	유희공간 활용	2020년 상반기 예정 - 폐교 매입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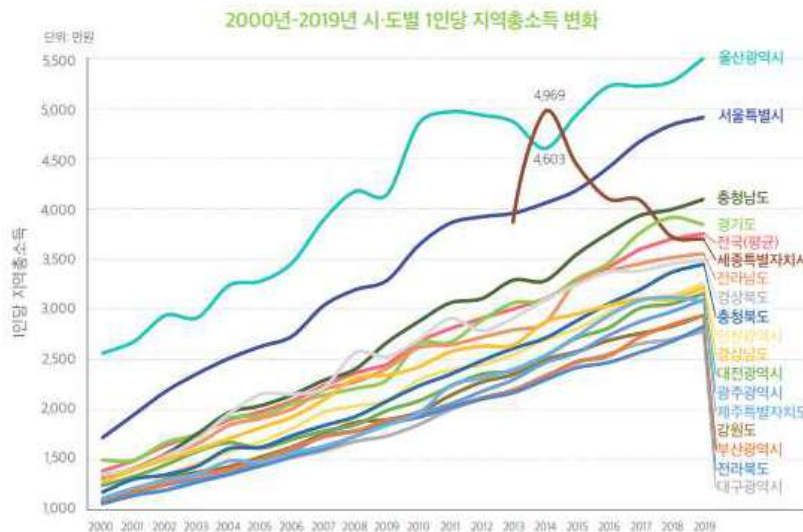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2020년부터 충남형 공유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공유경제 활동의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민대상 공유경제 인식제고와 공유경제 기업의 창업,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충남에 공유경제의 활동기반을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제4장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및 평가

1. 충남도 사회양극화 특징 및 정책 동향

1) 시도별 소득격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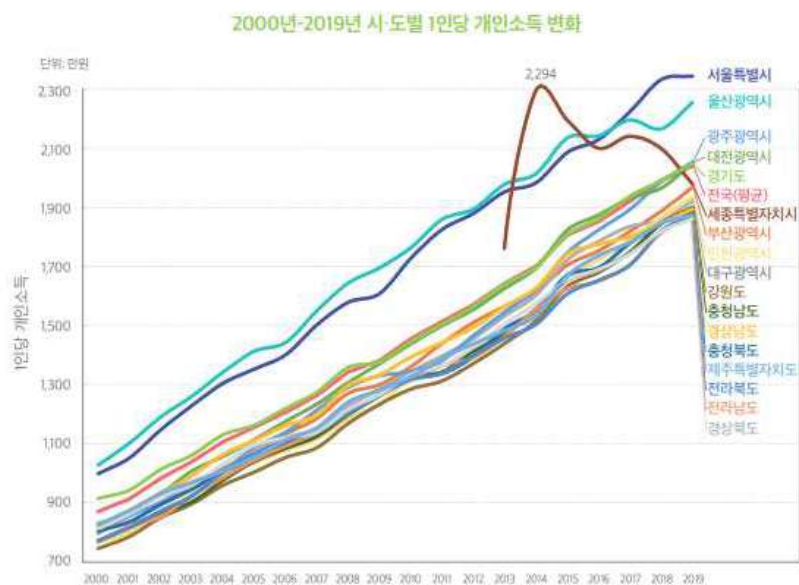
2000년~2019년 전국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변화를 보면, 충남도는 2000년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다음으로 5위를 차지했다. 그 후 대략 2008년부터는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며 상승했다. 이와 같은 순위는 충남도가 시도별 지역총소득 순위(2000년 10위, 2010년 7위, 2019년 7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림 5] 2000년~2019년 시도별 1인당 지역총소득 변화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통계, 세종시 통계연보; 김태환 외(2014)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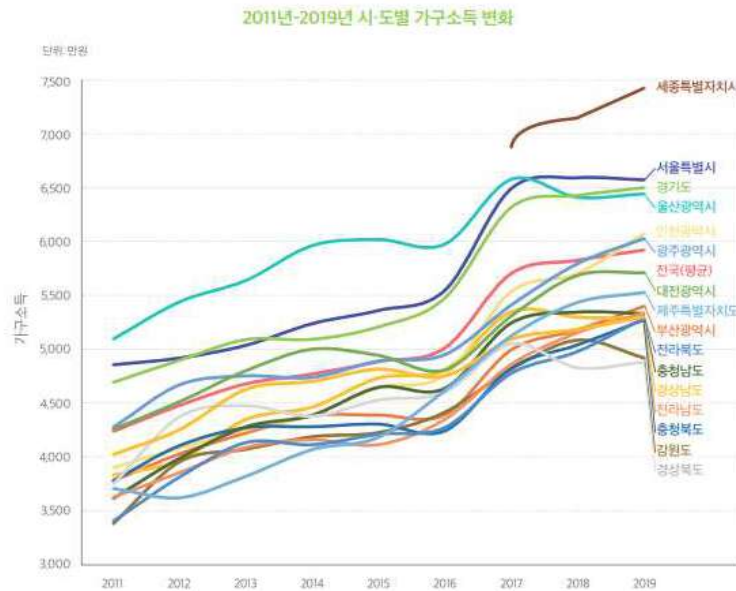
2000년~2019년 전국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변화를 보면, 충남도는 2000년 전체 16개 시도 가운데 10위를 차지했고 이후 2010년에도 같은 순위인 10위를 차지했다. 이후 2019년에는 한 단계 하락한 11위를 차지했다. 2019년 기준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순위는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특별시와 광역시 등이 높게 나타나고 도 지역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다른 도에 비해 1인당 개인소득이 높은 편이나 강원도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그림 6] 2000년~2019년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지역총소득 변화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통계, 세종시 통계연보; 김태환 외(2014) 재인용

2000년~2019년 전국 시도별 가구소득 변화를 보면, 충남도는 2011년 전체 16개 시도 가운데 14위를 차지했고, 이후 2015년에는 8위로 상승했다. 이후 2019년에는 다시 11위로 떨어졌다. 충남도 가구소득이 최근 들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7] 2000년~2019년 시도별 가구소득 지역총소득 변화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지역통계, 세종시 통계연보; 김태환 외(2014) 재인용

주 : 2011~2019년도 가구소득은 전국의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임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 [표 14]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019년 기준 충청남도는 시도별 지역총소득은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1인당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모두 11위로 나타나 1인당 지역총소득 순위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충청남도의 지역총소득이 충남도민 개인이나 가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표 14 > 시도별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가구소득 순위(2019년)

구분	1인당 지역총소득 (천원)(순위)	1인당 개인소득 (천원)(순위)	가구소득 (만원)(순위)
평균	37,530	20,400	5,924
서울특별시	49,121(2)	23,400(1)	6,575(2)
부산광역시	29,388(15)	19,680(7)	5,402(9)
대구광역시	27,798(17)	19,210(9)	5,288(14)
인천광역시	32,571(9)	19,332(8)	6,075(5)
광주광역시	30,964(12)	20,532(3)	6,030(6)
대전광역시	31,548(11)	20,498(4)	5,714(7)

울산광역시	54,969(1)	22,550(2)	6,445(4)
세종특별자치시	34,983(5)	19,789(6)	7,425(1)
경기도	38,466(4)	20,482(5)	6,503(3)
강원도	29,392(14)	18,997(10)	4,924(16)
충청북도	34,484(8)	18,823(13)	5,275(15)
충청남도	40,953(3)	18,955(11)	5,334(11)
전라북도	28,260(16)	18,725(15)	5,340(10)
전라남도	35,532(6)	18,711(16)	5,290(13)
경상북도	34,873(7)	18,611(17)	4,883(17)
경상남도	32,140(10)	18,939(12)	5,303(12)
제주특별자치도	30,834(13)	18,734(14)	5,531(8)

자료 : 김태환 외(2021). 『지역별 소득 격차와 불평등』을 참고로 재정리.

한편, 2020년 기준 시도별 사회복지비³⁾ 비율을 보면, 충남도는 광역시도 평균 40.92%(전국 평균 39.37%)보다 8.79%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순위를 보면, 충남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충남도보다 낮은 자치단체는 강원 29.17%, 제주 26.77%, 전남 25.33% 3군데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시도별 사회복지비 비율(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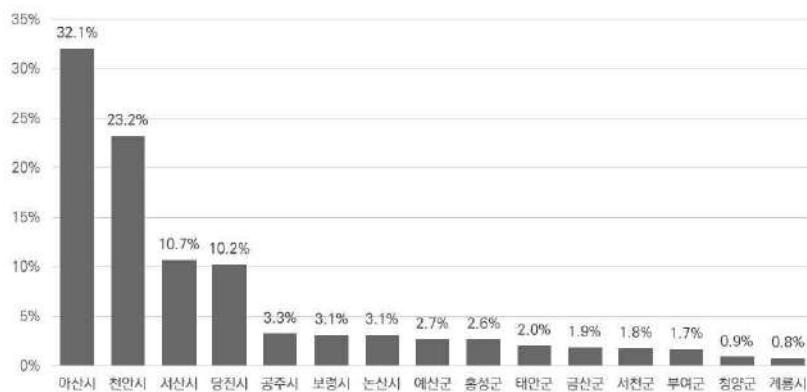
자료 : 지장재정통계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3) 사회복지비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등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 산정기준 : 총계, 결산, 최종
- 산정공식 : (사회복지분야 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 충남도 사회양극화 특징4)

충남도 사회양극화 특징은 우리나라 전체 사회양극화의 특징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회양극화의 특징과 다른 점은 지역 내 산업분포의 차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충남도내 기업분포와 경제비중을 보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북부권 4개 시가 충남 전체 GRDP의 74.2%를 차지하고 그중, 천안, 아산 두 지역이 전체의 50.7% 정도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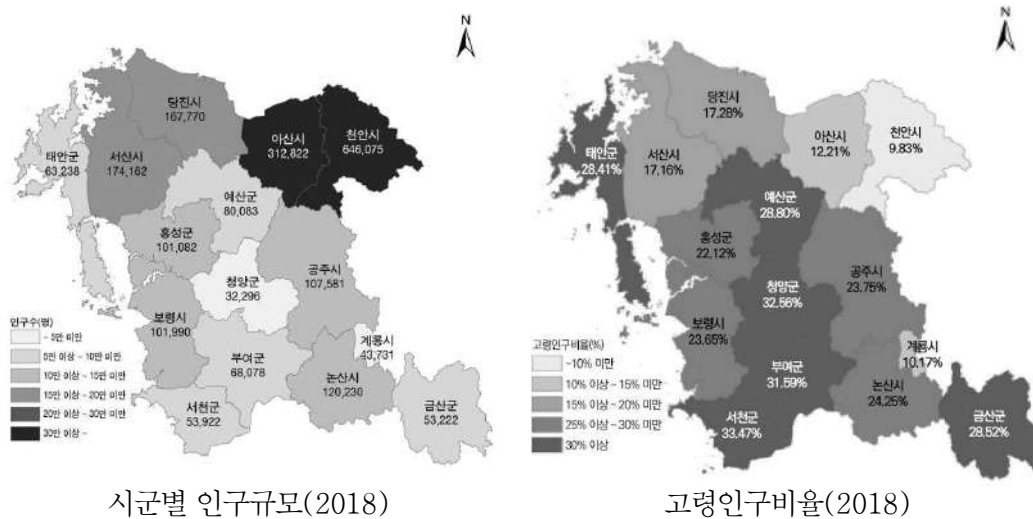
[그림 9] 충남 15개 시군의 GRDP 비중(2016년 기준)

자료 : 충청남도, 지역내총생산, 2018

충남도내 불평등한 산업구조는 불평등한 인구구조를 낳게 된다. 즉, 대기업 등 산업 구조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북부권 4개 시에는 비교적 젊은 인구가 많고 인구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그 외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고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이 우세한 충남 북부지역과 농업이 우세한 남부지역 간 격차는 충남도 양극화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측면 이외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4) 백운성 외(2020) '충남의 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 내용 일부를 발췌해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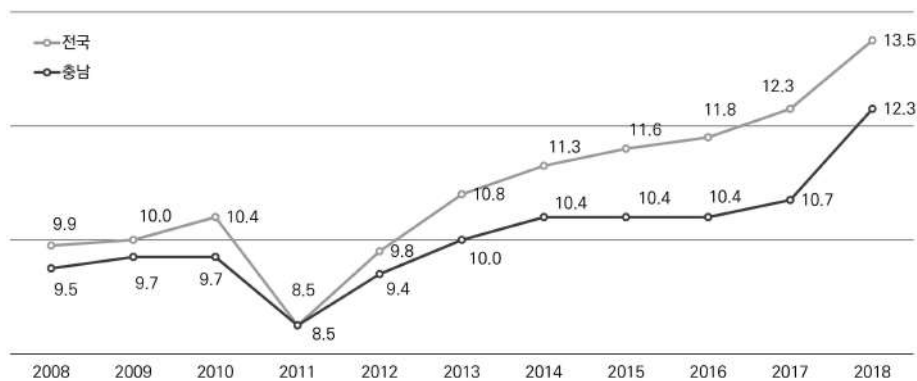


[그림 10]충남의 인구 및 고령인구 비율(2018년 기준)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 백운성 외(2020).

사회양극화 정도를 잘 보여주는 지표 중의 하나인 소득 10분위 배율을 보면 충남도는 전국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양극화 속도는 전국 평균을 앞지르고 있는 상태이다. 소득 1분위 대비 10분위 배율을 보면, 2008년에 전국 9.9, 충남 9.5에서 점점 증가하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해 2011년에는 8.5로 같아졌다. 이후 다시 증가해 2018년 기준으로 전국 13.3, 충남 12.3으로 동시에 증가했다.

특히 충남은 2017년 10.7에서 2018년 12.3으로 1.6이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 증가 1.2보다 높아 양극화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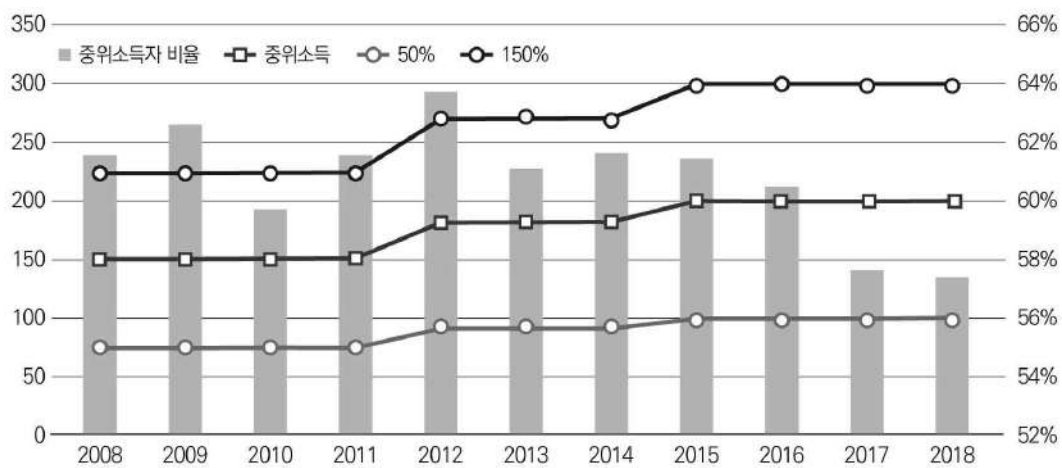


[그림 11] 1분위 대비 10분위 배율(상위 10%와 하위 10%)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사양극화는 사회를 지탱하는 중간계층이 감소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사회양극화는 중산층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충남의 중산층 비중(중위소득의 50%~150% 미만)은 2008년 61.5%에서 2018년 57.4%로 4.1%p 감소했다. 우려스런 점은 중위소득 150% 소득자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가고 중위소득 50% 소득자는 거의 정체 상태여서 양 소득자간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12] 충청남도 중산층비율(중위소득의 50%~150% 미만)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2008~2018)를 활용하여 작성

2.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과정 및 주요 정책

1)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과정

충남도는 민선7기에 들어 사회양극화를 저출생,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사회의 3대 위기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남도의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2019년 1월에 충남도청 내 양극화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양극화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했다. 이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2019년 4월 ‘충남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020년 4월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전, 3대 목표, 6대 추진전략, 74개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2021년 2월에는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자문기구인 ‘충남 양극화 해소 위원회’를 구성 및 발족했다. 또한 같은 해 3월에는 ‘충남 양극화 해소 위원회’의 실질적 업무를 실행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사회 및 기업 단체의 대표자 등을 중심으로 크게 소득·일자리분과, 복지·교육분과, 지역·공동체 분과 등 세 분야로 나뉘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 표 15 〉 충남도 민선7기 사회양극화 대응 정책 추진 과정

시기	정책 추진 내용	비고
2019. 1	•양극화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5급1명, 6급1명, 7급1명
2019. 4	•‘충남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연구기간 2019.4~2020.4
2019. 4, 7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1, 2차 공동워크숍 개최	
2019. 8, 9	•양극화 대응 충남도 T/F 회의 개최	
2019. 10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2019. 10	•양극화 완화를 위한 도민 아이디어 공모	
2019. 12	•연구 내용 도지사 및 행정부지사 보고	
2020. 3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개최	
2020. 4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3대 목표, 6대 추진전략 및 74개 실행과제 수립
2020. 7	•충남 양극화 대책 도민 보고회 개최	
2021. 2	•충남 양극화 해소 위원회 구성 및 발족	
2021. 3	•충남 양극화 해소 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소득·일자리분과, 복지·교육분과, 지역·공동체 분과

2)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 주요 정책

(1) 비전 및 추진 전략

충남도는 2019년 충남연구원에 의뢰한 ‘충남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통해 충남도 양극화 완화를 위한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충남도 양극화 완화를 위한 비전은 ‘더불어 잘 사는, 더 행복한 충남’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1)소득 및 고용 불균형 완화, 2)취약계층의 보호와 회복, 3)경제사회 포용성장 기반 강화를 설정했다.

또한 3대 목표 및 추진전략을 위해 1)임금보장과 근로여건 개선, 2)지역단위 일자리 창출, 3)경제적 약자 지원, 4)사회 안전망 확대, 5)지역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 6)공정한 기회보장과 공동체 형성 등 6개의 과제 영역을 구성하고 각각 세부 과제를 설정해 전체 74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그림 13]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전과 전략

자료: 백운성 외(2020).

(2) 양극화 대응 주요 정책

민선7기 충남도의 사회양극화 대응 정책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고 앞서 설명했듯이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무상정책, 수당지급, 공제지원, 주택제공 등 4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 대표적인 사업은 아래와 같다.

- ① 무상정책: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 7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도서관 여객선 운임 무료화
- ② 수당지급: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농어민수당
- ③ 공제지원: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더행복주택 건립
- ④ 주택제공: 행복주택(출산에 따라 임대료 감면 내지 면제)

이들 정책 중에는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한 사업도 있지만 충남도 자체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사회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이들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해 향후 보완 및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표 16 〉 충남도 민선7기 사회양극화 대응 중요 사업 및 성과

시기	사업	비고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설치 ·(광역 최초)충남아기수당 지급 개시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 터미널, 관공서 등 2,773개소 ·0세아 대상 ·분만 의료 취약지역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3대 무상교육 실시 ·(전국 최초)충남아이키움틀 개원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닥터헬기 응급환자 이송 1천명 돌파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확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 ·10인 미만 사업장 ·생존율 80.4% ·12개월 이하 → 24개월 미만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충남농어민수당 지급(전국 최고액) ·충남행복주택 기공식 ·더행복충남론 출시 ·버스비 무료화 확대 ·도서관 여객선 운임 무료화 ·행복키움수당 확대 지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및 두 자녀 가구 ·16만 5,000가구/가구당 80만원 ·아산 배방읍 총 600세대 ·금융 취약계층 소액대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24개월 이하 → 36개월 미만 ·도내 모든 신생아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 위원회 회의 자료, 2021. 2. 15.

3. 충남도 주요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1) 평가 개요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은 민선7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고령화, 저출산(생), 사회양극화임을 주장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회양극화 정책은 도정의 전 분야를 포괄하지만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무상정책, 수당지급, 공제지원, 주택제공 등 크게 네 가지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 충남도가 추진해온 사회양극화 정책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충남도 주요 사회양극화 정책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들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평가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정책

- ① 무상정책: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 7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도서관
여객선 운임 무료화
- ② 수당지급: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농어민수당
- ③ 공제지원: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 ④ 주택제공: 충남형 더행복주택(출산에 따라 임대료 감면 내지 면제)

2 설문 대상

-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183명⁵⁾, 그중 응답자는 84명

3 평가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5) 충청남도 도민평가단은 충남도가 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다.
2021년 7월에 183명(제13기)이 새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4 평가 기간

- 2021년 9월 23일~10월 8일

5 응답자 특성

- 본 설문지의 응답자 84명의 특성은 다음 [표 17]과 같다. 주요 특성을 보면, 남성이 67.9%로 여성 32.1%보다 약 2배였고, 결혼이 91.1%로 대다수가 기혼자였다. 연령대는 50대 34.5%, 60대 이상 38.1%로 중장년층이 많았고 학력은 전문대·대졸 46.9%, 대학원 졸 이상 43.2%로 고학력자들이 많았다. 거주 행정단위로는 동지역이 45.2%로 읍지역 27.4%, 면지역 27.4%보다 많았다.

〈 표 17 〉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100.0%)	구분	사례 수	비율 (100.0%)
성별(84)	남성	67.9	학력(81)	고졸 이하	9.9
	여성	32.1		전문대· 대졸	46.9
				대학원 졸 이상	43.2
결혼 여부(79)	기혼	91.1	거주 시군 (84)	북부권	28.6
	미혼	8.9		서해안권	23.8
				내륙권	16.7
				금강권	31.0
연령대(84)	30대 미만	2.4	거주 행정단위 (84)	읍	27.4
	30대	6.0		면	27.4
	40대	19.0			
	50대	34.5		동	45.2
	60대 이상	38.1			

2) 평가 결과

(1) 무상정책 평가 및 의견

충남도의 첫 번째 무상정책은 무상교육이다. 충남도는 2019년부터 중앙정부에 앞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특히 무상교육은 일률적으로 학비를 면제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더 혜택이 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잘함 32.1%, 매우 잘함 51.2%로 대체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83.3%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잘못함 1.2%, 매우 잘못함 3.6%로 잘못했다는 비율은 4.8%로 낮게 나타났다.

〈 표 18 〉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평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평균 (5점척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84)	3.6	1.2	11.9	32.1	51.2	4.26

충남도의 두 번째 무상정책은 친환경무상급식이다. 충남도는 또한 2019년부터 고등학교·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전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무상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이며 이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음식 제공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함이고 학부모에게는 음식준비의 수고로움을 없애고 가계비 부담도 줄이는 유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도는 기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확대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보면, 잘함 28.6%, 매우 잘함 52.6%로 잘했다는 평가가 82.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잘못함 4.8%, 매우 잘못함 4.8%로 못했다는 평가는 9.6%에 불과했다.

〈 표 19 〉 고등학교·특수학교 친환경무상급식 평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평균 (5점척도)
고등학교·특수학교 친환경무상급식	(84)	4.8	4.8	8.3	28.6	53.6	4.21

앞서 충남도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을 대학교와 복지시설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친환경무상급식의 대학교 확대’에 대해 찬성 19.0%, 적극 찬성 27.4%로 나타났고, 반대 27.4%, 매우 반대 9.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찬성이 46.4%로 반대 36.9%로 9.5%p 높았다.

다음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의 복지시설 확대’에 대해 찬성 33.7%, 적극 찬성 34.9%로 나타났고, 반대 13.3%, 매우 반대 0.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찬성이 68.6%로 반대 13.3%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한다면 복지시설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표 20 〉 친환경무상급식 대학교/복지시설 확대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평균 (5점척도)
친환경무상급식 대학교 확대	(84)	9.5	27.4	16.7	19.0	27.4	3.27
친환경무상급식 복지시설 확대	(83)	0	13.3	18.1	33.7	34.9	3.90

충남도의 세 번째 무상정책은 무상교복이다. 충남도는 2019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입학 시기 학부모에게는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잘함 25.3%, 매우 잘함 61.4%로 잘했다는 응답은 8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 정책에 대해 못했다는 응답은 4.8%(잘못함 8.4%, 매우 잘못함 1.2%)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무상교복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지 물었다. 조사결과, 찬성 30.1%, 적극 찬성 50.6%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8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8.4%(반대 7.2%, 매우 반대 1.2%)로 낮게 나타났다.

〈 표 21 〉 중학교 무상교복 평가 및 고등학교 무상교복 확대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평균 (5점척도)
중학교 무상교복	(83)	1.2	3.6	8.4	25.3	61.4	4.42
구분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평균 (5점척도)
고등학교 무상교복 확대	(83)	1.2	7.2	10.8	30.1	50.6	4.22

충남도의 네 번째 무상정책은 무상교통이다. 충남도는 2019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에 대해 버스비 무료화를 실시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교통망도 편리할 뿐만 아니라 노인의 지하철 요금은 무료인 반면 농어촌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는 우선 7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무상버스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대한 평가 결과, 잘함 25.0%, 매우 잘함 61.9%로 잘했다는 의견이 86.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잘못함 3.6%, 매우 잘못함 1.2%로 잘못했다는 의견은 4.8%에 불과했다.

〈 표 22 〉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평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평균 (5점척도)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	(84)	1.2	3.6	8.3	25.0	61.9	4.43

그렇다면 이러한 무상교통 정책의 확대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다. 먼저, 정책대상 어르신의 연세를 65~70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 30.1%, 적극 찬성 27.7%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57.8%로 나타났고, 반대로 반대 19.3%, 매우 반대 4.8%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24.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무상교통의 대상을 어린이 및 청소년(만6세~18세)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알아봤다. 조사 결과, 찬성 23.8%, 적극 찬성 39.3%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63.1%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1.5%(반대 17.9%, 매우 반대 3.6%)로 나타났다. 두 대상을 비교하면 무상교통의 대상 확대는 65세~70세보다는 어린이 및 청소년(만6세~18세)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3 〉 65세~70세 버스비 무료화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평균 (5점척도)
65세~70세 버스비 무료화	(83)	4.8	19.3	18.1	30.1	27.7	3.57
어린이 및 청소년 (만6세~18세) 버스비 무료화	(84)	3.6	17.9	15.5	23.8	39.3	3.77

충남도 무상교통정책의 특이점은 도서민(섬주민)의 여객선 무료운임이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교통이 불편한 도서민(섬주민)에게 여객선 운임 무료화를 실시했다. 이에 대한 평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잘함 35.7%, 매우 잘함 39.3%로 잘했다는 의견은 75.0%로 나타났다. 반면, 못했다는 의견은 7.2%(잘못함 6.0%, 매우 잘못함 1.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 표 24 〉 도서민 여객선 운임 무료화 평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평균 (5점척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 무료화	(84)	1.2	6.0	17.9	35.7	39.3	4.06

충남도 무상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은 [표 25]와 같다. 무상정책에는 늘 포퓰리즘 논쟁이 따르기 마련이다. 도민평가단 가○○은 “획일적인 무상교육 및 복지만이 정답은 아니다”고 응답한 반면 김○○은 “무상정책(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폄하하며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됐다”는 의견이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도입되고 있는 많은 무상정책은 도입 단계에서는 논란과 논쟁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위해서는 문○○이 지적한 것처럼 무상정책은 재정과 증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충남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정○○)고 했으나 7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와 관련해서는 75세 이하(65세~70세)로 낮추기보다는 75세 정도 연세가 적당하다(가○○)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보였다.(정○○) 특히, 시내와 떨어진 면단위 학생들에게는 더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이었다.

한편 도민평가단 FGI에서는 무상교통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르신들의 버스 승하차 시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버스의 규모도 줄이고 탑승구가 낮은 저상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표 25 〉 충남도 무상정책에 대한 의견

응답자	의견 내용
가○○	획일적인 무상교육 및 복지만이 정답이 아니다. 포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버스비 무료화의 경우 통학거리가 가깝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아울러 노인의 경우 75세 이상은 되어야만 노인의 범주에 든다고 생각한다.
김○○	차별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충남도민 모두가 도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느끼는 소속감도 매우 중요하다.
문○○	재정 및 증세논란이 제일 큰 문제일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 정책과 맞물려 장기적인 플랜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제발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박○○	무상정책(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폄하하며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각 지방자치단체(광역포함)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들이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치지만 결국에는 실행하는 예를 많이 보았다. 그러므로 충남도의 정책은 잘한 일이며 환영한다.
정○○	무상급식인 경우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치원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은 제외되는 현실이 맞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 태어나 만5세까지의 영양관리가 무척 중요하나 충남도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무지한 정책을 하고 있다. 충남도내 청소년에게 버스비 무료화하는 것에 찬성한다. 중고생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우리 아이들은 버스를 이용하지 않지만 자녀의 친구들의 경우 시내와 거리가 있는 곳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버스비를 늘 계산하며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

(2) 수당지급정책 평가 및 의견

충남도의 첫 번째 수당지급정책은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이다. 충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재 만 36개월(만 3세) 이하 출산 가정에 월 10만원의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도 행복키움수당은 중앙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수당(0세~만 6세)에 추가해서 주는 형태이다. 이는 정부의 육아수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충남도가 지급액을 추가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저출생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이다. 따라서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잘함 34.9%, 매우 잘함 48.2%로 잘했다는 의견이 83.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잘못함 4.8%, 매우 잘못함 1.2%로 잘못했다는 의견은 6.0%로 낮게 나타났다.

〈 표 26 〉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지급 평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평균 (5점척도)
행복키움수당 지급	(83)	1.2	4.8	10.8	34.9	48.2	4.24

충남도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에 대한 평가는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행복키움수당의 지급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물었다. 조사 결과, 찬성 31.0%, 적극 찬성 39.3%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70.3%에 달했다. 반면, 반대 16.7%, 매우 반대 2.4%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13.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표 27 〉 행복키움수당 지급 기간 확대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평균 (5점척도)
행복키움수당 지급 기간 확대	(84)	2.4	10.7	16.7	31.0	39.3	3.94

충남도의 두 번째 수당지급정책은 농어민수당이다. 충남도는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해 2020년부터 농어가당 연간 8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잘함 28.6%, 매우 잘함 39.3%로 잘했다는 의견이 67.9%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함 8.3%, 매우 잘못함은 0.0%로 나타나 매우 낮았다.

〈 표 28 〉 농어민수당 지급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평균 (5점척도)
농어민수당 지급	(84)	0	8.3	23.8	28.6	39.3	3.99

현재 농어민수당은 농어가 단위로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어민단체에서는 농어가 단위가 아니라 개별 농어민 단위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에서 개별성을 강조하듯이 농어민수당도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농어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금액 또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연간 80만 원으로는 농어민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농어민수당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찬성 25.0%, 적극 찬성 34.5%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59.5%에 달했다. 반면, 반대 10.7%, 매우 반대 2.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보통은 27.4%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9 〉 농어민수당 확대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평균 (5점척도)
농어민수당 확대	(84)	2.4	10.7	27.4	25.0	34.5	3.79

충남도 수당지급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은 [표 30]과 같다. 수당지급정책 또한 무상정책과 같이 포퓰리즘 논쟁이 따른다. 하지만 현재 충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농어민수당은 부정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그 이유는 이 두 정책은 지자체 차원에서 매우 긴요하고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도민평가단 정○○은 “저출산 문제의 극복은 비단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존망과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충남도가 장기적 목적을 가지고 선제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은 “대단위 토지나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부농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농어민은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복지 향상 차원의 수당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은 “행복키움수당은 취학 전 아동(5세)까지 확대하고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농어촌거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농어민수당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지역에서 편법으로 수당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고(김○○), 농어민들은 직불제, 농어민수당, 의료보험 감면 등의 혜택이 많기 때문에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해 지원해야 한다(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농어민수당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의 부당수령을 철저히 가려내고 농어민수당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좀 더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과 농어민수당은 인구문제와 직결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과 지역소멸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매우 중대하고도 어려운 과제이다. 이 때문에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과 농어민수당과 같은 극단적 처방의 정책이 나왔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정책의 정당성이 실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도민평가단 김○○와 오○○는 이러한 점들을 지적한 만큼 정책 실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 표 30 〉 충남도 수당지급정책에 대한 의견

응답자	답변 내용
김○○	대단위 토지나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부농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농어민은 생활수준이 열악한 서민에 치우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하는 목적으로 점차 수당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농어민수당은 농업 증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관에서도 실사 없이 규모를 따지고 이장 통장 서류만 받고 신규 농어민들에 대해 평을 함부로 한다.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장 통장한테 서류내고 말만 잘하면 통과되는 사례도 있다.
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행복키움수당은 취학 전 아동(5세)에게 지급하면 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민+농촌거주자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
오○○	명목만 농어민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현재 지원해주는 정책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농어민들만 지원하다보면 의외의 사각지대도 있는데 그런 곳을 발굴하여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농어민들은 직불제, 농어민수당, 의료보험 감면 등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	저출산 문제의 극복은 비단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존망과 존립이 걸린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직간접적인 지출은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기본적 투자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관련 수당들을 도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 및 탈농어촌 현상(도시집중화 현상) 문제 역시도, 소멸위험지수와 연계하여, 국가의 존립이라는 유사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우리 도내 15개 시군의 인구 구성 및 산업 구성 비율과 접목하여 볼 때, 이는 대국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며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된 수당 역시도 우리 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공제지원정책 평가 및 의견

충남도의 첫 번째 공제지원정책은 영세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이다. 충남도는 일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대 사회보험료(국민건강/고용/재해/연금)를 지원하고 있다.⁶⁾ 영세 소상공인들은 보통 가족단위 경영이거나 1인 경영이 대부분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저임금인상과 2020년 초에 시작된 팬데믹으로 4대 보험료도 낼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충남도의 4대 보험료 지원은 어떠한지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잘함 41.7%, 매우 잘함 34.5%로 잘했다는 의견은 76.2%로 비교적 높았다. 반면 잘못함 3.6%, 매우 잘못함 2.4%로 비교적 낮았다.

〈 표 31 〉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평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평균 (5점척도)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84)	2.4	3.6	17.9	41.7	34.5	4.02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충남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이 이러한 지원 사업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확대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찬성 36.9%, 적극 찬성 36.9%로 찬성한다는 의견이 7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 8.3%, 매우 반대 3.6%로 반대 의견이 11.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표 32 〉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평균 (5점척도)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84)	3.6	8.3	14.3	36.9	36.9	3.95

6)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가입 사업장,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신청일 현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지급 받는 사업장과 금액은 2021년 1분기 3,700여 곳, 24억 7,000억 원, 2분기 4,700여 곳, 39억 2,500억 원이다.

충남도의 두 번째 공제지원정책은 충남도민 안전보험이다. 충남도는 2021년부터 모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충남도민 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도민 안전보험은 도민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어도 충남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재난·사고 등 피해 발생 시 보험료 무료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난·사고 등을 대비한 보험이 없는 도민에게는 안전보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의견을 알아봤다. 조사 결과, 잘함 33.3%, 매우 잘함 56.0%로 잘했다는 의견이 8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잘못했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 표 33 〉 충남도민 안전보험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평균 (5점척도)
충남도민 안전보험	(84)	0.0	1.2	9.5	33.3	56.0	4.44

충남도 공제지원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은 [표 34]와 같다. 공제지원정책은 영세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도민 안전보험 가입이다. 두 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한다. 특히 안전보험에 대한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전도민이 혜택을 받는 정책이기 때문에 찬성률이 높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은 이유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민평가단 서○○은 “영세소상공인은 사회보험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고, 김○○도 “영세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는 찬성하며 사업장을 더 확대했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고○○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까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오○○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결국 직장인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그들이 충분히 경쟁력을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도민 안전보험 가입의 경우 좋은 정책이지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서○○은 “충남도민 안전보험은 좋은 정책인데 많은 도민들이 알지 못하므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문○○은 “도민 안전보험에 대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중산층 이하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 표 34 〉 충남도 공제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응답자	의견 내용
고○○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주변을 보면 가끔 영세민이 아님에도 지원을 받는 걸 보게 된다.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이 되었으면 한다.
김○○	충남도민 안전보험에 대해 자동가입 되었다면 도민들에게 홍보 등을 하여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영세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는 찬성하며 사업장을 더 확대 했으면 한다.
오○○	국민들은 직장인과 소상공인으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직장인 세금 받아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정책이란 생각이 든다. 소상공인들도 충분히 경쟁력을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것 같다.
문○○	모든 정책을 포퓰리즘적으로 구상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영세소상공인 지원 등도 소상공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안전보험은 잘 시행한 것 같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중산층 이하 도민들이 일반보험 가입 시 중복된 부분을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서○○	영세소상공인은 사회보험제도에서 현재도 보호받는 것이 어렵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만 월급 받는 근로자에 비해 영세소상공인은 사회적 보호장치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다. 충남도민 안전보험은 좋은 정책인데 많은 도민들이 알지 못하므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4) 주택지원 정책 의견 및 평가

충남도의 대표적인 주택지원 정책은 더행복주택사업(일명 꿈비채)⁷⁾이다. 충남도는 현재 청년 주택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주택건설을 통해 한 자녀 출생 시 임대료 50% 감면, 두 자녀 출생 시 임대료 전액 감면하는 더행복주택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잘함, 41.7%, 매우 잘함 46.7%로 잘했다는 의견이 8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잘못함 1.2%, 매우 잘못함 1.2%로 잘못했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 표 35 〉 더행복주택사업 평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잘못함	잘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평균 (5점척도)
더행복주택사업	(84)	1.2	1.2	9.5	41.7	46.4	4.31

충남도는 2022년까지 더행복주택 1,000가구를 건설하고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찬성 39.8%, 적극 찬성 45.8%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85.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주택부족과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담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표 36 〉 더행복주택사업 확대 의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매우 반대	반대	보통	찬성	적극 찬성	평균 (5점척도)
더행복주택사업 확대	(83)	0	2.4	12.0	39.8	45.8	4.29

7) 충남 꿈비채의 입주대상은 무주택 예비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소득근거지(지역 내 직장인) 등이 해당된다. 입주 후 자녀 1명 출생 시 임대료 50% 지원, 자녀 2명 출생 시 임대료는 무료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6년으로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36㎡주택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료 9만 원, 44㎡주택은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임대료 11만 원, 59㎡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15만 원이다.

충남도 주택지원 정책에 대한 도민 의견은 [표 37]과 같다. 주택지원정책은 현재 충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충남형 더행복주택사업(브랜드명 꿈비채)이다. 이 사업은 저출생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사업은 부동산 문제가 저출생과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값싼 임대료의 주택을 제공하는 한편, 출산 시에는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는 측면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도민평가단도 이 사업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도민평가단 전○○은 “더행복주택사업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마주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라는 국가적 3대 위기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매우 훌륭한 정책이다”고 평가하면서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는 해당 사업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인적·물적 투입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사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은 “신혼 또는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더행복주택의 크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며 “더행복주택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주택의 크기를 다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응답했다.⁸⁾ 이○○은 더행복주택의 지역적 편파성을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혜택을 천안·아산이 가져가고 있어 인구가 적은 지역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⁹⁾ 성○○ 또한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많은 사업 중에서 저출산 및 장기 전략 차원의 지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개별적이고 단회적인 지원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 지원을 위한 자금마련과 정책의 뒷받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과 전략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8) 충남형 더행복주택사업은 현재 아산시 배방읍 월천지구에 600호가 건설 중에 있으며 2022년 준공 및 입주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를 보면 36㎡ 1개 타입 60세대, 44㎡ 1개 타입 180세대, 59㎡ 5개 타입 360세대이다. 이들 면적은 아이들을 둘 낳아 기르기에 좁은 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9) 충남도는 아산 배방 600호 외에 당진 채운 100호, 예산 주교 87호, 홍성 내포 75호, 천안 남산 28, 서천 군사 25호 등 6개 지구 총 915세대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천안, 서산, 보령에 매입형 공공주택 1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24세대는 분양 완료)

〈 표 37 〉 충남도 주택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응답자	의견 내용
정○○	더행복주택사업의 경우 평수가 작아 주택문제와 저출생문제가 해결될 거라 보지 않는다.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영아기부터 저학년까지 아이들의 놀잇감, 그림책 등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물건이 가장 많은 시기라 (구)25평의 경우 30평대로 이사를 고민하게 된다. 신희살림에는 작은 평수도 무리 없지만, 자녀가 하나, 둘 태어나면서 주택의 크기가 중요하다. 노령의 경우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되려 작은 평수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희 또는 어린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더행복주택의 크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더행복주택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주택의 크기를 다시 고려해 주면 좋겠다.
이○○	충남 인구를 보면, 대부분의 혜택을 천안·아산이 가져가고 있다. 인구가 적은 지역도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성○○	도에서 시행하는 많은 사업 중에서 저출산 및 장기 전략 차원의 지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개별적이고 단회적인 지원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 지원을 위한 자금마련과 정책의 뒷받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오○○	주택문제로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출산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실례로 ‘휴먼거지’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지... 민영주택을 분양 시에 도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도입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건설사들의 막대한 이익을 도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에서도 신축하는 아파트의 일정비율을 매입하여 임대 등의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브랜드에 밀려서 자존심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도민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전○○	더행복주택사업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마주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라는 국가적 3대 위기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본다. 특별히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작금의 부동산 사태와 관련하여서도 충청남도가 매우 모범적인 해법과 선례를 공적 영역(public sector)의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우수 정책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각종 행정적 지원과 행정적 응원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입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더하여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는 해당 사업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인적·물적 투입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3) 요약 및 시사점

앞서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을 무상정책, 수당지급정책, 공제지원정책, 주택제공정책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여기에서는 각 영역별 평가와 의견 그리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무상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충남도 무상정책에는 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 7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도서관 여객선 운임 무료화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선호도 평가(5점 척도)를 보면,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정책’이 4.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를 65~70세 이하와 어린이 및 청소년(만6세~18세)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각각 3.57점, 3.77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정책의 확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도서관 여객선 운임 무료화정책’은 4.06점으로 무상정책에서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정책’은 4.42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를 고등학교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4.2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도 높고 확대에 대한 의견도 높아 고등학교 무상교복정책은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도가 처음 실시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정책’과 ‘고등학교·특수학교 친환경무상급식 급식정책’은 4.26점, 4.21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대학교와 복지시설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각각 3.27점, 3.9점으로 대학교보다는 복지시설로 확대하는 데 찬성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급식이 공공급식으로 확대되면서 복지시설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4] 충남도 무상정책 평가 및 의견(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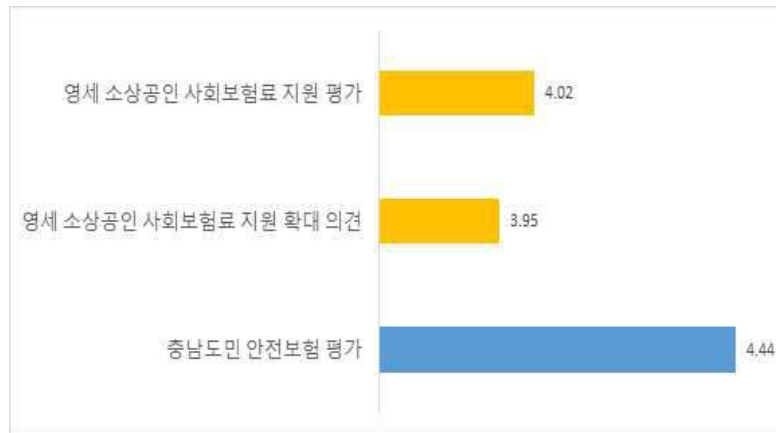
두 번째는 수당지급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수당지급에는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과 농어민수당이 있다. 이에 대한 선호도 평가(5점 척도)를 보면, ‘행복키움수당정책’은 4.24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현재 행복키움수당은 만3세(36개월) 이하 아이의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5세 정도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3.94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행되고 정책과 이를 확대하자는 의견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농어민수당 지급정책’에 대해서는 3.99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농어가당 연간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3.79점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농어민수당을 통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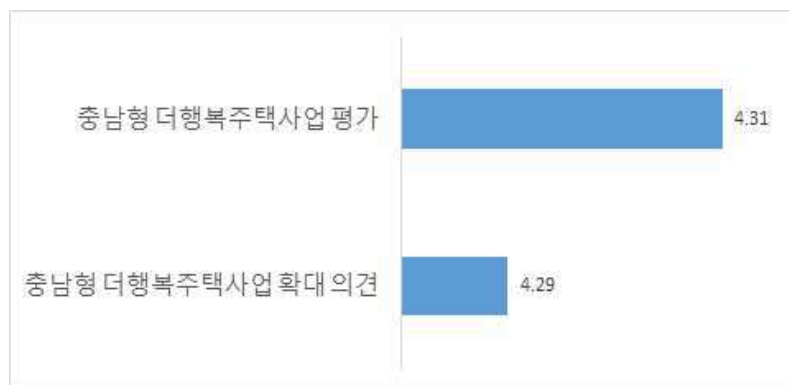
[그림 15] 충청남도 수당지급 정책 평가 및 의견(5점 척도)

세 번째는 공제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과 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정책이 있다. 이에 대한 선호도 평가(5점 척도)를 보면, ‘충남도민 안전보험 지원정책’은 4.4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정책은 위험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고 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인식도가 낮은 만큼 향후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4.02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3.95점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확대 의견 간 차이가 크지 않아 향후 확대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충남도 공제지원정책 평가 및 의견(5점 척도)

마지막으로는 주택제공정책이다. 충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해 저출산(생)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충남형 더행복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저렴한 임대료를 토대로 신혼부부가 한 자녀 출산 시 임대료 50% 감면, 2자녀 출산 시 전액 감면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형 더행복주택사업’에 대한 선호도 평가(5점 척도)를 보면, 4.31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 정책의 확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4.29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충남형 더행복주택사업에 대해 도민은 높게 평가하고 이 정책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동산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고 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결혼을 기피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충남형 더행복주택은 사회양극화 해소에 유효할 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7] 충남도 주택제공정책(충남형 더행복주택) 평가 및 의견(5점 척도)

이상으로 충남도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정책을 평가했다. 이외에 사회양극화와 관련해 많은 정책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정책, 수당정책, 공제지원정책, 주택제공정책 등 크게 4가지 정책을 대상으로 각각의 정책 선호도를 평가하고 이러한 정책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정책 같은 경우는 정책평가는 좋으나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는 정책도 있는 반면, 충남형 더행복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에 대한 평가도 좋고 확대에 대한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나온 결과들은 향후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5장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1.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개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양극화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보통 소득, 일자리, 부동산과 자산, 교육, 문화, 복지,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선 논의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양극화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양극화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국한할 수 없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사회양극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 양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들이 주민들의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정책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민의 사회양극화에 대한 인식실태, 정책선호도, 정책제안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 [표 38]과 같다.

〈 표 38 〉 충남도민 대상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목적	사회양극화에 관한 충남도민의 인식실태, 정책선호도, 정책제안 등을 파악
조사지역	충청남도 전체 15개 시·군
표본크기	1,050명
조사 내용	사회양극화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식 실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선호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수집방법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
조사대상자	충남도민
조사기간	2021. 06. 15. ~ 2021. 07. 14(1개월) (조사실행기관: 선인리서치)

2. 충남도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응답자 일반특성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전체 1050명이다. 이 중 성별로 보면, 남자 553명(52.7%), 여자 497명(47.3%)으로 남자가 다소 많았고, 결혼 여부를 보면, 기혼 778명(74.1%), 미혼 272명(25.9%)로 기혼이 월등히 많았다. 연령대를 보면, 20대 170명(16.2%), 30대 186명(17.7%), 40대 234명(22.3%), 50대(24.4%), 60대 이상 204명(19.4%)로 나타났다. 학력을 보면, 중졸이하 124명(11.8%), 고졸 454명(43.2%), 전문대졸 155명(14.8%), 대졸이상 317명(30.2%)으로 나타났다. 기타 가구형태, 월소득, 직업 등은 [표 39]를 참고 바란다.

〈 표 39 〉 응답자 일반특성1

[전체]		사례수	%
		1050	100.0%
성별	남 자	553	52.7%
	여 자	497	47.3%
결혼여부	기 혼	778	74.1%
	미 혼	272	25.9%
연령대	20대	170	16.2%
	30대	186	17.7%
	40대	234	22.3%
	50대	256	24.4%
	60대 이상	204	19.4%
학력	중졸이하	124	11.8%
	고졸	454	43.2%
	전문대졸	155	14.8%
	대졸이상	317	30.2%
가구형태	1인	111	10.6%
	2인	265	25.2%
	3인	360	34.3%
	4인 이상	314	29.9%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2	9.7%
	200-400만원 미만	330	31.4%
	400-600만원대	336	32.0%
	600만원 이상	282	26.9%

직업	관리자	36	3.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0%
	사무종사자	174	16.6%
	서비스 종사자	170	16.2%
	판매종사자	157	15.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4.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7.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0%
	단순노무종사자	29	2.8%
	주부	81	7.7%
	학생	63	6.0%
	무직	32	3.0%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계층의식, 정치성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계층의식은 하층 99명(9.4%), 중하층 471명(44.9%), 중층 404명(38.5%), 중상층 76명(7.2%)으로 중하층이 가장 많았다. 상층이라는 응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을 보면, 보수 108명(10.3%), 중도보수 257명(24.5%), 중도 327명(31.1%), 진보 65명(6.2%)으로 중도성향이 가장 많았고 보수와 진보 성향이 거의 비슷했다. 주택형태는 단독이 371명(35.3%), 아파트 510명(48.6%), 다세대주택/오피스텔(16.1%)로 아파트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거주시군은 인구규모에 따르기 때문에 천안시 170명(16.2%), 아산시 115명(11.0%) 등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3~8% 등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행정단위로는 읍지역 322명(30.7%), 면지역 284명(27.0%), 동지역 444명(42.3%)로 나타났고 농촌지역(읍·면)이 57.7%로 동지역 42.5%보다 다소 많았다.

〈 표 40 〉 응답자 일반특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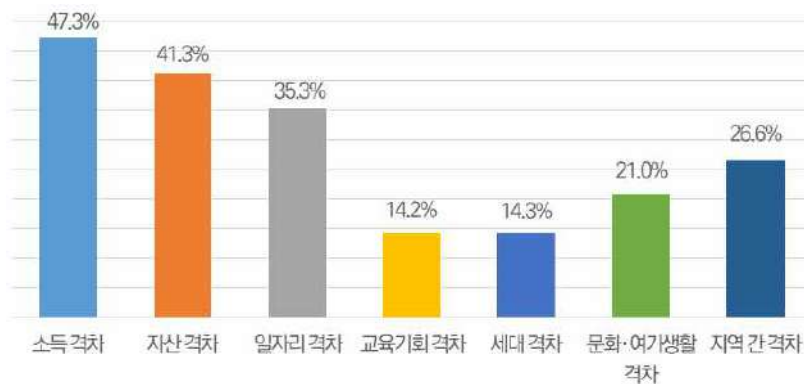
[전체]		사 례 수	%
		1050	100.0%
계층의식	하층	99	9.4%
	중하층	471	44.9%
	중층	404	38.5%
	중상층	76	7.2%
정치성향	보수	108	10.3%
	중도보수	257	24.5%
	중도	327	31.1%
	중도진보	293	27.9%
	진보	65	6.2%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35.3%
	아파트	510	48.6%
	다세대주택/오피스텔	169	16.1%
거주시군	천안시	170	16.2%
	공주시	67	6.4%
	보령시	66	6.3%
	아산시	115	11.0%
	서산시	85	8.1%
	논산시	70	6.7%
	계룡시	43	4.1%
	당진시	83	7.9%
	금산군	46	4.4%
	부여군	52	5.0%
	서천군	45	4.3%
	청양군	36	3.4%
	홍성군	64	6.1%
	예산군	57	5.4%
	태안군	51	4.9%
거주행정단위	읍	322	30.7%
	면	284	27.0%
	동	444	42.3%

2) 사회양극화에 관한 인식

(1) 사회양극화의 의미

사회양극화는 비단 소득 등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지역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사람들마다 그 뜻을 달리 해석한다. 그래서 충청도민이 이해하는 사회양극화의 의미를 알아봤다. 그 결과는 [그림 18], [표 41]과 같다.(중복 응답)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양극화의 의미는 ‘소득 격차’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산 격차’가 41.3%, ‘일자리 격차’ 35.3%, ‘지역 간 격차’ 26.6%, ‘문화·여가생활 격차’가 21.0%, ‘세대 격차’ 14.3%, ‘교육기회 격차’ 14.2% 순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사회양극화의 의미로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 경제적 격차를 우선으로 꼽았다.



[그림 18] 사회양극화 의미(복수응답)

유형별로 보면 모든 영역에서 ‘소득 격차’가 사회양극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했지만 일부 계층과 그룹에서는 ‘자산 격차’ 등을 핵심 요인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에서는 60대 이상(44.1%),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41.9%), 월소득은 200만원 미만(41.2%), 직업에서는 관리자(47.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40.1%), 주부(48.1%), 계층 의식에서는 하층(49.5%), 정치성향으로는 보수(47.2%) 등이었다. 전체적으로는 고령층, 저학력, 저소득, 보수층에서 사회양극화의 핵심은 ‘자산 격차’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 외 직업별로는 학생(44.4%), 거주행정단위에서는 면지역(41.2%)에서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를 동등하게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격차’를 사회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는 계층도 있었다. 바로 직업에서 무직(65.6%)이었다. 무직에게는 일자리가 무엇보다 절박한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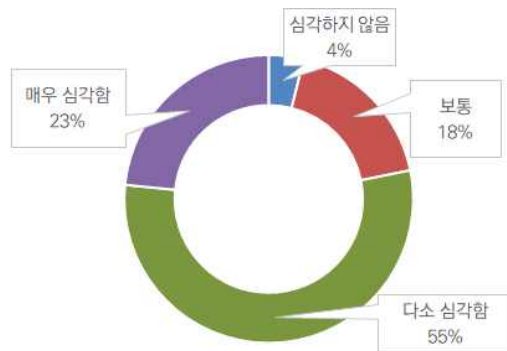
〈 표 41 〉 사회양극화 의미(복수응답)

구분		(사례수)	소득 격차	자산 격차	일자리 격차	교육 기회 격차	세대 격차	문화· 여가 생활 격차	지역 간 격차
[전체]		(1050)	47.3	41.3	35.3	14.2	14.3	21.0	26.6
성별	남 자	(553)	48.3	41.6	37.3	13.7	12.8	19.3	26.9
	여 자	(497)	46.3	41.0	33.2	14.7	15.9	22.7	26.2
결혼 여부	기 혼	(778)	46.1	43.2	32.8	14.0	14.8	21.0	28.1
	미 혼	(272)	50.7	36.0	42.6	14.7	12.9	21.0	22.1
연령대	20대	(170)	50.0	33.5	45.9	14.7	14.7	20.0	21.2
	30대	(186)	48.4	38.2	42.5	16.1	7.0	23.7	24.2
	40대	(234)	48.7	45.7	38.5	15.8	7.3	21.8	22.2
	50대	(256)	51.2	42.6	31.6	11.3	12.9	22.3	28.1
	60대 이상	(204)	37.7	44.1	21.1	13.7	30.4	16.7	36.3
학력	중졸이하	(124)	35.5	41.9	17.7	15.3	35.5	15.3	38.7
	고졸	(454)	48.2	39.6	37.0	14.8	13.7	20.9	25.8
	전문대졸	(155)	49.7	38.7	41.9	10.3	12.3	22.6	24.5
	대졸이상	(317)	49.5	44.8	36.6	14.8	7.9	22.4	24.0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2)	34.3	41.2	27.5	16.7	26.5	20.6	33.3
	200~400만원 미만	(330)	52.4	38.2	32.4	13.3	17.6	18.5	27.6
	400~600만원대	(336)	44.9	42.0	37.8	16.7	9.2	24.1	25.3
	600만원 이상	(282)	48.9	44.3	38.7	11.3	12.1	20.2	24.5
직업	관리자	(36)	44.4	47.2	44.4	8.3	11.1	22.2	22.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56.3	46.9	28.1	12.5	3.1	25.0	28.1
	사무종사자	(174)	50.0	44.8	37.4	14.4	10.3	21.3	21.8
	서비스 종사자	(170)	46.5	36.5	39.4	14.1	11.2	22.9	29.4
	판매종사자	(157)	56.1	42.0	29.3	13.4	15.9	16.6	26.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34.9	40.1	23.0	16.4	25.0	21.7	38.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50.0	41.5	39.0	11.0	11.0	23.2	24.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57.1	35.7	52.4	14.3	11.9	4.8	23.8
	단순노무종사자	(29)	48.3	37.9	44.8	13.8	13.8	13.8	27.6
	주부	(81)	46.9	48.1	23.5	13.6	12.3	29.6	25.9

	학생	(63)	44.4	44.4	41.3	14.3	20.6	22.2	12.7
	무직	(32)	34.4	25.0	65.6	25.0	12.5	18.8	18.8
계층 의식	하층	(99)	42.4	49.5	36.4	14.1	21.2	12.1	24.2
	중하층	(471)	51.2	40.3	32.5	15.7	14.6	18.3	27.4
	중층	(404)	44.6	40.3	38.1	12.1	11.9	25.2	27.7
	중상층	(76)	44.7	42.1	36.8	15.8	15.8	26.3	18.4
	보수	(108)	38.9	47.2	25.9	13.9	18.5	16.7	38.9
정치 성향	중도보수	(257)	46.3	36.2	31.9	18.3	21.0	19.8	26.5
	중도	(327)	48.9	43.4	38.5	11.6	11.0	22.3	24.2
	중도진보	(293)	49.5	42.0	39.6	13.3	10.6	19.1	25.9
	진보	(65)	47.7	38.5	29.2	15.4	13.8	33.8	21.5
	읍	(322)	47.2	39.8	31.1	14.9	15.2	24.8	27.0
거주 행정 단위	면	(284)	41.2	41.2	33.1	14.4	18.3	21.8	29.9
	동	(444)	51.4	42.6	39.9	13.5	11.0	17.6	24.1

(2)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

현재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했다. 조사 결과는 [그림 19]와 [표 42]와 같다. 먼저 전체적인 응답 결과를 보면, ‘다소 심각함’이 54.8%로 가장 많았고, ‘매우 심각함’은 23.4%로 나타났다. 이 둘을 더하면 충남도민의 78.2%는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그림 19]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

우리나라 사회양극화가 심각하다(다소 심각함+매우 심각함)는 응답한 결과를 보면, 성별에서는 남자(78.9%), 연령대로는 30대(89.8%, 1순위), 20대(85.3%), 학력으로는 고졸(81.5%), 월소득은 200-400만원 미만(84.5%), 직업으로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88.1%), 단순노무종사자(86.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82.9%) 순이며, 계층의식에서는 중하층(89.2%), 정치성향은 보수(84.3%), 거주행정단위는 면지역(80.3%)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연령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직업적으로는 기능직과 판매종사자, 계층적으로는 중하층, 정치성향으로 보수층, 지역적으로 농촌지역에서 우리사회의 양극화 정도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사회양극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단순노무종사자(4.21), 30대(4.18), 중하층(4.17), 보수(4.16), 20대(4.14), 200-400만 원 미만(4.12), 판매종사자(4.1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4.09), 200만원 미만(4.08), 학생(4.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유추해 보면, 30대이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며 보수는 적고 생각은 보수적인 계층이 우리나라 사회양극화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 〉 현재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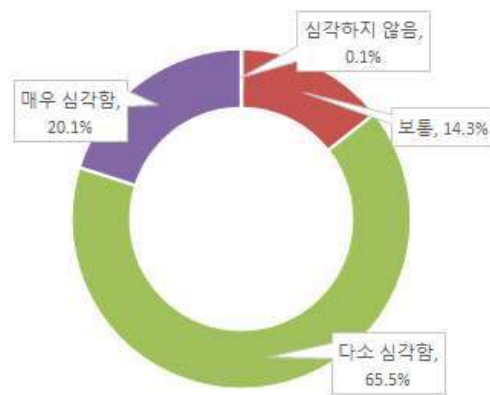
		(사례 수)	심각하지 않음	보통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평균 (5점척도)
[전체]		(1050)	3.9	17.9	54.8	23.4	3.98
성별	남 자	(553)	3.8	17.4	53.2	25.7	4.01
	여 자	(497)	4.0	18.5	56.5	20.9	3.94
연령대	20대	(170)	3.5	11.2	53.5	31.8	4.14
	30대	(186)	2.2	8.1	59.7	30.1	4.18
	40대	(234)	5.6	17.5	59.4	17.5	3.89
	50대	(256)	4.7	26.2	48.8	20.3	3.85
	60대 이상	(204)	2.9	22.5	53.4	21.1	3.93
학력	중졸이하	(124)	1.6	22.6	54.8	21.0	3.95
	고졸	(454)	2.9	15.6	55.5	26.0	4.05
	전문대졸	(155)	3.9	18.1	56.1	21.9	3.96
	대졸이상	(317)	6.3	19.2	53.0	21.5	3.90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2)		16.7	58.8	24.5	4.08
	200-400만원 미만	(330)	3.0	12.4	54.5	30.0	4.12
	400-600만원대	(336)	5.1	14.3	57.4	23.2	3.99
	600만원 이상	(282)	5.0	29.1	50.4	15.6	3.77
직업	관리자	(36)	19.4	33.3	44.4	2.8	3.3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9.4	40.6	40.6	9.4	3.50
	사무종사자	(174)	2.9	17.8	54.6	24.7	4.01
	서비스 종사자	(170)	6.5	14.7	60.0	18.8	3.91
	판매종사자	(157)	0.6	17.2	52.2	29.9	4.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2.6	21.7	55.9	19.7	3.9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9	12.2	52.4	30.5	4.0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9.5	71.4	16.7	4.02
	단순노무종사자	(29)	3.4	10.3	48.3	37.9	4.21
	주부	(81)	1.2	19.8	51.9	27.2	4.05
	학생	(63)	3.2	15.9	50.8	30.2	4.08
	무직	(32)	3.1	12.5	65.6	18.8	4.00
계층의식	하층	(99)	1.0	13.1	64.6	21.2	4.06
	중하층	(471)	0.8	10.0	60.1	29.1	4.17
	중층	(404)	4.0	26.0	50.0	20.0	3.86
	중상층	(76)	26.3	30.3	34.2	9.2	3.26
정치성향	보수	(108)	0.9	14.8	51.9	32.4	4.16
	중도보수	(257)	6.2	25.3	49.0	19.5	3.82
	중도	(327)	3.1	18.0	57.8	21.1	3.97
	중도진보	(293)	2.7	13.3	59.7	24.2	4.05
	진보	(65)	9.2	13.8	44.6	32.3	4.00
거주행정단위	읍	(322)	4.0	16.1	54.0	25.8	4.02
	면	(284)	2.8	16.9	59.5	20.8	3.98
	동	(444)	4.5	19.8	52.3	23.4	3.95

(3) 5년 전 비해 현재 사회양극화 정도

최근 5년 간 사회양극화 정도를 비교했다. 여기서 5년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와 이전 박근혜 정부 간 비교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으로 탄생한 정부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성장과 아울러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특히 강조했다.

5년 전에 비해 현재 사회양극화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 20], [표 4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소 심각함’ 65.5%, ‘매우 심각함’ 20.1%로 전체 응답자의 85.6%는 5년 전보다 사회양극화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심각하지 않음’은 0.1%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사회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는 평가이다.



[그림 20] 5년 전 대비 사회양극화 정도

유형별로 5년 전에 비해 사회양극화가 심각하다(다소 심각함+매우 심각함)는 응답을 보면, 성별은 남자(86.2%), 연령은 30대(94.1%), 20대(92.3%), 학력은 전문대졸(88.4%), 월소득은 200-400만원 미만(88.4%),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93.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92.2%), 판매종사자(90.4%) 순이며, 계층의식은 중하층(92.8%), 정치성향은 보수(90.8%), 중도진보(90.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산시(91.8%), 예산군(89.5%), 태안군(88.2%)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행정단위로는 면지역(86.7%)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해 현재 사회양극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30대(4.24), 단순노무종사자(4.2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4.19), 홍성군(4.19), 중하층(4.18), 예산군(4.18), 중도진보(4.16), 20대(4.15), 전문대졸(4.13), 200-400만원 미만(4.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면, 5년 전에 비해 사회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평가하는 계층이나 지역은 30대이면서 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에 종사하고 지역적으로는 홍성군과 예산군에 거주하며 정치성향은 중도진보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농어촌지역 근로자가 5년 전에 비해 사회양극화가 더 심각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3 〉 5년 전 대비 현재 사회양극화 정도

		(사례 수)	심각하지 않음	보통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평균(5점 척도)
[전체]		(1050)	0.1	14.3	65.5	20.1	4.06
성별	남 자	(553)	0.2	13.6	65.1	21.2	4.07
	여 자	(497)	.	15.1	66.0	18.9	4.04
연령대	20대	(170)	.	7.6	69.4	22.9	4.15
	30대	(186)	.	5.9	64.0	30.1	4.24
	40대	(234)	0.4	13.7	68.8	17.1	4.03
	50대	(256)	.	21.1	59.8	19.1	3.98
	60대 이상	(204)	.	19.6	67.2	13.2	3.94
학력	중졸이하	(124)	.	19.4	68.5	12.1	3.93
	고졸	(454)	0.2	12.1	68.7	18.9	4.06
	전문대졸	(155)	.	11.6	63.9	24.5	4.13
	대졸이상	(317)	.	16.7	60.6	22.7	4.06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2)	.	11.8	69.6	18.6	4.07
	200~400만원 미만	(330)	0.3	11.8	63.3	24.5	4.12
	400~600만원대	(336)	.	15.2	64.9	19.9	4.05
	600만원 이상	(282)	.	17.0	67.4	15.6	3.99
직업	관리자	(36)	.	41.7	47.2	11.1	3.6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	28.1	46.9	25.0	3.97
	사무종사자	(174)	.	12.6	66.1	21.3	4.09
	서비스 종사자	(170)	.	15.3	64.1	20.6	4.05
	판매종사자	(157)	.	9.6	70.7	19.7	4.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	19.1	70.4	10.5	3.9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1.2	11.0	61.0	26.8	4.1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	7.1	66.7	26.2	4.19
	단순노무종사자	(29)	.	6.9	62.1	31.0	4.24
	주부	(81)	.	13.6	63.0	23.5	4.10

	학생	(63)		9.5	66.7	23.8	4.14
	무직	(32)		9.4	78.1	12.5	4.03
계층 의식	하층	(99)	1.0	10.1	67.7	21.2	4.09
	중하층	(471)		7.2	67.7	25.1	4.18
	중층	(404)		18.3	67.1	14.6	3.96
	중상층	(76)		42.1	40.8	17.1	3.75
정치 성향	보수	(108)		9.3	74.1	16.7	4.07
	중도보수	(257)	0.4	19.1	67.3	13.2	3.93
	중도	(327)		15.9	63.6	20.5	4.05
	중도진보	(293)		9.6	64.8	25.6	4.16
	진보	(65)		16.9	56.9	26.2	4.09
거주 시군	천안시	(170)		14.7	65.3	20.0	4.05
	공주시	(67)		22.4	61.2	16.4	3.94
	보령시	(66)		18.2	66.7	15.2	3.97
	아산시	(115)		16.5	61.7	21.7	4.05
	서산시	(85)		8.2	70.6	21.2	4.13
	논산시	(70)	1.4	11.4	64.3	22.9	4.09
	계룡시	(43)		11.6	69.8	18.6	4.07
	당진시	(83)		12.0	74.7	13.3	4.01
	금산군	(46)		17.4	73.9	8.7	3.91
	부여군	(52)		15.4	59.6	25.0	4.10
	서천군	(45)		17.8	64.4	17.8	4.00
	청양군	(36)		13.9	66.7	19.4	4.06
	홍성군	(64)		12.5	56.3	31.3	4.19
	예산군	(57)		10.5	61.4	28.1	4.18
	태안군	(51)		11.8	68.6	19.6	4.08
거주 행정 단위	읍	(322)		15.5	59.6	24.8	4.09
	면	(284)		13.4	68.7	18.0	4.05
	동	(444)	0.2	14.0	67.8	18.0	4.04

(4)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도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도에 대한 응답은 다음 [그림 21], [표 44]와 같다. 조사 결과 사회양극화가 심각하다(다소 심각함+매우 심각함)는 응답은 64.2%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인 78.2%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5점 척도에서도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도는 3.67점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평가인 3.98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도

충남도 사회양극화가 심각하다(다소 심각함+매우 심각함)고 응답한 결과를 보면, 성별에서는 남성(65.3%), 연령은 30대(81.1%), 20대(79.4%) 순이며, 학력은 전문대졸(71.6%), 월소득은 200-400만 원 미만(76.3%),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75.8%), 무직(71.9%), 판매종사자(71.3%) 순으로 나타났다. 계층의식에서는 중하층(73.7%), 정치성향은 중도진보(72.0%), 진보(69.2%)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시군별로는 보면, 보령(74.3%), 서산시(67.1%) 순이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비슷했다. 거주행정단위를 보면, 동지역(64.6%), 면지역(65.2%), 읍지역(62.7%)로 농어촌 지역에서 사회양극화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보령(3.94), 30대(3.91점), 20대(3.91점), 진보(3.88), 200-400만 원 미만(3.87점), 중하층(3.84), 단순노무종사자(3.83), 학생(3.83), 전문대졸(3.7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령지역 주민들이 사회양극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젊으면서도 진보적이지만 소득과 학력은 낮고 계층적으로는 중하층에서 사회양극화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 〉 현재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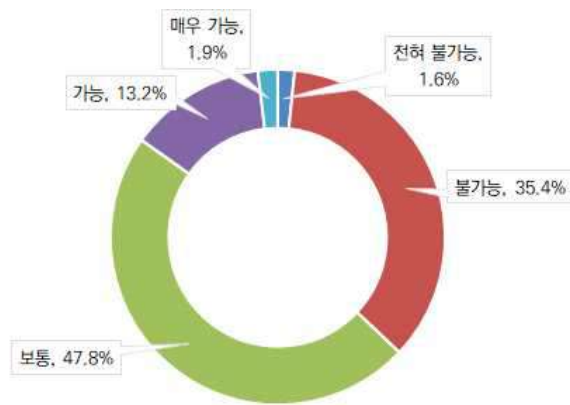
		(사례수)	심각하지 않음	보통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평균(점)
[전체]		(1050)	7.4	28.4	53.8	10.4	3.67
성별	남 자	(553)	8.9	25.9	53.9	11.4	3.68
	여 자	(497)	5.8	31.2	53.7	9.3	3.66
연령대	20대	(170)	1.8	18.8	65.9	13.5	3.91
	30대	(186)	0.5	18.3	63.4	17.7	3.98
	40대	(234)	2.6	34.2	54.7	8.5	3.69
	50대	(256)	22.3	30.5	40.2	7.0	3.32
	60대 이상	(204)	5.4	36.3	51.0	7.4	3.60
학력	중졸이하	(124)	4.8	38.7	50.8	5.6	3.57
	고졸	(454)	6.4	27.5	56.8	9.3	3.69
	전문대졸	(155)	3.9	24.5	61.3	10.3	3.78
	대졸이상	(317)	11.7	27.4	47.0	13.9	3.63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2)	2.9	30.4	53.9	12.7	3.76
	200-400만원 미만	(330)	2.1	21.5	63.6	12.7	3.87
	400-600만원대	(336)	3.9	34.5	54.5	7.1	3.65
	600만원 이상	(282)	19.5	28.4	41.5	10.6	3.43
직업	관리자	(36)	38.9	36.1	16.7	8.3	2.9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7.5	25.0	25.0	12.5	3.13
	사무종사자	(174)	7.5	23.6	55.2	13.8	3.75
	서비스 종사자	(170)	7.1	34.7	52.4	5.9	3.57
	판매종사자	(157)	5.1	23.6	60.5	10.8	3.7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4.6	33.6	55.9	5.9	3.6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4	28.0	54.9	14.6	3.8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7.1	21.4	64.3	7.1	3.71
	단순노무종사자	(29)	3.4	20.7	65.5	10.3	3.83
	주부	(81)	2.5	33.3	49.4	14.8	3.77
	학생	(63)	3.2	27.0	54.0	15.9	3.83
	무직	(32)	6.3	21.9	65.6	6.3	3.72
계층 의식	하층	(99)	2.0	28.3	59.6	10.1	3.78
	중하층	(471)	3.2	23.1	60.5	13.2	3.84
	중층	(404)	10.6	31.7	50.0	7.7	3.55
	중상층	(76)	23.7	43.4	25.0	7.9	3.17
정치 성향	보수	(108)	7.4	24.1	58.3	10.2	3.71
	중도보수	(257)	9.7	30.7	52.1	7.4	3.57
	중도	(327)	5.8	35.8	49.8	8.6	3.61

	중도진보	(293)	6.5	21.5	61.1	10.9	3.76
	진보	(65)	10.8	20.0	40.0	29.2	3.88
거주 시군	천안시	(170)	7.1	29.4	50.6	12.9	3.69
	공주시	(67)	14.9	20.9	47.8	16.4	3.66
	보령시	(66)	6.1	19.7	48.5	25.8	3.94
	아산시	(115)	7.8	26.1	55.7	10.4	3.69
	서산시	(85)	4.7	28.2	56.5	10.6	3.73
	논산시	(70)	7.1	34.3	52.9	5.7	3.57
	계룡시	(43)	7.0	30.2	58.1	4.7	3.60
	당진시	(83)	2.4	32.5	62.7	2.4	3.65
	금산군	(46)	8.7	28.3	47.8	15.2	3.70
	부여군	(52)	9.6	32.7	46.2	11.5	3.60
	서천군	(45)	8.9	26.7	57.8	6.7	3.62
	청양군	(36)	2.8	36.1	52.8	8.3	3.67
	홍성군	(64)	10.9	34.4	46.9	7.8	3.52
	예산군	(57)	8.8	22.8	63.2	5.3	3.65
	태안군	(51)	5.9	25.5	62.7	5.9	3.69
거주행 정단위	읍	(322)	8.1	29.2	51.2	11.5	3.66
	면	(284)	5.6	29.2	58.5	6.7	3.66
	동	(444)	8.1	27.3	52.7	11.9	3.68

(5) 계층이동 가능성

사회양극화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계층이 상층과 하층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상층과 하층만 남은 사회구조에서는 계층이동이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계층이동이 단절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로 이어지고 이러한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인 저출생도 사실은 계층이동의 단절에서 비롯된 저항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들이 아이를 낳아도 온전한 시민으로 키울 수 없는 사회, 가난의 대물림으로 한번 가난에 내몰린 사람들은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자식까지 가난을 대물림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후속세대를 낳지 않는다. 계층 사다리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설문에서는 충남도민이 느끼는 계층이동(사회적 지위 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그림 22], [표 45]와 같다. ‘개인이 노력할 경우 계층이동(사회적 지위 이동) 가능성’에 대해 충남도민의 15.1%만이 가능하다(가능+매우 가능)고 응답했다. ‘매우 가능’은 1.9%에 불과했다. 반면, 불가능하다(불가능+전혀 불가능)는 37.0%를 차지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계층이동의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계층 이동(사회적 지위 이동) 가능성

유형별로 계층이동이 가능하다(가능+매우 가능)하다는 응답을 보면, 성별에서는 남자(14.3%), 결혼여부에서는 미혼(4.7%), 연령에서는 20대(1.2%), 30대(4.8%), 월소득에서는 200만 원 미만(8.8%), 직업은 학생(0.0%), 무직(3.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7.1%), 계층의식은 하층(6.1%), 정치성향은 진보(10.8%), 거주행정단위는 읍지역(10.8%) 등에 낮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계층은 학생으로 우리사회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0.0%로 응답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층이동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고 있어 우리사회의 세대 간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들의 느끼는 박탈감과 좌절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계층이동 가능성(사회적 지위 이동)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계층으로는 무직(2.34), 20대(2.46), 학생(2.48), 30대(2.5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2.57), 하층(2.58), 200만 원 미만(2.67), 전문대졸(2.70)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없는 젊은층, 그리고 단순 생산직, 저소득 전문대졸 계층에서 개인이 노력해도 계층이동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 표 45 〉 개인 노력 시 계층이동(사회적 지위 이동)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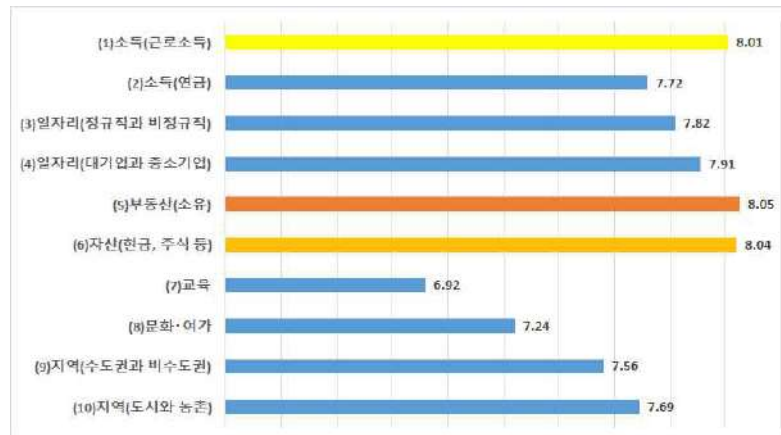
		(사례 수)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평균 (5점척도)
[전체]		(1050)	1.6	35.4	47.8	13.2	1.9	2.78
성별	남 자	(553)	1.8	36.5	47.4	12.1	2.2	2.76
	여 자	(497)	1.4	34.2	48.3	14.5	1.6	2.81
결혼 여부	기 혼	(778)	1.3	31.1	48.8	16.5	2.3	2.87
	미 혼	(272)	2.6	47.8	44.9	4.0	0.7	2.53
연령대	20대	(170)	1.2	53.5	44.1		1.2	2.46
	30대	(186)	4.3	39.8	51.1	4.8		2.56
	40대	(234)	1.7	32.9	54.3	11.1		2.75
	50대	(256)	1.2	37.5	33.2	27.7	0.4	2.89
	60대 이상	(204)		16.7	58.8	16.2	8.3	3.16
학력	중졸이하	(124)		23.4	57.3	13.7	5.6	3.02
	고졸	(454)	1.3	37.0	45.6	14.1	2.0	2.78
	전문대졸	(155)	3.9	33.5	51.6	10.3	0.6	2.70
	대졸이상	(317)	1.6	38.8	45.4	13.2	0.9	2.73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2)		42.2	49.0	8.8		2.67
	200~400만원 미만	(330)	1.5	31.2	53.3	10.9	3.0	2.83
	400~600만원대	(336)	1.8	33.0	54.8	8.6	1.8	2.76
	600만원 이상	(282)	2.1	40.8	32.6	23.0	1.4	2.81
직업	관리자	(36)		25.0	44.4	30.6		3.0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	34.4	31.3	28.1	3.1	2.94
	사무종사자	(174)	1.7	32.8	51.1	13.8	0.6	2.79
	서비스 종사자	(170)	1.8	38.8	44.1	14.1	1.2	2.74
	판매종사자	(157)	1.3	35.7	48.4	12.1	2.5	2.7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30.9	50.7	15.8	2.6	2.9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9	31.7	46.3	12.2	4.9	2.8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45.2	45.2	7.1		2.57
	단순노무종사자	(29)		31.0	37.9	20.7	10.3	3.10
	주부	(81)	1.2	25.9	61.7	9.9	1.2	2.84
	학생	(63)	1.6	49.2	49.2			2.48
	무직	(32)	3.1	62.5	31.3	3.1		2.34

계층 의식	하층	(99)	3.0	42.4	48.5	6.1		2.58
	중하층	(471)	1.9	31.8	54.8	8.7	2.8	2.79
	중층	(404)	0.7	38.9	42.3	17.1	1.0	2.79
	중상층	(76)	2.6	30.3	32.9	30.3	3.9	3.03
정치 성향	보수	(108)		33.3	51.9	8.3	6.5	2.88
	중도보수	(257)	0.8	31.1	50.2	14.8	3.1	2.88
	중도	(327)	0.9	35.8	48.3	14.4	0.6	2.78
	중도진보	(293)	3.8	41.6	40.6	13.0	1.0	2.66
	진보	(65)	1.5	26.2	61.5	10.8		2.82
거주행 정단위	읍	(322)	0.9	36.0	50.3	10.9	1.9	2.77
	면	(284)	1.4	33.5	49.3	13.4	2.5	2.82
	동	(444)	2.3	36.3	45.0	14.9	1.6	2.77

(5) 부문별 사회양극화 정도

우리사회의 양극화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양극화 부분은 크게 소득(근로소득), 소득(연금), 일자리(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자리(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동산(소유), 자산(현금, 주식 등), 교육, 문화·여가,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도시와 농촌)으로 나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충청도민이 느끼는 분야별 사회양극화 수준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10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양극화 정도가 심각), 충청도민은 부동산 소유(8.05)가 사회양극화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는 자산(현금, 주식 등)(8.04), 소득(근로소득)(8.01), 일자리(대기업과 중소기업)(7.91), 소득(연금)(7.72), 지역(도시와 농촌)(7.69),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7.56), 문화·여가(7.24), 교육(6.92)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도민은 사회양극화와 관련해 부동산과 자산 격차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고 다음으로 소득 격차와 일자리 격차, 지역 간 격차를 꼽았다. 문화·여가 격차, 교육 격차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그림 23] 참고)



[그림 23] 부문별 사회양극화 인식 정도(10점 척도)

유형별로 보면, 남자(8.04), 20대(8.38), 30대(8.32), 40대(8.14), 판매종사원(8.31), 중도보수(7.77), 중도(8.01)에서는 소득(근로소득) 부문이 사회양극화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여자(8.12), 50대(7.84), 60대 이상(7.90), 사무종사자(8.12), 농림어업 숙련노동자(7.8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8.21), 단순노무종사자(8.59), 주부(8.30), 중하층(8.32), 중도진보(8.41)에서는 부동산(소유) 부문이 사회양극화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종사자(8.09), 학생(8.27), 하층(8.03), 중층(7.99), 보수(8.45), 진보(8.29)에서는 자산(현금, 주식 등) 부문이 사회양극화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응답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표 46]을 참고 바란다.

〈 표 46 〉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10점 척도)

		(사 례 수)	(1) 소득 (근로 소득)	(2) 소득 (연금)	(3)일 자리 (정규 직과 비정 규직)	(4)일 자리 (대기 업과 중소 기업)	(5) 부동 산 (소유)	(6) 자산 (현금 , 주식 등)	(7) 교육	(8) 문화 · 여가	(9) 지역 (수도 권과 비수도 권)	(10) 지역 (도시 와 농촌)
[전체]		1050	8.01	7.72	7.82	7.91	8.05	8.04	6.92	7.24	7.56	7.69
성 별	남 자	553	8.04	7.73	7.88	7.95	7.99	8.00	6.98	7.24	7.56	7.71
	여 자	497	7.99	7.72	7.77	7.87	8.12	8.08	6.85	7.24	7.55	7.67
연 령 대	20대	170	8.38	7.98	7.79	8.16	8.22	8.30	6.98	7.45	7.65	7.88
	30대	186	8.32	7.76	8.09	8.37	8.31	8.24	7.08	7.48	7.71	7.81
	40대	234	8.14	7.77	7.90	7.82	8.09	8.06	6.91	7.56	7.58	7.65
	50대	256	7.65	7.68	7.84	7.83	7.84	7.83	6.96	6.84	7.39	7.58
	60대 이상	204	7.75	7.48	7.51	7.49	7.90	7.87	6.68	6.97	7.51	7.61
직 업	관리자	36	7.06	7.19	7.61	7.69	7.44	7.42	6.69	6.39	6.86	7.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7.31	7.38	7.13	7.53	7.25	7.03	7.34	6.75	6.84	7.31
	사무종사자	174	8.09	7.81	7.82	8.05	8.12	8.10	6.99	7.18	7.56	7.75
	서비스 종사자	170	8.07	7.81	7.98	7.95	8.08	8.09	6.99	7.37	7.73	7.68
	판매종사자	157	8.31	7.94	8.00	7.97	8.22	8.29	6.99	7.39	7.76	7.8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7.67	7.31	7.49	7.46	7.81	7.76	6.65	7.00	7.47	7.6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8.13	7.77	7.93	8.18	8.06	8.12	7.26	7.50	7.57	7.7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8.14	7.90	8.00	7.98	8.21	8.07	6.90	7.05	7.40	7.62
	단순노무 종사자	29	8.38	7.76	8.21	8.24	8.59	8.72	6.45	7.28	7.86	8.10
	주부	81	8.09	7.78	7.83	8.04	8.30	8.07	6.73	7.37	7.63	7.81
	학생	63	8.19	7.94	7.71	8.00	8.24	8.27	6.83	7.24	7.44	7.67
	무직	32	7.94	7.69	8.03	7.91	7.56	7.75	7.13	7.81	7.44	7.59
	하층	99	7.92	7.84	7.84	7.59	7.91	8.03	6.94	6.99	7.29	7.30
계 층 의 식	중하층	471	8.34	7.88	8.02	8.12	8.32	8.28	7.00	7.42	7.80	7.93
	중층	404	7.84	7.70	7.71	7.85	7.91	7.99	6.79	7.20	7.48	7.66
	중상층	76	7.08	6.75	7.21	7.38	7.30	6.76	7.08	6.64	6.80	6.87
	보수	108	7.89	7.81	7.81	7.91	8.28	8.45	6.61	6.92	7.69	8.02
정 치 성 향	중도보수	257	7.77	7.44	7.47	7.49	7.58	7.54	6.81	7.11	7.31	7.37
	중도	327	8.01	7.72	7.83	7.99	8.00	7.98	6.86	7.24	7.51	7.60
	중도진보	293	8.30	7.91	8.20	8.20	8.41	8.33	7.22	7.49	7.83	8.00
	진보	65	7.91	7.86	7.48	7.89	8.20	8.29	6.82	7.14	7.28	7.46

(6)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

우리사회 양극화의 원인은 어느 하나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지역 등 다양한 문제에서 기인한다.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충남도민이 생각하는 우리사회 양극화의 원인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그림 24], [표 47]과 같다.

충남도민이 생각하는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40.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케티(Thomas Piketty) 등이 주장했듯 우리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은 자산 불평등이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이라는 주장이 본 조사에서도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38.5%), ‘불안정한 노동증가(비정규·플랫폼노동 등)’(29.0%), ‘수도권 위주의 발전정책’(26.4%)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풍토’(19.9%), ‘농촌지역에 대한 차별’(14.4%),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12.0%), ‘사회보장체계의 미흡’(10.4%) 등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사회 양극화의 핵심은 자산과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24]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

유형별로 보면, 성별에서는 남자(38.9%), 여자(41.6%) 모두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를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했고, 연령에서는 20대(47.1%), 30대(46.8%)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했고, 40대(45.7%), 50대(42.2%), 60대 이상(43.6%)은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가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해 세대 간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 보면, 종졸이하(41.9%), 고졸(39.2%)에서 ‘불공평한 부동산 소유’를 가장 큰 사회양극화 원인이라고 응답했고, 전문대졸(48.4%), 대졸이상(42.6%)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가장 큰 사회양극화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40.6%), 판매종사자(41.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40.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41.5%), 단순노무종사자(55.2%), 학생(41.3%) 등은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를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 응답했고, 사무종사자(46.0%), 주무(44.4%), 무직(50.0%) 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직업 가운데 특이한 점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불안정한 노동증가’(54.8%)를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이 직업의 불안정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표 47 〉 우리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복수응답)

		(사 례 수)	정규 직과 비정규 직 간 임금차	사회 보장 체계의 미흡	불안 정한 노동 조건 (비정 규·플 랫폼 노동)	불 평 등한 부 동산 소 유	연 공 영 에 따 른 임 금 체 계	학 벌 을 중 시 하 는 사 회 풍 토	첨 단 과 학 술 의 변 화 로 인 한 지 식 격 차	수도 권 위 주 의 발 전 정 책	농 촌 지 역 에 대 한 차 별	기 타
[전체]		(1050)	38.5	10.4	29.0	40.2	12.0	19.9	9.0	26.4	14.4	0.4
성 별	남 자	(553)	38.3	11.6	30.7	38.9	10.3	19.7	9.0	26.6	14.6	0.2
	여 자	(497)	38.6	9.1	27.0	41.6	13.9	20.1	8.9	26.2	14.1	0.6
연 령 대	20대	(170)	47.1	8.2	35.9	32.4	12.9	27.1	7.1	20.0	9.4	
	30대	(186)	46.8	14.5	36.6	33.9	16.7	17.2	4.3	23.1	7.0	
	40대	(234)	40.2	9.8	33.8	45.7	11.1	19.2	8.1	23.1	9.0	
	50대	(256)	36.3	11.3	25.8	42.2	13.3	16.8	11.7	29.7	12.1	0.8
	60대 이상	(204)	24.5	7.8	14.7	43.6	6.4	21.1	12.3	34.3	34.3	1.0
학 력	중졸이하	(124)	23.4	9.7	12.1	41.9	5.6	22.6	11.3	32.3	41.1	
	고졸	(454)	36.3	9.3	30.2	39.2	11.0	21.4	9.0	29.7	13.2	0.6
	전문대졸	(155)	48.4	7.7	32.3	42.6	12.9	14.8	9.0	21.3	11.0	
	대졸이상	(317)	42.6	13.6	32.2	39.7	15.5	19.2	7.9	21.8	7.3	0.3
직 업	관리자	(36)	38.9	16.7	30.6	38.9	11.1	13.9	16.7	25.0	8.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25.0	18.8	21.9	40.6	18.8	18.8	21.9	28.1	6.3	
	사무종사자	(174)	46.0	12.6	31.0	41.4	19.0	18.4	4.0	21.3	5.7	0.6
	서비스 종사자	(170)	38.8	8.2	28.8	38.8	8.2	22.9	11.8	30.6	11.2	0.6
	판매종사자	(157)	40.1	9.6	31.8	41.4	9.6	22.3	9.6	24.2	10.8	0.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24.3	6.6	15.8	40.1	8.6	17.8	9.2	35.5	42.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39.0	14.6	35.4	41.5	13.4	19.5	9.8	19.5	7.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5.2	7.1	54.8	31.0	9.5	19.0	4.8	16.7	11.9	
	단순노무 종사자	(29)	37.9	3.4	24.1	55.2	10.3	20.7	3.4	31.0	13.8	
	주부	(81)	44.4	12.3	22.2	39.5	9.9	14.8	4.9	37.0	13.6	1.2
계 층 의 식	학생	(63)	34.9	9.5	30.2	41.3	19.0	22.2	11.1	19.0	12.7	
	무직	(32)	50.0	12.5	40.6	31.3	9.4	28.1	9.4	12.5	6.3	
	하층	(99)	29.3	11.1	29.3	44.4	15.2	14.1	8.1	25.3	23.2	
	중하층	(471)	42.3	9.6	28.5	36.1	9.3	21.4	7.4	28.5	17.0	
	중층	(404)	37.9	9.4	30.9	44.3	12.4	18.8	9.2	25.5	10.9	0.7
정 치 성 향	중상층	(76)	30.3	19.7	21.1	38.2	22.4	23.7	18.4	19.7	5.3	1.3
	보수	(108)	37.0	9.3	15.7	51.9	5.6	13.9	4.6	34.3	27.8	
	중도보수	(257)	35.0	7.8	29.2	33.1	10.5	22.6	13.2	28.4	19.8	0.4
	중도	(327)	41.9	11.3	28.1	41.3	13.5	19.6	8.9	22.9	11.9	0.6
	중도진보	(293)	36.2	12.3	36.2	39.9	13.3	19.8	6.8	27.0	8.2	0.3
	진보	(65)	47.7	9.2	21.5	44.6	15.4	21.5	9.2	20.0	10.8	

3)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선호도

(1) 소득보장정책 부문

본 연구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은 1)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예: 개인별 월 30만 원), 2)청년기본소득 지급(예: 월 10만 원), 3)근로장려금 확대(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 지급), 4)농어민기본소득 확대(예: 월 10~20만 원), 5)최저임금 인상(1시간당 1만 원 이상)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조사했다. 이들 정책에 대한 충남도민의 선호도 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 25~29]와 같다.

먼저 전 국민 기본소득(월 30만 원)에 대한 충남도민의 선호도이다. 최근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와 논쟁이 활발하면서 증세 없이 기존의 세수조정과 비과세 면제만으로 개별 국민당 월 30~60만 원의 기본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30만원의 기본소득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충남도민은 64.3%가 동의(아주 동의+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29.8%, '동의 안함'은 5.9%에 불과했다. 충남도민은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청년기본소득(월 10만 원)이다. 청년기본소득은 세대 간 불평등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해 그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충남도민은 '동의함' 46.5%, '아주 동의함' 24.5%로 동의 비율이 71.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보통 24.9%, '동의 안함'은 4.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세 번째는 근로 장려금 확대(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선호 현상은 뚜렷하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 등 근무 여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실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실업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유효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확대에 대해 충남도민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동의함' 54.4%, '아주 동의함' 29.0%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8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동의 안함'은

1.2%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은 매우 유효하면 정책 범위 내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농어민기본소득 확대(월 10~20만 원)이다. 농어민기본소득은 현재 농어민 수당 형태로 전국 지자체에서 도입이 됐거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전남, 전북, 충남은 2020년에 농(어)민수당을 도입했고 올해는 충북, 강원 등이 도입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경남, 경북, 제주 등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 도내 6개 시·군을 우선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했다. 현재 농(어)민수당은 농가당 연간 50~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반해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 맞게 농민 개인당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이유는 농어가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통한 농어민의 삶의 질 제고에 있다. 이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도농 간, 농가 내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러한 농어민기본소득의 확대에 대해 충남도민은 '동의함' 58.3%, '아주 동의함' 15.5%로 전체 응답자의 73.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민의 대다수가 농어민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결과는 예상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1시간당 1만 원 이상)이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인상을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산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대해 그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지금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기 때문에 인상폭은 크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적 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삶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불이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의 단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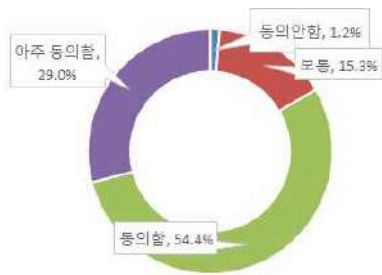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1시간당 1만 원 이상)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을 보면, '동의함' 49.8%, '아주 동의함' 13.4%로 동의한다는 비율은 63.2%로 나타났다. 보통은 32.9%, '동의 안함'은 13.4%로 나타났다. 충남도민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5] 전국민 기본소득제
(개인별 월 30만 원)



[그림 26] 청년기본소득 지급
(예: 월 10만 원)



[그림 27] 근로장려금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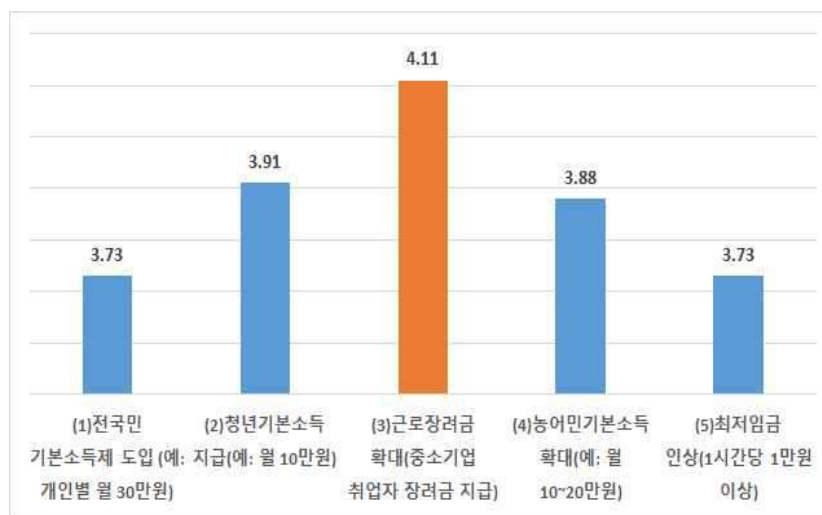
[그림 28] 농어민기본소득 확대
(예: 월 10~20만 원)



[그림 29] 최저임금 인상
(1시간당 1만 원 이상)

앞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부문 5가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들 5가지 정책 간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30]과 같다.

5가지 정책 가운데 충남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근로장려금 확대’가 4.11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청년기본소득 지급’ 3.91점, ‘농어민기본소득 확대’ 3.88점이었고 ‘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은 3.73점으로 동일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0] 소득보장부문 정책선호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5가지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연령별, 직업별, 계층의식별, 정치성향별, 거주행정단위별 선호도는 다음 [표 48]을 참조하기 바란다.

〈 표 48 〉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소득보장정책 부문

[전체]		(사례 수)	(1)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예:개인별 월 30만원)	(2)청년 기 본 소 득 지급 (예:월 10 만원)	(3)근로 장려금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지급)	(4)농어민 기 본 소 득 확대 (예 : 월 10~20만원)	(5)최저 임금 인상 (1 시 간 당 1만원이상)
			1050	3.73	3.91	4.11	3.88
연령대	20대	170	3.76	4.48	4.26	3.66	4.13
	30대	186	3.77	4.25	4.28	3.73	3.85
	40대	234	3.76	3.79	4.16	3.85	3.72
	50대	256	3.71	3.80	4.10	3.99	3.65
	60대 이상	204	3.65	3.42	3.80	4.09	3.39
직업	관리자	36	3.44	3.81	4.08	3.92	3.4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56	4.00	4.00	3.75	3.63
	사무종사자	174	3.79	3.99	4.19	3.83	3.89
	서비스 종사자	170	3.75	4.00	4.11	3.77	3.74
	판매종사자	157	3.77	3.90	4.17	3.86	3.5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3.60	3.38	3.81	4.30	3.3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3.83	4.02	4.07	3.83	3.8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3.86	4.00	4.29	3.81	3.90
	단순노무종사자	29	3.86	3.62	3.97	4.03	3.90
	주부	81	3.78	3.96	4.23	3.78	3.73
	학생	63	3.70	4.48	4.32	3.68	4.19
	무직	32	3.59	4.28	4.28	3.69	3.94
	계층 의식	하층	99	3.94	3.96	3.98	3.95
중하층		471	3.77	3.98	4.21	3.97	3.79
중층		404	3.65	3.83	4.09	3.80	3.73
중상층		76	3.63	3.84	3.78	3.66	3.49
정치 성향	보수	108	3.63	3.47	3.94	4.12	3.50
	중도보수	257	3.58	3.75	3.99	3.84	3.61
	중도	327	3.74	4.00	4.12	3.85	3.77
	중도진보	293	3.88	4.11	4.26	3.92	3.82
	진보	65	3.74	3.94	4.17	3.60	3.91
거주 행정 단위	읍	322	3.70	3.93	4.15	3.85	3.67
	면	284	3.74	3.74	4.00	4.04	3.68
	동	444	3.75	4.01	4.16	3.80	3.80

(2) 사회보장정책 부문

본 연구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정책으로는 1)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예: 월 30만 원→50만 원), 2)연금 간 격차 완화(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 3)아동수당 확대(예: 월 10만 원→30만 원), 4)전 국민 상병(傷病)수당 지급(부상과 질환으로 일을 못할 경우 적정 수당지급), 5)청년사회진출금 지급(1억원 정도 일시 지급), 6)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시(임시직, 플랫폼노동직, 농어민 등) 등 6가지이다. 이들 정책에 대한 충남도민의 선호도 조사결과는 다음 [그림 31~36]과 같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의 대폭 인상(예: 월 30만 원→50만 원)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해 꾸준히 발전되어온 정책이다. 현재 소득 기준 70% 이하 노인들에게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부부인 경우에는 약간 감면된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노령 연금을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으로도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대폭 인상(예: 월 30만 원→50만 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은 결과는 [표 49]와 같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동의함’ 38.2%, ‘아주 동의함’ 23.6%로 충남도민의 61.8%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32.1%, ‘동의 안함’은 6.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는 연금 간 격차 완화(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핵심 원인은 소득 부족이다. 그런데 노인은 고령으로 인해 노동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전소득에 의존하게 되면 그 핵심이 연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매우 불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규직이고 공적 기관 종사자인 경우에는 종사기간 에도 안정적 소득을 얻는 동시에 퇴직 이후에도 많은 연금을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근로기간 동안 불안정한 노동과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퇴직 후에도 낮은 연금으로 살아가게 된다. 특히 비정규직,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연금체계에서는 구조적인 빈곤이 지속된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혁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만큼 이해관계자 참여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러한 연금문제를 현재와 같은 부익부빈익빈 구조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언젠가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금개혁(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간 격차 완화)에 대해 충남도민의 의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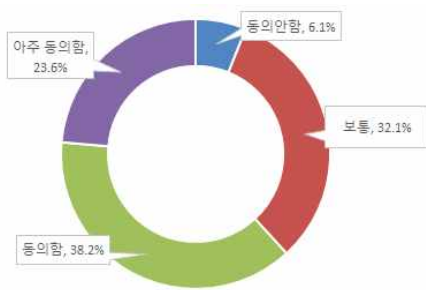
알아봤다. 조사 결과(그림 32 참조)를 보면, ‘동의함’ 48.2%, ‘아주 동의함’ 29.2%로 동의한다는 의견이 77.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보통은 20.9%, ‘동의 안함’은 1.7%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연금개혁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는 아동수당 확대(월 10만 원→30만 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아동수당제가 도입되었고 현재 0~8세 아동의 가정에 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충남도에서도 민선 7기 들어와 아기수당(이후 행복키움수당)이 도입되어 0~3세까지 정부 지원금에 10만 원을 추가해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기존 30만 원의 육아기본수당을 2021년부터는 40만 원으로 확대했다. 육아기본수당이 출생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아기수당은 저출생 극복을 시행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과 양극화이기 때문에 아기수당은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기수당 확대(월 10만 원→30만 원)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표 49 참조)를 보면, 아동수당 확대에 ‘동의함’은 54.3%, ‘아주 동의함’ 20.9%로 응답자의 75.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22.1%, ‘동의 안함’은 2.8%에 불과했다. 아동수당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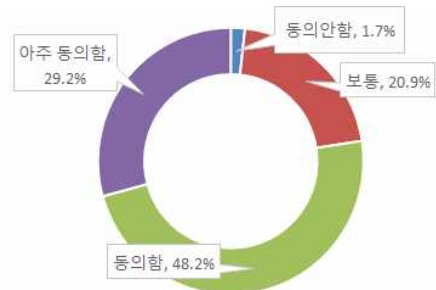
네 번째는 전 국민 상병(傷病)수당 지급이다. 상병수당은 ‘부상과 질환으로 일을 못할 경우 적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실시되고 있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책이다. 상병수당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의 사회보장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이 해당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체계가 잘 갖춰진 직장의 노동자인 경우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시, 혹은 중장기적으로 일을 못하더라도 사회보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지만 취약 계층의 노동자들은 한번 부상이나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소득 기회가 사라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빈곤층으로 전락되기 쉽다. 따라서 그들이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보장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 국민 상병수당제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은 다음 [그림 34]와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동의함’ 51.9%, ‘아주 동의함’ 19.0%로 동의 비율이 70.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보통은 26.0%, ‘동의 안함’은 3.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 국민 상병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청년사회진출금 지급(청년기본자산제)이다. 사회진출 시기의 청년들에게 일정한 자산(예: 약 1억 원)을 지급하자는 정책이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은 소득과 자산(자본)의 불평등에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취직하기도 어렵고 취직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같이 안정적 직장을 갖기는 더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 기성세대의 자산과 소득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아파트값 폭등에서와 같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격차는 크게 확대되어 청년세대의 좌절과 절망이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토마 피케티 등 불평등 연구자들 사이에 청년기본자산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진출기 청년에서 1억 원 정도를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세대 간 불평등이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년세대는 한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인데 청년세대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OECD 최하위의 저출생을 보이는 이유도 이러한 격차의 결과라 생각된다. ‘청년사회진출금 지급’(예: 1억 원 정도 일시 지급)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은 [그림 35]와 같다. 조사 결과를 보면, ‘동의함’ 36.9%, ‘아주 동의함’ 5.3%로 전체 응답자의 42.2%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51.0%, ‘동의 안함’은 6.8%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자산제에 대해 충남도민은 유보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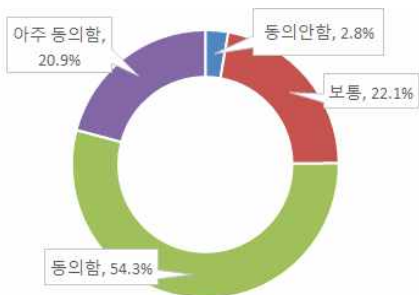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시이다. 현재 고용보험은 직장인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직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농어민 등은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일을 그만두어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얻기가 힘들다. 소득이 일정하지 못하면 안정적 사회보험도 가입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면 바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어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시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은 다음 [그림 36]과 같다. 조사 결과, ‘동의함’ 56.9%, ‘아주 동의함’ 11.2%로 전체 응답자의 68.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은 29.7%, ‘동의 안함’은 2.2%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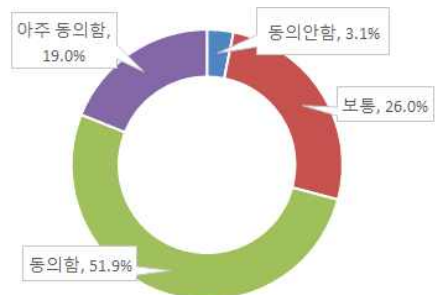
[그림 31] 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
(예: 월 30만 원→5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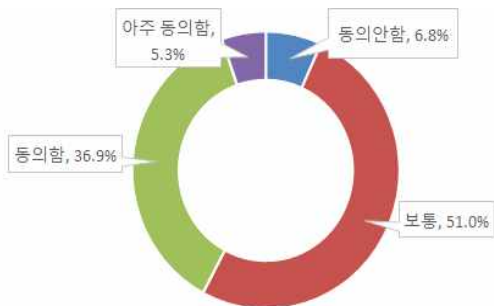
[그림 32] 연금 간 격차 완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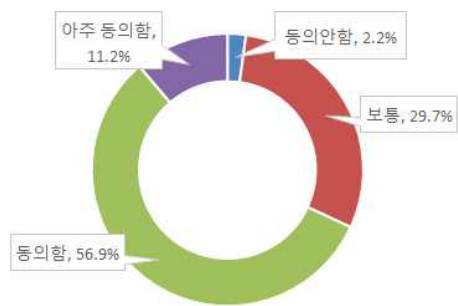
[그림 33] 아동수당 확대
(예: 월 10만 원→30만 원)



[그림 34] 전 국민 상병(傷病)수당 지급
(부상과 질환으로 일을 못할 경우 적정
수당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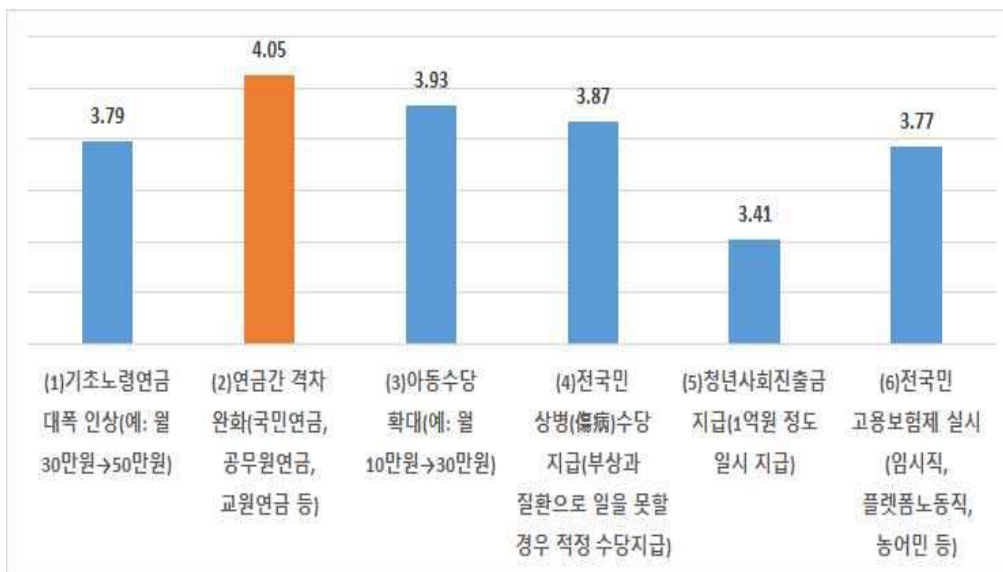
[그림 35] 청년사회진출금 지급
(1억 원 정도 일시 지급)



[그림 36]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임시직, 플랫폼노동자, 농어민 등)

앞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부문 6가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들 6가지 정책 간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37]과 같다.

6가지 정책 가운데 충남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연금 간 격차 완화(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가 4.0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동수당 확대(예: 월 10만 원→30만 원)’ 3.93점, ‘전 국민 상병수당 지급’ 3.87점이었고 ‘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예: 월 30만 원→50만 원)’,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3.77점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사회진출금 지급’(1억 원 정도 일시 지급)은 3.41점으로 다른 정책보다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사회보장부문 정책선호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6가지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성별, 결혼여부, 직업별, 거주행정 단위별 정책선호도는 다음 [표 49]와 같다.

〈 표 49 〉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사회보장 부문

		(사 례 수)	(1)기초 노령연금 대폭인상 (예 : 월 30 만 원 → 50 만 원)	(2)연금 간 격차 완 화 (국 민 연 금 , 공무원연 금, 교원 연금 등)	(3)아동 수당 확 대 (예 : 월 10만 원 → 30 만 원)	(4)전국민 상병 (傷病) 수당지급 (부상과 질환으로 일을못할 경우적정 수당지급)	(5)청년 사회진출 금 지급 (1억 원 정도 일 시 지급)	(6)전 국 민 고용 보 험 제 실시 (임 시직, 플 랫폼노동 직, 농어 민 등)
[전체]		1050	3.79	4.05	3.93	3.87	3.41	3.77
성별	남 자	553	3.74	4.05	3.95	3.89	3.46	3.82
	여 자	497	3.86	4.05	3.91	3.84	3.35	3.72
결혼 여부	기 혼	778	3.91	4.07	3.89	3.84	3.30	3.71
	미 혼	272	3.45	4.00	4.04	3.94	3.73	3.94
연령대	20대	170	3.44	4.01	4.05	4.02	3.82	3.96
	30대	186	3.60	4.12	4.22	3.98	3.52	3.98
	40대	234	3.67	4.05	4.08	3.86	3.37	3.77
	50대	256	3.89	4.04	3.85	3.81	3.34	3.68
	60대 이상	204	4.29	4.03	3.51	3.71	3.09	3.53
직업	관리자	36	3.94	4.08	3.81	3.64	3.56	3.5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94	4.28	3.88	3.75	3.31	3.50
	사무종사자	174	3.74	4.17	4.09	3.98	3.53	3.84
	서비스 종사자	170	3.69	4.03	3.98	3.79	3.38	3.76
	판매종사자	157	3.77	4.01	4.07	3.90	3.39	3.7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4.09	3.96	3.53	3.66	3.14	3.6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3.71	4.01	4.00	3.83	3.46	3.8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3.76	4.12	4.10	3.90	3.55	3.74
	단순노무종사자	29	4.45	4.24	3.69	4.10	3.14	3.90
	주부	81	3.90	4.09	4.00	4.07	3.25	3.80
	학생	63	3.40	4.05	3.92	3.97	3.71	4.03
	무직	32	3.19	3.59	4.00	3.94	3.88	3.81
거주행 정단위	읍	322	3.86	4.05	3.97	3.89	3.39	3.72
	면	284	3.89	4.01	3.83	3.76	3.32	3.72
	동	444	3.68	4.07	3.97	3.91	3.48	3.84

(3) 부동산·주거정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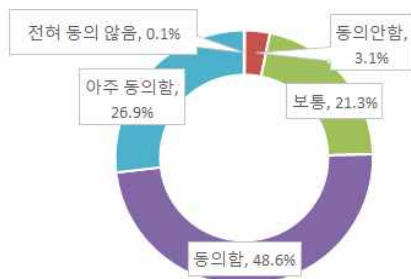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주거정책으로는 1)토지보유세 강화(세율 인상 확대, 2)공공임대주택 확대, 3)청년주택 확대(청년에게 임대료 감면 등) 등 3가지 정책이다. 이들 정책에 대한 충남도민의 선호도 조사결과는 다음 [그림 38~40]과 같다.

먼저, 토지(국토)보유세 강화이다.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우리사회의 양극화 원인에서도 나타났듯이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은 우리사회 양극화의 핵심이다. 부동산은 동산과는 달리 그 가치가 변질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의 양도나 대물림의 핵심이다. 그래서 부자 등 자산가들은 부동산 소유에 집착을 한다. 이 때문에 우리사회의 부동산 불평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남기업(2021)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지니계수는 0.811이 정도로 부동산은 소득보다도 두 배 이상의 불평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불평등 해결 없이는 사회양극화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누진적인 세율을 부과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토지는 인간이 만든 창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그 공유권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토지에 대한 세율을 강화해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종부세 논란에서와 같이 증세로 이어지는 부동산세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충남도민들은 토지보유세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다. 조사 결과([그림 38] 참조)를 보면, 토지보유세 강화에 대해 ‘동의함’ 48.6%, ‘아주 동의함’ 26.9%로 동의한다는 비율은 75.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만큼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보통은 21.3%, ‘동의 안함’ 3.1%, ‘전혀 동의 않음’ 0.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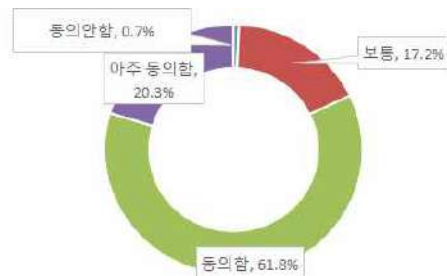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이다.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핵심은 서민들이 살 집이 없거나 비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민의 46%는 자기 집이 없다. 이 때문에 아파트값 등 부동산값이 올라가면 서민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가주택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집을 안정적으로 소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필요할 때 값싸게 거주하는 것도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는 주민의 80%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한다고 한다. 국가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굳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소유를 통한 주택보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에 대해 충남도민의 의견 결과는 [그림 39]와 같다. 조사 결과 ‘동의

합' 61.8%, '아주 동의함' 20.3%로 전체 응답자의 82.1%가 동의했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보통은 17.2%, '동의 안함'은 0.7%로 낮게 나타났다. 현재 충남도가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값싸게 제공하는 것은 출생률 제고뿐만 아니라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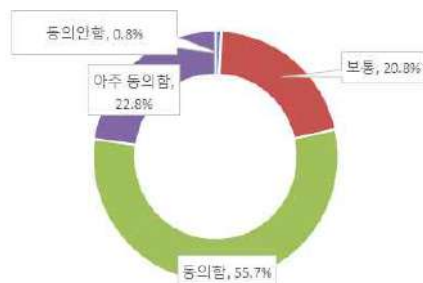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는 청년주택의 확대이다. 이 정책은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료를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청년기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막 사회를 진출한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세대 간 격차가 워낙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청년이 사회에서 생활하기는 쉽지 않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있어도 비정규직, 임시직, 플랫폼노동직 등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 소득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청년주택 같은 정책들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청년주택 확대'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 결과는 다음 [그림 40]과 같다. 조사 결과 '동의함' 55.7%, '아주 동의함' 22.8%로 전체 응답자의 78.5%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20.8%, '동의 안함' 0.8%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8] 토지보유세 강화(세율 인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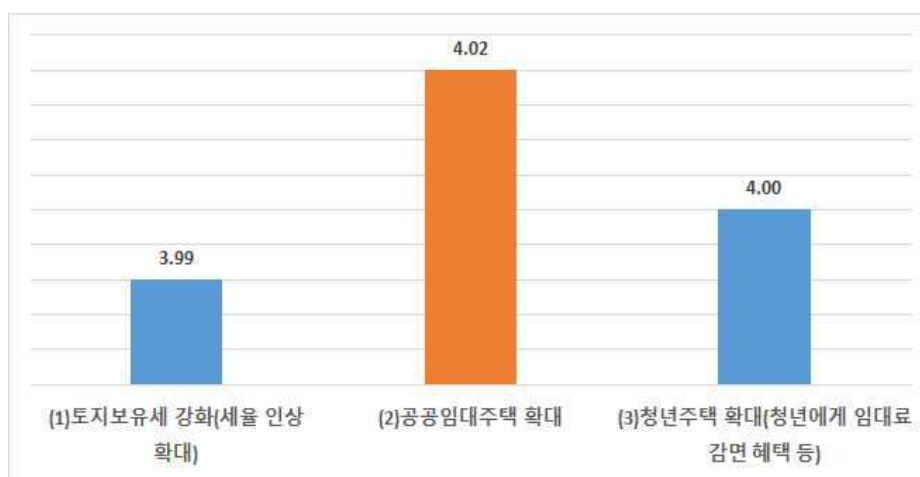
[그림 39] 공공임대주택 확대



[그림 40] 청년주택 확대
(청년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 등)

위와 같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주거 부문 3가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들 3가지 정책 간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41]과 같다.

3가지 정책 가운데 충남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4.0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청년주택의 확대’ 4.00점, ‘토지보유세 강화’ 3.99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 정책 모두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여 향후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림 41] 부동산·주거부문 정책 선호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3가지 부동산·주거 정책에 대한 성별, 결혼여부, 가구형태, 월소득, 계층의식, 정치성향, 주택형태, 거주시군, 거주행정단위에 따른 정책선호도는 다음 [표 50]과 같다.

〈 표 50 〉 부동산·주거부문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사례 수)	(1)토지보유세 강화(세율 인상 확대)	(2)공공임대주택 확대	(3)청년주택 확대(청년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 등)
[전체]		1050	3.99	4.02	4.00
성별	남 자	553	3.98	4.02	3.99
	여 자	497	4.00	4.01	4.02
결혼 여부	기 혼	778	3.92	4.02	3.93
	미 혼	272	4.18	4.01	4.21
가구 형태	1인	111	4.11	3.85	4.02
	2인	265	3.82	3.93	3.88
	3인	360	4.05	4.08	4.00
	4인 이상	314	4.03	4.08	4.11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2	3.65	3.71	3.74
	200-400만원 미만	330	4.05	4.03	4.05
	400-600만원대	336	3.99	4.04	4.05
	600만원 이상	282	4.05	4.09	4.00
계층 의식	하층	99	3.92	3.87	3.90
	중하층	471	4.10	4.11	4.09
	중층	404	3.95	3.98	3.98
	중상층	76	3.63	3.83	3.74
정치성 향	보수	108	3.95	4.01	3.94
	중도보수	257	3.79	3.82	3.77
	중도	327	4.04	4.05	4.02
	중도진보	293	4.13	4.18	4.20
	진보	65	3.92	3.92	4.06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3.84	3.96	3.98
	아파트	510	4.09	4.09	4.04
	다세대주택/오피스텔	169	4.02	3.93	3.93
거주 시군	천안시	170	4.03	4.06	4.07
	공주시	67	3.94	3.97	3.97
	보령시	66	3.97	4.05	4.00
	아산시	115	4.02	4.03	3.95
	서산시	85	3.92	4.13	4.07
	논산시	70	3.86	3.96	3.86
	계룡시	43	4.21	4.12	4.16
	당진시	83	4.13	4.14	3.94
	금산군	46	4.04	4.04	4.15
	부여군	52	4.00	3.98	4.02
	서천군	45	4.07	4.00	4.18
	청양군	36	3.94	4.00	4.06
	홍성군	64	3.97	3.86	3.86
	예산군	57	3.84	3.77	3.98
	태안군	51	3.86	3.98	3.90
거주 행정 단위	읍	322	4.00	4.04	4.01
	면	284	3.92	3.94	3.98
	동	444	4.03	4.05	4.02

(4) 일자리·사회혁신정책 부문

본 연구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사회혁신정책으로는 1)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3)주4일근무제 실시(일자리 나눔 목적 등), 4)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5)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6) 경제적 회생지원 확대(취약계층 부채 탕감 등) 등 6가지 정책이다. 이들 정책에 대한 충남도민의 선호도 조사결과는 다음 [그림 42~47]과 같다.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신자유주의 핵심정책은 고용의 유연화이다. 우리사회는 IMF 금융위기를 겪으며 급격한 고용의 유연화가 진행되었다. 비교적 안정적 고용형태를 보장했던 기존의 고용체계는 기업의 경쟁과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해체되어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단순히 고용형태의 차이가 아니라 신분과 계급의 차이기도 하다. 결국 고용이 어떤 형태에 따라 사회적인 신분과 계급이 정해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또 다른 차별과 불만이 대립되면서 진전되지 못했다. 그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산되는 비정규직은 가능한 안정적 고용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 청년들이 계획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에 정착할 수 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조사 결과는 [그림 42]와 같다. 조사 결과, ‘동의함’ 43.1%, ‘아주 동의함’ 42.9%로 전체 응답자의 86.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보통은 13.4%, ‘동의 안함’ 0.6%로 매우 낮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이다.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과 서민의 자활과 자립을 돕고 시민들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순환경제를 도모한다. 이 때문에 최근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형태로 다양하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지원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빈부 격차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은 [그림 43]과 같다. 조사 결과, ‘동의함’ 51.5%, ‘아주 동의함’ 24.7%로 전체 응답자의 76.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23.3%, ‘동의 안함’의 0.5%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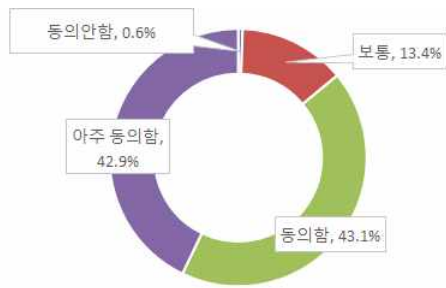
세 번째는 주4일근무제의 실시이다. 주4일근무제는 영국, 스페인, 핀란드, 뉴질랜드, 일본 등 선진국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제안된 상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으로 갈수록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어 일자리 나눔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주4일근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에서는 생산성 감소, 정규직만의 혜택, 재정 부담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추세는 주4일제의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은 [그림 44]와 같다. 조사 결과, ‘동의함’ 51.7%, ‘아주 동의함’ 19.2%로 전체 응답자의 70.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25.2%, ‘동의 안함’ 3.8%로 낮게 나타났다.

네 번째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이다. 일자리 확대는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핵심 정책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일자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 확대 정책을 제1의 정책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의 자동화와 효율화로 인해 일자리 확대는 쉽지 않다. 인공지능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로 인해 산업부문에서의 일자리는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태이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도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유럽 선진국에서도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확대되고 있고 그 비율도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조사 결과는 [그림 45]와 같다. 조사 결과, ‘동의함’ 50.4%, ‘아주 동의함’ 31.6%로 전체 응답자의 82.0%가 동의했다. 매우 높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보통 17.7%, ‘동의 안함’ 0.1%로 매우 낮았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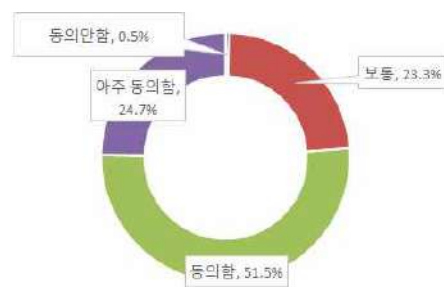
다섯 번째는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여기서 주민공동체 활동이란 공동육아, 마을활동 등 지역사회의 공익적 기여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앞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사회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지만 행정 차원의 사회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농촌지역처럼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사회서비스는 더욱 열악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마을 자체의 돌봄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단위 또는 지역사회 단위의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정당한 수당지급이다. 마을 돌봄에 대한 분명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지역단위 사회서비스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조사 결과는 [그림 46]과 같다. 조사 결과, ‘동의함’ 53.6%, ‘아주 동의함’ 8.5%로 전체 응답자의 64.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은 37.5%, ‘동의 안함’은 0.4%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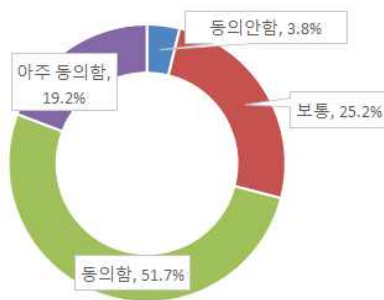
마지막은 경제적 회생 지원 확대이다. 사회가 건전하기 위해서는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극심한 경쟁사회이다 보니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특히 사업에 실패하거나 생활의 부채를 갚지 못하면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그러한 생활이 지속되면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체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경제적 회생 지원 확대(취약계층 부채 탕감 등)’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조사는 [그림 47]과 같다. 조사 결과, ‘동의함’ 51.9%, ‘아주 동의함’ 7.0%로 58.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40.7%, ‘동의 안함’은 0.4%로 유보하는 입장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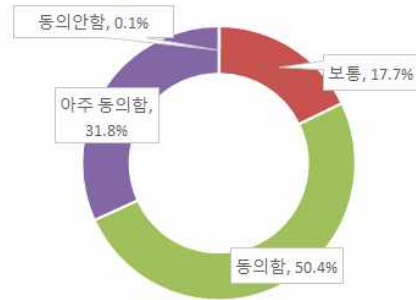
[그림 4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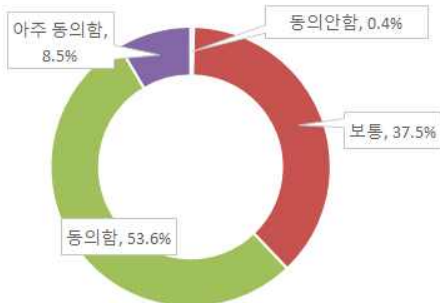
[그림 43]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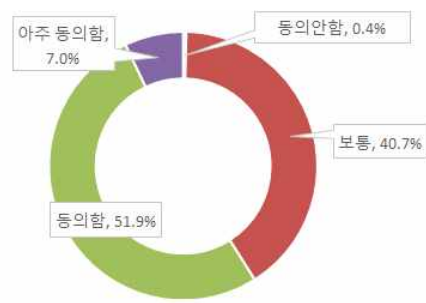
[그림 44] 주4일 근무제 실시
(일자리 나눔 목적 등)



[그림 45]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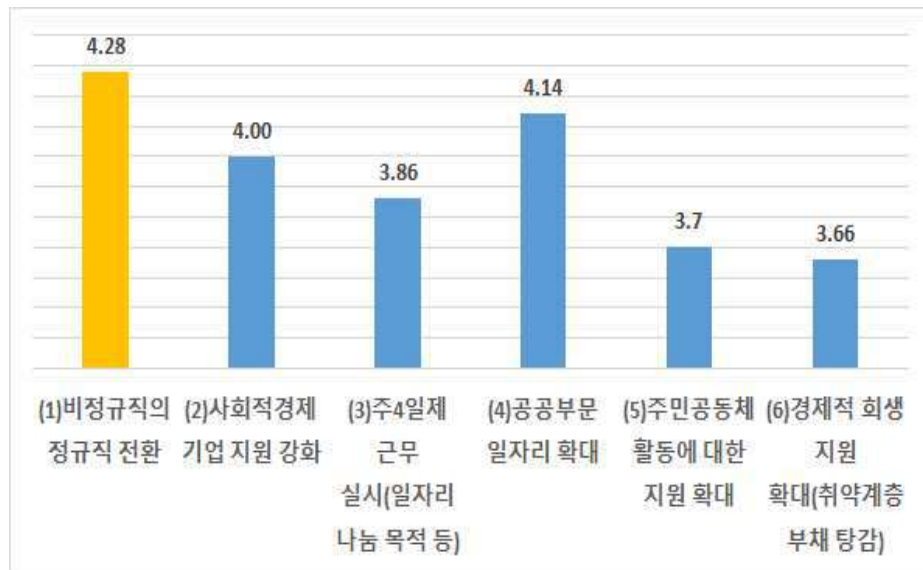
[그림 46]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림 47] 경제적 회생 지원 확대
(취약계층 부채 탕감)

앞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사회혁신부문 6가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들 6가지 정책 간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48]과 같다.

6가지 정책 가운데 충남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4.2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4.14점,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4.00점, ‘주4일 근무제 실시’ 3.86점,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3.70점, ‘경제적 회생 지원 확대’ 3.66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확대와 질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 일자리·사회혁신부문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6가지 일자리·사회혁신부문 정책에 대한 성별, 연령별, 월소득별, 직업별, 거주행정단위별 정책선호도는 다음 [표 51]과 같다.

〈 표 51 〉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사 례 수)	(1)비정 규 직 의 정 규 직 전환	(2)사회 적 경 제 기업 지원 강화	(3)주4일 근 무 제 실시 (일자리 나눔 목적 등)	(4)공공 부문 자리 확 대	(5)주민 공 동 체 활 동 에 대한 지 원 확대	(6)경제 적 희생 지원 확 대(취약 계층 부 채 탕 감)
[전체]		1050	4.28	4.00	3.86	4.14	3.70	3.66
성별	남 자	553	4.27	3.99	3.87	4.17	3.73	3.68
	여 자	497	4.30	4.02	3.86	4.10	3.67	3.63
연령대	20대	170	4.56	4.10	4.17	4.29	3.71	3.74
	30대	186	4.49	4.09	4.02	4.23	3.78	3.69
	40대	234	4.30	3.98	3.86	4.13	3.71	3.66
	50대	256	4.05	4.00	3.79	4.04	3.71	3.65
	60대 이상	204	4.12	3.88	3.56	4.07	3.59	3.56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2	4.00	3.78	3.63	3.86	3.57	3.50
	200~400만원 미만	330	4.35	4.03	3.86	4.26	3.71	3.72
	400~600만원대	336	4.31	4.00	3.84	4.12	3.72	3.68
	600만원 이상	282	4.27	4.06	3.99	4.12	3.72	3.61
직업	관리자	36	3.64	4.06	3.92	3.83	3.64	3.5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4.00	4.19	3.72	3.91	3.63	3.41
	사무종사자	174	4.38	4.09	4.09	4.22	3.74	3.64
	서비스 종사자	170	4.36	4.01	3.94	4.11	3.68	3.61
	판매종사자	157	4.32	4.07	3.87	4.22	3.74	3.7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4.05	3.84	3.42	4.05	3.67	3.5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22	3.89	3.95	3.98	3.62	3.7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55	4.02	3.79	4.21	3.76	3.67
	단순노무종사자	29	4.48	4.17	3.90	4.41	3.62	3.90
	주부	81	4.28	4.00	3.74	4.17	3.74	3.68
	학생	63	4.62	4.03	4.13	4.33	3.73	3.81
	무직	32	4.25	3.81	4.06	4.06	3.78	3.81
거주행 정단위	읍	322	4.31	3.99	3.82	4.07	3.67	3.64
	면	284	4.21	4.01	3.73	4.10	3.67	3.63
	동	444	4.31	4.01	3.98	4.21	3.75	3.69

(5) 교육·문화정책 부문

본 연구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문화정책으로는 1)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2)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 3)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4)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5)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6)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등 6가지 정책이다. 이들 정책에 대한 충남도민의 선호도 조사결과는 다음 [그림 49~54]와 같다.

먼저,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이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등록금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유럽보다 비싼 편이다. 비싼 등록금은 서민의 가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대학생 본인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비싼 등록금은 학생들의 학습과 자기계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제한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보니 등록금 마련에 시간을 빼앗겨야 하고 그러다 보면 학습과 자기성취를 위한 준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가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있지만 졸업 후에는 부채로 남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이 때문에 대학교육을 공교육 또는 의무교육 수준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해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70~80%는 사립대학이고 현재와 같이 대학이 많은 상태에서 대학의 개혁과 구조 조정 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면제 혹은 감면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론도 많다. 그럼에도 비싼 대학등록금은 서민가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낮춰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 49]와 같다. 조사 결과를 보면, ‘동의함’ 55.6%, ‘아주 동의함’ 31.9%로 전체 응답자의 87.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대학등록금이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은 12.2%, ‘동의 안함’ 0.3%로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는 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이다. 방과후 학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과열화되고 있는 사교육시장을 일정부분 학교와 같은 공적 영역을 흡수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돌봄의 기능이다. 특히,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들 돌보는 게 큰 고민거리이다. 학원을 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만약 학교에서 방과후에도 학생들에 필요한 교육과 돌봄이 이뤄진다면 서민의 고민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고 이에 수반이 되는 재정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일선 학교에

지역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체계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에 대한 충청도민의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 50]과 같다. 조사 결과, ‘동의함’ 52.9%, ‘아주 동의함’ 35.7%로 전체 응답자의 88.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방과후 학교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보통 11.3%, ‘동의 안함’ 0.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이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교육이다. 교육을 계층 사다리를 이어주는 주요한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교육열이 높은 것은 과거제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서민들 계층이동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의 출발선부터 불리한 조건에 있는 계층이 많다. 취약계층의 경우 교육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다. 물론 현재도 이러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도 특별전형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해 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계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는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에 대한 충청도민의 의견을 알아봤다. 조사 결과([그림 51] 참조), ‘동의함’ 53.0%, ‘아주 동의함’ 33.9%로 전체 응답자의 86.9%가 동의했다. 반면, 보통은 12.7%, ‘동의 안함’은 0.4%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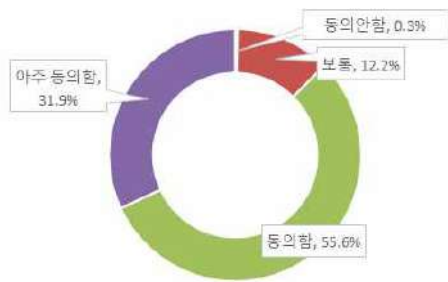
네 번째는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는 인구 감소 혹은 지역소멸이다. 이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부가 일부 계층, 일부 도시로 편중되면서 나머지 지역은 폐허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농촌지역은 이미 인구소멸을 맞은 지 오래이다. 그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곳은 학교이다. 과거에는 한 학년에 몇 백 명이 재학했던 학교가 현재는 한 학년에 4~5명인 학교도 많다. 그마저도 유지 못하고 폐교된 학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학교는 그 지역사회의 중심이다. 특히 농어촌 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공동체, 역사의 총합이다. 이 때문에 농어촌학교는 학교 이상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학교라도 잘 지켜낼 필요가 있다.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단지 학생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까지 함께 농촌지역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지역에 희망이 없다.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을 알아봤다. 조사 결과(그림 52) 참조, ‘동의함’ 58.2%, ‘아주 동의함’ 21.5%로 전체 응답자의 79.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20.0%, ‘동의 안함’은 0.3%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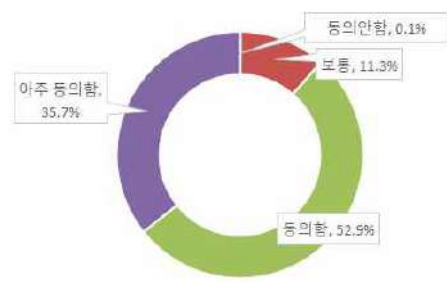
다섯 번째는 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이다. 문화여가는 교육과 더불어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하나다. 높은 문화적 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문화여가는 사치이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빈곤층에게 문화와 여가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문화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문화바우처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문화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의 노동과 저임금으로 문화와 여가는 쉽지 않고 그 수준 또한 매우 낮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 차원에서 정부가 취약계층도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 53]과 같다. 조사 결과, ‘동의함’ 54.3%, ‘아주 동의함’ 22.2%로 전체 응답자의 76.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23.4%, ‘동의 안함’ 0.1%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 소득 지원이다. 문화예술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 영역과 범위를 규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문화예술이 없는 국가와 사회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문화예술인의 평균적 생활은 여전히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예술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여 만 원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최근 충남문화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남도 문화예술인 월평균 소득이 70만 원 안팎인 것으로 나왔다. 최저임금 수준보다 못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공연이나 활동이 어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도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문화예술인에게 기본소득 성격의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한류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우리 문화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지만 평균적인 문화예술인의 삶은 강박하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같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높여나가자는 취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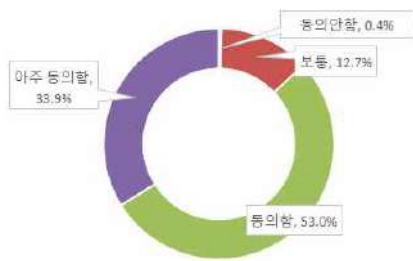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조사 결과는 [그림 54]와 같다. 문화예술인 소득 지원에 대해 ‘동의함’ 50.9%, ‘아주 동의함’ 1.9%로 전체 응답자의 52.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45.0%, ‘동의 안함’ 2.3%로 비교적 유보하는 입장이 많았다.



[그림 49]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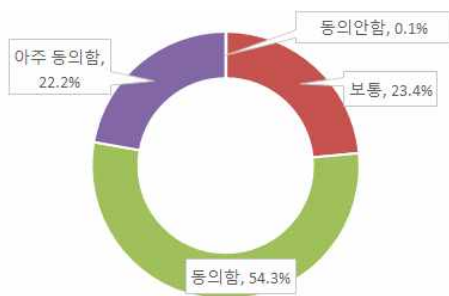
[그림 50] 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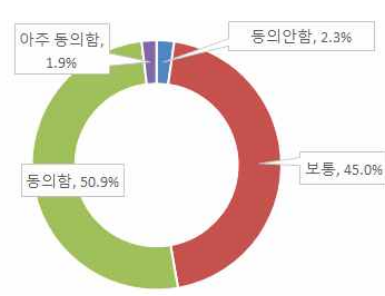
[그림 51]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그림 52]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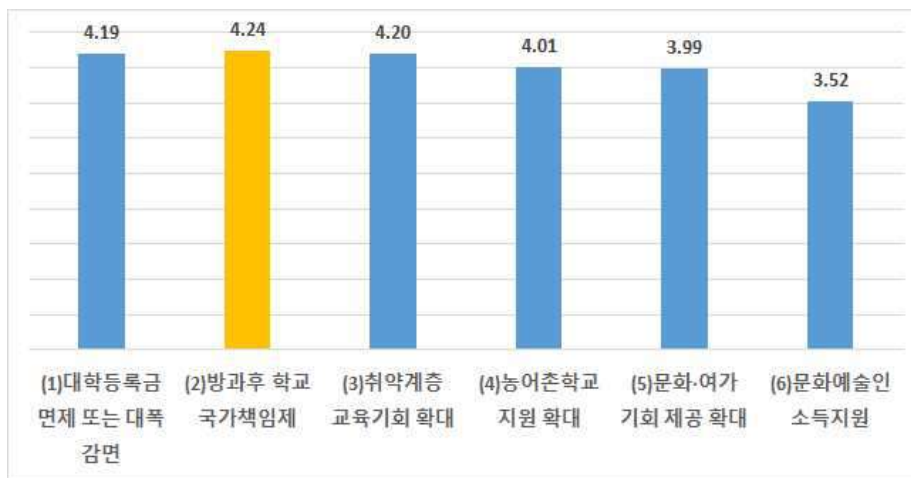
[그림 53] 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그림 54]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앞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문화부문 6가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들 6가지 정책 간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55]와 같다.

6가지 정책 가운데 충남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가 4.24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4.20점,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4.19점,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4.01점, ‘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3.9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인 ‘문화예술인 소득 지원’은 3.52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 부문의 정책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55] 교육·문화부문 사회양극화 정책선호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6가지 교육·문화부문 정책에 대한 성별, 결혼여부별, 연령별, 월소득별, 직업별, 계층의식별, 거주행정단위별 정책선호도는 다음 [표 52]와 같다.

〈 표 52 〉 교육·문화부문 사회양극화 해소정책(5점 척도)

		(사례수)	(1)대학 등록금 면제또는 대폭감면	(2)방과 후 학교 국가책 임제	(3)취약 계층 교육기회 확대	(4)농어 촌학교 지원확대	(5)문화· 여가기회 제공확대	(6)문화 예술인 지원확대
[전체]		1050	4.19	4.24	4.20	4.01	3.99	3.52
성별	남 자	553	4.18	4.23	4.23	4.03	4.00	3.54
	여 자	497	4.20	4.26	4.18	3.99	3.97	3.51
결혼 여부	기 혼	778	4.16	4.24	4.18	4.03	3.98	3.51
	미 혼	272	4.27	4.24	4.27	3.94	4.01	3.56
연령 대	20대	170	4.38	4.33	4.31	3.96	4.06	3.63
	30대	186	4.28	4.33	4.28	3.96	4.07	3.50
	40대	234	4.16	4.26	4.24	3.97	4.02	3.51
	50대	256	4.13	4.18	4.10	4.04	3.96	3.56
	60대 이상	204	4.06	4.15	4.14	4.09	3.84	3.43
학력	종졸이하	124	4.10	4.15	4.10	4.07	3.81	3.41
	고졸	454	4.13	4.26	4.24	4.04	4.08	3.57
	전문대졸	155	4.23	4.28	4.16	4.05	3.98	3.48
	대졸이상	317	4.29	4.24	4.22	3.91	3.91	3.52
월소 득	200만원 미만	102	3.94	4.09	4.06	3.97	3.80	3.42
	200-400만원 미만	330	4.18	4.25	4.26	4.06	4.01	3.51
	400-600만원대	336	4.20	4.26	4.18	3.99	4.05	3.52
	600만원 이상	282	4.29	4.27	4.22	3.98	3.95	3.57
직업	관리자	36	4.28	4.19	4.06	4.03	3.69	3.5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4.31	4.00	4.25	3.94	3.81	3.53
	사무종사자	174	4.33	4.29	4.24	4.00	3.96	3.60
	서비스 종사자	170	4.19	4.26	4.12	3.89	3.99	3.56
	판매종사자	157	4.16	4.27	4.27	4.00	4.06	3.4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4.03	4.14	4.12	4.19	3.86	3.3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15	4.24	4.09	3.89	3.98	3.5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10	4.36	4.36	4.07	4.02	3.50
	단순노무종사자	29	4.24	4.24	4.28	4.07	3.93	3.38
	주부	81	4.15	4.30	4.31	4.07	4.21	3.64
	학생	63	4.46	4.38	4.40	4.02	4.03	3.68
	무직	32	3.94	3.94	4.06	3.94	4.16	3.53
계층 의식	하층	99	4.12	4.10	4.07	3.98	3.81	3.49
	중하층	471	4.28	4.39	4.35	4.12	4.05	3.53
	중층	404	4.11	4.15	4.12	3.93	4.02	3.53
	중상층	76	4.17	4.03	3.93	3.79	3.63	3.53
거주 행정 단위	읍	322	4.25	4.28	4.21	4.04	3.96	3.52
	면	284	4.12	4.21	4.16	4.04	3.90	3.45
	동	444	4.20	4.23	4.23	3.97	4.06	3.58

(6) 지역균형발전 부문

본 연구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는 1)국회·공공기관 지방 이전, 2)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 3)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4)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5)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월 5~10만원) 등 5가지 정책이다. 이들 정책에 대한 충남도민의 선호도 조사결과는 다음 [그림 56~60]과 같다.

먼저, 국회·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다.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당초 수도 이전에 준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해 무산되었지만 정부 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해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했고 약 120개 공공기관을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해 지방의 거점도시를 조성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와 10개의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 되었고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지만 나주혁신도시, 전주 혁신도시, 부산의 혁신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단적으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가균형발전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좀 더 과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청와대, 국회, 기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국회 이전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격차,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필요하며 이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을 알아봤다. 조사 결과([그림 55] 참조), '동의함' 53.1%, '아주 동의함' 33.9%로 전체 응답자의 8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충남도민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충남도는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가 많은 상태이다.

두 번째는 지방거점대학 지원의 강화이다. 과거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은 서울의 우수 대학 못지않은 위상을 가졌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이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되어 비수도권 대학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입학 인구가 갈수록 감소되어 지방소재 대학은 정원 채우기도 급급한 게 지금의 현실이다. 지방의 대학, 특히 거점대학은 지역에서 학문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생활의 중심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지역의 거점대학은 지역위상의 표상

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 대학의 위기와 동시에 지역 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에 충남도민의 의견을 알아봤다. 그 결과는 [그림 57]과 같다. 조사 결과 ‘동의함’ 47.4%, ‘아주 동의함’ 39.9%로 전체 응답자의 87.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보통은 12.4%, ‘동의 안함’ 0.3%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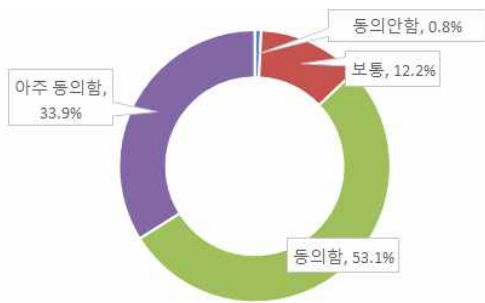
세 번째는 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투자대비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한다. 자율적인 시장경쟁 하에서는 당연한 원리이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산업인프라가 어느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인력, 교통, 정보, 시장 등이 몰려있기 때문에 수도권 입지는 기업의 우선 고려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린다면 비수도권의 산업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수도권 위주의 기업투자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수도권 투자에 대해 일정 수준 제한을 두었다. 그 결과 많은 기업과 대학들이 지방으로 몰려들면서 어느 정도 분산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충남도의 북부지역의 이러한 수도권 규제에 따라 수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도권 투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수도권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무색하게 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도권 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충남도민의 의견을 알아봤다. 그 결과는 [그림 58]과 같다. 조사 결과, ‘동의함’ 52.4%, ‘아주 동의함’ 21.3%로 전체 응답자의 73.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12.3%, ‘동의 안함’ 0.8%로 낮게 나타났다.

네 번째는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충남의 북부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은 참여정부의 수도권 투자 규제 정책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다.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곳으로 몰려들면서 도시가 급성장했다. 지금은 이전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여전히 기업과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충남의 남부와 내륙지역은 저발전과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인 이들 지역은 농업의 쇠퇴와 아울러 급격한 인구 감소의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와 내포신도시의 건설은 낙수효과 또는 후광효과보다는 수렴효과 또는 집중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주변 시군은 오히려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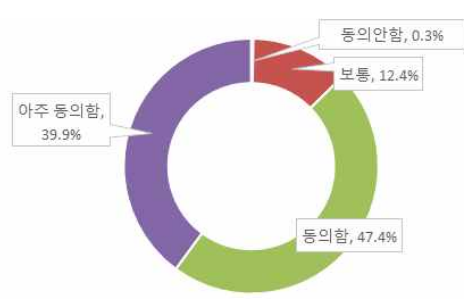
내 북부권과 남부권 간 지역격차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양극화 차원에서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에 대해 충남도민의 동의 정도를 알아봤다. 다음 [그림 59]와 같이 ‘동의함’ 52.5%, ‘아주 동의함’ 26.4%로 전체 응답자의 78.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20.4%, ‘동의 안함’ 0.8%로 낮게 나타났다. 충남도민의 대부분은 충남의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실시(월 5~10만 원 지급)이다. 최근 전국민 기본소득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부분적 기본소득 중의 하나인 농어촌주민 기본소득도 일각에서 논의 중에 있다.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은 도시와 농어촌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농(어)민수당 또는 농민기본소득(경기도)을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할 예정에 있지만 농어촌 인구 가운데 약 1/4만이 농어민이기 때문에 농(어)민수당, 농민기본소득만으로는 농어촌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실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도시 위주 발전과 대규모 인프라시설 건설로 농어촌은 더욱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투자들은 오히려 농어촌의 인구감소를 촉진하고 공동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행하고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촌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러한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실시’에 대해 충남도민의 의견을 알아봤다. [그림 60]과 같이 조사 결과를 보면, ‘동의함’ 54.4%, ‘아주 동의함’ 16.4%로 전체 응답자의 70.8%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29.0%, ‘동의 안함’ 0.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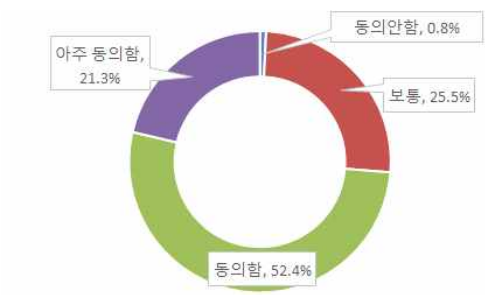
앞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부문 5가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들 5가지 정책 간 선호도를 알아보았다.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6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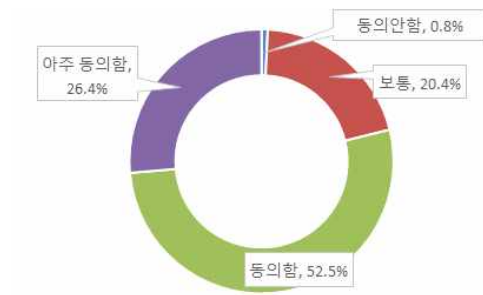
[그림 56] 국화·공공기관 지방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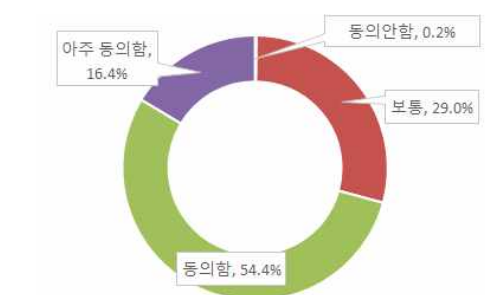
[그림 57] 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



[그림 58] 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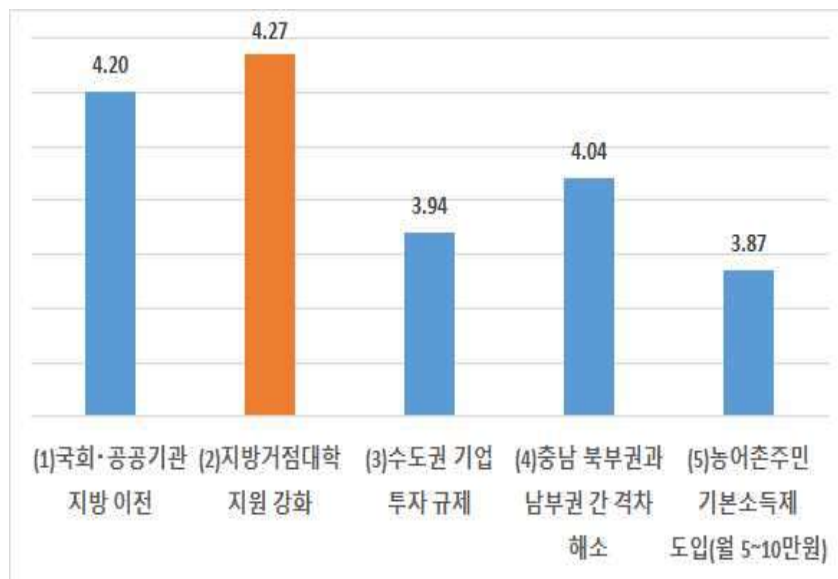


[그림 59]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그림 60]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실시

다음 5가지 정책 가운데 충남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가 4.27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국회·공공기관 지방 이전’ 4.20점,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4.04점, ‘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3.94점,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3.87점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민은 지역균형발전부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와 국회·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 실행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61] 지역균형발전부문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6가지 교육·문화부문 정책에 대한 성별, 결혼여부별, 연령별, 월소득별, 직업별, 계층의식별, 거주행정단위별 정책선호도는 다음 [표 53]과 같다.

〈 표 53 〉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

		(사례 수)	(1)국 회·공 공기관 지방 이전	(2)지 방거점 대학 지원 강화	(3)수 도권 기업 투자 규제	(4)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5)농어촌주 민 기본소득제 도입(월 5~10만원)
[전체]		1050	4.20	4.27	3.94	4.04	3.87
성별	남 자	553	4.20	4.27	3.96	4.07	3.88
	여 자	497	4.20	4.27	3.92	4.02	3.85
결혼여부	기 혼	778	4.21	4.25	3.93	4.05	3.89
	미 혼	272	4.17	4.33	3.99	4.03	3.81
연령대	20대	170	4.24	4.38	4.02	4.04	3.81
	30대	186	4.22	4.38	4.04	4.05	3.84
	40대	234	4.18	4.26	3.96	4.05	3.76
	50대	256	4.20	4.24	3.89	4.07	3.88
	60대 이상	204	4.19	4.14	3.83	4.01	4.06
학력	중졸이하	124	4.17	4.15	3.84	4.00	4.07
	고졸	454	4.19	4.28	3.89	4.05	3.95
	전문대졸	155	4.23	4.32	4.04	4.06	3.78
	대졸이상	317	4.22	4.27	4.02	4.04	3.72
가구형태	1인	111	4.12	4.22	3.89	4.03	3.91
	2인	265	4.17	4.18	3.83	3.98	3.99
	3인	360	4.26	4.27	3.98	4.01	3.79
	4인 이상	314	4.19	4.36	4.01	4.14	3.85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2	4.04	3.91	3.78	3.86	3.98
	200~400만원 미만	330	4.24	4.33	3.89	4.08	3.99
	400~600만원대	336	4.17	4.28	3.96	4.05	3.81
	600만원 이상	282	4.26	4.32	4.04	4.07	3.76
직업	관리자	36	4.08	4.14	4.03	4.03	3.6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4.16	4.06	4.09	3.72	3.50
	사무종사자	174	4.28	4.37	4.00	4.16	3.83
	서비스 종사자	170	4.18	4.27	3.86	3.92	3.75
	판매종사자	157	4.30	4.33	3.96	4.11	3.8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4.18	4.15	3.78	4.07	4.2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10	4.17	4.02	4.02	3.8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26	4.38	4.00	4.07	3.88
	단순노무종사자	29	4.31	4.28	4.07	4.07	4.00
	주부	81	4.12	4.23	3.93	4.15	3.91
	학생	63	4.24	4.43	4.03	4.02	3.92
	무직	32	3.88	4.22	4.00	3.78	3.69

계층의식	하층	99	4.09	4.07	3.83	3.82	3.89
	중하층	471	4.33	4.42	4.03	4.18	4.00
	중층	404	4.13	4.20	3.88	4.00	3.79
	중상층	76	3.95	3.93	3.93	3.74	3.47
	보수	108	4.30	4.35	3.81	4.15	4.07
정치성향	중도보수	257	4.07	4.18	3.84	3.99	3.84
	중도	327	4.17	4.28	3.94	3.99	3.82
	중도진보	293	4.33	4.33	4.11	4.11	3.90
	진보	65	4.15	4.18	3.86	4.03	3.74
	단독주택	371	4.19	4.27	3.91	4.12	4.02
주택형태	아파트	510	4.27	4.31	4.01	4.06	3.79
	다세대주택/오피스텔	169	4.02	4.13	3.80	3.84	3.78
거주시군	천안시	170	4.29	4.28	4.10	4.00	3.78
	공주시	67	4.25	4.27	3.97	3.96	3.82
	보령시	66	4.05	4.18	3.85	4.15	4.02
	아산시	115	4.24	4.28	4.09	3.98	3.74
	서산시	85	4.21	4.33	3.98	4.05	3.96
	논산시	70	4.14	4.27	3.84	4.20	3.77
	계룡시	43	4.14	4.33	4.16	4.09	3.84
	당진시	83	4.19	4.40	3.93	4.17	4.14
	금산군	46	4.33	4.28	3.89	3.83	3.85
	부여군	52	4.21	4.21	3.73	3.94	3.90
	서천군	45	4.16	4.29	3.87	4.24	3.91
	청양군	36	4.08	4.22	3.81	4.31	4.08
	홍성군	64	4.09	4.19	3.80	4.08	3.75
	예산군	57	4.02	4.14	3.89	3.93	3.93
	태안군	51	4.41	4.27	3.76	3.88	3.76
거주 행정 단위	읍	322	4.25	4.30	3.86	4.03	3.86
	면	284	4.15	4.23	3.89	4.05	3.94
	동	444	4.20	4.27	4.04	4.05	3.83

4)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1) 중앙정부의 우선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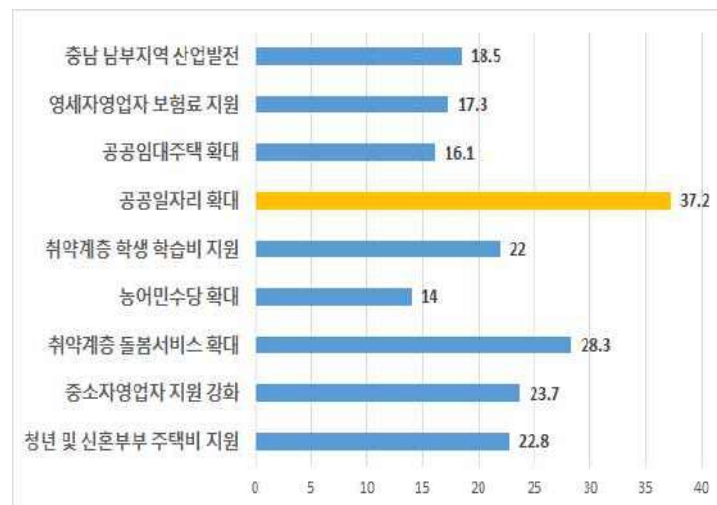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양극화가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이뤄지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주체와 방법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우선 정책을 알아봤다. 조사 결과([그림 62] 참조)를 보면, ‘임금 격차 완화’가 36.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부자에 대한 누진세 강화’ 30.5%,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6.0%, ‘도시와 농촌 간 격차 완화’ 25.1%, ‘수도권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22.5%, ‘부동산 과세 강화’ 21.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15.0%, ‘교육기회의 균등’ 11.7%, ‘공공일자리 확대’ 11.3%, ‘문화 불균형 해소 강화’ 0.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충남도민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의 우선 정책으로 임금격차 완화와 부자에 대한 누진세 강화를 크게 요구하는 만큼 충남도 차원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62]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중앙정부의 우선 정책(복수응답)

(2) 충청남도의 우선 정책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도의 우선 정책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 [그림 63]과 같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일자리 확대’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확대’ 28.3%, ‘중소자영업자 지원 강화’ 23.7%,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비 지원’ 22.8%, ‘취약계층 학생 학습비 지원’ 22.0%, ‘충남 남부지역 산업발전’ 18.5%, ‘영세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17.3%, ‘공공임대주택 확대’ 16.1%, ‘농어민수당 확대’ 14.0%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민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강하게 희망하는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정책들은 현재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정책이 많은 만큼 그 중요도에 따라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63]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충청남도의 우선 정책(복수응답)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성별, 결혼여부별, 연령별, 학력별, 월소득별, 계층의식별, 거주시군별, 거주행정단위별 조사 결과는 [표 54]와 같다.

〈 표 54 〉 사회양극화 해소 위해 충남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_(복수응답)

		(사례 수)	청년 및 신혼 부부 주택 비 지원	중소 기업 지원 강화	취약 계층 돌봄 서비스 확대	농어 민수 당 확대	취약 계층 학생 학습 비 지원	공공 일자 리 확대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영세 기업 보험 료 지원	충남 지역 산업 발전
[전체]		(1050)	22.8	23.7	28.3	14.0	22.0	37.2	16.1	17.3	18.5
성별	남 자	(553)	23.5	24.6	25.9	13.7	20.4	38.0	16.3	17.5	19.9
	여 자	(497)	21.9	22.7	31.0	14.3	23.7	36.4	15.9	17.1	16.9
결혼 여부	기 혼	(778)	15.0	25.3	28.1	17.6	22.4	36.8	14.4	21.1	19.2
	미 혼	(272)	44.9	19.1	28.7	3.7	21.0	38.6	21.0	6.6	16.5
연령 대	20대	(170)	53.5	14.1	24.1	2.4	19.4	40.6	23.5	5.3	17.1
	30대	(186)	37.1	22.6	30.6	4.8	23.1	33.3	23.7	11.3	13.4
	40대	(234)	13.7	28.6	35.5	7.7	20.9	38.5	15.4	24.8	15.0
	50대	(256)	11.3	30.1	29.3	14.8	23.4	34.0	12.9	21.5	22.7
	60대 이상	(204)	8.8	19.1	20.1	38.2	22.5	40.7	7.8	19.1	23.0
학력	중졸이하	(124)	7.3	13.7	17.7	46.8	20.2	46.8	8.1	14.5	24.2
	고졸	(454)	25.8	23.6	26.4	13.0	20.5	35.5	15.9	22.5	17.0
	전문대졸	(155)	22.6	27.7	28.4	6.5	25.2	32.3	20.0	16.8	20.6
	대졸이상	(317)	24.6	25.9	35.0	6.3	23.3	38.5	17.7	11.4	17.4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7.6	21.6	19.6	42.2	23.5	33.3	9.8	8.8	22.5
	200-400만원 미만	(330)	22.1	21.5	27.0	19.1	20.9	39.1	14.5	17.9	17.9
	400-600만원대	(336)	25.9	27.1	28.9	6.5	22.0	37.2	17.3	18.5	16.7
	600만원 이상	(282)	21.6	23.0	32.3	6.7	22.7	36.5	18.8	18.4	19.9
계층 의식	하층	(99)	24.2	24.2	22.2	27.3	23.2	32.3	16.2	15.2	14.1
	중하층	(471)	24.2	19.3	25.9	15.9	20.0	42.3	16.6	16.1	19.7
	중층	(404)	21.3	27.2	30.4	9.2	21.8	33.9	16.6	21.0	18.6
	중상층	(76)	19.7	31.6	39.5	10.5	34.2	30.3	10.5	7.9	15.8
거주 시군	천안시	(170)	28.2	30.0	34.1	7.1	14.7	40.0	20.6	15.3	10.0
	공주시	(67)	20.9	26.9	26.9	17.9	29.9	20.9	19.4	19.4	17.9
	보령시	(66)	16.7	25.8	30.3	18.2	21.2	19.7	19.7	24.2	24.2
	아산시	(115)	28.7	19.1	31.3	7.8	29.6	41.7	13.9	15.7	12.2
	서산시	(85)	18.8	16.5	34.1	16.5	29.4	31.8	18.8	18.8	15.3
	논산시	(70)	20.0	15.7	18.6	12.9	27.1	48.6	12.9	22.9	21.4
	계룡시	(43)	23.3	25.6	25.6	7.0	25.6	37.2	23.3	14.0	18.6
	당진시	(83)	19.3	19.3	27.7	19.3	20.5	42.2	20.5	12.0	19.3
	금산군	(46)	15.2	34.8	26.1	15.2	10.9	54.3	10.9	26.1	6.5
	부여군	(52)	23.1	30.8	30.8	13.5	23.1	40.4	9.6	17.3	11.5
	서천군	(45)	17.8	24.4	24.4	11.1	20.0	44.4	17.8	22.2	17.8
	청양군	(36)	19.4	16.7	27.8	27.8	13.9	50.0	2.8	11.1	30.6
	홍성군	(64)	26.6	21.9	32.8	15.6	20.3	23.4	7.8	18.8	32.8
	예산군	(57)	22.8	29.8	19.3	21.1	10.5	33.3	14.0	12.3	35.1
	태안군	(51)	25.5	17.6	15.7	17.6	31.4	35.3	15.7	13.7	27.5
거주 행정 단위	읍	(322)	23.0	24.8	26.4	12.1	19.9	39.4	14.9	17.4	22.0
	면	(284)	18.3	21.8	25.0	27.5	25.4	34.2	12.3	15.5	19.7
	동	(444)	25.5	24.1	31.8	6.8	21.4	37.6	19.4	18.5	15.1

(3) 사회양극화 해소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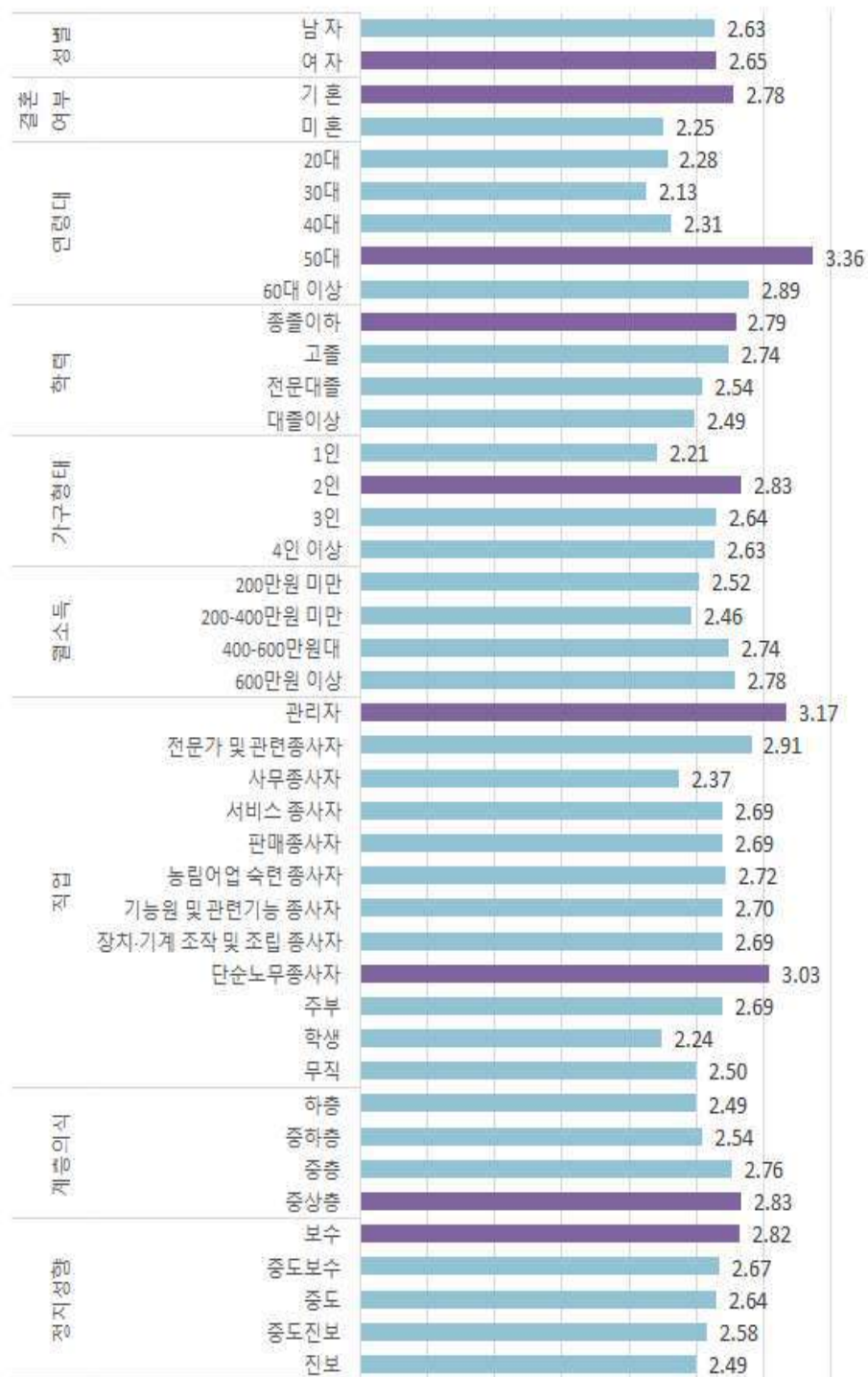
우리사회의 극심한 양극화가 향후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충남도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64]와 같다.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양극화 해소 가능성이 ‘없음’ 52.7%, ‘전혀 없음’ 1.8%로 해소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53.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잘 모름’ 25.8%, ‘약간 있음’ 19.0%, ‘매우 많음’ 0.7%로 양극화 해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은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민은 사회양극화에 대해 해소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이 2.5배 이상 많았다. 이와 같은 응답으로 판단하면, 사회양극화 해결이 그만큼 어려운 정책과제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 64] 우리 사회양극화 해소 가능성

사회양극화 해소 가능성을 5점 척도(1점 전혀 없음, 3점 보통, 5점 매우 많음)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65]와 같다. 부문별 결과를 보면, 성별에서는 여자(2.65), 결혼여부는 기혼(2.78), 연령대는 50대(3.36), 학력은 중졸 이하(2.79), 가구형태는 2인(2.83), 월소득은 600만 원 이상(2.78), 직업은 관리자(3.17), 계층의식은 중상층(2.83), 정치성향은 보수(2.8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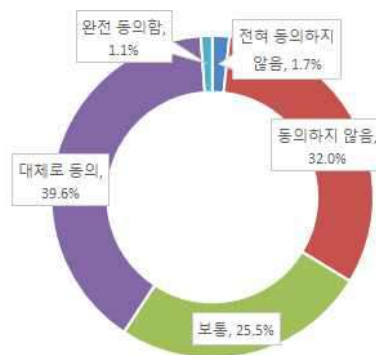
반면, 남자(2.63), 미혼(2.25), 30대(2.13), 대졸이상(2.49), 1인(2.21), 200-400만 원대(2.46), 학생(2.24), 하층(2.49), 진보(2.49)에서는 사회양극화 해소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 중에서도 학생들이 사회양극화 해소 가능성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했다. 이는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미래세대의 좌절과 절망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5] 부문별 사회양극화 해소 가능성(5점 척도)

(4)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증세 동의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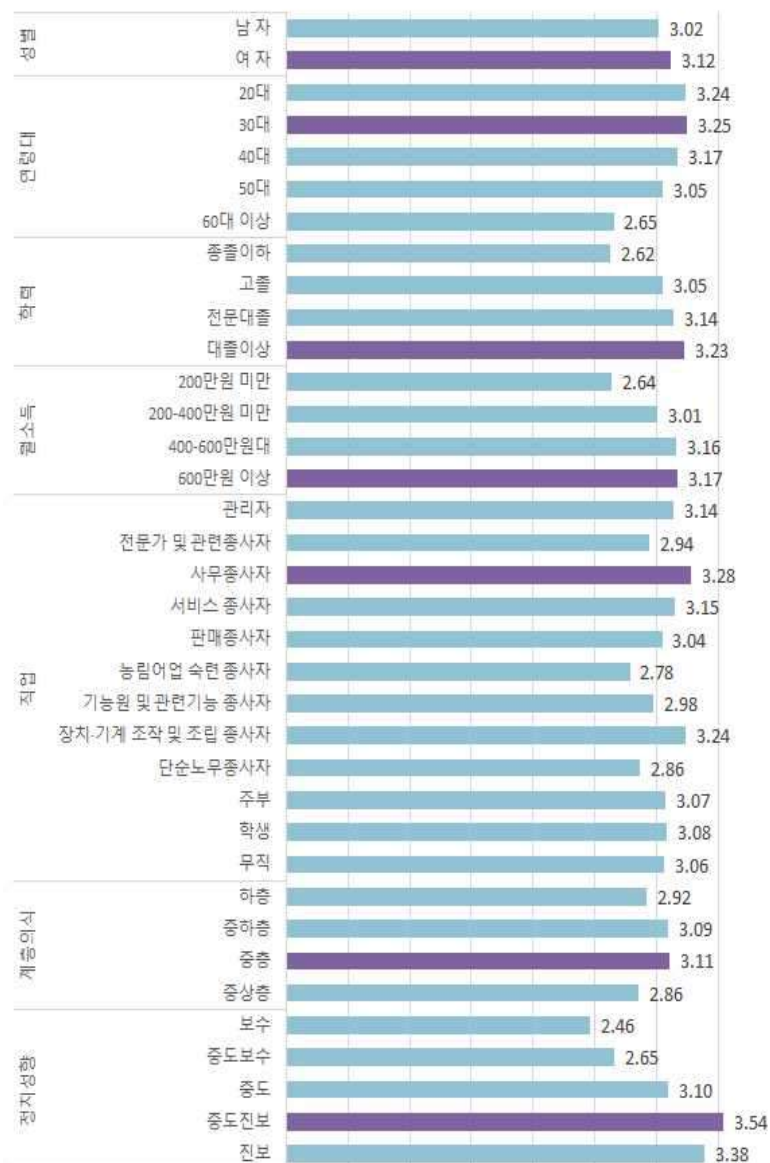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정책 투입이 필요하다. 정책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필요하다. 필요한 재정은 기존 재정의 세입과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증세는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적 표심을 증시하는 정치권에서 쉽게 증세를 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다.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종부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과세의 확대는 정치적으로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충남도민의 동의 정도를 알아봤다. 그 결과는 [그림 66]과 같다. 조사 결과, ‘대체로 동의’ 39.6%, ‘완전 동의함’ 1.1%로 전체 응답자의 40.7%는 증세에 동의했다. 반면, ‘동의하지 않음’ 32.0%, ‘전혀 동의하지 않음’ 1.7%로 전체 응답자의 33.7%는 증세에 동의하지 않았다. 중간적인 입장은 25.5%로 나타났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이 약간 많지만 반대도 많아 증세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6]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증세 필요성 동의 정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 필요성 동의 정도를 5점 척도(1점 전혀 없음, 3점 보통, 5점 매우 많음)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67]과 같다. 부문별 결과를 보면, 성별에서는 여자(3.12), 연령대는 30대(3.25), 학력은 대졸 이상(3.23), 월소득은 600만 원 이상(3.17), 직업은 사무종사자(3.28), 계층의식은 중층(3.11), 정치성향은 중도진보(3.5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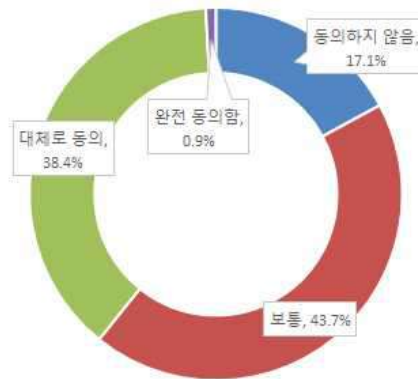
반면, 남자(3.02), 60대 이상(2.65), 중졸 이하(2.62), 200만 원 미만(2.6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78), 중상층(2.84), 보수(2.46)에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정도가 낮았다. 이 중에서도 학생들이 사회양극화 해소 가능성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했다. 전체적으로 고령, 저소득, 농어업종사자, 보수층에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7] 부문별 양극화 해소 위해 증세 필요성 동의정도

(5) 자신은 다소 손해이지만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증세 동의정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많은 응답자들이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했다. 하지만 증세로 인해 보인이 다소 손해를 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누구나 세금은 덜 내고 혜택은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자신은 다소 손해이지만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 동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 68]과 같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대체로 동의’ 38.4%, ‘완전 동의’ 0.9%로 전체 응답자의 39.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43.7%, ‘동의하지 않음’ 17.1%로 자신이 손해를 보는 증세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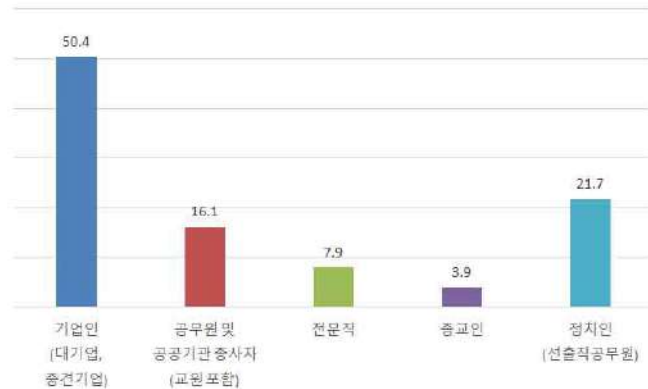


[그림 68] 자신은 다소 손해이지만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증세 동의 정도

(6) 심각한 사회양극화 해소 위해 가장 많이 양보해야 할 계층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의 재분배가 필요하고 필요한 재정은 증세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반대로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기존에 누려왔던 혜택이 사라지거나 더 많은 부담을 진다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양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과 규제만으로는 사회공동체의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심각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장 많이 양보해야 할 계층’은 어디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 6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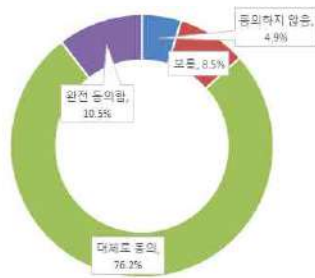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인(대기업, 중견기업)이 50.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치인(선출직 공무원) 21.7%,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교원 포함) 16.1%, 전문직 7.9%, 종교인 3.9%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민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선출직 공무원, 여기에는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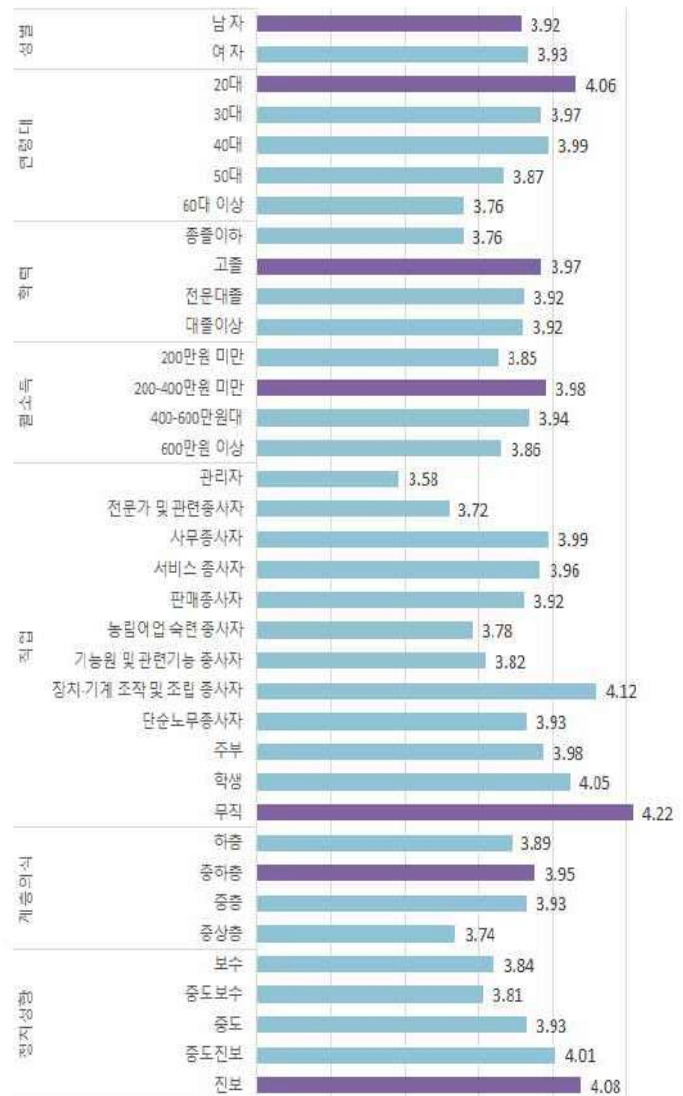
[그림 69] 심각한 사회양극화 해소 위해 가장 많이 양보해야 할 계층

(7) 초과이익공유제 동의정도

심각한 사회양극화 상황에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양극화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이익을 보는 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와 서민을 돕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익을 보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수익 일부를 기부(초과이익공유제)해 지역상생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들이다. 하지만 기업의 수익이 일시적이지 않고, 수익의 범위와 대상기업의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초과이익공유제는 현재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지역상생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중이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상생모델이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초과이익을 통한 지역상생기금 활동’에 대한 충남도민의 동의 정도는 다음 [그림 70]과 같다. 조사 결과, ‘대체로 동의’ 76.2%, ‘완전 동의’ 10.5%로 전체 응답자의 86.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통 8.5%, ‘동의하지 않음’ 4.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부문별 동의 정도는 다음 [그림 71]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70] 대기업 초과이익의 지역상생기금 활용 동의 정도



[그림 71] 부문별 대기업 초과이익의 지역상생기금 활용 동의 정도

3.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사회양극화에 관한 인식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충남도민 전체 1,0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6월~7월 사이에 실시했다. 설문내용은 크게 사회양극화에 관한 인식, 정책선호도, 정책 방안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설문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도민은 사회양극화의 의미를 소득 격차, 자산 격차, 일자리 격차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양극화 정도는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양극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소 심각’ 54.8%, ‘매우 심각’ 23.4%로 심각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8.2%일 정도로 매우 높았다.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충남도의 사회양극화에 대해서는 ‘다소 심각’ 53.8%, ‘매우 심각’ 10.4%로 전체 응답자의 64.2%가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우리나라 전체 사회양극화의 심각성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충남도 역시 사회양극화 심각 정도가 낮지 않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양극화의 해소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서 사회적 지위 이동 가능성, 즉 개인이 노력할 경우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함’(가능 13.2%+매우 가능 1.9%)보다는 ‘불가능함’(불가능 35.4%+전혀 불가능 1.6%)이 거의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청년층에서는 ‘가능함’은 1.2%에 불과했고, ‘불가능함’은 54.7%로 나타나 미래사회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양극화가 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부동산(소유)과 자산(현금, 주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약 10가지의 사회양극화 부문을 제시하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부문을 선택하게 했다. 조사 결과(10점 척도), 부동산(소유) 8.05, 자산(현금, 주식 등) 8.04점으로 거의 비슷했고, 다음으로 소득(근로소득) 8.01점, 일자리(대기업과 중소기업) 7.91점, 일자리(정규직과 비정규직) 7.82점 순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산(부동산, 현금, 주식 등)과 일자리가 사회양극화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토마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이 임금소득보다는 자본소득 증가율이 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문별 정책 선호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본 설문 조사에서는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영역을 크게 6부문(소득보장, 사회보장, 부동산·주거, 일자리·사회혁신, 교육·문화, 지역균형발전)으로 나누고 각 부문의 세부 정책을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부문별 정책 선호도(5점 척도)가 가장 높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보장 부문에서는 근로장려금 확대(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 지원)(4.11점), 사회보장 부문에서는 연금 간 격차 완화(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4.05점), 부동산·주거 부문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4.02점), 일자리·사회혁신 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4.28점),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4.24점),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는 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4.2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문별 선호도가 높은 정책들은 향후 사회양극화 정책 마련에도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대한 사회양극화 해소 요구 정책은 달랐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임금 격차 완화’(36.7%), ‘부자에 대한 누진세 강화’(30.5%)가 높게 나타났고, 충남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37.2%),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확대’(28.3%)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자신의 증세에는 유보 입장을 보였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50.7%(대체로 동의 39.6%+완전 동의 1.1%)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33.7%(동의하지 않음 32.0%+전혀 동의 않음 1.7%)보다 높았다. 하지만 자신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증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응답은 39.3%(대체로 동의 38.4%+완전 동의 0.9%)이었고, 보통은 43.7%, ‘동의하지 않음’은 17.1%로 다소 유보 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사회양극화를 위한 증세를 추진할 경우 국민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양극화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식과 정책선호도는 일반적인 상식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부문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양극화 해결에 중요한 정책들을 충남도민들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또한 본 설문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충남도에서 다 실행할 수는 없다. 국가 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과제도 많다. 따라서 부문별 정책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중앙정부 간 역할 분담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차 지원하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즉, 충남도에서 어려운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공론화를 지속해 나간다면 중앙정부는 중요한 사회양극화 정책을 실행할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정책적 협력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6장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도 대응과제

1. 기본 방향

사회양극화는 사회구조와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두 가지의 정책이나 사업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러한 정책과 사업은 대증요법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양극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있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양극화는 그 정도가 심각하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사회의 구조와 체계가 위협을 받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지금과 같이 사회양극화가 지속된다면 우리사회의 생존과 존속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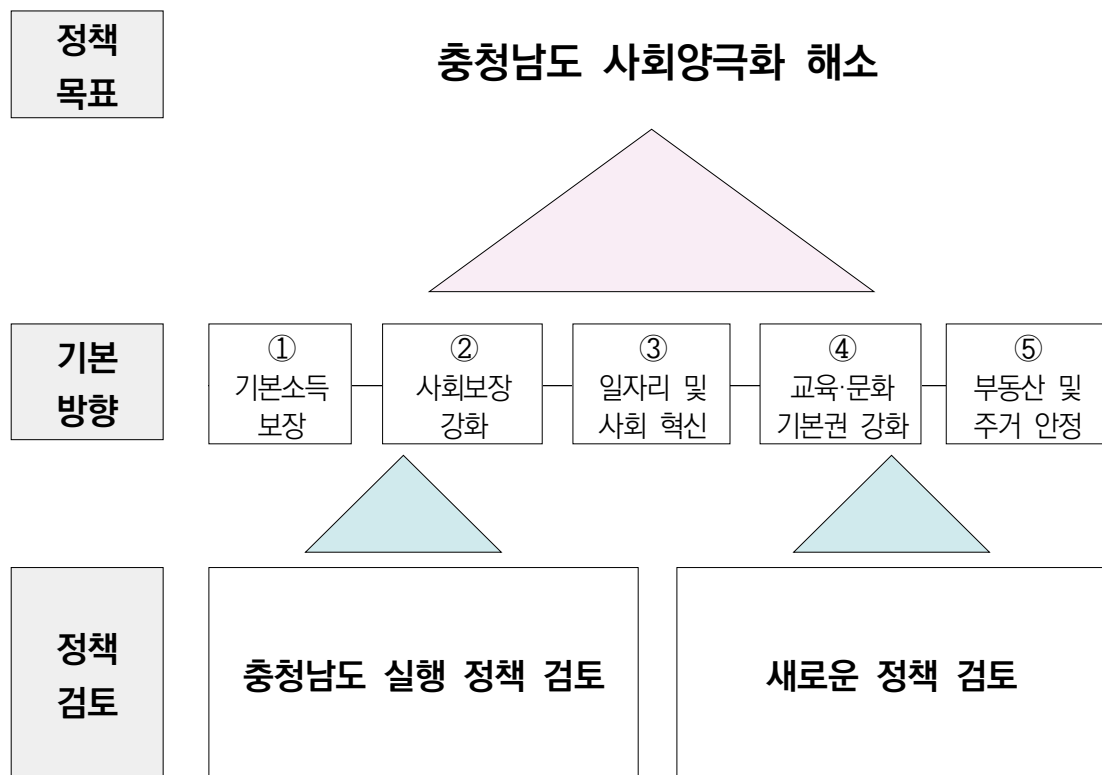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응과제로써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선7기 충남도의 사회양극화 정책의 계승발전이다. 앞서 제3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충남도는 민선7기에 들어서 무상정책, 수당정책, 공제지원 정책, 임대주택정책 등 다양한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책적 효과가 큰 정책은 확대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근 논의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이다. 사회양극화는 오랜 동안 제도화된 구조의 틀에서 축적된 체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될 수도 없고 일반적인 정책의 틀로써는 접근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논의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정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상병수당, 고용보험 등 기존의 관념과 제도적 틀을 뛰어넘은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들이 우리사회에서는 미증유의 정책들이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양극화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없고 새로운 정책은 도입을 주저하는 사이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충남도 차원에서 어떻게 도입할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충남도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을 검토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분야로 크게 ①소득보장정책, ②사회보장정책, ③일자리·사회혁신정책, ④교육·문화정책, ⑤부동산·주거정책, ⑥지역균형발전정책 등 6개 분야 31개 정책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는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의 기본방향으로 ①기본소득 보장, ②사회보장 강화, ③일자리 및 사회 혁신, ④교육·문화 기본권 강화, ⑤부동산 및 주거 안정 등 5개 분야 23개 정책의 도입 방안을 도출했다. 여기에서 제외된 정책 분야는 대부분 충남도 차원에서 도입이 어렵거나 그 범위가 넓어 본 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운 정책들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 과제는 다음 [표 55]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72] 충청남도 사회양극화 대응과제 기본방향

〈 표 55 〉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의 기본방향과 세부과제

정책 분야	검토 정책	개편 →	기본 방향	세부과제
①소득 보장정책	①기본소득제 도입 ②청년기본소득 지급 ③근로장려금 확대 ④농어민기본소득 확대 ⑤최저임금 인상	→	①기본소득 보장	①청년기본소득 ②아동(육아)기본소득 ③농어민기본소득 ④농어촌주민기본소득
②사회보 장정책	①기초노령연금 인상 ②연금간 격차 완화 ③아동수당 확대 ④상병(傷病)수당 지급 ⑤청년사회진출금 지급 ⑥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	②사회보장 강화	①기초연금 확대 ②상병(傷病)수당 지급 ③청년사회진출금 지급 ④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③일자리 ·사회혁 신정책	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②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③주4일근무제 실시 ④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⑤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⑥경제적 회생 지원 확대	→	③일자리 및 사회 혁신	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②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③주4일근무제 실시 ④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⑤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④교육· 문화정책	①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②방과후 학교 정부책임제 ③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④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⑤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⑥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	④교육·문화 기본권 강화	①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②방과후 학교 정부책임제 ③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④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⑤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⑥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⑤부동산 ·주거정 책	①토지보유세 강화 ②공공임대주택 확대 ③청년주택 확대	→	⑤부동산 및 주거 안정	①공공임대주택 확대 ②청년주택 확대
⑥지역 균형발전 정책	①공공기관 지방 이전 ②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 ③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④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⑤농어촌주민기본소득제 도입	→	제외	본 연구과제에서 제외. 단,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은 ① 소득보장정책으로 이동
합계	31과제		합계	21과제

2. 부문별 대응 과제¹⁰⁾

1) 기본소득 보장

(1)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가. 기본소득 논의 배경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소득 의무, 노동 조건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기본소득은 5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보편성, 둘째, 가족이나 집단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개별성, 셋째, 지급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무조건성, 넷째, 한 두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정기성, 마지막으로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현금성 등이다. 최근 기본소득의 6원칙으로 충분성을 거론하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채택된 사항이 아니다. 암튼 기본소득의 원칙이 이렇다는 것이고 실제 정책 실행과정에서는 변용이 되고 있다.

기본소득이 우리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논의 및 실험되거나 도입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선별복지의 한계이다. 지금의 복지체계는 산업화 시기 완전고용을 가정한 복지체계이다. 그래서 복지의 대상이 고용에서 배제된 계층, 신체적 장애가 있어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 고용이 되더라도 임금이 취약한 계층이 그 주요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첨단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용의 형태와 내용도 변화하였다. 이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등 기존의 복지체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해 기존의 복지체계를 보완 혹은 대체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일자리 감소와 불안이다. 4차산업 혁명, 인공지능, 자동화 등 현대 산업체계가 갈수록 첨단화,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노동이 필요 없는 산업체계가 진행되고 있다. 자동화, 첨단화로 산업은 성장하지만 고용은 줄어드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이 때문에

10) 부문별 대응 과제의 일부 내용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의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전문가별 자문분야는 다음과 같다: 서봉균(기초노령연금, 전 국민 고용보험제), 김영생(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이다영(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박주영(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남기업(공공임대주택 확대), 박덕병(청년주택 확대)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증가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청년들에게 이러한 체제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이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또한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우리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산업화시기 성장의 과정에서는 대부분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저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저성장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최근 들어 그 정도는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사실 토지는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특점과 특권을 허용하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접근할 권리가 주어져야 하지만 우리의 법률체제와 사회시스템이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유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강화해 여기에서 나오는 공유부(共有富, 또는 共同富)를 함께 나누는 체제가 필요한 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의 심화이다.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기후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기후위기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인류의 멸절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를 막아내는 게 인류의 가장 큰 과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 중심,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해 그들이 원하는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는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무한정한 물질적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석탄과 석유 등 환경을 파괴하는 자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기본소득형 탄소세가 기후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탄소세가 국경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탄소배출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러한 과세를 일부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기본소득으로 활용된다면 탄소사용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나. 기본소득의 도입 현황과 쟁점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BI)이 논의된 것은 2000년대 무렵이지만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2015년에 처음 실시한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은 우리사회의 기본소득 논쟁을 촉발했다. 청년문제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계급과 계층 불평등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실업문제의 핵심이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도입되었지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성남시에서는 모든 청년들에게 동등하면서도 실질적인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고 자 청년배당제도를 도입해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모든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정책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청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이후 서울시의 청년수당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청년뿐만 아니라 농민으로도 확대되었다. 전남 강진군은 2017년에 농업경영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농가당 70만 원 농민수당을 지급했으며 전남 해남군은 2019년 ‘해남군 농민수당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어가당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이러한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2020년에는 충남, 전남,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60~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을 시작했고 이후 강원, 충북, 경기, 경남, 경북, 제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뒤따라 시행을 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이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배당이나 수당 형태의 기본소득은 부분적으로 있어왔고 그 논의 또한 활발했지만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코로나19 발생 이후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초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지면서 전국민 기본소득이 경제적, 사회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재난지원금(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많은 지자체들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기본소득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실시했고 급기야 정부 차원에서도 보편적 기본소득 형태인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의 우리사회의 가장 논쟁적인 정책 이슈로 부상했다.

기본소득은 앞서 논의 배경에서 설명했듯이 우리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반대의

주장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주요한 반대 이유는 첫 번째, 재정이 많이 든다는 것이고 둘째,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소득을 주는 게 맞는지에 관한 문제이고, 세 번째, 기본소득이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 재난지원금, 나아가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다. 충남도 기본소득 도입 방안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전한 기본소득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기간 중에 실시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기본소득의 성격을 띠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소득의 기본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확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전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많은 만큼 충남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부분부터 실시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충남도 자체적인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안이 있을 것이다.

첫째, 충청남도 청년기본소득 실시이다. 오늘날 청년은 계급과 계층 격차의 핵심이 되고 있다. 과거 성장의 시대에는 계급과 계층 사다리가 어느 정도 존재했지만 현재와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계층 사다리가 끊어져 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지원했지만 정책적 효과는 미흡했다. 따라서 일부 특정 청년만 혜택을 보는 정책은 지향하고 모든 청년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제기되었다. 이미 경기도는 2019년부터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는 사회수당 형태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개월 한정인 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충남도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서울시 청년수당을 먼저 파악하고 충남도 여건에 맞는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남에는 천안, 아산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많은 대학이 위치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이 많지만 졸업 후에는 대부분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물론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등도 중요한 청년정책이지만 이들이 당장 생활을 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는 아동(육아)기본소득의 확대이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과 양육기구를 지원하는 가족지원 정책으로 현재 OECD 가입국 대부분이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8월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22년 1월부터 만 8세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은 아동 양육의 부담을 일정 부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월 10만원의 지급액으로는 출산과 보육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현금 1만원을 지원하면 출산율이 0.126%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한겨레, 2020/11/26). 따라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아동수당 지급액을 확대해야 한다.

충남도가 아동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은 강원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강원도는 2019년 출생신고 이후부터 지원금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란 이름으로 만 3살이하 영육아가 있는 보육 가정에 매달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강원도가 사업 시행 2년 만에 지급액 인상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당을 지급한 뒤 도내 출생아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줄었던 강원도 내 출생아 수는 ‘19년 8370명으로 ’18년에 비해(8351명) 0.23%(19명) 늘었다. ’19년도 기준, 17개 시·도 가운데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은 강원도와 세종 시밖에 없다(한겨레, 2020/11/26). 2018년 11월 전국 처음으로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한 충남도는 수당 지급 기간을 3년까지 늘렸다. 출산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수급기간뿐만 아니라 지급액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의 개선이다. 충남도는 2020년부터 농어가당 연간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가당 80만 원은 현재 전국 광역지자체 농어민수당 가운데 최고 액수이다. 하지만 최근 농어민수당을 기본소득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개별성의 원칙에 따라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농민 개인당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고, 제주도는 내년부터 농민 개인당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충남도도 농어가당 80만 원인 현재의 지급형태를 농민 개별당 지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가 개별 지급은 특히 농가 내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민 개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도 농어민수당은 현재 농어가당 지급에서 농어민 개별 지급으로 전환하고 총액은 다소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는 충청남도 농어촌주민기본소득 실시이다. 최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가 위험수준에 접어들면서 농어촌주민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은 농어민기본소득(농어민수당)의 연장선상이기는 하지만 두 제도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농어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은 농어촌주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통해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구현이다. 현재 농어촌지역은 그동안의 도시위주의 산업정책, 급격한 시장개방 등으로 농어촌의 근간이 되는 농어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어민기본소득을 통해 농어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해야 하지만 사실 농어촌지역에서의 농어민은 약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의 회생을 위해서는 농어민기본소득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도농 간 발전격차,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은 충남도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인구감소가 심한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점차 확대하고 이를 국가 정책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제시된 세 가지 기본소득은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 기존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시범사업을 실시 후 확대하는 방법 등으로 제시했다. 충남도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정책 수용도, 재정 여건, 정책의 형평성과 타당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 표 56 〉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도입 형태

기본소득 형태	정책 목표	도입 형태
청년기본소득제	균등한 기회 제공, 세대간 격차 해소	신규 도입
아동(육아)기본소득	저출생 극복, 육아 부담 경감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확대 개편
농어민기본소득제	농어민 소득 안정, 농어업의 지속성 보장	기존 농어민수당을 기본소득 형태로 개편
농어촌기본소득제	도농 격차 완화 지역균형발전 실현	인구감소지역 우선 대상 실시 후 확대

2) 사회보장 강화

(1) 기초노령연금 확대

가. 노인문제와 노인정책의 문제점

한국의 노인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각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례로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을 볼 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9년 43.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21) 또한 노인자살률을 보면 2019년 기준 46.6명으로 조사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은 OECD 국가를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노인에게 대한 공적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여유진, 2019) 노인자살과 관련해서도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 1위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20) 우리나라의 GDP 대비 노인에게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2013년 기준 2.2%로 고령화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OECD 평균인 7.7%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여유진, 2019)

나. 기초연금의 필요성 및 실시 현황

2008년부터 시행된(처음 명칭은 기초노령연금) 한국의 기초연금제도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계층에게 기여방식이 아닌 조세를 재원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공적연금의 한 형태이다. 한국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대상자 수와 지급 금액이 너무 적어 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이성기 외, 2019)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기초연금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2021년 기준으로 단독노인 가구 1,690,000원, 부부노인 가구 2,704,000원(선정기준액) 이하의 개별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부부인 경우 20% 감액)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전체 인구의 67.3%인 약 521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다. 기초연금의 한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들 또한 내포하고 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문제이다. 2020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의 6.9%인 38만 명 정도가 감액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둘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일명 “줬다 뺀 기초연금”문제이다.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에 따라 비수급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공무원 및 군인 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들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문제이다.

라. 국가 차원의 대응 과제

우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문제는 성격이 다른 두 제도(연금 성격인 국민연금과 부조 성격인 기초연금)를 억지로 연계시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미래 노후소득보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로 “줬다 뺀 기초연금”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보충성의 원리에 비추어 일견 타당한 면도 있다. 그러나 가구의 특성상 추가적인 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실제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도 노인의 추가적인 지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이라고 예외로 인정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직역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기초연금 제외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애초의 취지는 국민정서상 국민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직역연금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구조로 볼 때 직역연금 수급자라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마. 충청남도 차원의 확대 방안(전면 혹은 시범사업)

우선 “쫓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들이 받지 못하는 기초연금을 충청남도에서 보조해도 결국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을 감액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연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역연금 수급자들에게 충청남도 차원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실사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감액 수급자와 직역연금 수급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자를 위한 가칭 ‘**기초연금 플러스**’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9년 기준으로 도내 65세 이상 노인 약 37만 명 중에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은 약 27만 명으로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감액된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은, 전국 평균인 7%(이형훈, 2020)를 대입하면, 2만 명 안쪽이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충청남도 차원의 보조는 현재 한국의 노인빈곤과 부실한 공적노후 보장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수급자 중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91.0%로 이르렀다. 실제로 기초연금 예산은 14.9조원이며 2021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7%에 이를 정도로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한국의 노인빈곤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성과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하여 기초연금의 확대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충청남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좋은 표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상병(傷病)수당제 도입

가. 정책 도입의 필요성

외국에서는 보편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 상병수당제가 필요하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일례로,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발생했지만 감염병 증상에도 소득 감소를 우려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모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업무 이외의 부상·질병으로 인한 병가 규정이 없다. 개별 기업에서 사내 복지 차원으로 '유급병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용직 근무자,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아플 때 쉬는 건 '그림의 떡'인 셈이다. 실제로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일수록 유급병가 적용률이 낮았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등이 발행한 '외국의 유급병가·상병급여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12.3%)과 5~10인 사업장(15.5%)은 유급병가 적용률이 10%대에 불과했다. 반면 300~1000인 미만 사업장과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유급병가 적용률은 각각 71.1%와 80.6%에 달했다.

최근 노동계는 '전국민 상병수당(노동자가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상병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는 '공단·공단조합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례 보조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구체적 임의급여로 장례 보조비와 본인부담금 두 종류로만 한정해 상병수당은 제외돼 있다.

유급병가 적용률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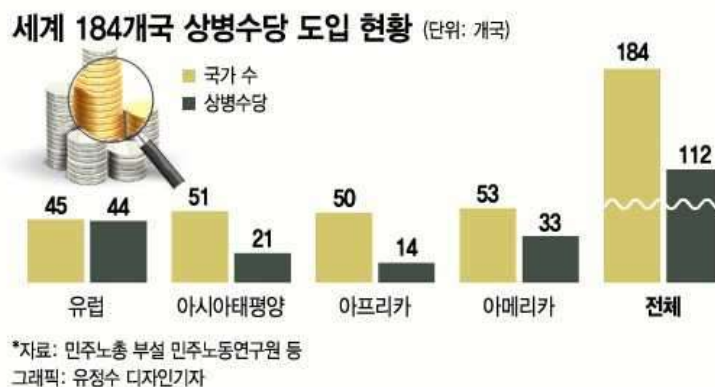
*자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등
그래픽: 유정수 디자인기자

출처 : 이재훈, 2020.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나. 해외사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다수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4개국이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는 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9개국에 불과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감염병 대응 차원과 노동자 복지 차원에서도 상병수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 이재훈, 2020.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다. 정부 정책 방안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선 많은 과제가 있다.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지, 세부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기업들은 상당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상병수당 도입 과정에서 자칫 어떤 방식으로든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재원 마련 방안이 필수다. 급여 기간, 보장 수준 등에 따라 과거 연구들을 보면 연간 비용을 최소 3,211억 원에서 최대 1조 5,387억 원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ILO는 재원조달방식에 대해 근로자가 재원에 부담하는 기여 액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민주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비용을 최소 3,211억 원에서 최대 1조 5,387억 원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ILO는 재원조달방식에 대해 근로자가 재원에 부담하는 기여액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도 운영방식에 관계없이 상병수당 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에 국고지원을 하고 있다. 보사연 발간 「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때 주된 재원조성을 조세 기반으로 할 것인지, 보험료 기반으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논의사항이 될 것"이라며 "현재 건강보험에 미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으로 소요재정의 50% 이상을 충당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 저자들은 적고 있다(임승지 외, 2021: 9).

라. 충남도차원의 정책 방안

충남도에서는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기업에 한하여 세제를 감면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프리랜서나 영세자영업자의 상병보험의 보험액은 충남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상병수당의 사회보험방식은 조세방식이다. 즉, 지자체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주로 추진체계였던 사회보험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덴마크의 경우 의료보장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상병수당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3) 청년사회진출금제(청년기본자산제) 도입

가. 정책 도입의 필요성

청년사회진출금은 기본자산제도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자산이란 한 개인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로 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말한다. 2022년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앞 다투어 기본자산제도에 가까운 공약을 발표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저축 계좌를 만들어주고 만 20세가 되면 1억 원을 주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발표했다(전북타임스, 2021.05.11). 김두관 의원은 '신생아 기본자산제'를 내걸었다. 모든 신생아 몫으로 3,000만 원을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만 20세가 되는 해에 6000만 원 이상 자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데일리중앙, 2020.11.16). 야권 대선주자들도 기본자산제도 공약을 내놓았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청년교육카드 형식으로 1)대학 등록금 2)직업교육훈련비 3)창업·창직 준비금으로 쓸 수 있는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1억 원 한도 무이자 용자를 약속했다. 정의당은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공약으로 내놓았다(다음뉴스, 2021.08.14).

실제로 기본자산제도는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까지 소급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아테네 정부가 시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나눠주는 배당제도(기본소득제도)를 비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판하고 있다(김종철, 2020).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적 이상을 지향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규모는 GDP의 30% 수준이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인 판 파레이스는 GDP의 1/4 수준의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 이를 받아들이면 정부 재원을 GDP의 55% 수준으로 늘려야 하게 된다. 여기에 2018년을 기준으로 GDP의 11.1%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을 OECD 평균에 해당하는 21% 수준으로 증가해나간다고 가정하면,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해 현금성 사회복지지출이 절반 가까이 절감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출 규모를 GDP의 60~7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게 된다. 누진세의 적용을 감안하면 부유층은 말 그대로 자기 소득의 거의 전부를 내놓아야 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를 강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에 투입되는 재원을 절감하는 방안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기본소득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회보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양극화 완화, 소비 진작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할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김종철, 2020).

나. 충남도 차원의 정책 방안

충남도 차원의 청년사회진출금, 즉 청년기초자산제 실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충남도 15개 시군에서 지역 내 청년에게 일정시기(예: 25세)에 일정액(군 단위 연간 2천만 원, 시단위 3천만 원)의 사회진출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청년의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진작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통장활용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역 내 중소 중견기업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위한 방식이다. 실제로 인천청년통장 「드림 for 청년통장」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3년간 월 10만원씩 내면, 인천시가 640만원을 보태서 1,000만원의 목돈을 주는 제도이다. 통장활용의 장점은 지역 내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지가 가능하다. 3년간 직장에 머물러야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표 57 〉 인천시「드림 for 청년통장」 지원내용

구 분	내용	저축액	총 액
인천시	분기 50만 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 원, 4회 납입(잔여1년)	640만 원	1,000만 원 (+이자)
근로자	월 10만 원, 36회 납입(3년)	360만 원	

(4) 전 도민 고용보험제 실시

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개념 및 논의 배경

고용보험이란 노동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이유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되어 상실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며 재취업을 돕는 사회보험¹¹⁾의 한 종류이다. 기존 고용보험제도는 단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노동과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어 왔다. 현재의 고용보험은 고용기간이 짧고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형식상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며, 취업시장에서 불가피하게 벗어나 영세자영업에 내몰리는 노동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제도로써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장 단위와 상관없이 소득에 기반을 하여 실제로 노동을 하는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사각지대를 없애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11) 사회보험제도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늘어난 임금노동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19세기 말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어 20세기에 정착된 제도이다. 노동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노동자와 생산에 필수적인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사용자가 각각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이며, 여러 가지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20세기 말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고용보험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ILO(2018)는 계약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과 조세제도의 도움을 받아 보편적인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나.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주요 내용 및 쟁점사항

현재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을 통해 2025년까지 첫째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둘째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하며, 셋째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전 국민고용보험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둘째로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던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만들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셋째로 고용보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이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이다.

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

위에서 이야기한 쟁점 중에서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인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시행된다면 새로이 확대되는 가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선결조건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존의 가입자들과 달리 새로이 확대되는 계층들은 취업과 실업의 경계가 모호하고 근로시간과 임금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히 고용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다르게 취업과 실업을 판단하여 기여기간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액과 수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국세청 조세체계와 연동하여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 국가 차원의 도입 방안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현행 국세청 소득세 징수체계와 연동하면 가능하다. 현재 소득세 과세체계는 전 국민 소득에 대한 충분한 포괄성을 이미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1년에 개인 총소득 1,200만원 이런 식으로, 취업과 실업을 가르는 소득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실업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재 소득을 확인하고, 추가로 실업 전 평균소득을 확인해야 한다. 네 번째로 실업 전 평균 소득과 연계하여 실업급여액을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납부방식을 소득기준으로 전환한다. 참고로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선결조건이지만 매월 소득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지금도 거의 모든 소득 신고와 과세에 대해서는 신고시점에 주어진 정보에 근거하여 과세하고 나중에 정확한 소득 정보가 생기면 사후 정산하고 있다.

마. 충남도 차원의 도입 방안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현재 고용보험이 가진, 단일 사업장에 기반을 둔 사용자와 노동자의 전속적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구조를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확대되는 적용대상자들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하여 도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 제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하여, ‘두루누리 사업’에 맞추진 지원기준을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선도하여 기준을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210만원’은 올해 최저임금 월 ‘182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를 적어도 2019년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중위값인 ‘234만원’(통계청, 2021) 정도까지는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으로 된 기준을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특히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적어도 ‘중소기업’ 단위까지는 확대해야 한다.

3) 일자리 및 사회 혁신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현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다. 공공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고용조건의 큰 차이로 인해 일자리가 30%로 감소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큰 격차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그대로 두고 다 만족하는 정규직화는 불가능하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화 차별 해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별은 별로 해소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실질소득의 차이는 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

임금 차이는 이상적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미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임금 차이를 정당화 시킬 수 있고 능력개발이 경력개발에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사회적 신분과 같은 정규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법이 없는 것이다.

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분야별 정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비정규직이 더 높다. 유연성을 제공하는 대가이다. 정규직의 50%정도를 일할 경우 70% 정도의 소득이 가능하도록 협약이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도 광주에 자동차 생산시설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일자리 안정성을 보장하고 타협한 임금을 유지하는 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줄여나갈 경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어떻게 하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개인의 여건과 사정을 반영하는 최적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러한 방식은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 해결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다.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쟁점

현재와 같이 정규직의 혜택과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은 많은 비정규직의 적은 혜택과 권리 제한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같이 지속 가능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경우 현재의 비정규직 전환의 쟁점은 사라질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치적인 해소 노력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

라. 충남도 차원의 정책 방안

광주와 같은 일자리 빅딜을 추진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임금을 조정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정규직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관점과 미래 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필요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의 국내 복귀와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렛대가 준비되어야 한다.

(2)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가. 지역사회 양극화 확대와 지역문제 해결의 어려움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을 살펴보면 18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자본주의 극대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활동의 흐름으로 출발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경제의 용어는 19세기 초 프랑스 경제학자들에 의해 사회적 의미의 경제활동이라는 폭넓은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1950년대 전후세계는 복지국가론의 등장으로 국가와 정부에 의한 사회적 문제해결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대안적 활동으로 사회적경제 활동영역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1970년대 본격적으로 제기된 정부실패를 극복하고자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 정책지향이 확산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사회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확산되면서 대안경제활동의 욕구가 확대되며 사회적경제 활동이 부상하였다. 특히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개념은 1998년 IMF이후 생산적 복지에서 발전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회적 대안으로 제시되며 노동 및 일자리의 새로운 정책추진 영역의 성격이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나.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 현황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직면한 한국경제 및 사회적 위기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양극화 현상의 심화와 고령화 사회의 직면으로 고용과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제·사회적 위기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가치의 창출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사회적경제에 정책적인 관심을 갖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표하였는데, 다양한 문제해결과 좋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제도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일자리, 금융, 공공조달, 창업 및 인재육성 등 사회적경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였다. 현재 문재인정부는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 현재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쟁점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일정 수준의 정치적, 경제적 수준에 오른 사회에서 이러한 제3섹터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사회처럼 발전된 국가의 형태에서는 전기, 물, 교통, 보건위생, 복지 등 대부분 사회적 수요는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사회와 같은 발전된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주로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힘든 문제(Wicked Problem)가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주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이 대부분이며 경영의 지속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준영, 2016).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IMF이후 사회적 일자리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시작되면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행정적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자유로운 신고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정부 지원의 조직들은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지나친 공공기반 중심의 운영형태를 보이는 양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수행하는 영역의 경우 전통적으로 정부의 행정 서비스 영역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대부분 영세하여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성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한계가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인재·김성기(2014)의 논의처럼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지원의 의존하는 사업모델로 정착되는 경향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

라.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

재 국가차원의 사회적경제 정책방안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에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사업의 내용은 4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정책영역이다.

- ① 범부처「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시행, ②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 다각도 판로지원 방안 마련, ③ 혁신형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소셜벤처 확산기반 마련, ④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추진이 대상이다.

둘째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정책영역이다.

- ①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 공동체 중심 지역생태계 구축, ②지역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③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 발굴·확산이 대상이다.

셋째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분야 다양화 지원이다.

- ①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주거 빈곤 완화를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②사회적경제 분야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③탄소중립·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환경 분야 진출 확대, ④ 디지털 뉴딜 이행·활용 확대가 대상이다.

넷째는, 사회적경제 법제도 인프라시설 확충이다.

- ① 사회적경제 관련법 입법을 통한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②사회적 성과 측정지표 마련 등 제도적 기반 확충, ③가치소비 캠페인(Buy Social)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 충청남도 차원의 정책 방안

충청남도 차원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2012년에는 전국 최초로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1,2차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수요충족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 및 기업들을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특성의 정책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현재 사회적경제의 지원정책은 민선5기 이후 10여년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정부나 공공의 직접지원보다는 충남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는 방식의 지원방식이 요구된다.

대표적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으로 중앙정부(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충남 청양군의 도심에 위치한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에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 본 혁신타운은 충남 사회적경제의 중간지원조직 및 실행기관들과 함께 충남의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의 사회혁신 기업들이 집적될 전망이며 이들의 발굴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팅과 다양한 리빙랩의 기반들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의 지리적 중심인 청양군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적으로 경영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진기지이자 거점으로서 기반과 운영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민선7기 이후 축적되고 있는 충남 사회적기금에 대한 활용과 확산에 대한 정책적 다양화를 통해 충남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높여 경영역량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도 사회적기금이 축적되고 이를 통해 충남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일부 융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융자조건의 완화와 함께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주4일근무제 실시

가. 주4일근무제의 배경

주4일근무제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의 전향적 방법과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2번째로 장시간 근로하는 국가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과도한 노동시간은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일 가정 양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극복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1세기 세계적으로 4차산업 혁명이 확산되고 인공지능 및 로봇 등의 첨단기술 확산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과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미래예측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1990년대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을 때

사회적 파장이 컸던 것처럼, 주4일근무제에 관한 현재 사회의 논의는 진행 중이라 볼 수 있다. 주5일제 근무는 우리나라에서 2003년 8월 정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대다수의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다.

주4일근무제는 일자리의 지속적 감소에 대한 대응의 측면도 있지만 일주일에 4일만 근무하게 함으로서 노동자들 간에 일자리를 공유하고 시간 및 요일선택 일자리를 확대하여 여성들의 선택적 일자리 확장을 통한 저출생 극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현재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SK그룹이 처음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였는데 2018년 11월 도입한 국주 주4일 근무를 2019년에 본격적으로 정착시켰다. 이러한 주4일근무제는 대기업보다 복지가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추세인데 이를 통해 역량있는 인재를 유치하고 직원 사기를 높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나. 주4일근무제를 위한 정책

현재 주4일근무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은 있지만 본격적인 정책 활동으로 도입되지는 않으며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 획득을 위한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다. 주4일근무제의 쟁점

이처럼 주4일근무제와 같은 근무시간 단축의 사회적 요구와 실행이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주4일제의 근무시간 단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일과 삶을 함께 넉넉하게 누릴 수 있어서 일과 삶 균형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일주일 근무를 3일 4일 단위로 분리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나눔을 통한 요일선택적 일자리의 유연성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일과 삶 균형에 따라 저출생 극복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4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받는 직업의 경우 근무시간의 단축은 임금 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근로자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및 임금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주4일 근무시간제 도입시 기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수준은 삭감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며 초과근무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게 되어 현재 노동계에서도 이를 수용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기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며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주4일제 실행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일자리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5일 근무에서 4일로 단축하는 만큼 정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존재한다. 민간기업 또한 현재 한국의 노동생산성도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금삭감 없는 주43일 근무 시간제의 정규직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4일 근무 시간제의 도입은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로 일자리가 고착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이 가정과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상황에서 시간제 정규직의 확대는 결국 여성의 고용률은 높이지만 여성과 남성의 성별 분업은 고착화될 수 있다.

이처럼 주4일근무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의 사회적 인식이 구분되는 현 상황에서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 주4일근무제를 위한 국가 정책방안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주4일 근무시간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을 시행하여 공공기관 개혁과 예산절감을 시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비정규직을 주4일을 포함한 시간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용 안전성을 보장하고 정규직과 격차해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진적 정책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일자리 또한 직무분석에 기반을 두어 주4일제를 포함하여 주3일제 등 다양한 시간 단위 탄력 근무 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기관 및 기업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을 풀타임과 시간제 근무로 구분하여 시간제 정규직은 업무 성격에 따라 주당 16시간-32시간 등으로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처럼 유연한 시간제 근무를 허용하면서 정규직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하면 기혼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출생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주4일근무제를 위한 충남 정책방안

우선 충청남도에서 주4일근무제 도입과 정책을 위해서는 선도적으로 주4일 근무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위한 조례 등 제도적 추진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주4일 근무제 정규직 도입을 일자리 나누기 통한 일자리 창출로 규정하고 충청남도청 및 의회, 산하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하여 충청남도내 민간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대신 주4일 근무제를 채택할 경우 충남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도민 및 기업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주4일 근무 도입을 위한 간담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쟁점들에 대한 주체들의 검토의 기회 및 場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가. 현재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과 어려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첩되거나 연계성이 떨어져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임금격차 완화 및 누진세 강화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격차를 줄이는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는 공공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 돌봄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 실질적으로 애로점을 해결해주는 사업과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금격차 완화는 최저임금 및 근로장려 세제 등 중앙정부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줄이거나 노조가 강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임금 기준을 높임으로서 저소득층과 고소득 임금 소득자의 격차를 늘리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 저소득자의 애로점을 해소해주는 사업과 기능은 현재 저소득자가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지만 저소득자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돌봄 서비스로 인해 여성들이 취업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저임금 일자리이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해서 소득이 높아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를 중단할 경우 소득 추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의 경우도 비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응해왔다. 대다수의 대형 제조업은 국내를 떠나 저임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로 이전했고 국내에 남은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혹은 국내 생활 밀착형 기업 또는 유연한 공급망을 유지하는 단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들이다. 이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취업이 가능한 기업은 생활밀착형 혹은 단속적인 업무(일감이 많으면 밤샘, 일이 없으면 무급 휴직)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 증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현재 소득 격차 확대와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양극화의 효과와 함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효과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의 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국내 1인당 소득은 이미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포스트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중심으로 더 이상 국내가 중심이 아닌 사업 확대를 모색한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정책으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일자리 정책도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기는 불가능하다.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정책을 생각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중물 혹은 물길 만들기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자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좀 더 디테일한 실행 방안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자의 생활과 여건 및 필요사항을 빅데이터로 구성하여서 이를 분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분야별 정책

대기업 초과이익 상생기금 활용은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만 클 수 있다. 기금이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 경우 기업의 미래 투자 감소로 일자리를 줄이거나 지역에서 떠날 수도 있다. 기금의 사용 목적과 운영 전략과 관리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분명한 지역 발전과 일자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때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기업이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서 창출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우수하고 저렴한 인력 활용 가능성이다.

제조업의 경우 이미 국내는 인력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무관리 인력은 많지만 고급 생산인력과 범용인력은 매우 부족해 기업들은 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있다. 국내는 생산인구 감소는 물론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되었고 초고령화를 곧 앞두고 있다. 대규모 인력 유입 외에는 이를 돌파할 방안이 없다고 한다. 현재의 양극화는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 인력과 관련성이 적은 인력의 소득 격차가 그 원인의 하나이다. 더 나아가 저부가가치 공정은 저임금 인력이 많은 외국으로 이전하고 국내에는 고부가가치창출이 가능한 일자리만 남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을 국내로 끌어들이어서 국내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내 인력은 관리 혹은 중급 일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 현재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쟁점

공공 일자리 정책은 현재에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단기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과 인턴과 체험형 인턴 사업은 이미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고 있어서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턴을 전전하면서 오랜 기간을 보내면서 취업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일자리와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공공일자리는 공공의 업무에 적합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직무와 경력개발과 관리 방안들이 디자인 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모든 사람이 먼저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탐색하고 여의치 않는 경우 민간 일자리를 찾는 현재의 형국은 인력양성의 효율성은 물론 경력개발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라.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

정부 차원의 소득격차와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이미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하지만 그 성과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사업들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데 따른 많은 부담이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과거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현재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선진국을 카피하는 추적자가 아닌 신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이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다. 한국은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싶어 하는 역동적이면서도 재미가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기회보다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가져다붙여 분배적 사회정책에 천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유럽 국가의 복지 국가 모델을 제대로 추구하든지 아니면 변화된 패러다임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 충남도 차원의 정책 방안

외국에 나가 있거나 나갈 계획을 가진 기업을 국내에 돌아오게 하거나 남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충남은 수도권과 달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북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청년층도 밀집하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여건에 더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경우 리쇼어링(reshoring) 효과를 충남이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는 저임금 노동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국내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인효과를 발휘할 때 가능하다. 또한 최근 단순 생산을 자동화 설비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 국가와 비용격차가 줄어들면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제조업의 중심지가 돌아오고 있다고 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내수확대와 경기진작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소비 감소와 경기 후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다. 또한 국내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 혹은 관리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임금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뉴딜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돌봄 서비스 등 저소득자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좀 더 디테일한 실행 방안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자의 생활과 여건 및 필요사항을 빅데이터로 구성해 이를 분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5)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가.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현황

주민공동체 활동은 근대 이전에는 공공서비스나 생활에 필요한 공유자원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생적 마을 형태의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된 형태였다. 이후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을 통해 지역단위에서 공동체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마을만들기의 정책이 주도적 방향이 되었고 이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차 없는 거리조성, 꽃길 골목 가꾸기, 담장허물기, 공동벽화와 커뮤니티 아트 등의 새로운 형태의 지역공동체 운동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으로 지역공동체가 사회적경제와 현장에서 접목되면서 지역공동체 조직들의 경제적 방식의 활동추구의 형태가 증가하였고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지역공동체 활동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적 특성별로 살펴보자면, 도시지역에서는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동체로 복수의 주민공동체가 존재하는 특성이 있으며 소수의 주민들로부터 시작되어 많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발전된 양상을 보인다. 이에 비해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와 달리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의 전통이 남아있는 지역들이 다수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생활여건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이자 주민간 협력을 통해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공동체로서의 특징을 보인다.

나. 주민공동체 관련 지원정책

주민공동체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은 지역공동체, 주민자치회, 마을기업의 정책을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2021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을 비전으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회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2020년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는 마을기업육성사업,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주민자치회시범실시가 대표적이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로 변경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읍면동은 626개이며, 118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다(20.06 기준).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따르면 주민주권 구현 추진과제에서 세부과제로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를 발표하였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지칭한다. 2021년 5월 행안부에서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는데 마을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다.

〈 표 58 〉 행안부 마을기업 지원 주요 정책

정책	내용
사업지원	-예비마을기업지정 및 사업비 지원 -1회차(신규)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2회차(재지정)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정책지원	-판로유통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마을기업 네트워크 조성 지원
우수마을기업지원	-우수마을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마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모두애(愛) 마을기업 선정	-마을기업하면 연상될 수 있도록 ‘간판 마을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마을기업 가치 공유·전파

다. 주민공동체 지원정책의 쟁점

주민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의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발적인 지역중심의 결사체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활동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수익과 이윤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운영의 어려움의 해결이 정책적 쟁점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마중물의 공공정책자금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에 따라 공동체 조직이 정부재정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폐해가 있다는 점에서 직접지원에 대한 정책적 쟁점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공동체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공공적이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지역단위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공동체의 정의적 측면에서 쟁점이 존재하는데 지역적 단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이윤창출이 공동체 활동에 필요하고 필수적인가 하는 지점에서도 공동체 조직들의 인식이 엇갈리면서 이에 대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러한 지점에서 정책지원의 방향은 주민공동체 지원정책에서는 경제적 이윤창출보다는 주민의 참여유인과 지역문제의 발굴과 해결, 이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공동체의 현장활동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국가차원의 주민공동체 정책 방안

국가 차원에서 주민공동체의 지원정책의 방향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동체의 생태계 조성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지역 내 자원과 가치를 순환시켜 지역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국가차원의 정책목표로 부합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해온 그간의 주민조직화 및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과 자원들을 존중하고 협력하여 이를 활성화시켜 주민자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로 마을공동체 및 지역공동체 관련 기본법이 현재 국회 계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행정적으로는 현재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정책과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와 컨트롤 타워의 정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내에 지역 및 마을공동체 관련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실행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지원센터)의 조직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해체되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마. 충청남도의 주민공동체 정책 방안

현재 충청남도에서 주민공동체의 지원정책은 중앙부처의 사업을 매칭하여 지원하거나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운영비를 지원하는 초기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충청남도에 공동체지원국과 공동체정책과는 설치되어 있지만 현장 중심으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중간지원조직(지원센터)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역공동체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기관으로 충남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와 함께 지역공동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충남 지역공동체 육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광역차원에서 공동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풀뿌리에서 주민참여 공동체 조직들이 발굴되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형성과 공동체모임형성을 지원하는 마중물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도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위한 공동체 전문가 및 활동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지역공동체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모임활동공간의 조성지원과 지역공동체 재정지원을 위한 자조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육·문화 기본권 강화

(1)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가. 현재 대학등록금의 현황과 문제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4년부터 대학 입학생이 11만 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장기적으로 학생 부족이 이어지면서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 이상으로 사실상 대학 교육이 필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은 OECD 평균 이하인데다 사립대 비율이 높아 등록금이 높은 편이다. 한국교육개발원(2019)¹²⁾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분야 정책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며 교육격차가 다시 사회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무상교육 실시는 사회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기에 대학 등록금과 무상교육 실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나. 대학등록금 감면 및 축소 관련된 정책

정부는 대학등록금 감면 차원 정책으로 ‘국가장학금 I 유형’과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운영하고 있다. I 유형은 소속 대학을 따지지 않고 학생 개인의 소득 분위를 고려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II 유형은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이라는 대학의 자구 노력을 고려해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다. II 유형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12) 한국교육개발원(2019). 교육여론조사.

신입생은 지원 대상 제외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대학 구조조정에서도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장치를 두었다. 장학금지급률,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등을 평가 지표를 두어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다. 대학등록금 감면 및 축소 관련 쟁점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등록금 감면과 축소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이는 등록금 뿐 아니라 고등교육 전반의 과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은 상황에서 대학 진학은 학문적 필요보다는 취업을 위한 것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점점 늘어나면서 부실대학 운영의 문제, 지방 우수대학의 고사 위기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에게는 실제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 부담만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국가 장학금이 가계 소득수준 뿐 아니라 학점이 주요 기준이 되고 있어 노동하는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

라.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

정부에서는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완화를 위하여 소득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대학생 3명 중 1명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의해 대학등록금을 내지 않고 대학에 다니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마. 충남도 차원의 정책 방안

충남도립대가 2022년부터 등록금을 전면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대학 무상교육의 가능성을 알리는 훌륭한 신호라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등록금 부담 경감 등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정책을 지역의 많은 대학에 확대하여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모든 도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학생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학점 요건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재정지원 대학의 재학생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 동시에 등록금 이외의 생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대학 기숙사에 저소득층 학생의 입실비 지원, 도민 대학생의 청년 기본소득 지원 등으로 이들이 대학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고등교육으로 진입 경로가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대학의 일-학습병행제(고용노동부 지원)로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는 성인학습자의 대학진학의 경로가 되고 있으며 일-학습병행제는 특성화고교 진학 청소년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고 대학과 산업체가 연계하여 계약학과 등의 형태로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학위 취득 방안은 일반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저렴하고 여러 지원 시스템에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향후 고등교육의 전망과 체제 변화에 맞추어 정책 역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2) 방과후 학교 정부책임제

가. 현재 방과후 학교 운영과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

방과후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돌봄 수요 충족,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 정국 이전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초등학교생의 57.1%, 중학생 28.5%, 고등학생 50.5%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이전 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¹³⁾.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학교 정책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교원의 업무 부담 문제이다. 정규교육과정 이외 방과후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선호가 높아 방과후를 학교 밖으로 빼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가 심하다. 둘째, 방과후 강사 수급과 업체 선정의 문제이다. 방과후 수업은 교원이

13) 교육부(2019).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통계.

직접 담당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 전문업체가 학교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교육적 역량을 충분히 갖춘 강사와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지역 자원이 풍부하지 않을 경우 선택지가 부족하다. 업체의 경우 교사 질 관리와 수업 관리를 담당하는데 사업비가 강사료 중심으로 편성되어 총체적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방과후 강사 처우 문제이다. 수업단위로 계약을 맺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인해 개학이 연기된 작년 같은 경우 수업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

나. 방과후 학교 국가 책임제의 개념과 정책적 논의

방과후학교 국가책임제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온종일 돌봄 체계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방과 후 주민과 아이들이 접근하기 편한 학교나 지역사회 내 공공 시설에 아이들을 돌보고 흥미·적성·진로를 고려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은 5. 31 교육개혁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정책이 적극 받아들여진 결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돌봄 서비스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지원하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초등돌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학교와 지자체의 연계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다. 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의 정책적 쟁점

돌봄운영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이 정책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교육감과 협의해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특별법안은 돌봄의 주체를 지자체로 보고 있다.

학부모 단체에서는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되었을 경우 책임의 소재와 전문성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육청이 돌봄 자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원단체는 돌봄업무가 교사업무와 학교의 부담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공간이 학교가 되더라도 운영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라.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

법안 통과가 유예되면서 정책 추진의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온종일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초등돌봄은 대상 확대, 운영시간 연장, 공간 확보 및 운영모델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마을돌봄은 취약계층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유치해 공공시설 공간을 활용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일반아동 이용기준을 확대한다. 청소년은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시간과 규모, 형태를 다양화하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마. 충청남도 차원의 정책 방안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지난 7월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제정의 배경에 중앙부처별로 3개 부처, 5개 사업으로 나뉘는 돌봄이 명칭부터 대상 연령, 운영 방식이 달라 혼란이 있어 난립하는 돌봄 사업을 도가 통합·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라고 소개하고 있다.

조례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충남도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단위 통합지원센터가 만들어져 돌봄 서비스 공급 주체와 수요 주체의 요구를 지역에 기반을 두어 조사하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둘째,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돌봄의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로 일괄 이관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오해도 받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서울 도봉구는 2017년부터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가 방과후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는 학교와 협약을 통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교과연구,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비교과 방과후 활동지원, 학교는 마을방과후활동 체계를 교육계획에 반영하고 홍보 및 안내 협조, 지자체는 마을방과후 운영센터를 운영하여 강사선발 및 강좌 개설, 회계업무 등을 총괄·운영한다.

서울 중구 역시 지자체가 전국 처음으로 학교돌봄터(중구형 돌봄) 사업을 시작했다. 학교돌봄터는 학교는 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을 맡는 형태이다. 100%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돌봄전담사를 중구시설관리공단이 고용하여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돌봄의 문제는 교육과정의 연속상에서 학교의 본래 기능을 살리면서, 어떻게 방과후 돌봄을 원활하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 도봉과 중구는 지자체가 담당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마을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사례도 활성화되고 있다. 충남 아산의 송악면에서 마을공간인 해유를 지역아동 돌봄의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도 주목해 볼만하다.

(3)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가. 현재 취약계층 대상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의 문제점

미래사회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격차와 심화는 이러한 문제가 교육 격차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의 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취약계층이 교육기회와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며 이에 여러 정책이 투입되고 있지만 지금의 격차는 잘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교육지원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 보장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유아교육, 중등·고등교육, 성인의 학습을 포괄하는 평생교육 영역에까지 이른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 시설에서 사립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¹⁴⁾. 여기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사립 유치원에 다니기에 여전히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이 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초중고는 교육급여 제도와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사업 등으로 저소득층의 학비, 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상급학교 진학에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이 대학입시에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수능성적은 대도시권의 학생이 가장 높으며 중소도시보다 그리고 읍면지역 학생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교육 뿐 아니라 평생교육(정규/비정규를 포함) 영역에서도 교육기회의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21)¹⁵⁾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취약

14)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01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15)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 2020년 국가 평생교육통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7.4%로 전체 참여율보다 12.6%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특수계층(장애인, 이주민 등)의 교육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과 교육 프로그램도 구상이 필요하다.

나. 취약계층 대상 교육기회 확대의 분야별 정책

학교 교육과정 내 취약계층이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①사립 유치원의 국공립시설로 전환, ② 공립유치원 확대, ③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이 국가 단위 정책에서 제안되고 있다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은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모두 방과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은 기초학력 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맞춤형 교육 선도·시범학교,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성인대상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이 대표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취약계층 대상 교육기회 확대의 정책적 쟁점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한정된 예산,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과 이해 부족, 교육과정 내 반영 부족, 전문성을 갖춘 교원 및 지원 인력 부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부족,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으로서 교육에 대한 이해와 단순 지원을 넘어서 교육 문화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과감한 교육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 시국의 취약계층 교육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초 ‘함께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업무계획 발표에서 지난 4년간 추진해온 교육정책의 자체 점검 결과 ‘체계적인 원격수업’과 ‘교육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중단 없는 학습을 제공했다는 점은 빠른 대응으로 자평하지만 결과적으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실 특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고서라도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문제의 근원적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정책은 국가 정책 기조인 ‘포용적 교육복지 국가 실현’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와 과정 속에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 정책으로는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 학습자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 학교 혁신을 통한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 혁신 마지막으로 교육복지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정책으로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 사회 파트너십에 기반한 평생교육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학습도시조성 사업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지만 재지정 평가를 통한 학습도시 내실화,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지역과 주민 특성을 고려한 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마. 충청도 차원의 정책 방안

광역도로서 충남은 15개 시군의 사회문화경제적 상황의 편차가 크고 이에 따른 교육적 상황도 상이한 편이다. 특히 농촌부 취약계층의 교육문제는 개별 학습자의 교육기회 제공 뿐 아니라 지역 학교의 존폐 위기와의 직결되는 문제라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을 둔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정책이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기반 돌봄 확대를 위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가 지역에 안착될 수 있는 세밀한 지원 확대이다. 방과 후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편한 학교와 지역사회 내 공공시설에 아이들을 돌보고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책으로 2021년 충청도도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돌봄 교실 운영(2021년 15개)과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5개 초교)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는 도민의 돌봄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 수요자 조사, 우수사례 벤치마킹, 충청도 실태 조사 등을 통한 내실화 및 확대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

둘째, 중등교육 차원에서는 학업격차로 인한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진로교육지원, 상담 및 생활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교육프로젝트조정자 배치 및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이들의 학습 및 직업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참여수당’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정한 학습 참여 조건을 충족한 청소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서산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지역 단위의 직업교육, 여성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소외계층 직업 프로그램의 지역별 무상교육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바우처제도는 교육사업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라 학습자 수요보다는 사업자의 요구에 맞춰져 있는 경향이 크다. 그 보다 지역의 산업 요구와 주민의 취업 교육 요구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중 지자체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충남 15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지원과 평생학습도시 내실화를 위한 학습 도시 컨설팅 및 전문인력 배치 지원도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지점이다.

(4)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가. 현재 농어촌 대상 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어려움

급격한 도시화 진행은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소규모 학교가 지속 증가하는 등 교육여건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력 약화는 다시 학령기 아동과 가족의 전출의 원인이 되고 악순환 고리에 걸려버렸고, 게다가 인구학적 측면에서 출산율이 급감함에 따라 농촌학교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런 현상이 상위 단계 학교군에서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30여 년 동안 진행되어온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교육정책으로서 긍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통폐합 찬성론과 반대론의 상반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농촌지역 교육문제는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농촌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는 등 농촌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농촌의 경제 기반 약화 및 이로 인한 교육 여건의 악화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 결과 학생과 그들의 부모가 농촌지역을 떠나 다시금 농촌 지역을 위축시키고 있다¹⁶⁾.

16) 양병찬(2008). 농촌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형성 : 충남 홍동 “풀무교육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회, 14(3). 129-151.

농촌 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추가적인 인구 감소로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즉, 농촌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이것이 이농을 부추기는 작용을 하여, 궁극적으로 농촌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나.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의 분야별 정책

교육부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이나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사업’과 같이 소규모학교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교육공동체를 회복하며 농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학교만 지원하게 될 경우 다른 학교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특성화교육 운영기반 조성 후 지원이 중단되는 등 학교의 자체적 역량 강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2006년에는 대안적으로 농촌유학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산촌유학을 모태로 우리나라에 맞는 농촌유학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2011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여 2014년 기준 약 40여개의 농촌유학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농촌유학의 경우 학교 운영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영역이나 학생생활시설 운영 등은 농림부 영역에 해당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 현재 농어촌학교 관련 지원정책의 쟁점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지방교육재정 및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1년까지 전국 5,453개교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특히 농어촌의 상당한 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졌다.

결국 농촌학교 통폐합이 지역인구를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학교 폐지 → 인구 감소 → 교육·의료·복지 등 주민 사회복지서비스 단위당 비용 상승 → 관련시설 통폐합 → 사회서비스 축소 → 인구 감소’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된 것이다. 이와 같은 통폐합 정책이 갖는 교육적 효과 부재에 대응하여 농촌 주민들 스스로 학교가 지역사회와 문화의 구심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통폐합을 거부하는 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교육복지 차원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를 육성하려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 정책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특별교부금으로 농촌지역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복지 정책은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전원학교,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학교군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한 통폐합 사업과는 대조를 이룬다.

라.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

농어업인삶의질법(2004)이 통과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부서인 교육부는 교육복지의 개념을 가지고 농어촌교육 정책을 입안 및 실행하게 되었다. 정책의 핵심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며 2015년 발표된 기준에 따라 기존에 존재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였으며, 통폐합 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개선된 권고기준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면·도서·벽지 지역은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가 기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실정 및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학교교육과정 내실화와 대안적 학교 운영 모형 개발 등을 통해 학교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농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기숙형 공립학교 지원사업,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업,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운영, 농어촌 거점형 우수학교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18년도부터 도입된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과 ‘ICT 활용 농산어촌 학습여건 개선 사업’은 소규모학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학교 교육과정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두레학교 사업’, 전라북도 교육청의 ‘어울림학교 사업’, 전라남도교육청의 ‘1학교 1브랜드 사업’ 등이 대표사례로 꼽힌다.

마. 충청남도 차원의 정책 방안

최근의 농어촌학교 지원 정책은 학교단위 재정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학생 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여러 이유에서 한계를 가진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조하다보니 학교 본연의 교과과정에 소홀 할 수 있으며, 특성화 사업에 동의했던 교원이나 관리자가 학교를 떠날 경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힘들어진다.

도내 농촌부가 많은 충청남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무조건적 통폐합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학교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적정규모 학교 운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학생 수가 지나치게 작으면 교사의 수 역시

작다는 것이고 이는 행정업무 부담과 수업과 교육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간 네트워크를 통해 타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공동 행사 운영 등을 지원해 볼 수 있다. 소규모 학교를 묶어 공동 행정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소규모 학교가 가진 장점을 적극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돌봄이 가능하다.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를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아닌 학교 운영과 학습자 케어의 전문성을 두고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을 유치할수록 지원할 수 있다. 교사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전문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셋째, 전문적 농어촌 학교 교원 육성이다. 농어촌학교에는 신규교사의 비율이 높고 교사의 지역 거주 비율도 낮다. 지역출신 교사와 장학사가 지역의 주민으로 거주하면서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 운영과 수업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승진 가산점, 관사 등의 혜택 외에도 다른 복지 혜택과 인센티브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 장학사를 육성하여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농어촌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운영 지원이다. 농어촌의 학교는 결국 지역의 존폐와 연결된다. 학교가 지역과 동 떨어져 존재하지 않고 지역과 함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 지역발전위원회 등의 마을단위 주민조직에서 마을교육과 학교의 의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면서 마을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산 송악의 경우 농촌지역 대규모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 인프라가 마을 주민뿐 아니라 아이들의 돌봄과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성과를 지역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조직이 마을교육자치를 구상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사례 학습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5) 문화·여가 기회 확대

가. 사회적 기본권으로써의 문화여가의 개념

문화여가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문화여가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권)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문화여가는 모든 국민이 어떠한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또한 누구나 어떠한 차별 없이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은 사회의 포용적 역할로도 이해할 수 있다.

나. 문화여가 기회의 불평등 현황

문화여가 기회에 대한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 신체적, 정보 등 접근성에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지리적으로는 도시에 비해 농촌,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오지 지역에는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시설)이 부족하다. 둘째, 시간적으로는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근무시간과 공공 문화여가 시설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겹쳐 공공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경제 활동이 장·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청·중년층은 시간적으로 문화여가 기회를 갖는 데 어려움이 있다. 청·중년층은 상당 시간을 직장 및 경제 활동에 소요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경우 문화여가에 비용을 소요할 여유가 없어 문화여가 기회를 갖기 어렵다. 넷째,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진 장애인을 위한 문화여가 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할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장애인들은 문화여가 기회에 있어 심각한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다. 끝으로 문화여가 기회에 대한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이주민 등은 문화여가 기회를 누리기 어렵다.

다. 문화여가 기회 확대 사례

문화여가 기회 확대와 관련한 정책사업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외계층의 문화여가 기회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이다.

2005년 문화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2021년 기준,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농어촌희망재단(재단법인 케이알에이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에서 매년 추진하는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은 “농촌 교육·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역 중에서도 교육·문화·복지 사각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공동체가 수혜 대상이다. 면 단위 주민공동체가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라.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

문화여가 생활SOC를 보다 촘촘하게 조성해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하고, 복합공간(다기능공간)으로 운영하여 운영 및 이용의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 등 개인 특성으로 인한 문화여가 기회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 및 유니버설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처 및 소비방식을 다양화,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이용률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공공 문화여가시설의 개방 시간을 조정해 근로활동으로 문화여가 기회에 제약을 받는 국민들의 시간적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 충청남도 차원의 정책 방안

문화여가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 일상적인 이용이 빈번한 장소 등에 주기적으로 문화여가 배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예술작품을 기획·전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1시군 1문화여가주민단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각 시군마다 특성에 맞게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예컨대 군민극단을 만들어 주민들이 연극을 배우고 직접 만들어 무대에 올라 다른 주민들에게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의 다듬이 공연단 등도 사례가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충남도 문화여가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점진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충남도만의 문화여가 기회 확대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확보 측면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문화여가 관련 정책의 전달 체계를 분석해 중복, 사각지대, 비효율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을 개선해 집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6)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가. 문화예술인 개념, 범위, 활동 현황

2021년9월24일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022년9월25일 시행)에 따르면,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과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뜻한다. 문화예술인의 개념도 이에 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과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예술인은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활동,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단속적(斷續的)인 활동, 장기간의 준비기간 등 직업 본연의 특수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차민경, 2020)¹⁷⁾.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데,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 운영이 “문학, 미술 (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 (일반, 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 (방송, 공연), 만화 총 11개 분야이다¹⁸⁾.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인 활동의 범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나. 문화예술인 소득 현황: 특히 코로나 이후 소득 감소 현황

「2018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6%가 겸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겸업을 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겸업의 구체적 이유로 ‘현재 예술 활동에서의 낮은 소득’이 4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현재 예술 활동에서의

17) 차민경. 2020.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 『202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불규칙한 소득'이 27.1%, '현재 예술 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이 10.7%를 차지했다. 또한 예술인의 지난 1년 간 예술활동 개인 수입은 평균 1,28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8.8%로 가장 많았고, '5백만 원 미만'이 27.4%, '1-2천만원 미만'이 1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상당수 예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예술인의 경제 여건은 더욱 어려워졌다. 코로나의 확산은 노동자들을 실업에 처하게 하는 위기를 만들어냈으며, 특히 고용시장 참여가 쉽지 않은 예술인의 경우 프리랜서, 비정형 형태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노동시장 불안정 증가는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결국 예술인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차민경, 2020).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한 문화예술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계유지 41.0%를 꼽았으며,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긴급생계비, 창작장려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45%가 응답하였다(뉴시스 2020.06.17.)¹⁹⁾

2020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활동증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예술 활동이 취소·연기된 예술인은 87.4%이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축소, 임금미지급 등의 피해를 보았다(차민경, 2020). 특히 프리랜서, 임시직, 계약직 등의 비율이 높은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드물어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었다(차민경, 2020).

다. 문화여가 소득 지원 사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2021 예술인복지사업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업이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다. 해당 지원은 예술인증명을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지원-국민연금보험료의 40~80%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납부 보험료 50~90% 환급”, “예술인 의료비 지원-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1인당 연 300만 원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생활안정 자금대출(최대 700만 원), 코로나19특별융자, 전세자금대출(최대1억 원)”

19) 뉴시스(2020.06.17.), 문화예술인 10명중 4명 ‘코로나로 큰 걱정은 생계유지’.

라.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

문화예술인의 활동 여건 개선과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통적 장르 구분을 활용한 예술활동증명을 토대로 지원하고 있어 사각지대 발생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보다 유연한 예술인 맞춤형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산 규모 확대와 운영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더욱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복지적 관점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 관점으로 정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2월 시행된 예술인고용보험의 제도적 안착과 예술인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마. 충남도 차원의 정책 방안

문화예술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예술의 가치와 문화예술인 지원의 필요성을 토대로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

소득 지원 외에 고려 가능한 정책은 문화예술인의 수요를 토대로 할 필요가 있다. 차민경(2020)의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롭게 추진할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가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예술인 재난지원(긴급지원, 재난보험지원 등)”, “예술인 작업실 임차료 지원”, “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제공(지원사업, 복지사업, 고용, 교육 정보 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유희공간이나 원도심 등에 예술인 창작공간을 마련해 지원하거나 임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안내하는 온·오프라인 정보센터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예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소득이 합당하게 지불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문화여가 기회 확대와도 맥을 같이 한다.

5) 부동산 및 주거 안정

(1) 공공임대주택 확대

가.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주택문제는 첫째,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서울의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12.04배 수준으로, 2013년 3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9배 수준이었다가 2016년 4분기에 10배를 넘었고, 급기야 2020년엔 12배를 넘어섰다. 이는 도시 국가인 홍콩을 제외하면 10배 이상을 나타낸 도시는 캐나다 밴쿠버(11.9배)와 호주 시드니(11배) 두 곳뿐이다. 이어 호주 멜버른(9.5배), 미국 LA(9배)·샌프란시스코(8.4배), 영국 런던(8.2배), 미국 뉴욕(5.4배) 순이다.²⁰⁾

둘째,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주택보급률은 24년 동안(1995~2019) 30.9%p 증가(73.9%→104.8%)했지만 자가보유율은 겨우 3.1%p(53.2%→56.3%)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주택을 끊임없이 공급했지만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²¹⁾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양과 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민간에서 소유한 주택인 전세임대 및 사원임대, 민간소유 주택을 매입한 매입임대, 곧 민간이 소유 예정인 분양 전환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2019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비축물량은 96만 호로 전체 주택의 4.5%에 불과하다. 반면 OECD 평균 수준은 8%이고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의 주요국은 15%를 넘고 있다.

나.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투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하나, 소득이 낮은 계층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오르고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주거 취약계층은 증가했는데, 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판자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고시텔, 움막 등을 의미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주택이 아닌 비(非)주택거주 가구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엔 전체 가구에서 0.44%(63,312가구)였던 비주택 가구수 비율이 2017년에는 2.18%(429,730가구)로 무려 4배가 넘게 증가했다.

20) 한겨레신문 2020. 8. 30 “‘연소득 대비 집값’ 서울은 12배, 뉴욕·런던보다 월등히 높다”

21) kosis.kr; kostat.go.kr

그러나 주거권은 기본권이다. 주거권이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를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결국 정부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정부의 출자 금액을 늘리면 임대료 계산에서 출자금에 빠지기 때문에 주거비를 더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공공임대주택 중에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싼 이유는 정부가 공급비용의 85%를 부담하고, 입주자는 공급비용의 15%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주거비를 보조하는 주거급여를 늘리면 저소득층의 실질 주거비는 더 낮아질 것이다.

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방안과 쟁점사항

우리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소득 1~4분위인 저소득층²²⁾에 집중하다가 2010년대부터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의 하나로 들어오면서 중소득층 이상, 심지어 소득 8분위까지도 주거 복지 대상에 포함되어왔다.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크게 올라 중소득층도 자기 소득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집값의 투기적 상승이 주거복지 수요의 대상을 넓힌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은, 주택투기를 차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처럼 건물만 분양하도록 하여 자기의 소득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투기로 인해서 주거 불안정이 심하니까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즉 주거복지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주택투기 차단, 그리고 엄청난 대출을 받지 않고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것과 함께해야 한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회 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 즉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지 말고 일반 주택 단지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단지 내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개발이익환수의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22) 흔히 소득 분위를 10분위로 나누면 1분위가 가장 소득이 낮은 분위이고 10분위가 가장 소득이 높은 분위이다. 그리고 1~4분위는 저소득층, 5~8분위는 중소득층, 9~10분위는 고소득층으로 분류한다.

두 번째 쟁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를 낮춰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에 들어가는 재정출자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

라.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

중앙정부는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세 강화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투기가 노리는 매매차익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 보유세이다.

두 번째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주택의 목표는 주택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땅을 팔지 말고 건물만 분양해서 자가 보유의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택문제의 핵심문제 중 하나는 자가 보유의 장벽이 너무 높다는 것, 즉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에 있었다. 그런 까닭에 과도한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불안정 노동자들, 그리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들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신규 주택가격이 비싼 이유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택에서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엄청난 대출을 받지 않고도 새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토지임대료를 제대로 징수하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만 시장에 등장하게 된다.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를 강화해 나간다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충청도 차원의 정책 방안

주거복지 차원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리고, 자가 보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려면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이 택지 조성비를 곧바로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즉, 채권 발행을 통해서 조달해야 하는데, 토지임대료를 적정하게 제대로 환수하게 되면 채권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갚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할 수 있도록 금융조달 관련 제도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

주거문제 해결책, 주거불안 계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국가의 재정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먼저 주거불안 계층이 늘어나는 주된 원인인 주택투기를 차단할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자가보유의 장벽을 낮추는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면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양을 늘리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전 국민 주거권이 실현될 수 있다. 즉, 단편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나열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충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충남형 더행복주택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공공개발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부부가 첫째를 출산 시 임대료의 50% 감면하고 둘째부터는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현재 아산 배방에 600세대를 짓고 있고 2022년에 입주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아산지역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충남도 자체 예산으로는 충남형 더행복주택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대주택 방식을 받아서 확대하도록 충남도가 추동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주택 확대

가. 청년 주택문제의 현실

청년에게 주택문제는 소위 넘사벽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이다. 청년들은 장기간 학업과 취업 준비를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졸업 후 좋은 일자리 얻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얻어도 좋은 거주지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대도시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청년들 대부분은 집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금의 청년들을 일컬어 ‘N포세대’, 즉 결혼, 연애, 취업 등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고 불린다. 청년에게 희망이 없는 사회, 이는 분명히 정상이 아니다. 그 핵심에는 취업과 주거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나. 청년주택 추진 사례

충청남도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행복한 주택’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의 안전한 육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고 지난해 충남형 최고의 선도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이 요즘 청년들의 지방유입에 큰 모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남 목포 “괜찮아마을”,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 경북 문경 “달빛탐사대”는 청년의 지방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사업이다. 지역차원의 직업교육과 마을공동체를 연계한 정주프로그램이 청년의 농촌거주에 도움을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관계인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정주인구가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 관심과 호감을 갖고 꾸준히 관계를 맺는 사람에 주목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이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 폐가를 리모델링하여 일시적, 혹은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정책사업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다. 국가 차원의 정책 방안

청년주택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주택이 다소 노후화되었더라도 기존 주택을 활용 가능하다. 문제는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들은 수도권 이하로 이전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양질의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예술분야, 환경분야 등 기존 비즈니스 영역이 아닌 사회적 책임에 근거한 사회적영역의 창업 인프라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충청남도 차원의 정책 방안

청양군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청양군의 특성 상 농업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농업은 기반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업종이다.

주택문제가 일자리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창업과 거주가 동시에 가능한 오피스텔 형태의 거주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오피스텔과 네트워크 공간을 함께 갖춘 혁신공간이 지역의 일자리문제, 주택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주거 정책은 지역사회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충남 대전·서울 학사관 운영, 청년 전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있다.

지역사회 청년 쉼어하우스는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교가 있는 시군에서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도 공모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충청남도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여군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있으며, 현재 쉼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군에는 국립공주대학교가 있지만 현재 쉼어하우스 운영을 하지 않는다.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충남 청년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다른 군단위 청년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군단위에는 비어있는 건물이나 땅이 있는데 거기에 쉼어하우스뿐만 아니라 청년 임대주택을 지어서 2030세대의 독립 및 주거 불안 해소가 되었으면 한다. 군단위 농촌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다른 청년들이 유입되는 충남이 되어서 청년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생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생도 포함된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주거 정책은 19세에서 39세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충남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만 대상으로 하면 대학생도 아니고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대학원생은 소외된다. 지역 출신이 지역대학에 입학하여 무난히 학업을 마무리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충남 주거 정책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학사관 운영,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외에는 별로 없다. '충남 주거 포털'과 같은 통합사이트가 필요하다. 각 시군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청년들이 주거안정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 사이트가 구축이 되면 충남 주거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고 신청하는 방법도 수월해지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긴다면 충남 주거 정책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부문별 세부 실행방안

1) 기본소득 보장 부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5대 기본 방향의 첫 번째는 기본소득 보장이다. 기본소득 보장에는 크게 청년기본소득, 아동(육아)기본소득, 농어민기본소득, 농어촌기본소득 등 4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이들에 대한 세부 실행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기본소득은 충남도가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과 서울형 청년수당을 검토 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세대와 계층 격차라는 이중의 격차뿐만 아니라 산업의 고도화와 자동화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육아)기본소득은 충남도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충남도는 현재 만 3세 이하 가정에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강원도는 현재 30만 원의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2022년부터는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할 예정²³⁾이다. 대전시는 2022년부터 만 3세 이하 가정에 월 30만 원의 양육기본수당²⁴⁾을 지급할 예정이다.

셋째, 농어민기본소득이다. 현재 충남도는 농어가당 연간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민단체에서는 농어민수당의 개별 지급뿐만 아니라 액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농어가당 지급되고 있는 농어민수당을 기본소득 형태인 개별지급으로 개선하고 예산 증액을 통해 지급액도 다소 높이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이다.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은 농어민기본소득과 유사할 수 있으나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농어민기본소득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이고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도농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어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충남도에서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을 처음부터 도입

23)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1인당 월 40만 원 지급한다 - 베이비뉴스 (ibabynews.com)(2021.3.15.)

24) 대전시, 내년부터 3세 미만 월 30만원 양육기본수당 지급 (news1.kr)(2021.9.15.)

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정책 중에서 아동(육아)기본소득과 농어민기본소득은 기존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바로 시행이 가능하며, 청년기본소득과 농어촌주민기본소득은 1~2년 준비 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59 〉 기본소득 보장 부문 세부 실행방안

대응과제	세부 실행 과제 및 방법	실행 시기		
		1년 이내	1~3년	3년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과 서울형 청년수당을 검토 후 실시		→	→
아동(육아)기본소득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확대	→	→	→
농어민기본소득	충남도 농어민수당 확대	→	→	→
농어촌주민기본소득	면지역부터 시범실시 후 확대		→	→

2) 사회보장 강화 부문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의 두 번째 기본 방향은 사회보장 강화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보장 강화에는 크게 기초연금 보완, 상병수당 지급, 청년사회진출금 지급, 전 도민 고용보험제 도입이다. 이들 정책에 대한 세부 실행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연금의 보완이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9%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부인 경우에는 2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도 감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자살률 또한 최고 수준²⁵⁾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감액보다는 전체 노인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액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 당장은 어렵다면 충남도 차원에서 감면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상병(傷病)수당제 도입이다. 현재 상병수당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영세소상공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농어민 등 소득보장체계가 취약한

25) 고령인구 비중 높아지는데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2021. 9. 29)

계층들은 질병과 상해로 인해 근로가 어려울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된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상병수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상병수당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남도가 선도해 개인과 지자체(시군+도)가 공동 부담하는 형태의 상병수당제 모델을 선제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셋째, 청년사회진출금 지급이다. 청년사회진출금은 일명 청년기본자산제로 불린다. 청년들은 현재 일자리 부족문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얻어도 낮은 임금, 폭등하는 집값으로 신음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출산 등을 많은 부분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이들에게 많은 정책과 지원이 쏟아지지만 그들에게 실질적 혜택과 효과는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는 모든 청년에게 일정한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25살이 되는 지역의 청년에게는 우선적으로 2~3천만 원의 사회진출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에서 취업한 청년에게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적금을 매칭(청년 340만원+지자체 640만 원)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1천만 원의 적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 도민 고용보험제 실시이다.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사업장에서 사회보험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영세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이러한 혜택을 많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일정한 부분을 담당해 사회보장시스템을 만들고 이러한 시스템에 취약계층이 참여한다면 고용해제로 인한 생계의 불안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충남도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영세자영업자, 영세사업체, 프리랜서, 농어민 등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정책 중에 도민 고용보험제 실시는 기존의 영세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정책은 제도 개선과 공론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제도와 재정을 동시에 고려하며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표 60 〉 사회보장 강화 부문 세부 실행방안

대응과제	세부 실행 과제 및 방법	실행 시기		
		1년 이내	1~3년	3년 이후
기초연금 보완	기초연금 감액분 보완		→	→
상병(傷病)수당 지급	본인 부담+지자체(시군+도) 부담 방식으로 실시			→
청년사회진출금 지급	①시 3000만원, 군20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②통장활용방식: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 불입시 지자체에서 640만원 매칭해 총 1000만원 지급			→
도민 고용보험제 실시	우선은 충남도 영세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	→	→

3) 일자리 및 사회 혁신 부문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의 세 번째 기본 방향은 일자리 및 사회 혁신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일자리 및 사회 혁신에는 크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주4일근무제 실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이들 정책에 대한 세부 실행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항이지만 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 문재인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은 했지만 ‘인국공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많은 젊은 세대들이 반대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한정된 자리를 놓고 젊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쉽지 않다. 따라서 일자리 자체를 늘려야 가능하지만 그 문제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최근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대안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인금은 낮추되 주택 등 기본적 생활인프라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일반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처럼 정규직 일자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충남도와 각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원 강화이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영세성을 벗어나기 힘든 상태이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에는 신용업무에는 제한이 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대부분 기존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최근 사회적경제 기업들 간 연대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단계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중에서도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주4일근무제 실시이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미래 역시 그리 전망이 밝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이 대안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는 최대한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 주4일근무제를 위해서는 먼저 공공부문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주4일근무제에 관한 규정 마련을 통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점차 주4일근무제제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4일근무제 기업, 특히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이다. 일자리는 민간의 역할이 크지만 현재와 같이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있고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충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서해안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업유치에 장점이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해외에서의 인건비 상승으로 많은 해외로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리쇼어링(reshoring)하고 있어 이러한 기업을 충남도내로 유치해 나간다면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부분의 공공일자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충남도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공동체활동 중간지원조직 설립, 공동체활동모임 공간 조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사업 등이 있다. 지역활성화 및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서는 기층단위에서 다양한 공동체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와 지자체 업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동체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촉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서 공동체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활동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간에서 다양한 융복합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정책들 가운데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공동체활동모임 공간 조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사업 지원 등은 현재 충남도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4일근무제, 공동체활동 지원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은 어느 정도 제도 마련과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표 61 〉 일자리 및 사회 혁신 부문 세부 실행방안

대응과제	세부 실행 과제 및 방법	실행 시기		
		1년 이내	1~3년	3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형 일자리를 모델로 충남형 일자리 개발			→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강화	→	→	→
주4일근무제 실시	①공공부문 주4일 시간제 정규직 채용		→	→
	②주4일근무제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공		→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①지자체 주도 리쇼어링(reshoring) 기업 유치		→	→
	②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	→	→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①공동체활동 지원 중간지원조직 설립		→	→
	②공동체활동모임 공간 조성	→	→	→
	③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사업 지원	→	→	→

4)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부문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의 네 번째 기본 방향은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부문에서는 크게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방과후 학교 정부책임제,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문화여가 기회 확대, 문화예술인 소득 지원 등 6개의 대응과제가 있다.

먼저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70~80%는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 대학교육이 거의 의무교육에 준하는 수준에 왔다. 따라서 대학교육에 대해 정부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등록금은 학교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정의 경제적 격차가 이후 교육 격차를 낳고 교육 격차가 다시 경제적 격차를 낳는 모순이 반복되는 게 지금은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교 학비 지원은 빈부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도는 2022년부터 충남 도립대학 학생들에게 학비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학생들에게 생활비도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과후 학교 정부책임제 실시이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높여 학생들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의 정규교육은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방과후 학교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력해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방과후 학교 운영 센터 설립을 통해 방과후 학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돌봄센터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교육 격차가 곧 빈부 격차를 낳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는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온종일 돌봄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자녀의 돌봄에 여력이 없거나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학습과 직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교밖 청소년도 정규교육에 준하는 교육 기회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소외 계층 직업프로그램 무상 지원이다. 소외계층일수록 경제활동에 일찍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이들을 위한 직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이다. 본 연구에선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무조건적인 농어촌학교 폐교 지양, 농촌학교 전문교사 육성,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운영 지원을 제시했다. 농어촌지역에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폐교되는 학교 또한 많아지는 게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일단 학교가 폐교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지역 폐교는 신중해야 한다. 지역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더욱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문제는 교육당국과 지자체 차원에서 함께 접근해야 한다. 농어촌학교 교원의 도시 이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학교 전문교사를 육성하고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문화여가 기회 확대이다. 문화여가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계급과 계층에 따라 그 향유 정도가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은 문화여가서비스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공급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의 영역에서 문화여가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도 문화여가의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문화여가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도민들이 최소한의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저기준선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수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이다. 문화예술인의 기준이 모호하고 다소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문화예술인의 소득은 일반인에 비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더욱이 지난 초 발생한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많은 문화예술 활동이 중단되면서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문화예술인에게 어느 정도 안정적 소득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경기도에서는 기본소득형태의 창작수당제도를 마련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도 문화예술인 창작수당제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고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된 6가지 정책과제 중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확대하거나 개선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어느 정도 제도적인 틀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이 있다. 예를 들어, 대학등록금 면제 및 생활비 지원, 학교 및 마을돌봄센터 지원, 소외계층 직업프로그램 무상 지원, 주민참여형 문화여가단체 육성,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등은 현재의 정책 사업을 보완 및 개선하면 가능할 것이고 그 외 사업은 제도와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잠정적 실행 시기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62 〉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부문 세부 실행방안

대응과제	세부 실행 과제 및 방법	실행 시기		
		1년 이내	1~3년	3년 이후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도립대 전액 학비 면제 및 생활비 지원	→	→	→
방과후 학교 정부책임제	①지자체 방과후학교 운영센터 운영		→	→
	②학교 및 마을돌봄센터 지원	→	→	→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①온종일 돌봄서비스 구축		→	→
	②학교밖 청소년의 학습 및 직업 지원		→	→
	③소외계층 직업프로그램 무상지원	→	→	→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①무조건적인 농촌학교 폐교 지양		→	→
	②농촌학교 전문교사 육성		→	→
	③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운영 지원		→	→
문화·여가 기회 확대	①주민참여형 문화여가단체 육성	→	→	→
	②충남도 문화여가 최소기준 설정		→	→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①기본소득형 창작수당 지원		→	→
	②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	→	→

5)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부문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의 다섯 번째 기본 방향은 부동산 및 주거 안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청년주택 확대이다. 제2장에서도 설명했듯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지니계수는 08.11로 심각한 상태이다. 최근 부동산가격의 폭등은 일반 서민과 청년층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으로 인해 빈부 격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단절된다는 것이다. 저출생의 중요 이유 중의 하나도 부동산 문제이다. 따라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개발방식을 바꿔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값싸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 방법이 토지임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공공부분에서 토지를 개발해 기업에게 매각하지 않고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면 주택가격에서 토지가격은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임대료도 훨씬 싸게 된다. 대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채권으로 충당하고 이 비용은 향후 주택 임대자들의 임대료로 충당하면 가능하다.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개발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충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충남형 더행복주택 사업도 토지임대부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주택제공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 안정의 또 다른 정책과제는 청년주택의 확대이다. 현재 충남도와 시군 지자체에서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폭등은 미래세대에게는 큰 장애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청년문제를 논할 수 없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창업과 거주를 할 수 있는 청년형 오피스텔 제공, 청년쉐어하우스의 확대, 전월세 임대료 지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주택문제는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더욱이 주택을 많이 짓는다고 청년들이 다 입주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년들의 취향과 소요를 잘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한 정책사업 가운데 충남형 더행복주택사업과 청년쉐어하우스, 전월세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은 현재 실시하고 정책을 좀 더 확대 발전하면 가능할 것이다. 반면, 토지임대부 공공임대주택과 창업+거주형 오피스텔 공급은 제도 마련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63 〉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부문 세부 실행방안

대응과제	세부 실행 과제 및 방법	실행 시기		
		1년 이내	1~3년	3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확대	①토지임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
	②충남형 더행복주택 확대	→	→	→
청년주택 확대	①창업+거주형 오피스텔 제공		→	→
	②청년쉐어하우스 확대	→	→	→
	③전월세 임대료 지원	→	→	→

제7장 결론 및 과제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진단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과제의 도출과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사회양극화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구의 사회양극화 현상을 보면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 즉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대량생산과 소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에 사회양극화 현상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다. 우리나라 또한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WTO, FTA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양극화는 심화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사회양극화 문제가 주목을 받는 것은 산업화의 성장시기에는 빈부의 격차는 있었지만 노동을 통해 어느 정도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발전 시기에도 양극화 현상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노동의 기회가 많아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저성장기에는 노동을 통한 빈부 격차를 줄이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 AI 등 산업의 자동화와 고도화로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계층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 사회양극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극히 소수에게로 부가 더욱 집중되고 점이다. 이전에는 상위 20%, 상위 10%가 전체 자산과 소득의 50%를 차지했다면 최근에는 상위 5%, 1%가 부를 독차지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극소수 상위 계층으로 자산과 소득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양극화는 많은 사회적 폐단을 낳게 된다. 빈곤, 실업, 갈등, 혼란, 불안, 좌절 등이 심화되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존속되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충남도는 민선7기 들어 사회양극화를 저출산(생), 고령화와 함께 3대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도 사회양극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 사회양극화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양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분석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한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 분석틀 및 흐름, 타 연구와의 차별성을 설명했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짧은 산업화 과정에서 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적 제도가 부족해 사회양극화 수준이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심각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영국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임을 제시했다. 서구는 오랜 산업화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회보장과 안전망을 갖춰왔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충남도 또한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양극화 문제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과 함께 충남도에서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새로운 차원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다. 또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사용된 다양한 형태의 연구 방법과 분석틀을 소개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문헌분석, 설문조사, FGI조사 등에 관해 개략적인 내용을 서술했다.

제2장에서는 사회양극화 개념 및 특성을 분석했다. 흔히 사회양극화(social polarization)는 학자들마다 다르기 통일된 개념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회양극화와 관련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 내용을 분석해 사회양극화를 “사회적 자원과 가치관이 양극단으로 편중되고 고착된 상태, 또는 그렇게 진행되는 상태를 뜻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여기에서는 국내외 양극화 현상에 관한 내용을 분석했다. 특히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omas Piketty)가 <21세기 자본론>에서 현재 양극화의 원인은 노동수익보다는 자산수익이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 토지소유의 불평등 정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토지의 지니계수가 0.811일 정도로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사회양극화의 배경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세계화 확대, 기술의 진보, 복지체계의 미흡 등을 지적하고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최근 사회양극화 대응정책에 관한 동향을 분석했다. 여기에서는 최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정책 사례와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사회보장정책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제도 단계적 폐지, 한국형 상병수당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 영아수당제도 등을 소개했고, 둘째, 소득분배정책으로는 기본소득, 기초(본)자산제, 초과 이익공유제, 국토보유세 등을 소개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체계의 변화와 혁신도 중요한 주제인 만큼 여기에서는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에 관한 정책 내용 및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제4장에서는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충남도는 민선7기에 들어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무상정책, 수당지급정책, 공제지원사업, 주택지원정책 등 4개 부분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외에도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여기에서는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 평가대상 정책은 무상정책 4개(무상교복, 무상교육, 무상급식, 7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도서관 여객선 운임 무료화), 수당지급정책 2개(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농어민수당), 공제지원정책 2개(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모든 도민 안전보험 가입), 주택지원정책 1개(충남형 더행복주택(출산에 따라 임대료 감면 내지 면제)) 등 9개 정책이다. 평가자는 충청남도 도민평가단이며 전체 183명 중 84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평가결과, 각 정책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 많았지만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한 경제, 재정과 예산 마련, 정책 홍보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제5장에서는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양극화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충남도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사회양극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고 어떤 정책이 우선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민 1,05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에서 7월 14일(1개월)까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1)사회양극화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식 실태, 2)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선호도, 3)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이었다.

특히 본 설문에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선호도 조사를 크게 6개 부문으로 나눠 조사했다. 그 6개 부문은 구체적으로 1)소득보장정책, 2)사회보장정책, 3)일자리·사회혁신정책, 4)교육·문화정책, 5)부동산·주거정책, 6)지역균형발전정책이다. 조사결과를 간략히 보면, 충남도민은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에 대해 77.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충청남도의 사회양극화에 대해서는 64.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사회양극화 대응정책 선호도를 보면, 먼저 소득보장정책 부문에서는 근로장려금(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 확대가 가장 높았고, 사회보장정책 부문에서는 연금 간 격차 완화(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에 참고가 될 것이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충남도 차원의 기본방향과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본 장에서는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정책 검토를 통해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대응정책을 제시했다.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1)기본소득 보장, 2)사회보장 강화, 3)일자리 및 사회 혁신, 4)교육·문화 기본권 강화, 5)부동산 및 주거 안정 등 5개 분야를 설정하고 23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정책과제에는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농어민수당 확대, 더행복주택 등 기존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상병(傷病)수당, 청년사회진출금 지급 등 새롭게 제시된 정책과제 등이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정책들은 많은 예산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정책 도입에 앞서 단계적, 부분적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2. 결론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양극화에 관해 개념, 원인, 양태, 정책,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과 세부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 설정은 크게 1)기본소득 보장, 2)사회보장 강화, 3)일자리 및 사회 혁신, 4)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5)부동산 및 주거 안정 등 5개 분야이다. 각 분야별 세부 정책 내용은 다음 [표 64]와 같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 보장 부문이다. 사회양극화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가 소득문제이다. 소득은 주로 노동과 자산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데 오늘날 노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고, 자산은 부동산 격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왔지만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기존 복지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에서 비롯됐다.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가난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는 기존 복지체계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부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세금을 내도 자신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는 가난한 사람은 낙인효과로 인해 사회적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선별과정에서 인권 침해의 문제가 있다. 더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지원을 받는 기존의 복지 구조는 인간의 양심과 존엄을 위협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기존 선별 복지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의 고도화, 자동화 등 새로운 사회경제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basic income)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충남도에서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아동(육아)기본소득, 농어민기본소득, 농어촌주민기본소득 등 가능한 분야부터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 중 아동(육아) 기본소득은 현재 충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을 확대하고, 농어민 기본소득은 충남도의 농어민수당을 확대하면 가능할 것이다. 청년기본소득과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은 청년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고 농어촌 주민기본소득은 도농 간 발전 격차 완화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보장의 강화 부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한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조차도 앞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구의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여전히 미흡한 정책이 많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소득 하위 70% 기준이며 부부의 경우에는 지급액을 합산해 70%까지만 지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고 자살률은 최상위이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중앙정부에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충남도 자체적인 월 10만 원의 '노인수당'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프리랜서 등이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상병(傷病)수당제,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청년사회진출금지원제, 역시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전 도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과 같은 사회보장 정책의 도입을 제시했다.

세 번째는 일자리 및 사회 혁신 부문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할 만큼 일자리는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의 핵심정책이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새롭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 특히 산업구조가 갈수록 자동화, 첨단화되어 가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불안정한 노동자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주4일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작정 전환한다고 해서 일자리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며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무한정 만들 수도 없다. 주4일 근무제도 우리사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데 직업 형태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 이 때문에 이들 정책에 대해서는 숙의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민간영역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과 공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동 인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는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부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학력중심사회에서 교육은 계층사다리(이동)의 핵심 수단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좋은 교육, 좋은 학교가 한 사람의 신분과 계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육은 늘 계급과 계층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이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역대 정부 교육정책에서는 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는 심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만 부모의 학력과 재력에 의한 사교육이 실력을 결정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교육여건이 농어촌지역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공정한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할 필요가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학교에 대한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방과후 학교를 정부가 책임짐으로써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학습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 아울러 문화여가도 인간의 기본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 차원에서 문화여가의 최소 기준 설정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요소로 규정하고 이를 제공하는 주체인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 최근 경기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제를 도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및 주거 안정 부문이다. 부동산 불평등은 가장 큰 사회양극화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격차가 소득 격차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그 격차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만큼 비싼 나라도 많지 않고, 우리나라만큼 부동산 격차가 큰 나라도 많지 않다. 앞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연소득 대비 서울의 주택가격은 2020년 대비 12배가 넘었다. 이는 도시 국가인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주택보유율은 2019년 기준 104.8%이지만 자가 보유율은 56.3%에 그치고 있다. 주택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주택소유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따라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충남도 차원에서도 가급적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한편 주택의 자가 보유율 확대를 위해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 공급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쉐어하우스 확대, 충남형 더행복주택 확대가 필요하고 청년거주 주택의 전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출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는 충남형 더행복주택사업은 아산을 시작으로 충남도내 타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형 임대주택 보급뿐만 아니라 매입형 임대주택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문제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더행복주택의 혜택이 일부 지역, 특히 도시지역만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 표 64 〉 충남도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주요 대응과제

기본 방향	대응과제	세부 대응과제(방안)
기본소득 보장	청년기본소득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과 서울형 청년수당을 검토 후 실시
	아동(육아)기본소득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확대
	농어민기본소득	충남도 농어민수당 확대
	농어촌주민기본소득	면지역부터 시범실시 후 확대
사회보장 강화	기초연금 보완	기초연금 감액분 보완(기초연금플러스사업)
	상병(傷病)수당 지급	본인 부담+지자체(시군+도) 부담 방식으로 실시
	청년사회진출금 지급	①시 3000만원, 군20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②통장활용방식: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원 불입 시 지자체에서 640만 원 매칭해 총 1000만원 지급
	도민 고용보험제 실시	우선은 충남도 영세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일자리 및 사회 혁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형 일자리를 모델로 충남형 일자리 개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강화
	주4일근무제 실시	①공공부문 주4일근무제 정규직 채용
		②주4일근무제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공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①지자체 주도 리쇼어링(reshoring) 기업 유치
		②돌봄서비스 제공 확대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①공동체활동 지원 중간지원조직 설립
		②공동체활동모임 공간 조성
		③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사업 지원
교육 및 문화 기본권 강화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도립대 전액 학비 면제 및 생활비 지원
	방과후 학교 정부책임제	①지자체 방과후학교 운영센터 운영
		②학교 및 마을돌봄센터 지원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①온종일 돌봄서비스 구축
		②학교밖 청소년의 학습 및 직업 지원
		③소외계층 직업프로그램 무상지원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①무조건적인 농촌학교 폐교 지양
		②농촌학교 전문교사 육성
		③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운영 지원
	문화·여가 기회 확대	①주민참여형 문화여가단체 육성
		②충남도 문화여가 최소기준 설정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①기본소득형 창작수당 지원
		②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부동산 및 주거 안정	공공임대주택 확대	①토지임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②충남형 더행복주택 확대
	청년주택 확대	①창업+거주형 오피스텔 제공
		②청년쉐어하우스 확대
		③전월세 임대료 지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사회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이며 생존의 문제이다. 이 때문에 어느 한두 개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사회의 지속성은 사라질 것이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소 체계는 부족하지만 사회양극화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분석해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정책분석, 설문 조사와 인터뷰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정책 중에는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책도 있고 현재 충남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도 있다.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가급적이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위주로 논의하고자 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만큼 기존 정책과 새로운 정책을 같이 검토하고 향후 충남도 차원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들 정책들 가운데에는 기본소득(청년, 아동, 농어민, 농어촌주민), 기초연금 확대, 상병(傷病)수당제, 청년사회진출금 지급(청년기본자산제), 주4일제 도입 등 새로운 정책 제안도 있고 일자리와 사회혁신, 교육과 문화 부문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제시된 정책과제가 많다보니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다. 사실 앞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충남도에서 사회양극화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보니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소개 단계로 그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할 중요 정책 제시가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양극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책을 검토해 충남도에서 실행이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정책과제가 많다보니 정책의 중요도와 선명성은 미흡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과제에 대한 예산문제는 제외되어 실행 가능성 판단이 어렵다. 정책과제별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제시하면 사업의 실행력을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예산 추계가 어려운 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정책과제가 실행이 된다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본질적인 정책과제 제시는 미흡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제시했듯이 현재 사회양극화의 핵심 원인은 자산과 부동산 불평등이다. 특히 부동산 불평등은 어느 불평등에 앞서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는 사회양극화 해결도 어렵다. 하지만 부동산과 조세의 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더행복주택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토지)과 조세의 문제는 사회양극화 해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도 차원에서도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6. 『양극화 선행연구 요약보고서』 연구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 2020.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 국회입법조사처. 2013.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T/F-』 연구보고서.
- 금재호. 2011.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응용경제』13(2), 131-168.
- 김교성. 2016. “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비판사회정책』 제52호, 179-222.
- 김문조. 2008. 한국 사회의 양극화: ‘97년 외환위기와 사회불평등. 집문당.
- 김병준. 2009. 소득양극화의 의미: 경제정책적 의미. 『사회과학연구』21, 39-48.
- 김성근. 2014. 국민통합의 과제와 전략: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 김원식. 2013. “복지재정을 통한 한국의 성장형 복지시스템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중심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 김원식. 2013. 한국사회 양극화와 다차원적 정의. 『사회와 철학』26, 223-250.
- 김종철. 2020. 기본소득은 틀렸다. 개마고원.
- 김태환·김은란·신희석·이혜민·박미래·이혜진. 2021. 지역별 소득 격차와 불균형.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Brief』7.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김흥중·김균태·오형범·나수엽·하유정. 2005.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흥중·김균태·오형범·나수엽·하유정. 2005.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남기철·박미은·양영자·황미영. 2006. “사회 양극화와 사회복지실천의 딜레마”.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5-145.
- 남기엽. 2021. 불로소득 환수형 부동산체계론: 부동산공화국 탈출하기. 개마고원
- 남은영. 2009. 외환위기 이후 계층의 양극화: 변화된 일상과 소비생활. 『조사연구』10, 1-32.

- 남찬섭. “사회양극화와 사회복지의 과제”, 남찬섭·심창학·허선. 200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5-44.
- 남춘호. 2003. 고용의 질적 구조 변화: 고급화 대 양극화. 『지역사회연구』. 15, 41-69.
- 남춘호. 2011. 고용의 질 지수를 이용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 추세분석. 『경제와 사회』. 92, 305-35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연구보고서.
- 박민진. 2018. 『구조화이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혁신 추동요인 연구: 소셜벤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반정호. 2013.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노동리뷰』, 62-75.
- 백승호. 2010.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41(3), 185-212.
- 보건복지부. 2021. 『2021 자살예방백서』
- 송석휘. 2015. 지방정부 사회혁신에 대한 평가와 과제: 서울시 사회혁신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5(2), 153-189.
- 송호근·장덕진·김희연. 2006.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경기도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신동균. 2006.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노동리뷰』, 63-80.
- 신동균·장지연. 2010. “소득재분배정책이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26(4), 357-384.
- 신명호. 2006.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빈곤. 『아세아연구』49, 7-34.
- 앤서니 B. 앳킨스. 2015.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장경덕 역. 글항아리
- 에스핑-안데르센. 2014. 끝나지 않은 혁명. 주은선·김영미 역. 나눔의 집.
- 여유진. 2019. 한국의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보건복지 ISSUE & FOCUS』36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위평량. 2011. “초과이익공유제 검토”. 『철학과 현실』6, 98-112.
- 윤형근. 2013. 『협동조합의 오래된 미래 선구자들』, 도서출판 그물코.
- 이경태. 2014. “양극화문제,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시선집중 GSJ-제180호.
- 이성기·원석조. 2019. 『사회보장론』, 공동체.
- 이승협. 2008. “유럽의 사회정의와 사회정책”. 『사회복지정책』. vol. 34(9), 413-434.
- 이재훈. 2020. 외국의 유급병가, 상병수당 현황과 한국의 도입방향. 민주연구원 이슈페이퍼.

- 이현우·박충훈·송상훈·최성환·이채영·가선영·박서연. 2019.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이형훈. 2020. 공적소득보장체계와 기초연금의 발전방향. 『연금포럼』80. 국민연금연구원
- 장원봉. 2006.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 전강수·강남훈. 2017. “초과이익공유제 검토”. 『역사비평』8, 250-281.
- 제주발전연구원. 2020. 『제2차 제주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연구보고서.
- 주은선. 2009.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전개: 복지-노동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28, 143-185.
- 충남연구원. 2020. 『충남의 경제사회 구조변화와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연구보고서.
- 통계청. 2021. 『2019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 통계청. 2021. 『2021 고령자 통계』
- 폴 피어슨. 2006.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 박시종 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한국개발연구원. 2006. 『소득분배 양극화에 대한 연구』연구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언』연구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연구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 대응』연구보고서.
- 한국사회학회. 2008. 『사회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사회양극화와 사회국가』연구보고서.
- 한국행정연구원. 2014. 『국민통화의 과제와 전략: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수단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 홍두승·김병조. 2006. “한국사회발전과 중산층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발표논문집』, 2-17
- 홍헌호. 2010. 소득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과 과제. 『노동사회』156, 73-82..

- Bassi A., Ecchia G., and Guerra A. 2016. Social Innovation Policies with the Involvement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novative Social Investment. Innosi.
- Caulier-Grice J, Davies A, Patrick R, Norman W. 2012. Defining Social Innovation. A Deliverable of the Project. TEPSIE.
- ILO. 2018, Berg, J., M. Furrer, E. Harmon, U. Rani, and M. S. Silberman.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Towards decent work in the online world*.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Mungal, J. 2006. Social Innovation: What it is, Why it matters and How it can be accelerated, 김영수 역. 2011. 『사회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하는가』. 시대의 창.
- Phills J. Deiglmeier A. and Miller, D., 2008. Rediscovering Social Innovation.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fall. 6(4).
- Polanyi, K.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홍기빈 역. 2009.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 Polanyi, K. 1977. The Livelihood of Man, 이병천·나익주 역, 2017. 『인간의 살림살이』. 후마니타스.

부록

1. 사회양극화에 관한 충남도민 설문지
2. 사회양극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표
3.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책 평가 조사표
4. 사회양극화에 관한 충남도민 설문결과표
5. 사회양극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부록1. 사회양극화에 관한 충남도민 설문지

2021 사회양극화에 관한 충남도민 의식조사	일련번호				
	조사원 성명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2021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사회양극화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문제 등 그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온전한 유지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설문조사는 사회양극화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식실태와 정책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충남도 및 중앙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충남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을 도정과 국정에 반영코자 하오니 본 설문조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33조 및 34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의 모든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 목적으로는 절대 활용되지 않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충남연구원장

■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박경철 책임연구원 ☎ 041-840-1206(kcpark@cni.re.kr)

I. 사회양극화에 관한 인식

※ 사회양극화란 사회의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함. 즉, 사회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가 확대되고 고착화되는 현상을 말함.

1. 귀하는 사회양극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① 소득 격차 ② 자산 격차 ③ 일자리 격차 ④ 교육기회 격차
⑤ 세대 격차 ⑥ 문화·여가생활 격차 ⑦ 지역 간 격차 ⑧ 기타

2.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양극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음 ② 심각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다소 심각함 ⑤ 매우 심각함

3. 귀하는 지난 5년 전에 비해 현재 사회양극화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음 ② 심각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다소 심각함 ⑤ 매우 심각함

4. 귀하는 현재 충남도의 사회양극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음 ② 심각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다소 심각함 ⑤ 매우 심각함

5. 귀하는 개인이 노력을 한다면 계층이동(사회적 지위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불가능 ② 불가능 ③ 보통 ④ 가능 ⑤ 매우 가능

6. 귀하는 아래 각 부분에서의 양극화(불평등 및 격차)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점수에 ○ 또는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심각 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심각
소득(근로소득)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 10 점				
소득(연금)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 10 점				
일자리(정규직과 비정규직)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 10 점				
일자리(대기업과 중소기업)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 10 점				
부동산(소유)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 10 점				
자산(현금, 주식 등)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 10 점				
교육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 10 점				
문화·여가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 10 점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 10 점				
지역(도시와 농촌)	0점 - 1점 - 2점 - 3점 - 4점 - 5점 - 6점 - 7점 - 8점 - 9점 - 10 점				

7. 귀하는 우리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 | |
|---------------------------|-----------------|
| 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 ② 사회보장체계의 미흡 |
| ③ 불안정한 노동 증가(비정규, 플랫폼노동*) | ④ 불평등한 부동산 소유 |
| 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체계 | ⑥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
| ⑦ 첨단과학 기술의 변화로 인한 지식격차 | ⑧ 수도권 위주의 발전 정책 |
| ⑨ 농촌지역에 대한 차별 | ⑩ 기타 |

*플랫폼노동: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

(예, 배달앱, 대리운전앱 등을 활용한 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노동)

II.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한 의견

다음은 현재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논의 중인 주요 정책들입니다.
각 부문의 해당 정책에 대한 귀하의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보장정책 부문

아래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 또는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동의 정도(1점=전혀 동의 않음, 3점=보통, 5점 아주 동의함)				
	1점	2점	3점	4점	5점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예: 개인별 월 30만원)	①	②	③	④	⑤
청년기본소득 지급 (예: 월 10만원)	①	②	③	④	⑤
근로장려금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 지급)	①	②	③	④	⑤
농어민기본소득 확대 (예: 월 10~20만원)	①	②	③	④	⑤
최저임금 인상 (1시간당 1만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2. 사회보장정책 부문

아래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 또는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동의 정도(1점=전혀 동의 않음, 3점=보통, 5점 아주 동의함)				
	1점	2점	3점	4점	5점
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 (예: 월 30만원→50만원)	①	②	③	④	⑤
연금간 격차 완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	①	②	③	④	⑤
아동수당 확대 (예: 월 10만원→30만원)	①	②	③	④	⑤

전국민 상병(傷病)수당 지급 (부상과 질환으로 일을 못할 경우 적정 수당 지급)	①	②	③	④	⑤
청년사회진출금 지급 (1억원 정도 일시 지급)	①	②	③	④	⑤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임시직, 플랫폼노동직, 농어민 등)	①	②	③	④	⑤

3. 부동산 및 주거정책 부문

아래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 또는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동의 정도(1점=전혀 동의 없음, 3점=보통, 5점 아주 동의함)				
	1점	2점	3점	4점	5점
토지보유세 강화* (세율 인상 확대)	①	②	③	④	⑤
공공임대주택 확대	①	②	③	④	⑤
청년주택 확대(청년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 등)	①	②	③	④	⑤

*토지보유세: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세금

4. 일자리 및 사회혁신정책 부문

아래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 또는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동의 정도(1점=전혀 동의 없음, 3점=보통, 5점 아주 동의함)				
	1점	2점	3점	4점	5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주4일근무제 실시 (일자리 나눔 목적 등)	①	②	③	④	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①	②	③	④	⑤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 회생 지원 확대 (취약계층 부채 탕감)	①	②	③	④	⑤

사회적경제기업: 소규모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영리보다는 사회적 복리 증진을 위한 기업

*주민공동체 활동: 공동육아, 마을축제 등 주민주도의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공익적 기여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

5. 교육·문화정책 부문

아래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 또는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동의 정도(1점=전혀 동의 않음, 3점=보통, 5점 아주 동의함)				
	1점	2점	3점	4점	5점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①	②	③	④	⑤
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	①	②	③	④	⑤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6. 지역균형발전정책 부문

아래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를 ○ 또는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동의 정도(1점=전혀 동의 않음, 3점=보통, 5점 아주 동의함)				
	1점	2점	3점	4점	5점
국회·공공기관 지방 이전	①	②	③	④	⑤
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①	②	③	④	⑤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①	②	③	④	⑤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월 5~10만원)	①	②	③	④	⑤

Ⅲ.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1. 귀하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 선택

- ① 임금 격차 완화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③ 부자에 대한 누진세 강화 ④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⑤ 부동산 과세 강화 ⑥ 공공일자리 확대 ⑦ 교육기회의 균등
⑧ 수도권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⑨ 도시와 농촌 간 격차 완화
⑩ 기타()

2. 귀하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충남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 선택

- ①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비 지원
- ② 중소기업영업자 지원 강화
- ③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확대
- ④ 농어민수당 확대
- ⑤ 취약계층 학생 학습비 지원
- ⑥ 공공일자리 확대
- ⑦ 공공임대주택 확대
- ⑧ 영세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 ⑨ 충남 남부지역 산업발전
- ⑩ 기타()

3. 귀하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없음 ③ 잘 모름
④ 약간 있음 ⑤ 매우 많음

4. 귀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동의 ⑤ 완전 동의함

4-1. (증세에 동의하는 경우) 귀하 자신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세를 한다면 이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동의 ⑤ 완전 동의함

5. 귀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많이 양보해야 할 계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인(대기업, 중견기업) 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교원 포함)
③ 전문직 ④ 종교인 ⑤ 정치인(선출직공무원)
⑥ 기타

6. 귀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수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수익의 일부를 기부(초과이익공유제)하게 해서 지역상생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동의 ⑤ 완전 동의함

7. 마지막으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Ⅳ. 응답자 정보

성별	① 남	② 여	결혼 여부	① 기혼	② 미혼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직업계 전문학교 포함)			
	④ 대졸	⑤ 대학원 졸 이상				
가구형태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① 200만원 미만	② 200-400만원 미만	③ 400-600만원대			
	④ 600-800만원 미만	⑤ 800-1000만원 미만	⑥ 1000만 원 이상			
직업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주부			
	⑪ 학생	⑫ 기타				
종사상 지위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기타				
계층의식	① 하층	② 중하층	③ 중층	④ 중상층	⑤ 상층	
정치성향	① 보수	② 중도보수	③ 중도	④ 중도진보	⑤ 진보	
주택형태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② 아파트	③ 다세대주택		
	④ 오피스텔		⑤ 기타			
거주방식	① 자가	② 월세	③ 반전세	④ 전세	⑤ 기타	
거주 시군	① 천안시	② 공주시	③ 보령시	④ 아산시		
	⑤ 서산시	⑥ 논산시	⑦ 계룡시	⑧ 당진시		
	⑨ 금산군	⑩ 부여군	⑪ 서천군	⑫ 청양군		
	⑬ 홍성군	⑭ 예산군	⑮ 태안군			
거주행정 단위	① 읍	② 면	③ 동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2. 사회양극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표

2021 사회양극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소득보장·사회보장부문	전문가 소속	
	전문가 성명	

전문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전문가 의견조사는 2021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사회양극화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문제 등 그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온전한 유지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조사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재 논의되거나 일부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의견을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의견 조사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 충남연구원 사회양극화대응정책연구단장

□ 문의: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박경철 책임연구원 ☎ 041-840-1206(kcpark@cni.re.kr)
 연구간사 임다정 연구원 ☎ 041-840-1170(dajung@cni.re.kr)

※ 사회양극화란 사회의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함. 즉, 사회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가 확대되고 고착화되는 현상을 말함.

다음은 현재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논의 중인 주요 정책(소득보장/사회보장부문)들입니다. 아래 각 부문의 정책명과 정책 설명을 참고하셔서 해당 정책에 대한 의견을 빈칸에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량에 상관없이 작성 가능한 것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보장정책 부문

구분	정책 설명	전문가 의견 서술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 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예: 개인별 월 30만원)	불평등과 양극화, 일자리 감소,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소득 보장			
청년기본소득 지급 (예: 월 10만원)	청년실업과 불안한 일자리,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소득보장			
근로장려금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 지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와 중소기업 취업 촉진			
농어민기본 소득 확대 (예: 월 10~20만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어민의 생활안정 보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성 보장			
최저임금 인상 (1시간당 1만원이상)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			

2. 사회보장정책 부문

구분	정책 설명	전문가 의견 서술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실행시 어려움 및 해결 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 (예: 월 30만원→50만원)	빈곤과 질병, 일자리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해 안정적 소득을 보장			
연금간 격차완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교원연금 등) 간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동등한 노후생활 보장			
아동수당 확대 (예: 월 10만원→30만원)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양육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			
전국민 상병(傷病)수당 지급	부상과 질환으로 일을 못할 경우 적절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보장			
청년사회진출금 지급 (1억원 정도 일시 지급)	세대 간 심각한 자산 격차 문제를 해소해 계급사다리를 이어줌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임시직, 플랫폼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등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로 생활안정과 직업전환 기회 제공			

3. 기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이나 연구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 사회양극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일자리·사회혁신/교육·문화 부문	전문가 소속	
	전문가 성명	

전문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전문가 의견조사는 2021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사회양극화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문제 등 그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온전한 유지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조사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재 논의되거나 일부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의견을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의견조사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 충남연구원 사회양극화대응정책연구단장

☐ 문의: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박경철 책임연구원 ☎ 041-840-1206(kcpark@cni.re.kr)

연구간사 임다정 연구원 ☎ 041-840-1170(dajung@cni.re.kr)

※ 사회양극화란 사회의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함. 즉, 사회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가 확대되고 고착화되는 현상을 말함.

다음은 현재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논의 중인 주요 정책(소득보장/사회보장부문)들입니다. 아래 각 부문의 정책명과 정책 설명을 참고하셔서 해당 정책에 대한 의견을 빈칸에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량에 상관없이 작성 가능한 것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 및 사회혁신정책 부문

구분	정책 설명	전문가 의견 서술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 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과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활을 보장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선순환경제를 도모			
주4일근무제 실시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나눔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 기회의 확대 및 복지 서비스 향상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공동육아, 마을돌봄 등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공익적 기여 활동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확대			
경제적 회생 지원 확대	사업실패 또는 신용불량 취약계층에 대해 부채 탕감(감면)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소규모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영리보다는 사회적 복리 증진을 위한 기업

*주민공동체 활동: 공동육아, 마을축제 등 주민주도의 공동체가 지역사회의 공익적 기여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

2. 교육·문화정책 부문

구분	정책 설명	전문가 의견 서술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부분적 실행 방안)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 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등)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대학등록금의 면제 또는 대폭 감면을 통해 가계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 보장			
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안정적 노동 및 생활여건을 보장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교육을 통한 계층사다리 보장을 위해 취약 및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인구소멸’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사회적 기본권 차원에서 문화와 여가 활동에 대한 기회 제공 확대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소득 지원			

3. 기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이나 연구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 사회양극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부동산·주거/지역균형발전 부문**

전문가
소속

전문가
성명

전문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전문가 의견조사는 2021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충남도 사회양극화 대응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사회양극화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문제 등 그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온전한 유지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견조사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재 논의되거나 일부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의견을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의견 조사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 충남연구원 사회양극화대응정책연구단장

☐ 문의: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박경철 책임연구원 ☎ 041-840-1206(kcpark@cni.re.kr)

연구간사 임다정 연구원 ☎ 041-840-1170(dajung@cni.re.kr)

※ 사회양극화란 사회의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함. 즉, 사회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가 확대되고 고착화되는 현상을 말함.

다음은 현재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논의 중인 주요 정책(소득보장/사회보장부문)들입니다. 아래 각 부문의 정책명과 정책 설명을 참고하셔서 해당 정책에 대한 의견을 빈칸에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량에 상관없이 작성 가능한 것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및 주거정책 부문

구분	정책 설명	전문가 의견 서술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 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등)
토지보유세 강화	토지보유에 대한 누진세 도입을 통해 심각한 부동산 소유 격차 완화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청년주택 확대	임대료 감면(지원)과 중장기 임대 보장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와 생활 안정 보장			

2. 지역균형발전정책 부문

구분	정책 설명	전문가 의견 서술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부분적 실행 방안)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 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등)
국회·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회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도모			
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	지역의 거점 대학(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및 지역발전 도모			
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 규제를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 방지 및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천안, 아산, 당진 등 충남 북부권에 치우친 경제 불균형 문제 해소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월 5~10만원)	농어촌주민에게 일정한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 주민 간 소득 격차 완화			

3. 기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이나 연구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3. 충청남도 사회양극화 정책평가 조사표

2021 충청남도 사회양극화정책 평가 설문조사	일련번호				
	연 락 처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정책 평가 및 자문을 통해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충청남도 도민평가단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양극화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민선7기 충청남도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양극화를 우리 사회의 3대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에 관해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정과 국정에 반영코자 하오니 본 설문조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통계법 33조 및 34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의 모든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 목적으로는 절대 활용되지 않습니다.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9월

충남연구원장

■ 문의: 충남연구원 사회양극화대응정책연구단 단장 박경철

☎ 041-840-1206(kcpark@cni.re.kr)

충남연구원 사회양극화대응정책연구단 간사 임다정

☎ 041-840-1170(dajung@cni.re.kr)

※ 사회양극화란 사회의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함. 즉, 사회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가 확대되고 고착화되는 현상을 말함.

1. 무상정책 평가 및 의견

1. 충남도는 2019년부터 중앙정부에 앞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된 번호 앞에 ☐표 또는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동일)

- ① 매우 잘못함 ② 잘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2. 충남도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전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못함 ② 잘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 2-1. 충남도가 친환경무상급식을 대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 2-2. 충남도가 친환경무상급식을 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3. 충남도는 2019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못함 ② 잘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 3-1. 충남도가 중학교 무상교복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4. 충남도는 2019년부터 75세 어르신(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에 대해 버스비 무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못함 ② 잘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4-1. 버스비 무료화를 75세에서 65~70세 정도로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4-2. 충남도내 어린이와 청소년(만 6~18세)에게 버스비를 무료화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5. 충남도는 올해부터 교통이 불편한 도서민(섬주민)에게 여객선 운임 무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못함 ② 잘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무상정책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의견:

II. 수당지급정책 평가 및 의견

6. 충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현재 만 36개월(만 3세) 이하 출산 가정에 월 10만원의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못함 ② 잘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6-1. 충남도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의 지급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7. 충남도는 농어가의 소득안정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농어가당 연간 8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못함 ② 잘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7-1. 충남도 농어민수당을 점차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수당지급정책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의견:

Ⅲ. 공제지원정책 평가 및 의견

8. 충남도는 일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국민건강/고용/재해/연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못함 ② 잘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8-1. 충남도의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9. 충남도는 2021년부터 모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충남도민 안전보험*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못함 ② 잘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 충남도민 안전보험: 직접 가입하지 않았어도 충남도민이라면 자동 가입으로
재난·사고 등 피해 발생 시 보험료 무료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

공제지원정책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의견:

IV. 주택지원 정책 및 평가

10. 충남도는 현재 청년 주택문제와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주택건설을 통해 한 자녀 출생 시 임대료 50% 감면, 두 자녀 출생 시 임대료 전액 감면하는 더행복주택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못함 ② 잘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10-1. 충남도 더행복주택사업을 2022년까지 1000가구 건설 등 향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반대 ③ 보통
④ 찬성 ⑤ 적극 찬성

더행복주택사업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의견:

V. 응답자 정보

성별	① 남	② 여	결혼 여부	① 기혼	② 미혼
연령대	① 30대 미만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학력	① 고졸 이하	② 전문대·대졸	③ 대학원 졸 이상		
거주 시군	① 북부권(천안, 아산, 당진) ② 서해안권(서산, 태안, 보령, 서천) ③ 내륙권(홍성, 예산, 청양) ④ 금강권(공주, 부여, 논산, 계룡, 금산)				
거주행정 단위	① 읍	② 면	③ 동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4. 사회양극화에 관한 충남도민 설문결과표

〈표 65〉 표본 특성표

		사례수	%
[전체]		1050	100.0%
성별	남 자	553	52.7%
	여 자	497	47.3%
결혼여부	기 혼	778	74.1%
	미 혼	272	25.9%
연령대	20대	170	16.2%
	30대	186	17.7%
	40대	234	22.3%
	50대	256	24.4%
	60대 이상	204	19.4%
학력	중졸이하	124	11.8%
	고졸	454	43.2%
	전문대졸	155	14.8%
	대졸이상	317	30.2%
가구형태	1인	111	10.6%
	2인	265	25.2%
	3인	360	34.3%
	4인 이상	314	29.9%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2	9.7%
	200-400만원 미만	330	31.4%
	400-600만원대	336	32.0%
	600만원 이상	282	26.9%
직업	관리자	36	3.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0%
	사무종사자	174	16.6%
	서비스 종사자	170	16.2%
	판매종사자	157	15.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4.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7.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0%
	단순노무종사자	29	2.8%
	주부	81	7.7%
	학생	63	6.0%
	무직	32	3.0%

계층의식	하층	99	9.4%
	중하층	471	44.9%
	중층	404	38.5%
	중상층	76	7.2%
정치성향	보수	108	10.3%
	중도보수	257	24.5%
	중도	327	31.1%
	중도진보	293	27.9%
	진보	65	6.2%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35.3%
	아파트	510	48.6%
	다세대주택/오피스텔	169	16.1%
거주시군	천안시	170	16.2%
	공주시	67	6.4%
	보령시	66	6.3%
	아산시	115	11.0%
	서산시	85	8.1%
	논산시	70	6.7%
	계룡시	43	4.1%
	당진시	83	7.9%
	금산군	46	4.4%
	부여군	52	5.0%
	서천군	45	4.3%
	청양군	36	3.4%
	홍성군	64	6.1%
	예산군	57	5.4%
	태안군	51	4.9%
거주행정단위	읍	322	30.7%
	면	284	27.0%
	동	444	42.3%

〈 표 66 〉 사회양극화 의미(복수응답)

		(사례 수)	소득 격차	자산 격차	일 자리 격차	교육 기회 격차	세대 격차	문화· 여가 생활 격차	지역 간 격차
[전체]		(1050)	47.3	41.3	35.3	14.2	14.3	21.0	26.6
성별	남 자	(553)	48.3	41.6	37.3	13.7	12.8	19.3	26.9
	여 자	(497)	46.3	41.0	33.2	14.7	15.9	22.7	26.2
결혼여 부	기 혼	(778)	46.1	43.2	32.8	14.0	14.8	21.0	28.1
	미 혼	(272)	50.7	36.0	42.6	14.7	12.9	21.0	22.1
연령대	20대	(170)	50.0	33.5	45.9	14.7	14.7	20.0	21.2
	30대	(186)	48.4	38.2	42.5	16.1	7.0	23.7	24.2
	40대	(234)	48.7	45.7	38.5	15.8	7.3	21.8	22.2
	50대	(256)	51.2	42.6	31.6	11.3	12.9	22.3	28.1
	60대 이상	(204)	37.7	44.1	21.1	13.7	30.4	16.7	36.3
학력	중졸이하	(124)	35.5	41.9	17.7	15.3	35.5	15.3	38.7
	고졸	(454)	48.2	39.6	37.0	14.8	13.7	20.9	25.8
	전문대졸	(155)	49.7	38.7	41.9	10.3	12.3	22.6	24.5
	대졸이상	(317)	49.5	44.8	36.6	14.8	7.9	22.4	24.0
가구형 태	1인	(111)	47.7	44.1	31.5	11.7	17.1	23.4	24.3
	2인	(265)	43.0	39.6	26.4	14.0	22.6	18.5	35.8
	3인	(360)	47.8	40.3	41.4	16.1	9.7	21.4	23.3
	4인 이상	(314)	50.3	43.0	37.3	13.1	11.5	21.7	23.2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2)	34.3	41.2	27.5	16.7	26.5	20.6	33.3
	200~400만원 미만	(330)	52.4	38.2	32.4	13.3	17.6	18.5	27.6
	400~600만원대	(336)	44.9	42.0	37.8	16.7	9.2	24.1	25.3
	600만원 이상	(282)	48.9	44.3	38.7	11.3	12.1	20.2	24.5
직업	관리자	(36)	44.4	47.2	44.4	8.3	11.1	22.2	22.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56.3	46.9	28.1	12.5	3.1	25.0	28.1
	사무종사자	(174)	50.0	44.8	37.4	14.4	10.3	21.3	21.8
	서비스 종사자	(170)	46.5	36.5	39.4	14.1	11.2	22.9	29.4
	판매종사자	(157)	56.1	42.0	29.3	13.4	15.9	16.6	26.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34.9	40.1	23.0	16.4	25.0	21.7	38.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50.0	41.5	39.0	11.0	11.0	23.2	24.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57.1	35.7	52.4	14.3	11.9	4.8	23.8
	단순노무종사자	(29)	48.3	37.9	44.8	13.8	13.8	13.8	27.6
	주부	(81)	46.9	48.1	23.5	13.6	12.3	29.6	25.9

	학생	(63)	44.4	44.4	41.3	14.3	20.6	22.2	12.7
	무직	(32)	34.4	25.0	65.6	25.0	12.5	18.8	18.8
계층의 식	하층	(99)	42.4	49.5	36.4	14.1	21.2	12.1	24.2
	중하층	(471)	51.2	40.3	32.5	15.7	14.6	18.3	27.4
	중층	(404)	44.6	40.3	38.1	12.1	11.9	25.2	27.7
	중상층	(76)	44.7	42.1	36.8	15.8	15.8	26.3	18.4
	보수	(108)	38.9	47.2	25.9	13.9	18.5	16.7	38.9
정치성 향	중도보수	(257)	46.3	36.2	31.9	18.3	21.0	19.8	26.5
	중도	(327)	48.9	43.4	38.5	11.6	11.0	22.3	24.2
	중도진보	(293)	49.5	42.0	39.6	13.3	10.6	19.1	25.9
	진보	(65)	47.7	38.5	29.2	15.4	13.8	33.8	21.5
	단독주택	(371)	42.9	38.8	28.6	15.6	21.8	19.9	32.3
주택형 태	아파트	(510)	49.2	43.3	39.0	13.5	9.2	20.4	25.3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51.5	40.8	39.1	13.0	13.0	24.9	17.8
거주시 군	천안시	(170)	51.8	55.9	32.4	13.5	11.8	10.6	24.1
	공주시	(67)	50.7	49.3	23.9	14.9	14.9	19.4	26.9
	보령시	(66)	59.1	31.8	40.9	6.1	18.2	16.7	27.3
	아산시	(115)	52.2	41.7	41.7	7.8	13.0	18.3	25.2
	서산시	(85)	55.3	45.9	32.9	9.4	10.6	17.6	28.2
	논산시	(70)	38.6	41.4	40.0	15.7	15.7	20.0	28.6
	계룡시	(43)	32.6	44.2	37.2	23.3	16.3	23.3	23.3
	당진시	(83)	47.0	28.9	38.6	16.9	15.7	27.7	25.3
	금산군	(46)	41.3	30.4	30.4	21.7	19.6	30.4	26.1
	부여군	(52)	46.2	34.6	30.8	15.4	13.5	32.7	26.9
	서천군	(45)	40.0	26.7	35.6	15.6	17.8	28.9	35.6
	청양군	(36)	38.9	33.3	36.1	13.9	19.4	25.0	33.3
	홍성군	(64)	31.3	42.2	37.5	17.2	9.4	31.3	31.3
	예산군	(57)	43.9	43.9	35.1	12.3	12.3	22.8	29.8
	태안군	(51)	56.9	35.3	35.3	23.5	17.6	17.6	13.7
거주행 정단위	읍	(322)	47.2	39.8	31.1	14.9	15.2	24.8	27.0
	면	(284)	41.2	41.2	33.1	14.4	18.3	21.8	29.9
	동	(444)	51.4	42.6	39.9	13.5	11.0	17.6	24.1

〈 표 67 〉 현재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정도

		(사례수)	심각 하지 않음	보통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평균 (점)
[전체]		(1050)	3.9	17.9	54.8	23.4	3.98
성별	남 자	(553)	3.8	17.4	53.2	25.7	4.01
	여 자	(497)	4.0	18.5	56.5	20.9	3.94
결혼여부	기 혼	(778)	4.1	20.2	54.6	21.1	3.93
	미 혼	(272)	3.3	11.4	55.1	30.1	4.12
연령대	20대	(170)	3.5	11.2	53.5	31.8	4.14
	30대	(186)	2.2	8.1	59.7	30.1	4.18
	40대	(234)	5.6	17.5	59.4	17.5	3.89
	50대	(256)	4.7	26.2	48.8	20.3	3.85
	60대 이상	(204)	2.9	22.5	53.4	21.1	3.93
학력	중졸이하	(124)	1.6	22.6	54.8	21.0	3.95
	고졸	(454)	2.9	15.6	55.5	26.0	4.05
	전문대졸	(155)	3.9	18.1	56.1	21.9	3.96
	대졸이상	(317)	6.3	19.2	53.0	21.5	3.90
가구형태	1인	(111)	1.8	12.6	49.5	36.0	4.20
	2인	(265)	3.8	15.5	57.4	23.4	4.00
	3인	(360)	5.0	16.9	57.5	20.6	3.94
	4인 이상	(314)	3.5	22.9	51.3	22.3	3.92
월소득	200만원 미만	(102)		16.7	58.8	24.5	4.08
	200-400만원 미만	(330)	3.0	12.4	54.5	30.0	4.12
	400-600만원대	(336)	5.1	14.3	57.4	23.2	3.99
	600만원 이상	(282)	5.0	29.1	50.4	15.6	3.77
직업	관리자	(36)	19.4	33.3	44.4	2.8	3.3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9.4	40.6	40.6	9.4	3.50
	사무종사자	(174)	2.9	17.8	54.6	24.7	4.01
	서비스 종사자	(170)	6.5	14.7	60.0	18.8	3.91
	판매종사자	(157)	0.6	17.2	52.2	29.9	4.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2.6	21.7	55.9	19.7	3.9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9	12.2	52.4	30.5	4.0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9.5	71.4	16.7	4.02

	단순노무종사자	(29)	3.4	10.3	48.3	37.9	4.21
	주부	(81)	1.2	19.8	51.9	27.2	4.05
	학생	(63)	3.2	15.9	50.8	30.2	4.08
	무직	(32)	3.1	12.5	65.6	18.8	4.00
계층의식	하층	(99)	1.0	13.1	64.6	21.2	4.06
	중하층	(471)	0.8	10.0	60.1	29.1	4.17
	중층	(404)	4.0	26.0	50.0	20.0	3.86
	중상층	(76)	26.3	30.3	34.2	9.2	3.26
정치성향	보수	(108)	0.9	14.8	51.9	32.4	4.16
	중도보수	(257)	6.2	25.3	49.0	19.5	3.82
	중도	(327)	3.1	18.0	57.8	21.1	3.97
	중도진보	(293)	2.7	13.3	59.7	24.2	4.05
	진보	(65)	9.2	13.8	44.6	32.3	4.00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2.7	19.1	59.0	19.1	3.95
	아파트	(510)	4.3	18.4	52.7	24.5	3.97
	다세대주택/오피스텔	(169)	5.3	13.6	51.5	29.6	4.05
거주시군	천안시	(170)	2.9	22.9	51.2	22.9	3.94
	공주시	(67)	6.0	19.4	40.3	34.3	4.03
	보령시	(66)	1.5	24.2	50.0	24.2	3.97
	아산시	(115)	6.1	21.7	49.6	22.6	3.89
	서산시	(85)	4.7	9.4	67.1	18.8	4.00
	논산시	(70)	4.3	15.7	60.0	20.0	3.96
	계룡시	(43)	4.7	11.6	62.8	20.9	4.00
	당진시	(83)	3.6	18.1	60.2	18.1	3.93
	금산군	(46)	6.5	13.0	47.8	32.6	4.07
	부여군	(52)	5.8	13.5	59.6	21.2	3.96
	서천군	(45)	4.4	15.6	55.6	24.4	4.00
	청양군	(36)		19.4	58.3	22.2	4.03
	홍성군	(64)	4.7	18.8	51.6	25.0	3.97
	예산군	(57)		17.5	56.1	26.3	4.09
	태안군	(51)	2.0	13.7	60.8	23.5	4.06
거주행정단위	읍	(322)	4.0	16.1	54.0	25.8	4.02
	면	(284)	2.8	16.9	59.5	20.8	3.98
	동	(444)	4.5	19.8	52.3	23.4	3.95

〈표 68〉 5년 전에 비해 현재 사회양극화 정도

		(사례수)	심각하지 않음	보통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평균 (점)
[전체]		(1050)	0.1	14.3	65.5	20.1	4.06
성별	남 자	(553)	0.2	13.6	65.1	21.2	4.07
	여 자	(497)		15.1	66.0	18.9	4.04
결혼여부	기 혼	(778)		16.5	64.0	19.5	4.03
	미 혼	(272)	0.4	8.1	69.9	21.7	4.13
연령대	20대	(170)		7.6	69.4	22.9	4.15
	30대	(186)		5.9	64.0	30.1	4.24
	40대	(234)	0.4	13.7	68.8	17.1	4.03
	50대	(256)		21.1	59.8	19.1	3.98
	60대 이상	(204)		19.6	67.2	13.2	3.94
학력	중졸이하	(124)		19.4	68.5	12.1	3.93
	고졸	(454)	0.2	12.1	68.7	18.9	4.06
	전문대졸	(155)		11.6	63.9	24.5	4.13
	대졸이상	(317)		16.7	60.6	22.7	4.06
가구형태	1인	(111)	0.9	11.7	61.3	26.1	4.13
	2인	(265)		14.3	65.7	20.0	4.06
	3인	(360)		16.1	60.0	23.9	4.08
	4인 이상	(314)		13.1	73.2	13.7	4.01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1.8	69.6	18.6	4.07
	200-400만원 미만	(330)	0.3	11.8	63.3	24.5	4.12
	400-600만원대	(336)		15.2	64.9	19.9	4.05
	600만원 이상	(282)		17.0	67.4	15.6	3.99
직업	관리자	(36)		41.7	47.2	11.1	3.6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28.1	46.9	25.0	3.97
	사무종사자	(174)		12.6	66.1	21.3	4.09
	서비스 종사자	(170)		15.3	64.1	20.6	4.05
	판매종사자	(157)		9.6	70.7	19.7	4.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9.1	70.4	10.5	3.9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1.2	11.0	61.0	26.8	4.13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7.1	66.7	26.2	4.19
	단순노무종사자	(29)		6.9	62.1	31.0	4.24
	주부	(81)		13.6	63.0	23.5	4.10
	학생	(63)		9.5	66.7	23.8	4.14
	무직	(32)		9.4	78.1	12.5	4.03

계층의식	하층	(99)	1.0	10.1	67.7	21.2	4.09
	중하층	(471)	.	7.2	67.7	25.1	4.18
	중층	(404)	.	18.3	67.1	14.6	3.96
	중상층	(76)	.	42.1	40.8	17.1	3.75
정치성향	보수	(108)	.	9.3	74.1	16.7	4.07
	중도보수	(257)	0.4	19.1	67.3	13.2	3.93
	중도	(327)	.	15.9	63.6	20.5	4.05
	중도진보	(293)	.	9.6	64.8	25.6	4.16
	진보	(65)	.	16.9	56.9	26.2	4.09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	14.0	71.7	14.3	4.00
	아파트	(510)	.	13.9	63.7	22.4	4.08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0.6	16.0	57.4	26.0	4.09
거주시군	천안시	(170)	.	14.7	65.3	20.0	4.05
	공주시	(67)	.	22.4	61.2	16.4	3.94
	보령시	(66)	.	18.2	66.7	15.2	3.97
	아산시	(115)	.	16.5	61.7	21.7	4.05
	서산시	(85)	.	8.2	70.6	21.2	4.13
	논산시	(70)	1.4	11.4	64.3	22.9	4.09
	계룡시	(43)	.	11.6	69.8	18.6	4.07
	당진시	(83)	.	12.0	74.7	13.3	4.01
	금산군	(46)	.	17.4	73.9	8.7	3.91
	부여군	(52)	.	15.4	59.6	25.0	4.10
	서천군	(45)	.	17.8	64.4	17.8	4.00
	청양군	(36)	.	13.9	66.7	19.4	4.06
	홍성군	(64)	.	12.5	56.3	31.3	4.19
	예산군	(57)	.	10.5	61.4	28.1	4.18
	태안군	(51)	.	11.8	68.6	19.6	4.08
거주행정 단위	읍	(322)	.	15.5	59.6	24.8	4.09
	면	(284)	.	13.4	68.7	18.0	4.05
	동	(444)	0.2	14.0	67.8	18.0	4.04

〈 표 69 〉 현재 충남도 사회양극화 정도

		(사례 수)	심각하지 않음	보통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평균 (점)
[전체]		(1050)	7.4	28.4	53.8	10.4	3.67
성별	남 자	(553)	8.9	25.9	53.9	11.4	3.68
	여 자	(497)	5.8	31.2	53.7	9.3	3.66
결혼여부	기 혼	(778)	9.6	30.8	50.5	9.0	3.59
	미 혼	(272)	1.1	21.3	63.2	14.3	3.91
연령대	20대	(170)	1.8	18.8	65.9	13.5	3.91
	30대	(186)	0.5	18.3	63.4	17.7	3.98
	40대	(234)	2.6	34.2	54.7	8.5	3.69
	50대	(256)	22.3	30.5	40.2	7.0	3.32
	60대 이상	(204)	5.4	36.3	51.0	7.4	3.60
학력	종졸이하	(124)	4.8	38.7	50.8	5.6	3.57
	고졸	(454)	6.4	27.5	56.8	9.3	3.69
	전문대졸	(155)	3.9	24.5	61.3	10.3	3.78
	대졸이상	(317)	11.7	27.4	47.0	13.9	3.63
가구형태	1인	(111)	0.9	15.3	63.1	20.7	4.04
	2인	(265)	4.9	31.3	57.4	6.4	3.65
	3인	(360)	10.0	28.1	51.7	10.3	3.62
	4인 이상	(314)	8.9	30.9	50.0	10.2	3.61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2.9	30.4	53.9	12.7	3.76
	200~400만원 미만	(330)	2.1	21.5	63.6	12.7	3.87
	400~600만원대	(336)	3.9	34.5	54.5	7.1	3.65
	600만원 이상	(282)	19.5	28.4	41.5	10.6	3.43
직업	관리자	(36)	38.9	36.1	16.7	8.3	2.9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7.5	25.0	25.0	12.5	3.13
	사무종사자	(174)	7.5	23.6	55.2	13.8	3.75
	서비스 종사자	(170)	7.1	34.7	52.4	5.9	3.57
	판매종사자	(157)	5.1	23.6	60.5	10.8	3.7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4.6	33.6	55.9	5.9	3.6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4	28.0	54.9	14.6	3.8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7.1	21.4	64.3	7.1	3.71
	단순노무종사자	(29)	3.4	20.7	65.5	10.3	3.83
	주부	(81)	2.5	33.3	49.4	14.8	3.77
	학생	(63)	3.2	27.0	54.0	15.9	3.83
	무직	(32)	6.3	21.9	65.6	6.3	3.72

계층의식	하층	(99)	2.0	28.3	59.6	10.1	3.78
	중하층	(471)	3.2	23.1	60.5	13.2	3.84
	중층	(404)	10.6	31.7	50.0	7.7	3.55
	중상층	(76)	23.7	43.4	25.0	7.9	3.17
정치성향	보수	(108)	7.4	24.1	58.3	10.2	3.71
	중도보수	(257)	9.7	30.7	52.1	7.4	3.57
	중도	(327)	5.8	35.8	49.8	8.6	3.61
	중도진보	(293)	6.5	21.5	61.1	10.9	3.76
	진보	(65)	10.8	20.0	40.0	29.2	3.88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8.1	31.3	55.0	5.7	3.58
	아파트	(510)	7.8	27.6	52.2	12.4	3.69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4.7	24.3	56.2	14.8	3.81
거주시군	천안시	(170)	7.1	29.4	50.6	12.9	3.69
	공주시	(67)	14.9	20.9	47.8	16.4	3.66
	보령시	(66)	6.1	19.7	48.5	25.8	3.94
	아산시	(115)	7.8	26.1	55.7	10.4	3.69
	서산시	(85)	4.7	28.2	56.5	10.6	3.73
	논산시	(70)	7.1	34.3	52.9	5.7	3.57
	계룡시	(43)	7.0	30.2	58.1	4.7	3.60
	당진시	(83)	2.4	32.5	62.7	2.4	3.65
	금산군	(46)	8.7	28.3	47.8	15.2	3.70
	부여군	(52)	9.6	32.7	46.2	11.5	3.60
	서천군	(45)	8.9	26.7	57.8	6.7	3.62
	청양군	(36)	2.8	36.1	52.8	8.3	3.67
	홍성군	(64)	10.9	34.4	46.9	7.8	3.52
	예산군	(57)	8.8	22.8	63.2	5.3	3.65
	태안군	(51)	5.9	25.5	62.7	5.9	3.69
거주행정 단위	읍	(322)	8.1	29.2	51.2	11.5	3.66
	면	(284)	5.6	29.2	58.5	6.7	3.66
	동	(444)	8.1	27.3	52.7	11.9	3.68

〈 표 70 〉 개인 노력시 계층이동(사회적 지위 이동) 가능성

		(사례 수)	전혀 불가능	불가능	보통	가능	매우 가능	평균 (점)
[전체]		(1050)	1.6	35.4	47.8	13.2	1.9	2.78
성별	남 자	(553)	1.8	36.5	47.4	12.1	2.2	2.76
	여 자	(497)	1.4	34.2	48.3	14.5	1.6	2.81
결혼여부	기 혼	(778)	1.3	31.1	48.8	16.5	2.3	2.87
	미 혼	(272)	2.6	47.8	44.9	4.0	0.7	2.53
연령대	20대	(170)	1.2	53.5	44.1		1.2	2.46
	30대	(186)	4.3	39.8	51.1	4.8		2.56
	40대	(234)	1.7	32.9	54.3	11.1		2.75
	50대	(256)	1.2	37.5	33.2	27.7	0.4	2.89
	60대 이상	(204)		16.7	58.8	16.2	8.3	3.16
학력	중졸이하	(124)		23.4	57.3	13.7	5.6	3.02
	고졸	(454)	1.3	37.0	45.6	14.1	2.0	2.78
	전문대졸	(155)	3.9	33.5	51.6	10.3	0.6	2.70
	대졸이상	(317)	1.6	38.8	45.4	13.2	0.9	2.73
가구형태	1인	(111)	1.8	40.5	52.3	5.4		2.61
	2인	(265)	0.4	30.2	47.9	15.5	6.0	2.97
	3인	(360)	2.2	34.7	47.8	14.7	0.6	2.77
	4인 이상	(314)	1.9	38.9	46.2	12.4	0.6	2.71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42.2	49.0	8.8		2.67
	200-400만원 미만	(330)	1.5	31.2	53.3	10.9	3.0	2.83
	400-600만원 대	(336)	1.8	33.0	54.8	8.6	1.8	2.76
	600만원 이상	(282)	2.1	40.8	32.6	23.0	1.4	2.81
직업	관리자	(36)		25.0	44.4	30.6		3.0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	34.4	31.3	28.1	3.1	2.94
	사무종사자	(174)	1.7	32.8	51.1	13.8	0.6	2.79
	서비스 종사자	(170)	1.8	38.8	44.1	14.1	1.2	2.74
	판매종사자	(157)	1.3	35.7	48.4	12.1	2.5	2.7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30.9	50.7	15.8	2.6	2.9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9	31.7	46.3	12.2	4.9	2.8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45.2	45.2	7.1		2.57
	단순노무종사자	(29)		31.0	37.9	20.7	10.3	3.10
	주부	(81)	1.2	25.9	61.7	9.9	1.2	2.84
	학생	(63)	1.6	49.2	49.2			2.48
	무직	(32)	3.1	62.5	31.3	3.1		2.34
계층의식	하층	(99)	3.0	42.4	48.5	6.1		2.58
	중하층	(471)	1.9	31.8	54.8	8.7	2.8	2.79
	중층	(404)	0.7	38.9	42.3	17.1	1.0	2.79
	중상층	(76)	2.6	30.3	32.9	30.3	3.9	3.03

정치성향	보수	(108)		33.3	51.9	8.3	6.5	2.88
	중도보수	(257)	0.8	31.1	50.2	14.8	3.1	2.88
	중도	(327)	0.9	35.8	48.3	14.4	0.6	2.78
	중도진보	(293)	3.8	41.6	40.6	13.0	1.0	2.66
	진보	(65)	1.5	26.2	61.5	10.8		2.82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1.9	33.2	48.5	14.3	2.2	2.82
	아파트	(510)	1.4	36.3	45.3	14.9	2.2	2.80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1.8	37.9	53.8	5.9	0.6	2.66
거주시군	천안시	(170)	3.5	34.1	44.1	17.1	1.2	2.78
	공주시	(67)	3.0	32.8	46.3	11.9	6.0	2.85
	보령시	(66)	1.5	25.8	57.6	12.1	3.0	2.89
	아산시	(115)	0.9	38.3	44.3	13.9	2.6	2.79
	서산시	(85)	2.4	37.6	44.7	12.9	2.4	2.75
	논산시	(70)	2.9	45.7	38.6	12.9		2.61
	계룡시	(43)		32.6	51.2	16.3		2.84
	당진시	(83)	1.2	36.1	50.6	9.6	2.4	2.76
	금산군	(46)		43.5	39.1	17.4		2.74
	부여군	(52)	1.9	34.6	51.9	9.6	1.9	2.75
	서천군	(45)		40.0	48.9	6.7	4.4	2.76
	청양군	(36)		30.6	58.3	11.1		2.81
	홍성군	(64)	1.6	35.9	51.6	9.4	1.6	2.73
	예산군	(57)		36.8	49.1	14.0		2.77
	태안군	(51)		23.5	56.9	17.6	2.0	2.98
거주행정단위	읍	(322)	0.9	36.0	50.3	10.9	1.9	2.77
	면	(284)	1.4	33.5	49.3	13.4	2.5	2.82
	동	(444)	2.3	36.3	45.0	14.9	1.6	2.77

〈 표 71 〉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1)소득(근로소득)

		(사례수)	4	보통	6	7	8	9	매우 심각	평균 (점)
[전체]		(1050)	0.5	9.4	9.4	14.4	21.2	25.2	19.8	8.01
성별	남 자	(553)	0.4	9.6	9.4	13.4	20.6	26.9	19.7	8.04
	여 자	(497)	0.6	9.3	9.5	15.5	21.9	23.3	19.9	7.99
결혼여부	기 혼	(778)	0.6	10.9	10.0	14.9	20.1	25.3	18.1	7.91
	미 혼	(272)		5.1	7.7	12.9	24.6	25.0	24.6	8.31
연령대	20대	(170)		2.9	7.6	12.9	27.1	24.1	25.3	8.38
	30대	(186)	0.5	3.8	8.6	14.5	21.0	26.3	25.3	8.32
	40대	(234)	0.9	7.3	7.3	16.7	19.7	26.5	21.8	8.14
	50대	(256)		18.8	7.8	15.2	20.3	23.8	14.1	7.65
	60대 이상	(204)	1.0	10.8	16.2	11.8	19.6	25.5	15.2	7.75
학력	중졸이하	(124)	1.6	9.7	16.1	11.3	20.2	25.8	15.3	7.77
	고졸	(454)		8.1	7.9	13.7	22.5	27.5	20.3	8.14
	전문대졸	(155)		8.4	8.4	17.4	23.2	21.3	21.3	8.05
	대졸이상	(317)	0.9	11.7	9.5	15.1	18.9	23.7	20.2	7.91
가구형태	1인	(111)	0.9	4.5	17.1	9.9	12.6	23.4	31.5	8.25
	2인	(265)	0.8	10.2	11.3	10.9	21.5	30.2	15.1	7.93
	3인	(360)		11.1	7.5	22.5	24.4	15.3	19.2	7.83
	4인 이상	(314)	0.6	8.6	7.3	9.6	20.4	33.1	20.4	8.21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0	9.8	21.6	5.9	23.5	25.5	12.7	7.69
	200~400 만원 미만	(330)	0.3	7.0	7.0	12.7	18.2	27.0	27.9	8.34
	400~600 만원대	(336)	0.6	7.1	8.0	20.2	24.4	24.1	15.5	7.95
	600만원 이상	(282)	0.4	14.9	9.6	12.4	20.2	24.5	18.1	7.83
직업	관리자	(36)	2.8	16.7	22.2	13.9	27.8	8.3	8.3	7.0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4.4	6.3	6.3	12.5	28.1	12.5	7.31
	사무종사자	(174)	1.1	9.8	5.7	15.5	20.1	25.9	21.8	8.09
	서비스 종사자	(170)		7.1	11.2	16.5	20.0	23.5	21.8	8.07
	판매종사자	(157)		6.4	7.6	15.3	19.1	22.3	29.3	8.3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3	13.8	13.8	12.5	18.4	26.3	13.8	7.6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9.8	6.1	17.1	17.1	28.0	22.0	8.13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8	9.5	7.1	40.5	21.4	16.7	8.14
	단순노무종사자	(29)		6.9	6.9	6.9	20.7	37.9	20.7	8.38
	주부	(81)		9.9	7.4	14.8	18.5	30.9	18.5	8.09
	학생	(63)		1.6	11.1	15.9	28.6	23.8	19.0	8.19
	무직	(32)		3.1	9.4	15.6	37.5	31.3	3.1	7.94

계층의식	하층	(99)	2.0	6.1	13.1	15.2	21.2	25.3	17.2	7.92
	중하층	(471)		5.1	7.4	14.0	21.0	27.0	25.5	8.34
	중층	(404)	0.5	12.6	9.2	14.6	21.8	26.2	15.1	7.84
	중상층	(76)	1.3	23.7	18.4	14.5	19.7	9.2	13.2	7.08
정치성향	보수	(108)		16.7	5.6	9.3	24.1	29.6	14.8	7.89
	중도보수	(257)	1.2	12.1	12.5	14.4	20.6	21.0	18.3	7.77
	중도	(327)		6.1	11.3	19.0	22.0	22.6	19.0	8.01
	중도진보	(293)	0.3	6.8	5.8	13.0	20.1	31.1	22.9	8.30
	진보	(65)	1.5	15.4	10.8	6.2	20.0	21.5	24.6	7.91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0.5	11.3	10.8	12.1	21.8	27.5	15.9	7.89
	아파트	(510)	0.6	8.0	8.2	16.7	21.6	24.7	20.2	8.05
	다세대주택/오피스텔	(169)		9.5	10.1	12.4	18.9	21.9	27.2	8.15
거주시군	천안시	(170)	0.6	11.2	14.1	16.5	17.1	22.4	18.2	7.78
	공주시	(67)		14.9	7.5	6.0	19.4	19.4	32.8	8.19
	보령시	(66)		9.1	9.1	10.6	18.2	21.2	31.8	8.29
	아산시	(115)	0.9	7.8	7.0	18.3	16.5	21.7	27.8	8.18
	서산시	(85)		2.4	11.8	16.5	21.2	25.9	22.4	8.24
	논산시	(70)		5.7	15.7	12.9	21.4	28.6	15.7	7.99
	계룡시	(43)		7.0	2.3	30.2	14.0	32.6	14.0	8.05
	당진시	(83)		7.2	4.8	24.1	20.5	28.9	14.5	8.02
	금산군	(46)		10.9	6.5	10.9	26.1	28.3	17.4	8.07
	부여군	(52)	1.9	9.6	5.8	9.6	36.5	19.2	17.3	7.96
	서천군	(45)		8.9	13.3	2.2	44.4	22.2	8.9	7.84
	청양군	(36)		11.1	8.3	13.9	30.6	22.2	13.9	7.86
	홍성군	(64)		14.1	12.5	9.4	21.9	32.8	9.4	7.75
	예산군	(57)	1.8	12.3	5.3	14.0	17.5	35.1	14.0	7.95
	태안군	(51)	2.0	11.8	7.8	9.8	15.7	25.5	27.5	8.12
거주행정 단위	읍	(322)	1.2	8.7	8.4	12.7	23.6	23.6	21.7	8.07
	면	(284)	0.4	10.9	12.0	14.8	20.8	25.0	16.2	7.85
	동	(444)		9.0	8.6	15.3	19.8	26.6	20.7	8.09

〈 표 72 〉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2)소득(연금)

		(사례수)	3	4	보통	6	7	8	9	매우 심각	평균 (점)
[전체]		(1050)	0.1	0.3	7.8	12.2	16.3	29.4	29.7	4.2	7.72
성별	남 자	(553)	0.2	0.2	8.3	10.7	15.7	31.8	29.5	3.6	7.73
	여 자	(497)		0.4	7.2	13.9	16.9	26.8	30.0	4.8	7.72
결혼여부	기 혼	(778)	0.1	0.4	8.5	12.5	15.7	29.6	29.4	3.9	7.69
	미 혼	(272)			5.9	11.4	18.0	29.0	30.5	5.1	7.82
연령대	20대	(170)			1.2	11.8	20.0	27.6	34.1	5.3	7.98
	30대	(186)		0.5	5.9	12.9	17.2	29.0	30.1	4.3	7.76
	40대	(234)	0.4		6.4	11.5	15.0	33.3	30.3	3.0	7.77
	50대	(256)		0.4	10.2	10.9	16.4	28.1	29.3	4.7	7.68
	60대 이상	(204)		0.5	13.7	14.2	13.7	28.4	25.5	3.9	7.48
학력	중졸이하	(124)		0.8	13.7	14.5	12.1	29.8	25.8	3.2	7.47
	고졸	(454)		0.2	5.5	12.3	17.0	28.0	31.1	5.9	7.84
	전문대졸	(155)			4.5	11.0	18.7	40.0	24.5	1.3	7.73
	대졸이상	(317)	0.3	0.3	10.4	11.7	15.8	26.2	31.9	3.5	7.66
가구형태	1인	(111)		0.9	9.9	18.9	9.9	22.5	27.9	9.9	7.67
	2인	(265)		0.4	9.1	12.8	15.8	32.5	25.7	3.8	7.63
	3인	(360)		0.3	8.1	11.1	20.3	29.4	28.3	2.5	7.66
	4인 이상	(314)	0.3		5.7	10.5	14.3	29.3	35.4	4.5	7.90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0	13.7	19.6	8.8	24.5	24.5	7.8	7.47
	200-400 만원 미만	(330)			7.3	12.4	13.0	31.2	30.9	5.2	7.82
	400-600 만원대	(336)		0.6	5.7	11.6	21.7	31.0	27.1	2.4	7.68
	600만원 이상	(282)	0.4		8.9	9.9	16.3	27.3	33.3	3.9	7.77
직업	관리자	(36)	2.8		11.1	22.2	19.4	19.4	19.4	5.6	7.1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28.1	3.1	9.4	28.1	25.0	6.3	7.38
	사무종사자	(174)		0.6	5.7	12.6	13.8	30.5	33.9	2.9	7.81
	서비스 종사자	(170)			6.5	10.6	18.2	28.8	31.8	4.1	7.81
	판매종사자	(157)			6.4	9.6	14.0	28.7	36.3	5.1	7.9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3	15.8	15.1	13.8	28.9	22.4	2.6	7.3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3.7	15.9	12.2	39.0	26.8	2.4	7.77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7.1	2.4	21.4	35.7	28.6	4.8	7.90
	단순노무 종사자	(29)			10.3	6.9	17.2	31.0	31.0	3.4	7.76

	주부	(81)	.	.	4.9	17.3	17.3	22.2	32.1	6.2	7.78
	학생	(63)	.	.	.	14.3	27.0	19.0	30.2	9.5	7.94
	무직	(32)	.	.	3.1	6.3	25.0	50.0	15.6	.	7.69
계층의식	하층	(99)	.	.	9.1	12.1	12.1	28.3	29.3	9.1	7.84
	중하층	(471)	.	0.2	4.9	11.5	15.3	31.6	31.6	4.9	7.88
	중층	(404)	.	0.5	7.2	11.4	19.3	29.0	29.7	3.0	7.70
	중상층	(76)	1.3	.	27.6	21.1	11.8	19.7	18.4	.	6.75
정치성향	보수	(108)	.	.	7.4	10.2	14.8	34.3	28.7	4.6	7.81
	중도보수	(257)	0.4	0.8	13.2	15.6	12.8	27.6	26.5	3.1	7.44
	중도	(327)	.	.	6.7	11.9	21.1	28.1	26.6	5.5	7.72
	중도진보	(293)	.	0.3	4.8	9.2	15.7	31.4	36.2	2.4	7.91
	진보	(65)	.	.	6.2	16.9	10.8	26.2	30.8	9.2	7.86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	0.5	10.8	11.1	15.6	29.6	28.6	3.8	7.64
	아파트	(510)	0.2	0.2	6.3	11.2	18.4	29.0	30.6	4.1	7.77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	.	5.9	17.8	11.2	30.2	29.6	5.3	7.76
거주시군	천안시	(170)	.	0.6	5.9	16.5	18.8	30.0	25.9	2.4	7.59
	공주시	(67)	.	3.0	13.4	9.0	3.0	20.9	43.3	7.5	7.85
	보령시	(66)	.	.	10.6	7.6	18.2	16.7	45.5	1.5	7.83
	아산시	(115)	0.9	.	6.1	10.4	21.7	15.7	33.9	11.3	7.91
	서산시	(85)	.	.	3.5	12.9	14.1	31.8	25.9	11.8	7.99
	논산시	(70)	.	.	4.3	25.7	14.3	28.6	25.7	1.4	7.50
	계룡시	(43)	.	.	7.0	11.6	23.3	30.2	25.6	2.3	7.63
	당진시	(83)	.	.	4.8	6.0	18.1	33.7	32.5	4.8	7.98
	금산군	(46)	.	.	6.5	8.7	8.7	39.1	34.8	2.2	7.93
	부여군	(52)	.	.	15.4	5.8	13.5	28.8	36.5	.	7.65
	서천군	(45)	.	.	11.1	8.9	6.7	35.6	37.8	.	7.80
	청양군	(36)	.	.	5.6	19.4	19.4	38.9	16.7	.	7.42
	홍성군	(64)	.	.	7.8	14.1	15.6	31.3	28.1	3.1	7.67
	예산군	(57)	.	.	12.3	8.8	17.5	47.4	12.3	1.8	7.44
	태안군	(51)	.	.	11.8	11.8	23.5	33.3	17.6	2.0	7.39
거주행정 단위	읍	(322)	0.3	0.3	8.1	11.2	15.5	32.9	28.9	2.8	7.70
	면	(284)	.	0.7	9.5	13.7	16.2	28.2	27.8	3.9	7.61
	동	(444)	.	.	6.5	11.9	16.9	27.7	31.5	5.4	7.82

〈 표 73 〉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3) 일자리(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례수)	4	보통	6	7	8	9	매우 심각	평균 (점)
[전체]		(1050)	0.6	7.0	10.0	20.4	26.4	25.0	10.6	7.82
성별	남 자	(553)	0.7	5.4	9.0	23.1	24.4	26.6	10.7	7.88
	여 자	(497)	0.4	8.9	11.1	17.3	28.6	23.3	10.5	7.77
결혼여부	기 혼	(778)	0.8	5.5	10.4	20.4	27.8	24.0	11.1	7.85
	미 혼	(272)		11.4	8.8	20.2	22.4	27.9	9.2	7.74
연령대	20대	(170)		11.2	6.5	20.6	22.9	31.8	7.1	7.79
	30대	(186)		3.8	8.6	22.0	23.7	24.7	17.2	8.09
	40대	(234)	0.4	5.6	11.1	17.1	29.9	24.4	11.5	7.90
	50대	(256)		4.7	12.5	24.2	23.0	23.8	11.7	7.84
	60대 이상	(204)	2.5	11.3	9.8	17.6	31.9	22.1	4.9	7.51
학력	중졸이하	(124)	2.4	14.5	8.9	16.9	31.5	21.8	4.0	7.42
	고졸	(454)	0.4	5.1	8.8	19.6	24.9	30.8	10.4	7.97
	전문대졸	(155)		5.8	12.9	14.2	31.6	20.6	14.8	7.93
	대졸이상	(317)	0.3	7.6	10.7	25.9	24.0	20.2	11.4	7.72
가구형태	1인	(111)		10.8	9.9	20.7	22.5	25.2	10.8	7.74
	2인	(265)	1.9	7.2	10.6	17.0	32.1	24.5	6.8	7.71
	3인	(360)		6.9	10.8	24.4	25.6	18.3	13.9	7.79
	4인 이상	(314)	0.3	5.7	8.6	18.5	23.9	33.1	9.9	7.99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2.9	11.8	10.8	18.6	37.3	15.7	2.9	7.34
	200-400만원 미만	(330)	0.3	6.1	7.9	17.9	25.8	30.3	11.8	8.01
	400-600만원대	(336)	0.3	5.4	13.4	18.2	26.5	25.3	11.0	7.85
	600만원 이상	(282)	0.4	8.5	8.2	26.6	23.0	22.0	11.3	7.75
직업	관리자	(36)	2.8		16.7	33.3	19.4	16.7	11.1	7.6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15.6	6.3	43.8	21.9	9.4	3.1	7.13
	사무종사자	(174)		9.2	9.8	21.8	24.1	19.0	16.1	7.82
	서비스 종사자	(170)	0.6	4.1	11.2	17.1	27.6	26.5	12.9	7.98
	판매종사자	(157)	0.6	4.5	11.5	16.6	24.8	28.7	13.4	8.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2.0	13.8	3.9	23.0	31.6	22.4	3.3	7.4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9	11.0	19.5	25.6	29.3	9.8	7.93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8	11.9	19.0	21.4	28.6	14.3	8.00
	단순노무종사자	(29)			17.2	6.9	34.5	20.7	20.7	8.21
	주부	(81)		6.2	9.9	16.0	33.3	32.1	2.5	7.83
	학생	(63)		7.9	7.9	30.2	19.0	28.6	6.3	7.71
	무직	(32)		6.3	15.6	6.3	25.0	34.4	12.5	8.03
	하층	(99)		7.1	7.1	20.2	33.3	25.3	7.1	7.84
계층의식	중하층	(471)	0.8	4.7	8.5	19.1	24.2	29.9	12.7	8.02
	중층	(404)	0.2	9.4	11.1	19.3	28.0	22.3	9.7	7.71
	중상층	(76)	1.3	9.2	17.1	34.2	22.4	9.2	6.6	7.21

정치성향	보수	(108)	2.8	5.6	5.6	18.5	35.2	26.9	5.6	7.81
	중도보수	(257)	1.2	10.5	13.6	25.7	21.8	17.9	9.3	7.47
	중도	(327)	-	5.5	11.9	21.4	27.2	22.6	11.3	7.83
	중도진보	(293)	-	4.4	5.8	15.7	27.0	33.4	13.7	8.20
	진보	(65)	-	15.4	12.3	18.5	23.1	24.6	6.2	7.48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1.3	8.9	9.2	19.7	30.5	23.2	7.3	7.68
	아파트	(510)	0.2	6.1	10.2	20.0	24.1	26.5	12.9	7.93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	5.9	11.2	23.1	24.3	24.9	10.7	7.83
거주시군	천안시	(170)	-	5.3	14.7	24.7	18.8	25.9	10.6	7.77
	공주시	(67)	-	14.9	9.0	16.4	10.4	31.3	17.9	7.88
	보령시	(66)	1.5	9.1	9.1	19.7	18.2	31.8	10.6	7.82
	아산시	(115)	0.9	1.7	13.9	26.1	13.0	21.7	22.6	8.04
	서산시	(85)	1.2	4.7	8.2	16.5	22.4	37.6	9.4	8.05
	논산시	(70)	-	5.7	12.9	12.9	37.1	20.0	11.4	7.87
	계룡시	(43)	2.3	4.7	2.3	18.6	32.6	27.9	11.6	8.05
	당진시	(83)	-	6.0	7.2	20.5	31.3	25.3	9.6	7.92
	금산군	(46)	-	8.7	8.7	15.2	28.3	34.8	4.3	7.85
	부여군	(52)	-	9.6	15.4	19.2	32.7	17.3	5.8	7.50
	서천군	(45)	-	6.7	4.4	17.8	37.8	24.4	8.9	7.96
	청양군	(36)	2.8	5.6	11.1	19.4	38.9	19.4	2.8	7.56
	홍성군	(64)	1.6	10.9	3.1	17.2	40.6	18.8	7.8	7.72
	예산군	(57)	-	5.3	10.5	26.3	36.8	15.8	5.3	7.63
	태안군	(51)	-	15.7	5.9	23.5	35.3	17.6	2.0	7.39
거주행정 단위	읍	(322)	1.2	9.6	13.0	17.1	32.9	18.3	7.8	7.57
	면	(284)	0.7	7.4	7.0	22.5	31.7	22.5	8.1	7.77
	동	(444)	-	5.0	9.7	21.4	18.2	31.5	14.2	8.04

〈 표 74 〉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4)일자리(대기업과 중소기업)

		(사례수)	4	보통	6	7	8	9	매우 심각	평균 (점)
[전체]		(1050)	0.3	5.9	10.5	17.3	26.2	31.1	8.7	7.91
성별	남 자	(553)	0.2	4.5	11.2	17.9	24.6	33.1	8.5	7.95
	여 자	(497)	0.4	7.4	9.7	16.7	28.0	29.0	8.9	7.87
결혼여부	기 혼	(778)	0.4	6.3	11.4	17.7	26.7	29.6	7.8	7.84
	미 혼	(272)		4.8	7.7	16.2	24.6	35.7	11.0	8.12
연령대	20대	(170)		4.1	4.7	17.6	24.7	41.8	7.1	8.16
	30대	(186)		1.1	7.5	15.6	23.1	34.4	18.3	8.37
	40대	(234)	0.9	5.1	11.1	19.7	28.6	26.1	8.5	7.82
	50대	(256)	0.4	4.7	13.7	16.8	28.5	28.9	7.0	7.83
	60대 이상	(204)		14.2	13.2	16.7	24.5	27.9	3.4	7.49
학력	종졸이하	(124)		16.9	14.5	20.2	21.8	24.2	2.4	7.29
	고졸	(454)		4.8	8.4	15.6	26.9	37.0	7.3	8.05
	전문대졸	(155)	0.6	4.5	8.4	20.0	23.9	26.5	16.1	8.06
	대졸이상	(317)	0.6	3.8	12.9	17.4	28.1	27.8	9.5	7.90
가구형태	1인	(111)		12.6	8.1	16.2	18.0	27.9	17.1	7.92
	2인	(265)		7.9	12.1	17.7	28.3	29.8	4.2	7.72
	3인	(360)	0.3	5.0	9.4	20.3	28.3	28.3	8.3	7.90
	4인 이상	(314)	0.6	2.9	11.1	14.0	24.8	36.6	9.9	8.09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6.7	15.7	18.6	20.6	24.5	3.9	7.32
	200-400만원 미만	(330)		6.7	6.7	15.2	25.5	33.9	12.1	8.10
	400-600만원대	(336)		5.4	11.9	16.4	26.2	33.0	7.1	7.91
	600만원 이상	(282)	1.1	1.8	11.3	20.6	29.1	28.0	8.2	7.91
직업	관리자	(36)	2.8	2.8	16.7	22.2	19.4	27.8	8.3	7.6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	18.8	28.1	28.1	15.6	6.3	7.53
	사무종사자	(174)	0.6	2.9	13.2	14.4	27.0	27.0	14.9	8.05
	서비스 종사자	(170)		4.1	10.6	18.8	25.9	34.1	6.5	7.95
	판매종사자	(157)	0.6	6.4	7.0	14.0	32.5	31.8	7.6	7.9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4.5	14.5	13.8	29.6	23.0	4.6	7.4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3.7	6.1	20.7	24.4	28.0	17.1	8.1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8	11.9	16.7	21.4	38.1	7.1	7.98
	단순노무종사자	(29)		6.9	3.4	17.2	13.8	48.3	10.3	8.24
	주부	(81)		4.9	7.4	19.8	23.5	35.8	8.6	8.04
	학생	(63)		3.2	6.3	27.0	19.0	39.7	4.8	8.00
	무직	(32)		9.4	9.4	9.4	25.0	46.9		7.91

계층의식	하층	(99)	.	10.1	12.1	21.2	26.3	26.3	4.0	7.59
	중하층	(471)	0.2	4.9	5.9	18.5	23.6	35.9	11.0	8.12
	중층	(404)	0.2	6.2	12.9	14.6	28.5	30.2	7.4	7.85
	중상층	(76)	1.3	5.3	23.7	19.7	30.3	13.2	6.6	7.38
정치성향	보수	(108)	.	12.0	7.4	13.0	17.6	45.4	4.6	7.91
	중도보수	(257)	0.8	10.1	15.6	20.6	24.5	22.2	6.2	7.49
	중도	(327)	.	3.7	11.3	17.1	27.2	31.8	8.9	7.99
	중도진보	(293)	0.3	1.7	5.8	16.7	31.7	32.1	11.6	8.20
	진보	(65)	.	9.2	12.3	15.4	16.9	35.4	10.8	7.89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	9.4	11.1	16.2	26.7	30.5	6.2	7.76
	아파트	(510)	0.6	2.7	10.6	17.5	27.3	32.4	9.0	8.01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	7.7	8.9	19.5	21.9	29.0	13.0	7.95
거주시군	천안시	(170)	.	2.9	14.1	19.4	26.5	29.4	7.6	7.88
	공주시	(67)	1.5	9.0	11.9	10.4	25.4	34.3	7.5	7.82
	보령시	(66)	.	7.6	12.1	10.6	18.2	33.3	18.2	8.12
	아산시	(115)	0.9	1.7	11.3	28.7	13.9	30.4	13.0	7.97
	서산시	(85)	1.2	3.5	17.6	10.6	21.2	35.3	10.6	7.95
	논산시	(70)	.	10.0	7.1	14.3	27.1	34.3	7.1	7.90
	계룡시	(43)	.	7.0	.	18.6	32.6	41.9	.	8.02
	당진시	(83)	.	2.4	8.4	13.3	26.5	38.6	10.8	8.23
	금산군	(46)	.	.	13.0	15.2	34.8	28.3	8.7	8.04
	부여군	(52)	.	11.5	7.7	13.5	32.7	23.1	11.5	7.83
	서천군	(45)	.	4.4	13.3	13.3	26.7	40.0	2.2	7.91
	청양군	(36)	.	11.1	5.6	22.2	33.3	25.0	2.8	7.64
	홍성군	(64)	.	6.3	10.9	17.2	40.6	20.3	4.7	7.72
	예산군	(57)	.	10.5	5.3	26.3	29.8	21.1	7.0	7.67
	태안군	(51)	.	13.7	3.9	19.6	23.5	31.4	7.8	7.78
거주행정 단위	읍	(322)	0.3	7.1	10.2	17.4	29.8	26.1	9.0	7.84
	면	(284)	.	8.1	10.9	19.0	27.5	28.2	6.3	7.76
	동	(444)	0.5	3.6	10.4	16.2	22.7	36.7	9.9	8.07

〈 표 75 〉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5)부동산(소유)

		(사례수)	3	4	보통	6	7	8	9	매우 심각	평균 (점)
[전체]		(1050)	0.1	0.3	6.9	11.5	13.2	22.6	27.4	18.0	8.05
성별	남 자	(553)	0.2	0.4	7.2	12.7	13.0	21.2	29.5	15.9	7.99
	여 자	(497)		0.2	6.4	10.3	13.5	24.1	25.2	20.3	8.12
결혼여부	기 혼	(778)	0.1	0.4	7.8	11.8	11.8	22.6	27.6	17.7	8.02
	미 혼	(272)			4.0	10.7	17.3	22.4	26.8	18.8	8.14
연령대	20대	(170)			3.5	9.4	15.9	24.1	27.1	20.0	8.22
	30대	(186)			1.1	8.6	15.1	29.0	26.3	19.9	8.31
	40대	(234)	0.4	0.9	5.6	10.7	13.2	21.8	29.1	18.4	8.09
	50대	(256)			12.1	10.9	12.1	23.0	29.7	12.1	7.84
	60대 이상	(204)		0.5	9.8	17.6	10.8	15.7	24.0	21.6	7.90
학력	중졸이하	(124)		0.8	10.5	20.2	9.7	15.3	23.4	20.2	7.79
	고졸	(454)			4.8	10.1	15.0	24.2	27.8	18.1	8.14
	전문대졸	(155)		0.6	7.1	11.0	13.5	18.7	31.0	18.1	8.08
	대졸이상	(317)	0.3	0.3	8.2	10.4	12.0	24.9	26.8	17.0	8.01
가구형태	1인	(111)			6.3	14.4	11.7	15.3	33.3	18.9	8.12
	2인	(265)		0.8	7.2	14.0	11.3	20.4	26.4	20.0	8.03
	3인	(360)			6.4	12.5	17.5	27.5	21.4	14.7	7.89
	4인 이상	(314)	0.3	0.3	7.3	7.3	10.5	21.3	33.1	19.7	8.23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7.8	24.5	9.8	18.6	25.5	13.7	7.71
	200-400만 원 미만	(330)		0.6	5.2	10.3	12.7	20.6	28.8	21.8	8.21
	400-600만원 대	(336)			5.4	9.8	17.0	27.7	24.1	16.1	8.04
	600만원 이상	(282)	0.4	0.4	10.3	10.3	10.6	20.2	30.5	17.4	8.00
직업	관리자	(36)	2.8		11.1	13.9	13.9	33.3	16.7	8.3	7.4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	28.1	12.5	3.1	15.6	25.0	12.5	7.25
	사무종사자	(174)			8.6	8.0	11.5	24.1	29.9	17.8	8.12

	서비스 종사자	(170)	.	.	5.3	11.8	12.4	25.3	31.2	14.1	8.08
	판매종사자	(157)	.	0.6	3.2	8.9	14.0	25.5	29.3	18.5	8.2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	0.7	10.5	17.1	13.8	15.1	22.4	20.4	7.8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	.	2.4	13.4	15.9	25.6	29.3	13.4	8.0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	.	7.1	9.5	11.9	21.4	26.2	23.8	8.21
	단순노무 종사자	(29)	.	.	6.9	6.9	.	20.7	37.9	27.6	8.59
	주부	(81)	.	.	2.5	11.1	14.8	22.2	24.7	24.7	8.30
	학생	(63)	.	.	4.8	11.1	15.9	17.5	25.4	25.4	8.24
	무직	(32)	.	.	6.3	15.6	28.1	21.9	21.9	6.3	7.56
계층의식	하층	(99)	.	.	6.1	17.2	12.1	26.3	21.2	17.2	7.91
	중하층	(471)	.	0.2	4.2	8.1	13.6	21.2	30.1	22.5	8.32
	중층	(404)	.	0.2	8.9	11.9	14.4	22.0	28.2	14.4	7.91
	중상층	(76)	1.3	1.3	13.2	23.7	6.6	28.9	14.5	10.5	7.30
정치성향	보수	(108)	.	0.9	9.3	7.4	9.3	14.8	33.3	25.0	8.28
	중도보수	(257)	0.4	0.8	8.9	20.6	16.0	19.5	21.0	12.8	7.58
	중도	(327)	.	.	7.3	11.9	14.7	23.9	24.2	18.0	8.00
	중도진보	(293)	.	.	3.4	4.1	11.9	28.0	34.1	18.4	8.41
	진보	(65)	.	.	7.7	13.8	7.7	16.9	29.2	24.6	8.20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	0.5	8.9	12.4	14.3	18.9	28.6	16.4	7.94
	아파트	(510)	0.2	0.2	5.9	9.8	12.7	24.9	26.1	20.2	8.15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	.	5.3	14.8	12.4	23.7	29.0	14.8	8.01
거주시군	천안시	(170)	.	.	10.0	10.6	8.2	22.4	28.8	20.0	8.09
	공주시	(67)	.	1.5	6.0	10.4	9.0	28.4	16.4	28.4	8.19
	보령시	(66)	.	.	9.1	15.2	13.6	15.2	19.7	27.3	8.03
	아산시	(115)	0.9	.	6.1	12.2	8.7	22.6	27.8	21.7	8.16
	서산시	(85)	.	1.2	4.7	14.1	16.5	14.1	25.9	23.5	8.09
	논산시	(70)	.	.	2.9	12.9	15.7	18.6	28.6	21.4	8.21
	계룡시	(43)	.	.	4.7	2.3	11.6	20.9	44.2	16.3	8.47
	당진시	(83)	.	1.2	2.4	7.2	10.8	32.5	32.5	13.3	8.22
	금산군	(46)	.	.	10.9	13.0	19.6	15.2	15.2	26.1	7.89
	부여군	(52)	.	.	5.8	9.6	13.5	32.7	28.8	9.6	7.98
	서천군	(45)	.	.	2.2	17.8	17.8	24.4	28.9	8.9	7.87

	청양군	(36)			11.1	11.1	22.2	22.2	27.8	5.6	7.61
	홍성군	(64)			15.6	7.8	21.9	15.6	26.6	12.5	7.67
	예산군	(57)			3.5	15.8	10.5	26.3	33.3	10.5	8.02
	태안군	(51)			5.9	13.7	17.6	29.4	27.5	5.9	7.76
거주행정 단위	읍	(322)	0.3		7.8	11.5	14.0	23.6	26.4	16.5	7.98
	면	(284)		0.4	6.3	11.6	16.5	21.8	27.1	16.2	7.99
	동	(444)		0.5	6.5	11.5	10.6	22.3	28.4	20.3	8.14

〈 표 76 〉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6)자산(현금, 주식 등)

		(사례수)	3	4	보통	6	7	8	9	매우 심각	평균 (점)
[전체]		(1050)	0.1	0.4	7.1	13.0	14.9	17.2	26.7	20.7	8.04
성별	남 자	(553)	0.2	0.5	7.1	13.2	15.4	17.9	25.3	20.4	8.00
	여 자	(497)		0.2	7.2	12.7	14.3	16.5	28.2	20.9	8.08
결혼여부	기 혼	(778)	0.1	0.5	8.7	13.2	14.4	15.8	26.6	20.6	7.98
	미 혼	(272)			2.6	12.1	16.2	21.3	26.8	21.0	8.21
연령대	20대	(170)			1.2	10.0	16.5	21.8	31.2	19.4	8.30
	30대	(186)			2.7	12.4	16.7	18.3	26.3	23.7	8.24
	40대	(234)	0.4		6.0	12.4	17.9	15.8	26.1	21.4	8.06
	50대	(256)		0.8	10.5	13.7	14.8	17.2	25.8	17.2	7.83
	60대 이상	(204)		1.0	13.2	15.7	8.3	14.2	25.0	22.5	7.87
학력	중졸이하	(124)		0.8	15.3	14.5	8.1	13.7	29.0	18.5	7.80
	고졸	(454)		0.4	5.3	11.9	13.7	20.0	27.5	21.1	8.15
	전문대졸	(155)			3.9	16.1	15.5	13.5	27.7	23.2	8.15
	대졸이상	(317)	0.3	0.3	8.2	12.3	18.9	16.4	24.0	19.6	7.92
가구형태	1인	(111)		0.9	4.5	15.3	11.7	12.6	28.8	26.1	8.22
	2인	(265)			7.9	14.3	11.3	17.0	28.7	20.8	8.06
	3인	(360)		0.8	6.1	16.1	17.2	19.4	25.6	14.7	7.84
	4인 이상	(314)	0.3		8.6	7.3	16.2	16.6	25.5	25.5	8.18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0	7.8	20.6	9.8	16.7	26.5	17.6	7.83
	200-400 만원 미만	(330)			7.6	9.7	14.2	14.5	29.4	24.5	8.22
	400-600 만원대	(336)		0.6	3.9	16.1	16.1	23.5	22.0	17.9	7.96
	600만원 이상	(282)	0.4	0.4	10.3	10.3	16.0	13.1	29.1	20.6	8.00
직업	관리자	(36)	2.8		5.6	22.2	22.2	16.7	22.2	8.3	7.4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	37.5	3.1	12.5	6.3	28.1	9.4	7.03
	사무종사자	(174)			5.7	13.2	17.2	15.5	25.3	23.0	8.10

	서비스 종사자	(170)			4.7	15.9	12.9	18.8	27.1	20.6	8.09
	판매종사자	(157)			5.1	8.3	14.0	21.0	28.0	23.6	8.2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0.7	13.8	16.4	10.5	13.2	27.6	17.8	7.7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15.9	22.0	19.5	19.5	23.2	8.12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4.8	11.9	11.9	23.8	23.8	21.4	8.07
	단순노무 종사자	(29)		3.4	3.4		6.9	17.2	34.5	34.5	8.72
	주부	(81)			12.3	7.4	17.3	8.6	32.1	22.2	8.07
	학생	(63)				17.5	9.5	23.8	27.0	22.2	8.27
	무직	(32)			3.1	12.5	28.1	25.0	25.0	6.3	7.75
계층의식	하층	(99)		1.0	3.0	13.1	17.2	20.2	31.3	14.1	8.03
	중하층	(471)			6.6	9.3	13.0	16.8	28.9	25.5	8.28
	중층	(404)		0.2	5.9	15.3	16.1	17.1	25.7	19.6	7.99
	중상층	(76)	1.3	2.6	22.4	22.4	17.1	17.1	11.8	5.3	6.76
정치성향	보수	(108)		1.9	6.5	7.4	6.5	13.9	34.3	29.6	8.45
	중도보수	(257)	0.4	0.8	12.8	18.7	16.3	14.8	21.0	15.2	7.54
	중도	(327)			6.1	16.2	15.0	17.4	26.6	18.7	7.98
	중도진보	(293)			4.1	5.5	18.1	20.5	29.7	22.2	8.33
	진보	(65)			4.6	16.9	7.7	16.9	23.1	30.8	8.29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1.1	7.3	14.3	13.5	16.4	27.8	19.7	7.99
	아파트	(510)	0.2		8.0	11.0	15.9	18.0	25.5	21.4	8.05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4.1	16.0	14.8	16.6	27.8	20.7	8.10
거주시군	천안시	(170)			11.8	13.5	10.0	17.6	21.2	25.9	8.01
	공주시	(67)		3.0	7.5	11.9	9.0	17.9	25.4	25.4	8.09
	보령시	(66)			12.1	19.7	12.1	16.7	18.2	21.2	7.73
	아산시	(115)	0.9		8.7	14.8	13.9	13.0	20.0	28.7	8.03
	서산시	(85)			1.2	21.2	20.0	10.6	20.0	27.1	8.08
	논산시	(70)			4.3	15.7	15.7	10.0	41.4	12.9	8.07
	계룡시	(43)		2.3	7.0		9.3	27.9	44.2	9.3	8.23
	당진시	(83)			3.6	6.0	20.5	22.9	27.7	19.3	8.23
	금산군	(46)			8.7	10.9	19.6	8.7	23.9	28.3	8.13
	부여군	(52)			3.8	11.5	17.3	23.1	26.9	17.3	8.10
	서천군	(45)			4.4	13.3	17.8	28.9	13.3	22.2	8.00
	청양군	(36)			8.3	11.1	16.7	22.2	30.6	11.1	7.89
	홍성군	(64)		1.6	6.3	7.8	17.2	15.6	34.4	17.2	8.11
	예산군	(57)			5.3	12.3	19.3	15.8	42.1	5.3	7.93

	태안군	(51)	.	.	7.8	15.7	11.8	19.6	31.4	13.7	7.92
거주행정 단위	읍	(322)	0.3	.	5.9	10.6	17.4	15.5	30.1	20.2	8.13
	면	(284)	.	0.7	5.6	13.0	15.1	23.9	23.2	18.3	7.99
	동	(444)	.	0.5	9.0	14.6	12.8	14.2	26.4	22.5	8.00

〈 표 77 〉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7)교육

		(사례수)	4	보통	6	7	8	9	매우 심각	평균 (점)
[전체]		(1050)	1.2	12.7	24.5	30.5	20.7	6.7	3.8	6.92
성별	남 자	(553)	1.1	12.3	22.4	31.3	21.5	7.6	3.8	6.98
	여 자	(497)	1.4	13.1	26.8	29.6	19.7	5.6	3.8	6.85
결혼여부	기 혼	(778)	1.4	12.9	23.8	31.5	20.2	6.8	3.5	6.90
	미 혼	(272)	0.7	12.1	26.5	27.6	22.1	6.3	4.8	6.96
연령대	20대	(170)	0.6	10.0	29.4	28.8	19.4	5.9	5.9	6.98
	30대	(186)	0.5	12.9	21.5	26.9	23.7	10.2	4.3	7.08
	40대	(234)	0.9	13.2	23.5	32.1	21.4	5.1	3.8	6.91
	50대	(256)	0.8	11.3	22.7	34.0	21.9	5.9	3.5	6.96
	60대 이상	(204)	3.4	15.7	26.5	28.9	16.7	6.9	2.0	6.68
학력	중졸이하	(124)	4.0	14.5	28.2	29.0	16.9	5.6	1.6	6.64
	고졸	(454)	1.1	12.6	27.5	28.9	18.5	7.7	3.7	6.89
	전문대졸	(155)	0.6	9.7	21.9	34.2	27.1	4.5	1.9	6.99
	대졸이상	(317)	0.6	13.6	19.9	31.5	22.1	6.6	5.7	7.03
가구형태	1인	(111)	1.8	19.8	23.4	26.1	21.6	6.3	0.9	6.68
	2인	(265)	2.6	14.0	24.2	27.9	20.4	7.2	3.8	6.86
	3인	(360)	0.3	11.7	22.8	30.0	21.9	7.5	5.8	7.08
	4인 이상	(314)	1.0	10.2	27.1	34.7	19.1	5.4	2.5	6.87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2.9	14.7	33.3	23.5	18.6	5.9	1.0	6.62
	200-400만원 미만	(330)	1.8	14.8	23.3	31.5	17.3	7.9	3.3	6.85
	400-600만원대	(336)	0.6	13.1	25.6	26.5	22.9	6.8	4.5	6.96
	600만원 이상	(282)	0.7	8.9	21.3	36.5	22.7	5.3	4.6	7.06
직업	관리자	(36)	2.8	11.1	30.6	36.1	11.1	5.6	2.8	6.6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9.4	9.4	43.8	18.8	12.5	6.3	7.34
	사무종사자	(174)	0.6	16.1	20.1	26.4	25.9	5.2	5.7	6.99
	서비스 종사자	(170)	0.6	10.6	22.4	35.3	21.2	6.5	3.5	6.99
	판매종사자	(157)		10.8	28.0	27.4	23.6	5.7	4.5	6.9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4.6	14.5	26.3	30.3	15.8	7.2	1.3	6.6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9.8	18.3	28.0	29.3	9.8	4.9	7.2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16.7	28.6	23.8	19.0	2.4	9.5	6.90
	단순노무 종사자	(29)		24.1	31.0	27.6	10.3	6.9		6.45

	주부	(81)	2.5	11.1	29.6	33.3	16.0	6.2	1.2	6.73
	학생	(63)	1.6	9.5	31.7	31.7	17.5	3.2	4.8	6.83
	무직	(32)		12.5	18.8	31.3	18.8	18.8		7.13
계층의식	하층	(99)		11.1	26.3	34.3	17.2	8.1	3.0	6.94
	중하층	(471)	1.5	11.9	22.5	31.0	20.8	7.2	5.1	7.00
	중층	(404)	1.2	13.9	27.7	28.7	21.0	5.0	2.5	6.79
	중상층	(76)	1.3	13.2	17.1	31.6	22.4	10.5	3.9	7.08
정치성향	보수	(108)	0.9	21.3	24.1	30.6	17.6	3.7	1.9	6.61
	중도보수	(257)	3.1	15.6	26.8	23.3	18.3	8.6	4.3	6.81
	중도	(327)	1.2	12.8	23.5	35.2	19.0	4.6	3.7	6.86
	중도진보	(293)		5.5	23.9	32.8	24.2	8.9	4.8	7.22
	진보	(65)		18.5	23.1	24.6	27.7	4.6	1.5	6.82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2.2	11.6	24.8	31.5	20.2	8.1	1.6	6.87
	아파트	(510)	0.8	12.4	23.3	29.8	22.0	5.7	6.1	7.01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0.6	16.0	27.2	30.2	17.8	6.5	1.8	6.75
거주시군	천안시	(170)	1.2	8.2	25.3	31.2	24.7	4.7	4.7	7.03
	공주시	(67)	4.5	13.4	23.9	31.3	16.4	4.5	6.0	6.79
	보령시	(66)		16.7	34.8	22.7	16.7	7.6	1.5	6.68
	아산시	(115)	1.7	9.6	21.7	32.2	23.5	8.7	2.6	7.03
	서산시	(85)		7.1	25.9	32.9	20.0	14.1		7.08
	논산시	(70)		14.3	22.9	21.4	31.4	5.7	4.3	7.04
	계룡시	(43)	2.3	16.3	16.3	30.2	14.0	14.0	7.0	7.07
	당진시	(83)	1.2	10.8	20.5	34.9	14.5	13.3	4.8	7.10
	금산군	(46)	2.2	2.2	41.3	21.7	19.6	8.7	4.3	6.98
	부여군	(52)		13.5	23.1	26.9	28.8	3.8	3.8	6.98
	서천군	(45)		11.1	24.4	31.1	24.4	2.2	6.7	7.02
	청양군	(36)		13.9	38.9	36.1	8.3		2.8	6.50
	홍성군	(64)		21.9	26.6	31.3	17.2		3.1	6.56
	예산군	(57)	5.3	17.5	17.5	38.6	17.5	3.5		6.56
	태안군	(51)		27.5	9.8	31.4	19.6	3.9	7.8	6.86
거주행정 단위	읍	(322)	2.2	14.0	21.7	32.6	20.5	4.3	4.7	6.87
	면	(284)	1.4	14.1	25.4	29.2	21.5	5.6	2.8	6.83
	동	(444)	0.5	10.8	25.9	29.7	20.3	9.0	3.8	7.01

〈 표 78 〉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8)문화·여가

		(사례수)	4	보통	6	7	8	9	매우 심각	평균 (점)
[전체]		(1050)	0.5	6.0	24.1	27.8	26.2	11.2	4.2	7.24
성별	남 자	(553)	0.2	5.8	25.0	27.5	26.4	11.2	4.0	7.24
	여 자	(497)	0.8	6.2	23.1	28.2	26.0	11.3	4.4	7.24
결혼여부	기 혼	(778)	0.5	7.1	24.9	27.6	24.9	10.7	4.2	7.18
	미 혼	(272)	0.4	2.9	21.7	28.3	29.8	12.9	4.0	7.39
연령대	20대	(170)	0.6	1.8	20.6	29.4	30.6	11.2	5.9	7.45
	30대	(186)		1.6	23.1	23.7	31.7	16.7	3.2	7.48
	40대	(234)		2.1	17.9	27.4	32.9	14.1	5.6	7.56
	50대	(256)	0.4	12.1	33.2	28.1	13.7	8.6	3.9	6.84
	60대 이상	(204)	1.5	10.3	23.5	30.4	25.5	6.4	2.5	6.97
학력	종졸이하	(124)	1.6	11.3	25.8	28.2	26.6	6.5		6.86
	고졸	(454)	0.4	5.5	20.5	28.9	25.6	14.5	4.6	7.36
	전문대졸	(155)		4.5	26.5	22.6	29.0	12.9	4.5	7.33
	대졸이상	(317)	0.3	5.4	27.4	28.7	25.6	7.6	5.0	7.17
가구형태	1인	(111)		8.1	27.0	26.1	26.1	11.7	0.9	7.09
	2인	(265)	0.8	6.8	23.0	27.5	29.4	9.8	2.6	7.18
	3인	(360)	0.8	5.0	24.4	30.0	22.8	11.4	5.6	7.25
	4인 이상	(314)		5.7	23.6	26.1	27.4	12.1	5.1	7.32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2.0	14.7	25.5	28.4	26.5	2.0	1.0	6.73
	200-400만원 미만	(330)		4.2	22.7	26.7	28.5	13.3	4.5	7.38
	400-600만원대	(336)	0.3	1.8	19.3	29.5	30.1	15.5	3.6	7.48
	600만원 이상	(282)	0.7	9.9	30.9	27.0	18.8	7.1	5.7	6.97
직업	관리자	(36)		8.3	55.6	30.6	2.8		2.8	6.3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	12.5	34.4	21.9	15.6	9.4	3.1	6.75
	사무종사자	(174)		5.7	24.7	30.5	27.6	7.5	4.0	7.18
	서비스 종사자	(170)		7.6	22.4	24.7	22.9	15.3	7.1	7.37
	판매종사자	(157)		3.8	22.3	24.8	32.5	12.7	3.8	7.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3	9.9	21.7	33.6	25.0	5.3	3.3	7.0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1.2	19.5	30.5	28.0	18.3	2.4	7.5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4.8	33.3	23.8	19.0	14.3	2.4	7.05
	단순노무 종사자	(29)		6.9	20.7	24.1	41.4		6.9	7.28

	주부	(81)	.	4.9	23.5	25.9	24.7	17.3	3.7	7.37
	학생	(63)	1.6	3.2	22.2	34.9	23.8	9.5	4.8	7.24
	무직	(32)	.	3.1	12.5	12.5	46.9	21.9	3.1	7.81
계층의식	하층	(99)	.	9.1	24.2	31.3	30.3	4.0	1.0	6.99
	중하층	(471)	0.4	3.6	18.7	30.4	29.3	13.4	4.2	7.42
	중층	(404)	0.2	7.4	27.5	23.8	24.0	12.1	5.0	7.20
	중상층	(76)	2.6	9.2	39.5	28.9	13.2	2.6	3.9	6.64
정치성향	보수	(108)	1.9	8.3	27.8	27.8	28.7	3.7	1.9	6.92
	중도보수	(257)	0.4	8.2	25.7	26.8	26.1	10.9	1.9	7.11
	중도	(327)	0.6	6.4	24.2	29.1	23.2	10.4	6.1	7.24
	중도진보	(293)	.	2.7	19.1	29.7	28.7	14.0	5.8	7.49
	진보	(65)	.	6.2	33.8	16.9	26.2	16.9	.	7.14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1.1	7.8	21.8	31.3	24.5	9.4	4.0	7.15
	아파트	(510)	0.2	4.9	25.9	25.9	26.5	11.6	5.1	7.29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	5.3	23.7	26.0	29.0	14.2	1.8	7.28
거주시군	천안시	(170)	.	3.5	31.2	25.3	32.9	5.3	1.8	7.11
	공주시	(67)	1.5	10.4	16.4	25.4	26.9	16.4	3.0	7.27
	보령시	(66)	.	4.5	25.8	30.3	27.3	9.1	3.0	7.20
	아산시	(115)	.	5.2	20.0	26.1	29.6	13.9	5.2	7.43
	서산시	(85)	1.2	3.5	11.8	21.2	43.5	17.6	1.2	7.60
	논산시	(70)	.	1.4	27.1	34.3	21.4	12.9	2.9	7.26
	계룡시	(43)	2.3	4.7	14.0	34.9	20.9	16.3	7.0	7.44
	당진시	(83)	1.2	3.6	24.1	32.5	16.9	16.9	4.8	7.30
	금산군	(46)	.	6.5	26.1	32.6	17.4	6.5	10.9	7.24
	부여군	(52)	.	7.7	21.2	26.9	28.8	7.7	7.7	7.31
	서천군	(45)	.	6.7	35.6	20.0	31.1	4.4	2.2	6.98
	청양군	(36)	.	2.8	22.2	25.0	30.6	13.9	5.6	7.47
	홍성군	(64)	.	6.3	32.8	32.8	10.9	12.5	4.7	7.05
	예산군	(57)	1.8	17.5	21.1	29.8	19.3	5.3	5.3	6.84
	태안군	(51)	.	13.7	27.5	25.5	15.7	11.8	5.9	7.02
거주행정 단위	읍	(322)	0.3	5.6	28.6	30.7	19.9	9.3	5.6	7.15
	면	(284)	0.7	7.7	22.9	25.0	29.9	10.2	3.5	7.20
	동	(444)	0.5	5.2	21.6	27.5	28.4	13.3	3.6	7.32

〈 표 79 〉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9)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

		(사례수)	4	보통	6	7	8	9	매우 심각	평균 (점)
	[전체]	(1050)	0.1	6.4	16.4	24.8	25.0	22.3	5.1	7.56
성별	남 자	(553)		7.1	14.8	25.9	24.2	23.3	4.7	7.56
	여 자	(497)	0.2	5.6	18.1	23.5	25.8	21.1	5.6	7.55
결혼여부	기 혼	(778)	0.1	6.8	16.6	23.3	26.1	21.7	5.4	7.55
	미 혼	(272)		5.1	15.8	29.0	21.7	23.9	4.4	7.57
연령대	20대	(170)		2.9	16.5	26.5	25.9	22.9	5.3	7.65
	30대	(186)		3.8	14.0	26.9	22.6	28.5	4.3	7.71
	40대	(234)		6.0	16.7	27.4	18.8	25.6	5.6	7.58
	50대	(256)		9.0	16.8	21.5	34.0	16.8	2.0	7.39
	60대 이상	(204)	0.5	8.8	17.6	22.5	22.1	19.1	9.3	7.51
학력	중졸이하	(124)	0.8	7.3	21.0	21.0	22.6	18.5	8.9	7.48
	고졸	(454)		5.7	15.4	22.2	25.8	25.3	5.5	7.66
	전문대졸	(155)		5.8	12.9	27.1	25.8	24.5	3.9	7.62
	대졸이상	(317)		7.3	17.7	28.7	24.3	18.3	3.8	7.40
가구형태	1인	(111)	0.9	9.9	14.4	22.5	25.2	23.4	3.6	7.46
	2인	(265)		4.5	20.8	19.2	24.9	22.3	8.3	7.65
	3인	(360)		6.1	16.1	32.2	24.7	17.5	3.3	7.41
	4인 이상	(314)		7.0	13.7	21.7	25.2	27.4	5.1	7.68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0	8.8	21.6	23.5	25.5	12.7	6.9	7.29
	200~400만원 미만	(330)		6.1	15.2	20.3	23.0	29.1	6.4	7.73
	400~600만원대	(336)		5.1	17.3	27.7	23.8	22.0	4.2	7.53
	600만원 이상	(282)		7.4	14.9	27.0	28.4	18.1	4.3	7.48
직업	관리자	(36)		8.3	33.3	25.0	30.6	2.8		6.8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15.6	18.8	40.6	15.6	9.4		6.84
	사무종사자	(174)		6.3	12.1	29.3	28.2	20.1	4.0	7.56
	서비스 종사자	(170)		5.3	16.5	18.8	27.6	22.9	8.8	7.73
	판매종사자	(157)		5.1	11.5	24.2	26.8	26.8	5.7	7.7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0.7	8.6	19.7	19.7	23.7	21.1	6.6	7.4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6.1	11.0	34.1	22.0	22.0	4.9	7.5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8	23.8	26.2	16.7	28.6		7.40
	단순노무 종사자	(29)		6.9	6.9	20.7	34.5	20.7	10.3	7.86

	주부	(81)		6.2	19.8	19.8	18.5	30.9	4.9	7.63
	학생	(63)		4.8	20.6	27.0	23.8	20.6	3.2	7.44
	무직	(32)		3.1	21.9	28.1	21.9	25.0		7.44
계층의식	하층	(99)	1.0	8.1	22.2	25.3	23.2	13.1	7.1	7.29
	중하층	(471)		4.0	11.9	24.2	26.3	27.0	6.6	7.80
	중층	(404)		7.9	17.1	24.3	25.0	21.8	4.0	7.48
	중상층	(76)		10.5	32.9	30.3	18.4	7.9		6.80
정치성향	보수	(108)		6.5	11.1	29.6	19.4	25.9	7.4	7.69
	중도보수	(257)	0.4	9.3	22.2	21.4	25.3	16.3	5.1	7.31
	중도	(327)		6.1	18.3	23.9	26.0	21.4	4.3	7.51
	중도진보	(293)		2.4	9.9	28.3	27.0	26.6	5.8	7.83
	진보	(65)		13.8	21.5	18.5	18.5	24.6	3.1	7.28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0.3	7.8	14.3	22.1	25.9	24.3	5.4	7.60
	아파트	(510)		4.7	16.1	27.6	23.9	22.4	5.3	7.59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8.3	21.9	21.9	26.0	17.8	4.1	7.36
거주시군	천안시	(170)		7.1	17.6	24.7	18.8	25.9	5.9	7.56
	공주시	(67)		10.4	13.4	20.9	16.4	31.3	7.5	7.67
	보령시	(66)		9.1	16.7	21.2	25.8	22.7	4.5	7.50
	아산시	(115)		3.5	20.9	20.0	16.5	30.4	8.7	7.76
	서산시	(85)		7.1	15.3	18.8	23.5	24.7	10.6	7.75
	논산시	(70)		5.7	17.1	25.7	24.3	22.9	4.3	7.54
	계룡시	(43)		2.3	4.7	37.2	34.9	18.6	2.3	7.70
	당진시	(83)		2.4	9.6	32.5	32.5	18.1	4.8	7.69
	금산군	(46)		6.5	21.7	23.9	26.1	19.6	2.2	7.37
	부여군	(52)		9.6	11.5	23.1	36.5	17.3	1.9	7.46
	서천군	(45)		2.2	20.0	26.7	28.9	22.2		7.49
	청양군	(36)		8.3	22.2	11.1	33.3	22.2	2.8	7.47
	홍성군	(64)		4.7	20.3	29.7	31.3	12.5	1.6	7.31
	예산군	(57)	1.8	7.0	14.0	29.8	24.6	15.8	7.0	7.44
	태안군	(51)		11.8	17.6	29.4	27.5	11.8	2.0	7.16
거주행정 단위	읍	(322)		5.9	17.7	28.9	30.4	14.9	2.2	7.37
	면	(284)	0.4	5.6	16.9	24.3	22.9	23.6	6.3	7.60
	동	(444)		7.2	15.1	22.1	22.3	26.8	6.5	7.66

〈 표 80 〉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_(10)지역(도시와 농촌)

		(사례 수)	보통	6	7	8	9	매우 심각	평균 (점)
[전체]		(1050)	5.5	15.8	20.3	26.1	27.2	5.0	7.69
성별	남 자	(553)	5.1	15.6	19.9	28.0	26.2	5.2	7.71
	여 자	(497)	6.0	16.1	20.7	23.9	28.4	4.8	7.67
결혼여부	기 혼	(778)	5.9	16.2	21.3	24.9	26.6	5.0	7.65
	미 혼	(272)	4.4	14.7	17.3	29.4	29.0	5.1	7.79
연령대	20대	(170)	2.9	14.7	15.9	31.2	28.8	6.5	7.88
	30대	(186)	3.8	11.8	19.9	32.3	29.0	3.2	7.81
	40대	(234)	6.8	13.7	22.6	26.5	25.2	5.1	7.65
	50대	(256)	6.3	19.1	20.3	23.8	25.8	4.7	7.58
	60대 이상	(204)	6.9	18.6	21.6	18.6	28.4	5.9	7.61
학력	중졸이하	(124)	8.1	16.1	22.6	19.4	29.0	4.8	7.60
	고졸	(454)	5.3	16.5	14.8	27.8	30.6	5.1	7.77
	전문대졸	(155)	7.7	10.3	25.2	22.6	27.7	6.5	7.72
	대졸이상	(317)	3.8	17.4	24.9	28.1	21.5	4.4	7.59
가구형태	1인	(111)	9.9	16.2	17.1	23.4	27.9	5.4	7.59
	2인	(265)	4.5	18.1	17.7	23.0	30.2	6.4	7.75
	3인	(360)	6.4	16.4	25.8	28.1	20.6	2.8	7.48
	4인 이상	(314)	3.8	13.1	17.2	27.4	32.2	6.4	7.90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0.8	19.6	22.5	21.6	20.6	4.9	7.36
	200~400만원 미만	(330)	6.1	13.6	16.1	25.2	32.4	6.7	7.84
	400~600만원대	(336)	5.7	17.0	21.4	28.3	25.0	2.7	7.58
	600만원 이상	(282)	2.8	15.6	23.0	26.2	26.2	6.0	7.76
직업	관리자	(36)	5.6	33.3	36.1	8.3	13.9	2.8	7.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6.3	25.0	15.6	40.6	9.4	3.1	7.31
	사무종사자	(174)	3.4	13.2	25.3	27.6	24.1	6.3	7.75
	서비스 종사자	(170)	7.1	15.3	17.6	27.1	28.2	4.7	7.68
	판매종사자	(157)	3.8	12.7	21.7	23.6	33.8	4.5	7.8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8.6	15.8	23.0	17.1	29.6	5.9	7.61
	기능원및관련 기능 종사자	(82)	7.3	12.2	17.1	32.9	28.0	2.4	7.7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16.7	31.0	21.4	23.8	4.8	7.62
	단순노무종사자	(29)	3.4	6.9	13.8	41.4	20.7	13.8	8.10
	주부	(81)	4.9	18.5	12.3	25.9	30.9	7.4	7.81
	학생	(63)	4.8	20.6	11.1	33.3	27.0	3.2	7.67
	무직	(32)	6.3	18.8	12.5	34.4	28.1		7.59
	하층	(99)	7.1	23.2	24.2	25.3	18.2	2.0	7.30
계층의식	중하층	(471)	4.2	10.2	19.5	28.2	30.1	7.6	7.93
	중층	(404)	6.2	16.6	19.6	24.3	29.7	3.7	7.66
	중상층	(76)	7.9	36.8	23.7	23.7	7.9		6.87

정치성향	보수	(108)	4.6	10.2	18.5	18.5	41.7	6.5	8.02
	중도보수	(257)	8.9	22.6	22.2	19.8	21.8	4.7	7.37
	중도	(327)	5.8	17.1	22.0	26.0	24.8	4.3	7.60
	중도진보	(293)	0.7	9.9	18.8	35.5	29.7	5.5	8.00
	진보	(65)	13.8	18.5	13.8	21.5	26.2	6.2	7.46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7.0	14.0	19.7	24.8	30.5	4.0	7.70
	아파트	(510)	4.1	13.5	23.1	27.3	26.1	5.9	7.75
	다세대주택/오피스텔	(169)	6.5	26.6	13.0	25.4	23.7	4.7	7.47
거주시군	천안시	(170)	4.1	22.9	18.8	24.1	22.9	7.1	7.60
	공주시	(67)	6.0	20.9	16.4	17.9	31.3	7.5	7.70
	보령시	(66)	4.5	21.2	22.7	15.2	30.3	6.1	7.64
	아산시	(115)	6.1	17.4	18.3	24.3	23.5	10.4	7.73
	서산시	(85)	4.7	15.3	23.5	23.5	23.5	9.4	7.74
	논산시	(70)	5.7	12.9	25.7	24.3	27.1	4.3	7.67
	계룡시	(43)	2.3	2.3	23.3	34.9	37.2		8.02
	당진시	(83)	1.2	6.0	22.9	44.6	24.1	1.2	7.88
	금산군	(46)	8.7	15.2	26.1	15.2	26.1	8.7	7.61
	부여군	(52)	5.8	13.5	17.3	30.8	32.7		7.71
	서천군	(45)	2.2	15.6	28.9	24.4	28.9		7.62
	청양군	(36)	5.6	22.2	5.6	22.2	44.4		7.78
	홍성군	(64)	6.3	15.6	15.6	39.1	23.4		7.58
	예산군	(57)	14.0	7.0	19.3	24.6	29.8	5.3	7.65
	태안군	(51)	9.8	15.7	19.6	25.5	27.5	2.0	7.51
거주행정 단위	읍	(322)	6.5	14.6	20.8	28.3	27.3	2.5	7.63
	면	(284)	7.0	15.5	21.1	24.6	26.4	5.3	7.64
	동	(444)	3.8	16.9	19.4	25.5	27.7	6.8	7.77

〈 표 81〉 현재 사회양극화 수준(평균 table)

		(사 례 수)	(1) 소득 (근 로소 득)	(2) 소득 (연 금)	(3) 일자 리 (정 규직 과 비정 규직)	(4) 일자 리 (대 기업 과 중소 기업)	(5) 부동 산 (소 유)	(6) 자산 (현 금, 주식 등)	(7) 교육	(8) 문화 · 여가	(9) 지역 (수 도권 과 비수 도권)	(10) 지역 (도 시와 농촌)
[전체]		10 50	8.01	7.72	7.82	7.91	8.05	8.04	6.92	7.24	7.56	7.69
성별	남 자	553	8.04	7.73	7.88	7.95	7.99	8.00	6.98	7.24	7.56	7.71
	여 자	497	7.99	7.72	7.77	7.87	8.12	8.08	6.85	7.24	7.55	7.67
결혼여부	기 혼	778	7.91	7.69	7.85	7.84	8.02	7.98	6.90	7.18	7.55	7.65
	미 혼	272	8.31	7.82	7.74	8.12	8.14	8.21	6.96	7.39	7.57	7.79
연령대	20대	170	8.38	7.98	7.79	8.16	8.22	8.30	6.98	7.45	7.65	7.88
	30대	186	8.32	7.76	8.09	8.37	8.31	8.24	7.08	7.48	7.71	7.81
	40대	234	8.14	7.77	7.90	7.82	8.09	8.06	6.91	7.56	7.58	7.65
	50대	256	7.65	7.68	7.84	7.83	7.84	7.83	6.96	6.84	7.39	7.58
	60대 이상	204	7.75	7.48	7.51	7.49	7.90	7.87	6.68	6.97	7.51	7.61
학력	중졸이하	124	7.77	7.47	7.42	7.29	7.79	7.80	6.64	6.86	7.48	7.60
	고졸	454	8.14	7.84	7.97	8.05	8.14	8.15	6.89	7.36	7.66	7.77
	전문대졸	155	8.05	7.73	7.93	8.06	8.08	8.15	6.99	7.33	7.62	7.72
	대졸이상	317	7.91	7.66	7.72	7.90	8.01	7.92	7.03	7.17	7.40	7.59
가구형태	1인	111	8.25	7.67	7.74	7.92	8.12	8.22	6.68	7.09	7.46	7.59
	2인	265	7.93	7.63	7.71	7.72	8.03	8.06	6.86	7.18	7.65	7.75
	3인	360	7.83	7.66	7.79	7.90	7.89	7.84	7.08	7.25	7.41	7.48
	4인 이상	314	8.21	7.90	7.99	8.09	8.23	8.18	6.87	7.32	7.68	7.90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7.69	7.47	7.34	7.32	7.71	7.83	6.62	6.73	7.29	7.36
	200~400만원미 만	330	8.34	7.82	8.01	8.10	8.21	8.22	6.85	7.38	7.73	7.84
	400~600만원대	336	7.95	7.68	7.85	7.91	8.04	7.96	6.96	7.48	7.53	7.58
	600만원 이상	282	7.83	7.77	7.75	7.91	8.00	8.00	7.06	6.97	7.48	7.76
직업	관리자	36	7.06	7.19	7.61	7.69	7.44	7.42	6.69	6.39	6.86	7.0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7.31	7.38	7.13	7.53	7.25	7.03	7.34	6.75	6.84	7.31
	사무종사자	174	8.09	7.81	7.82	8.05	8.12	8.10	6.99	7.18	7.56	7.75
	서비스 종사자	170	8.07	7.81	7.98	7.95	8.08	8.09	6.99	7.37	7.73	7.68
	판매종사자	157	8.31	7.94	8.00	7.97	8.22	8.29	6.99	7.39	7.76	7.8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7.67	7.31	7.49	7.46	7.81	7.76	6.65	7.00	7.47	7.6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8.13	7.77	7.93	8.18	8.06	8.12	7.26	7.50	7.57	7.7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8.14	7.90	8.00	7.98	8.21	8.07	6.90	7.05	7.40	7.62
	단순노무종사자	29	8.38	7.76	8.21	8.24	8.59	8.72	6.45	7.28	7.86	8.10
	주부	81	8.09	7.78	7.83	8.04	8.30	8.07	6.73	7.37	7.63	7.81
	학생	63	8.19	7.94	7.71	8.00	8.24	8.27	6.83	7.24	7.44	7.67
	무직	32	7.94	7.69	8.03	7.91	7.56	7.75	7.13	7.81	7.44	7.59
계층의식	하층	99	7.92	7.84	7.84	7.59	7.91	8.03	6.94	6.99	7.29	7.30
	중하층	471	8.34	7.88	8.02	8.12	8.32	8.28	7.00	7.42	7.80	7.93
	중층	404	7.84	7.70	7.71	7.85	7.91	7.99	6.79	7.20	7.48	7.66
	중상층	76	7.08	6.75	7.21	7.38	7.30	6.76	7.08	6.64	6.80	6.87
정치성향	보수	108	7.89	7.81	7.81	7.91	8.28	8.45	6.61	6.92	7.69	8.02
	중도보수	257	7.77	7.44	7.47	7.49	7.58	7.54	6.81	7.11	7.31	7.37
	중도	327	8.01	7.72	7.83	7.99	8.00	7.98	6.86	7.24	7.51	7.60
	중도진보	293	8.30	7.91	8.20	8.20	8.41	8.33	7.22	7.49	7.83	8.00
	진보	65	7.91	7.86	7.48	7.89	8.20	8.29	6.82	7.14	7.28	7.46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7.89	7.64	7.68	7.76	7.94	7.99	6.87	7.15	7.60	7.70
	아파트	510	8.05	7.77	7.93	8.01	8.15	8.05	7.01	7.29	7.59	7.75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8.15	7.76	7.83	7.95	8.01	8.10	6.75	7.28	7.36	7.47
거주시군	천안시	170	7.78	7.59	7.77	7.88	8.09	8.01	7.03	7.11	7.56	7.60
	공주시	67	8.19	7.85	7.88	7.82	8.19	8.09	6.79	7.27	7.67	7.70
	보령시	66	8.29	7.83	7.82	8.12	8.03	7.73	6.68	7.20	7.50	7.64
	아산시	115	8.18	7.91	8.04	7.97	8.16	8.03	7.03	7.43	7.76	7.73
	서산시	85	8.24	7.99	8.05	7.95	8.09	8.08	7.08	7.60	7.75	7.74
	논산시	70	7.99	7.50	7.87	7.90	8.21	8.07	7.04	7.26	7.54	7.67
	계룡시	43	8.05	7.63	8.05	8.02	8.47	8.23	7.07	7.44	7.70	8.02
	당진시	83	8.02	7.98	7.92	8.23	8.22	8.23	7.10	7.30	7.69	7.88
	금산군	46	8.07	7.93	7.85	8.04	7.89	8.13	6.98	7.24	7.37	7.61
	부여군	52	7.96	7.65	7.50	7.83	7.98	8.10	6.98	7.31	7.46	7.71
	서천군	45	7.84	7.80	7.96	7.91	7.87	8.00	7.02	6.98	7.49	7.62
	청양군	36	7.86	7.42	7.56	7.64	7.61	7.89	6.50	7.47	7.47	7.78
	홍성군	64	7.75	7.67	7.72	7.72	7.67	8.11	6.56	7.05	7.31	7.58
	예산군	57	7.95	7.44	7.63	7.67	8.02	7.93	6.56	6.84	7.44	7.65
	태안군	51	8.12	7.39	7.39	7.78	7.76	7.92	6.86	7.02	7.16	7.51
거주행정 단위	읍	322	8.07	7.70	7.57	7.84	7.98	8.13	6.87	7.15	7.37	7.63
	면	284	7.85	7.61	7.77	7.76	7.99	7.99	6.83	7.20	7.60	7.64
	동	444	8.09	7.82	8.04	8.07	8.14	8.00	7.01	7.32	7.66	7.77

〈표 82〉 우리사회 양극화의 주요 원인(복수응답)

		(사 례 수)	정규 직과 비정 규직 간 임금 격차	사회 보장 체계의 미흡	불안 정한 노동 증가 (비 정규 , 플랫 폼노 동	불평 등한 부동 산 소유	연공 서열 에 따른 임금 체계	학벌 을 중시 하는 사회 풍토	첨단 과학 기술 의 변화로 인한 지식 격차	수도 권 위주 의 발전 정책	농촌 지역 에 대한 차별	기타	11
[전체]		(1050)	38.5	10.4	29.0	40.2	12.0	19.9	9.0	26.4	14.4	0.3	0.1
성별	남 자	(553)	38.3	11.6	30.7	38.9	10.3	19.7	9.0	26.6	14.6	0.2	
	여 자	(497)	38.6	9.1	27.0	41.6	13.9	20.1	8.9	26.2	14.1	0.4	0.2
결혼여부	기 혼	(778)	35.5	10.3	25.6	42.2	11.3	19.0	10.0	29.2	16.5	0.4	0.1
	미 혼	(272)	47.1	10.7	38.6	34.6	14.0	22.4	5.9	18.4	8.5		
연령대	20대	(170)	47.1	8.2	35.9	32.4	12.9	27.1	7.1	20.0	9.4		
	30대	(186)	46.8	14.5	36.6	33.9	16.7	17.2	4.3	23.1	7.0		
	40대	(234)	40.2	9.8	33.8	45.7	11.1	19.2	8.1	23.1	9.0		
	50대	(256)	36.3	11.3	25.8	42.2	13.3	16.8	11.7	29.7	12.1	0.8	
	60대 이상	(204)	24.5	7.8	14.7	43.6	6.4	21.1	12.3	34.3	34.3	0.5	0.5
학력	중졸이하	(124)	23.4	9.7	12.1	41.9	5.6	22.6	11.3	32.3	41.1		
	고졸	(454)	36.3	9.3	30.2	39.2	11.0	21.4	9.0	29.7	13.2	0.4	0.2
	전문대졸	(155)	48.4	7.7	32.3	42.6	12.9	14.8	9.0	21.3	11.0		
	대졸이상	(317)	42.6	13.6	32.2	39.7	15.5	19.2	7.9	21.8	7.3	0.3	
가구형태	1인	(111)	44.1	12.6	29.7	42.3	12.6	13.5	9.0	17.1	18.9		
	2인	(265)	27.5	9.4	20.4	43.0	10.9	18.9	10.6	34.3	24.5	0.4	
	3인	(360)	40.3	11.7	30.6	37.2	14.4	22.8	10.0	24.7	8.1		0.3
	4인 이상	(314)	43.6	8.9	34.1	40.4	9.9	19.7	6.4	24.8	11.5	0.6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23.5	13.7	16.7	45.1	10.8	19.6	11.8	27.5	31.4		
	200~400만원 미만	(330)	41.8	10.0	26.4	38.8	10.3	18.8	9.1	26.4	18.5		
	400~600만원대	(336)	39.6	8.3	33.0	41.1	11.9	19.0	8.9	27.7	9.5	0.6	0.3
	600만원 이상	(282)	38.7	12.1	31.6	39.0	14.5	22.3	7.8	24.5	9.2	0.4	
직업	관리자	(36)	38.9	16.7	30.6	38.9	11.1	13.9	16.7	25.0	8.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25.0	18.8	21.9	40.6	18.8	18.8	21.9	28.1	6.3		
	사무종사자	(174)	46.0	12.6	31.0	41.4	19.0	18.4	4.0	21.3	5.7	0.6	
	서비스 종사자	(170)	38.8	8.2	28.8	38.8	8.2	22.9	11.8	30.6	11.2		0.6
	판매종사자	(157)	40.1	9.6	31.8	41.4	9.6	22.3	9.6	24.2	10.8	0.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24.3	6.6	15.8	40.1	8.6	17.8	9.2	35.5	42.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39.0	14.6	35.4	41.5	13.4	19.5	9.8	19.5	7.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5.2	7.1	54.8	31.0	9.5	19.0	4.8	16.7	11.9		
	단순노무종사자	(29)	37.9	3.4	24.1	55.2	10.3	20.7	3.4	31.0	13.8		
	주부	(81)	44.4	12.3	22.2	39.5	9.9	14.8	4.9	37.0	13.6	1.2	
	학생	(63)	34.9	9.5	30.2	41.3	19.0	22.2	11.1	19.0	12.7		
	무직	(32)	50.0	12.5	40.6	31.3	9.4	28.1	9.4	12.5	6.3		
계층의식	하층	(99)	29.3	11.1	29.3	44.4	15.2	14.1	8.1	25.3	23.2		
	중하층	(471)	42.3	9.6	28.5	36.1	9.3	21.4	7.4	28.5	17.0		
	중층	(404)	37.9	9.4	30.9	44.3	12.4	18.8	9.2	25.5	10.9	0.7	
	중상층	(76)	30.3	19.7	21.1	38.2	22.4	23.7	18.4	19.7	5.3		1.3
정치성향	보수	(108)	37.0	9.3	15.7	51.9	5.6	13.9	4.6	34.3	27.8		
	중도보수	(257)	35.0	7.8	29.2	33.1	10.5	22.6	13.2	28.4	19.8	0.4	
	중도	(327)	41.9	11.3	28.1	41.3	13.5	19.6	8.9	22.9	11.9	0.3	0.3
	중도진보	(293)	36.2	12.3	36.2	39.9	13.3	19.8	6.8	27.0	8.2	0.3	
주택형태	진보	(65)	47.7	9.2	21.5	44.6	15.4	21.5	9.2	20.0	10.8		
	단독주택	(371)	34.8	8.6	24.8	38.8	8.4	19.7	8.4	31.8	24.5	0.3	
	아파트	(510)	39.8	10.4	31.4	40.8	13.9	21.0	8.8	25.1	8.2	0.4	0.2
거주시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42.6	14.2	30.8	41.4	14.2	17.2	10.7	18.3	10.7		
	천안시	(170)	40.0	11.2	27.6	40.0	12.9	21.2	15.3	22.9	8.8		
	공주시	(67)	31.3	9.0	22.4	44.8	9.0	25.4	13.4	25.4	19.4		
	보령시	(66)	40.9	12.1	34.8	27.3	13.6	19.7	6.1	25.8	19.7		
	아산시	(115)	44.3	10.4	37.4	33.0	13.9	17.4	7.8	22.6	11.3	1.7	
	서산시	(85)	42.4	9.4	23.5	45.9	15.3	11.8	10.6	29.4	11.8		
	논산시	(70)	32.9	12.9	25.7	48.6	4.3	20.0	10.0	32.9	12.9		
	계룡시	(43)	34.9	4.7	32.6	44.2	16.3	25.6	4.7	23.3	14.0		
	당진시	(83)	33.7	10.8	22.9	47.0	15.7	19.3	2.4	28.9	16.9	1.2	1.2
	금산군	(46)	30.4	10.9	37.0	34.8	13.0	17.4	10.9	32.6	13.0		
	부여군	(52)	36.5	17.3	21.2	40.4	5.8	25.0	13.5	28.8	11.5		
	서천군	(45)	48.9	8.9	31.1	44.4	13.3	17.8	4.4	20.0	11.1		
	청양군	(36)	25.0	11.1	36.1	38.9	5.6	13.9	8.3	27.8	33.3		
	홍성군	(64)	37.5	4.7	37.5	35.9	10.9	25.0	6.3	25.0	17.2		
	예산군	(57)	40.4	14.0	21.1	38.6	10.5	19.3	5.3	33.3	17.5		
	태안군	(51)	47.1	5.9	27.5	41.2	13.7	21.6	3.9	23.5	15.7		
거주행정 단위	읍	(322)	38.8	10.2	28.0	41.3	12.4	21.7	9.3	25.8	12.4		
	면	(284)	36.3	9.5	27.8	39.8	9.9	16.5	7.0	28.5	24.3	0.4	
	동	(444)	39.6	11.0	30.4	39.6	13.1	20.7	9.9	25.5	9.5	0.5	0.2

〈표 83〉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사례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점)
	[전체]	(1050)	5.9	29.8	49.6	14.7	3.73
성별	남 자	(553)	7.1	30.0	48.6	14.3	3.70
	여 자	(497)	4.6	29.6	50.7	15.1	3.76
결혼여부	기 혼	(778)	6.7	29.3	49.5	14.5	3.72
	미 혼	(272)	3.7	31.3	50.0	15.1	3.76
연령대	20대	(170)	2.9	35.9	42.9	18.2	3.76
	30대	(186)	4.8	27.4	53.2	14.5	3.77
	40대	(234)	5.1	28.6	51.7	14.5	3.76
	50대	(256)	4.3	30.5	54.7	10.5	3.71
	60대 이상	(204)	12.3	27.5	43.1	17.2	3.65
학력	중졸이하	(124)	12.9	30.6	37.9	18.5	3.62
	고졸	(454)	5.5	29.7	52.4	12.3	3.72
	전문대졸	(155)	4.5	26.5	48.4	20.6	3.85
	대졸이상	(317)	4.4	31.2	50.8	13.6	3.74
가구형태	1인	(111)	7.2	34.2	46.8	11.7	3.63
	2인	(265)	7.9	28.7	46.8	16.6	3.72
	3인	(360)	4.2	26.4	52.8	16.7	3.82
	4인 이상	(314)	5.7	33.1	49.4	11.8	3.67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0.8	29.4	43.1	16.7	3.66
	200-400만원 미만	(330)	6.4	30.6	49.1	13.9	3.71
	400-600만원대	(336)	5.7	28.0	51.8	14.6	3.75
	600만원 이상	(282)	3.9	31.2	50.0	14.9	3.76
직업	관리자	(36)	5.6	47.2	44.4	2.8	3.4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46.9	50.0	3.1	3.56
	사무종사자	(174)	4.6	30.5	46.0	19.0	3.79
	서비스 종사자	(170)	4.1	31.2	50.0	14.7	3.75
	판매종사자	(157)	6.4	24.8	54.1	14.6	3.7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1.8	29.6	45.4	13.2	3.6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6.1	20.7	57.3	15.9	3.8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9.5	19.0	47.6	23.8	3.86
	단순노무 종사자	(29)	6.9	20.7	51.7	20.7	3.86
	주부	(81)	2.5	27.2	60.5	9.9	3.78
	학생	(63)	4.8	36.5	42.9	15.9	3.70
	무직	(32)	3.1	46.9	37.5	12.5	3.59
계층의식	하층	(99)	6.1	20.2	47.5	26.3	3.94

	중하층	(471)	6.2	27.6	49.5	16.8	3.77
	중층	(404)	5.9	32.9	51.0	10.1	3.65
	중상층	(76)	3.9	39.5	46.1	10.5	3.63
정치성향	보수	(108)	13.0	25.9	46.3	14.8	3.63
	중도보수	(257)	10.9	31.9	45.5	11.7	3.58
	중도	(327)	4.0	32.1	49.5	14.4	3.74
	중도진보	(293)	1.4	27.0	53.6	18.1	3.88
	진보	(65)	4.6	29.2	53.8	12.3	3.74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8.6	26.7	50.7	14.0	3.70
	아파트	(510)	4.3	31.0	49.6	15.1	3.75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4.7	33.1	47.3	14.8	3.72
거주시군	천안시	(170)	3.5	24.1	48.8	23.5	3.92
	공주시	(67)	9.0	17.9	67.2	6.0	3.70
	보령시	(66)	4.5	28.8	54.5	12.1	3.74
	아산시	(115)	5.2	30.4	51.3	13.0	3.72
	서산시	(85)	2.4	36.5	52.9	8.2	3.67
	논산시	(70)	5.7	27.1	51.4	15.7	3.77
	계룡시	(43)	4.7	41.9	44.2	9.3	3.58
	당진시	(83)	3.6	26.5	59.0	10.8	3.77
	금산군	(46)	10.9	26.1	52.2	10.9	3.63
	부여군	(52)	7.7	34.6	42.3	15.4	3.65
	서천군	(45)	6.7	40.0	35.6	17.8	3.64
	청양군	(36)	11.1	33.3	44.4	11.1	3.56
	홍성군	(64)	15.6	31.3	32.8	20.3	3.58
	예산군	(57)	3.5	26.3	52.6	17.5	3.84
	태안군	(51)	3.9	41.2	39.2	15.7	3.67
거주행정 단위	읍	(322)	6.8	32.6	44.7	15.8	3.70
	면	(284)	7.0	28.2	48.2	16.5	3.74
	동	(444)	4.5	28.8	54.1	12.6	3.75

〈 표 84 〉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청년기본소득 지급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4.2	24.9	46.5	24.5	3.91
성별	남 자	(553)	4.2	25.5	45.8	24.6	3.91
	여 자	(497)	4.2	24.1	47.3	24.3	3.92
결혼여부	기 혼	(778)	5.5	29.2	47.8	17.5	3.77
	미 혼	(272)	0.4	12.5	42.6	44.5	4.31
연령대	20대	(170)	0.6	5.3	40.0	54.1	4.48
	30대	(186)	0.5	15.6	41.9	41.9	4.25
	40대	(234)	3.4	28.2	54.3	14.1	3.79
	50대	(256)	1.6	30.1	55.5	12.9	3.80
	60대 이상	(204)	14.7	39.2	35.8	10.3	3.42
학력	종졸이하	(124)	16.9	41.1	32.3	9.7	3.35
	고졸	(454)	3.1	23.1	49.3	24.4	3.95
	전문대졸	(155)	1.3	23.2	45.8	29.7	4.04
	대졸이상	(317)	2.2	21.8	48.3	27.8	4.02
가구형태	1인	(111)	4.5	22.5	29.7	43.2	4.12
	2인	(265)	9.1	36.2	43.4	11.3	3.57
	3인	(360)	1.4	18.9	50.3	29.4	4.08
	4인 이상	(314)	3.2	22.9	50.6	23.2	3.94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2.7	39.2	30.4	17.6	3.53
	200~400만원 미만	(330)	5.5	25.8	38.8	30.0	3.93
	400~600만원대	(336)	3.0	22.6	52.4	22.0	3.93
	600만원 이상	(282)	1.1	21.3	54.3	23.4	4.00
직업	관리자	(36)		36.1	47.2	16.7	3.8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21.9	56.3	21.9	4.00
	사무종사자	(174)	2.3	21.3	51.1	25.3	3.99
	서비스 종사자	(170)	1.8	21.2	52.4	24.7	4.00
	판매종사자	(157)	5.7	21.7	49.7	22.9	3.9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5.1	41.4	34.2	9.2	3.3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1.2	23.2	47.6	28.0	4.0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23.8	45.2	28.6	4.00
	단순노무종사자	(29)	3.4	48.3	31.0	17.2	3.62
	주부	(81)	1.2	27.2	45.7	25.9	3.96
	학생	(63)	1.6	6.3	34.9	57.1	4.48
	무직	(32)		6.3	59.4	34.4	4.28

계층의식	하층	(99)	9.1	23.2	30.3	37.4	3.96
	중하층	(471)	3.8	23.6	43.3	29.3	3.98
	중층	(404)	4.0	26.5	51.7	17.8	3.83
	중상층	(76)	1.3	26.3	59.2	13.2	3.84
정치성향	보수	(108)	13.9	36.1	38.9	11.1	3.47
	중도보수	(257)	6.6	33.1	38.9	21.4	3.75
	중도	(327)	2.1	22.0	49.2	26.6	4.00
	중도진보	(293)	1.4	16.0	52.9	29.7	4.11
	진보	(65)	1.5	27.7	46.2	24.6	3.94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9.4	30.5	42.9	17.3	3.68
	아파트	(510)	1.6	22.2	50.4	25.9	4.01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0.6	20.7	42.6	36.1	4.14
거주시군	천안시	(170)	0.6	25.9	41.2	32.4	4.05
	공주시	(67)	6.0	25.4	49.3	19.4	3.82
	보령시	(66)	4.5	25.8	56.1	13.6	3.79
	아산시	(115)	0.9	18.3	50.4	30.4	4.10
	서산시	(85)	4.7	30.6	47.1	17.6	3.78
	논산시	(70)	1.4	30.0	50.0	18.6	3.86
	계룡시	(43)	2.3	23.3	48.8	25.6	3.98
	당진시	(83)	3.6	18.1	50.6	27.7	4.02
	금산군	(46)	6.5	23.9	39.1	30.4	3.93
	부여군	(52)	5.8	26.9	40.4	26.9	3.88
	서천군	(45)	6.7	20.0	53.3	20.0	3.87
	청양군	(36)	11.1	33.3	36.1	19.4	3.64
	홍성군	(64)	9.4	25.0	42.2	23.4	3.80
	예산군	(57)	7.0	26.3	43.9	22.8	3.82
	태안군	(51)	5.9	25.5	47.1	21.6	3.84
거주행정 단위	읍	(322)	4.7	23.3	46.6	25.5	3.93
	면	(284)	7.4	30.3	43.0	19.4	3.74
	동	(444)	1.8	22.5	48.6	27.0	4.01

〈 표 85 〉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근로장려금 확대

		(사례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1.2	15.3	54.4	29.0	4.11
성별	남 자	(553)	1.1	14.5	56.2	28.2	4.12
	여 자	(497)	1.4	16.3	52.3	30.0	4.11
결혼여부	기 혼	(778)	1.5	16.3	54.2	27.9	4.08
	미 혼	(272)	0.4	12.5	54.8	32.4	4.19
연령대	20대	(170)	0.6	5.3	61.8	32.4	4.26
	30대	(186)		10.8	50.5	38.7	4.28
	40대	(234)		15.8	52.6	31.6	4.16
	50대	(256)	1.6	16.0	53.1	29.3	4.10
	60대 이상	(204)	3.9	26.5	55.4	14.2	3.80
학력	중졸이하	(124)	4.8	29.8	51.6	13.7	3.74
	고졸	(454)	0.9	14.1	57.0	28.0	4.12
	전문대졸	(155)		12.9	52.9	34.2	4.21
	대졸이상	(317)	0.9	12.6	52.4	34.1	4.20
가구형태	1인	(111)	2.7	13.5	51.4	32.4	4.14
	2인	(265)	2.6	20.8	57.7	18.9	3.93
	3인	(360)	0.8	16.9	50.0	32.2	4.14
	4인 이상	(314)		9.6	57.6	32.8	4.23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5.9	29.4	46.1	18.6	3.77
	200~400만원 미만	(330)	0.9	11.8	60.6	26.7	4.13
	400~600만원대	(336)	0.6	15.5	51.8	32.1	4.15
	600만원 이상	(282)	0.7	14.2	53.2	31.9	4.16
직업	관리자	(36)		13.9	63.9	22.2	4.0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	18.8	53.1	25.0	4.00
	사무종사자	(174)	0.6	12.1	55.2	32.2	4.19
	서비스 종사자	(170)	1.8	13.5	56.5	28.2	4.11
	판매종사자	(157)	1.3	12.1	54.8	31.8	4.1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2.6	28.9	53.3	15.1	3.8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5.6	41.5	32.9	4.0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2.4	59.5	35.7	4.29
	단순노무 종사자	(29)	3.4	13.8	65.5	17.2	3.97
	주부	(81)		13.6	49.4	37.0	4.23
	학생	(63)		6.3	55.6	38.1	4.32
	무직	(32)		6.3	59.4	34.4	4.28
계층의식	하층	(99)	4.0	18.2	53.5	24.2	3.98
	중하층	(471)	0.6	11.9	52.9	34.6	4.21
	중층	(404)	1.0	16.1	55.9	27.0	4.09
	중상층	(76)	2.6	28.9	56.6	11.8	3.78

정치성향	보수	(108)	3.7	19.4	55.6	21.3	3.94
	중도보수	(257)	2.7	17.9	57.2	22.2	3.99
	중도	(327)	0.3	17.7	51.4	30.6	4.12
	중도진보	(293)		8.9	56.3	34.8	4.26
	진보	(65)	1.5	15.4	47.7	35.4	4.17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3.0	18.6	53.6	24.8	4.00
	아파트	(510)	0.2	12.5	54.9	32.4	4.19
	다세대주택/오피스텔	(169)	0.6	16.6	54.4	28.4	4.11
거주시군	천안시	(170)	0.6	16.5	54.7	28.2	4.11
	공주시	(67)		20.9	53.7	25.4	4.04
	보령시	(66)	1.5	13.6	54.5	30.3	4.14
	아산시	(115)		13.9	50.4	35.7	4.22
	서산시	(85)	1.2	11.8	57.6	29.4	4.15
	논산시	(70)	1.4	15.7	58.6	24.3	4.06
	계룡시	(43)	2.3	4.7	55.8	37.2	4.28
	당진시	(83)	1.2	14.5	53.0	31.3	4.14
	금산군	(46)		10.9	54.3	34.8	4.24
	부여군	(52)	1.9	11.5	59.6	26.9	4.12
	서천군	(45)		20.0	51.1	28.9	4.09
	청양군	(36)	5.6	16.7	50.0	27.8	4.00
	홍성군	(64)	4.7	21.9	53.1	20.3	3.89
	예산군	(57)	1.8	14.0	57.9	26.3	4.09
	태안군	(51)		21.6	51.0	27.5	4.06
거주행정 단위	읍	(322)	1.2	14.3	52.8	31.7	4.15
	면	(284)	2.1	20.1	53.9	23.9	4.00
	동	(444)	0.7	13.1	55.9	30.4	4.16

〈 표 86 〉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농어민기본소득 확대

		(사례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1.2	25.0	58.3	15.5	3.88
성별	남 자	(553)	1.4	22.2	59.3	17.0	3.92
	여 자	(497)	1.0	28.0	57.1	13.9	3.84
결혼여부	기 혼	(778)	0.6	21.6	59.5	18.3	3.95
	미 혼	(272)	2.9	34.6	54.8	7.7	3.67
연령대	20대	(170)	4.1	32.4	56.5	7.1	3.66
	30대	(186)	1.6	31.7	59.1	7.5	3.73
	40대	(234)	0.9	26.1	59.8	13.2	3.85
	50대	(256)		20.3	60.2	19.5	3.99
	60대 이상	(204)	0.5	17.2	54.9	27.5	4.09
학력	중졸이하	(124)		16.1	56.5	27.4	4.11
	고졸	(454)	1.3	26.0	57.5	15.2	3.87
	전문대졸	(155)	0.6	27.7	58.1	13.5	3.85
	대졸이상	(317)	1.9	25.6	60.3	12.3	3.83
가구형태	1인	(111)	2.7	34.2	52.3	10.8	3.71
	2인	(265)	1.1	20.4	54.0	24.5	4.02
	3인	(360)	1.4	26.1	58.3	14.2	3.85
	4인 이상	(314)	0.6	24.2	64.0	11.1	3.86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0	25.5	50.0	23.5	3.96
	200~400만원 미만	(330)	1.2	24.5	55.8	18.5	3.92
	400~600만원대	(336)	1.8	25.9	58.9	13.4	3.84
	600만원 이상	(282)	0.7	24.1	63.5	11.7	3.86
직업	관리자	(36)		30.6	47.2	22.2	3.9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3	62.5	6.3	3.75
	사무종사자	(174)	2.9	23.0	62.1	12.1	3.83
	서비스 종사자	(170)	2.4	27.6	60.6	9.4	3.77
	판매종사자	(157)	0.6	24.8	62.4	12.1	3.8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3.2	44.1	42.8	4.3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8.0	61.0	11.0	3.8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26.2	59.5	11.9	3.81
	단순노무 종사자	(29)		17.2	62.1	20.7	4.03
	주부	(81)		29.6	63.0	7.4	3.78
	학생	(63)	1.6	34.9	57.1	6.3	3.68
	무직	(32)	3.1	31.3	59.4	6.3	3.69
계층의식	하층	(99)	2.0	23.2	52.5	22.2	3.95
	중하층	(471)	0.2	21.0	60.3	18.5	3.97
	중층	(404)	2.0	27.7	58.4	11.9	3.80
	중상층	(76)	2.6	36.8	52.6	7.9	3.66

정치성향	보수	(108)		15.7	56.5	27.8	4.12
	중도보수	(257)	1.6	28.0	54.9	15.6	3.84
	중도	(327)	1.2	25.1	60.9	12.8	3.85
	중도진보	(293)	0.7	21.8	62.5	15.0	3.92
	진보	(65)	4.6	41.5	43.1	10.8	3.60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18.6	56.9	24.5	4.06
	아파트	(510)	1.6	26.7	60.2	11.6	3.82
	다세대주택/오피스텔	(169)	3.0	33.7	55.6	7.7	3.68
거주시군	천안시	(170)	1.2	28.8	62.4	7.6	3.76
	공주시	(67)		32.8	52.2	14.9	3.82
	보령시	(66)		25.8	51.5	22.7	3.97
	아산시	(115)	0.9	27.8	60.9	10.4	3.81
	서산시	(85)	1.2	17.6	65.9	15.3	3.95
	논산시	(70)	2.9	24.3	61.4	11.4	3.81
	계룡시	(43)	2.3	20.9	60.5	16.3	3.91
	당진시	(83)		18.1	66.3	15.7	3.98
	금산군	(46)	2.2	15.2	63.0	19.6	4.00
	부여군	(52)		28.8	51.9	19.2	3.90
	서천군	(45)		22.2	57.8	20.0	3.98
	청양군	(36)		25.0	55.6	19.4	3.94
	홍성군	(64)	1.6	32.8	40.6	25.0	3.89
	예산군	(57)	3.5	17.5	59.6	19.3	3.95
	태안군	(51)	3.9	27.5	49.0	19.6	3.84
거주행정 단위	읍	(322)	1.9	25.8	57.5	14.9	3.85
	면	(284)	0.4	21.5	51.8	26.4	4.04
	동	(444)	1.4	26.6	63.1	9.0	3.80

〈 표 87 〉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최저임금 인상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3.9	32.9	49.8	13.4	3.73
성별	남 자	(553)	3.3	32.4	49.7	14.6	3.76
	여 자	(497)	4.6	33.4	49.9	12.1	3.69
결혼여부	기 혼	(778)	5.0	37.7	47.3	10.0	3.62
	미 혼	(272)	0.7	19.1	57.0	23.2	4.03
연령대	20대	(170)	0.6	13.5	58.2	27.6	4.13
	30대	(186)	1.6	24.7	60.8	12.9	3.85
	40대	(234)	4.3	34.2	47.0	14.5	3.72
	50대	(256)	3.5	36.3	52.0	8.2	3.65
	60대 이상	(204)	8.8	50.5	33.3	7.4	3.39
학력	중졸이하	(124)	9.7	50.8	36.3	3.2	3.33
	고졸	(454)	4.2	32.6	47.4	15.9	3.75
	전문대졸	(155)	0.6	25.8	57.4	16.1	3.89
	대졸이상	(317)	2.8	29.7	54.9	12.6	3.77
가구형태	1인	(111)	5.4	21.6	47.7	25.2	3.93
	2인	(265)	4.9	43.4	43.0	8.7	3.55
	3인	(360)	3.3	34.2	51.4	11.1	3.70
	4인 이상	(314)	3.2	26.4	54.5	15.9	3.83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5.9	46.1	34.3	13.7	3.56
	200-400만원 미만	(330)	4.5	33.0	50.6	11.8	3.70
	400-600만원대	(336)	3.3	29.8	51.2	15.8	3.79
	600만원 이상	(282)	3.2	31.6	52.8	12.4	3.74
직업	관리자	(36)	5.6	47.2	41.7	5.6	3.4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	40.6	46.9	9.4	3.63
	사무종사자	(174)	0.6	24.7	60.3	14.4	3.89
	서비스 종사자	(170)	4.7	32.9	45.9	16.5	3.74
	판매종사자	(157)	7.6	38.2	43.3	10.8	3.5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8.6	51.3	33.6	6.6	3.3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3.2	67.1	9.8	3.8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26.2	50.0	21.4	3.90
	단순노무 종사자	(29)	6.9	20.7	48.3	24.1	3.90
	주부	(81)	1.2	32.1	59.3	7.4	3.73
	학생	(63)		14.3	52.4	33.3	4.19
	무직	(32)		21.9	62.5	15.6	3.94

계층의식	하층	(99)	6.1	39.4	40.4	14.1	3.63
	중하층	(471)	3.4	30.1	51.0	15.5	3.79
	중층	(404)	3.5	32.4	51.7	12.4	3.73
	중상층	(76)	6.6	43.4	44.7	5.3	3.49
정치성향	보수	(108)	8.3	40.7	43.5	7.4	3.50
	중도보수	(257)	5.8	37.0	47.5	9.7	3.61
	중도	(327)	1.8	33.3	50.5	14.4	3.77
	중도진보	(293)	3.4	28.0	51.5	17.1	3.82
	진보	(65)	1.5	23.1	58.5	16.9	3.91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5.4	39.1	43.4	12.1	3.62
	아파트	(510)	3.9	31.2	52.9	12.0	3.73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0.6	24.3	54.4	20.7	3.95
거주시군	천안시	(170)	2.4	34.1	46.5	17.1	3.78
	공주시	(67)	9.0	37.3	37.3	16.4	3.61
	보령시	(66)	3.0	25.8	48.5	22.7	3.91
	아산시	(115)	1.7	27.0	62.6	8.7	3.78
	서산시	(85)	4.7	23.5	58.8	12.9	3.80
	논산시	(70)	1.4	38.6	48.6	11.4	3.70
	계룡시	(43)	9.3	20.9	55.8	14.0	3.74
	당진시	(83)	2.4	24.1	61.4	12.0	3.83
	금산군	(46)	6.5	45.7	47.8		3.41
	부여군	(52)	7.7	38.5	36.5	17.3	3.63
	서천군	(45)	2.2	33.3	46.7	17.8	3.80
	청양군	(36)	2.8	38.9	41.7	16.7	3.72
	홍성군	(64)	1.6	46.9	42.2	9.4	3.59
	예산군	(57)	8.8	31.6	49.1	10.5	3.61
	태안군	(51)	2.0	39.2	47.1	11.8	3.69
거주행정 단위	읍	(322)	3.7	37.0	47.8	11.5	3.67
	면	(284)	4.2	36.6	45.8	13.4	3.68
	동	(444)	3.8	27.5	53.8	14.9	3.80

〈 표 88 〉 소득보장정책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사례 수)	(1)전 국민 기본 소득제 도입	(2)청년기 본 소득 지급	(3)근로장 려금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 지급)	(4) 농어민기 본 소득 확대	(5)최저임 금 인상 (1시간당 1만원이상)
[전체]		1050	3.73	3.91	4.11	3.88	3.73
성별	남 자	553	3.70	3.91	4.12	3.92	3.76
	여 자	497	3.76	3.92	4.11	3.84	3.69
결혼여부	기 혼	778	3.72	3.77	4.08	3.95	3.62
	미 혼	272	3.76	4.31	4.19	3.67	4.03
연령대	20대	170	3.76	4.48	4.26	3.66	4.13
	30대	186	3.77	4.25	4.28	3.73	3.85
	40대	234	3.76	3.79	4.16	3.85	3.72
	50대	256	3.71	3.80	4.10	3.99	3.65
	60대 이상	204	3.65	3.42	3.80	4.09	3.39
학력	중졸이하	124	3.62	3.35	3.74	4.11	3.33
	고졸	454	3.72	3.95	4.12	3.87	3.75
	전문대졸	155	3.85	4.04	4.21	3.85	3.89
	대졸이상	317	3.74	4.02	4.20	3.83	3.77
가구형태	1인	111	3.63	4.12	4.14	3.71	3.93
	2인	265	3.72	3.57	3.93	4.02	3.55
	3인	360	3.82	4.08	4.14	3.85	3.70
	4인 이상	314	3.67	3.94	4.23	3.86	3.83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3.66	3.53	3.77	3.96	3.56
	200-400만원 미만	330	3.71	3.93	4.13	3.92	3.70
	400-600만원대	336	3.75	3.93	4.15	3.84	3.79

	600만원 이상	282	3.76	4.00	4.16	3.86	3.74
직업	관리자	36	3.44	3.81	4.08	3.92	3.4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56	4.00	4.00	3.75	3.63
	사무종사자	174	3.79	3.99	4.19	3.83	3.89
	서비스 종사자	170	3.75	4.00	4.11	3.77	3.74
	판매종사자	157	3.77	3.90	4.17	3.86	3.5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3.60	3.38	3.81	4.30	3.3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3.83	4.02	4.07	3.83	3.8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3.86	4.00	4.29	3.81	3.90
	단순노무종사자	29	3.86	3.62	3.97	4.03	3.90
	주부	81	3.78	3.96	4.23	3.78	3.73
	학생	63	3.70	4.48	4.32	3.68	4.19
	무직	32	3.59	4.28	4.28	3.69	3.94
계층의식	하층	99	3.94	3.96	3.98	3.95	3.63
	중하층	471	3.77	3.98	4.21	3.97	3.79
	중층	404	3.65	3.83	4.09	3.80	3.73
	중상층	76	3.63	3.84	3.78	3.66	3.49
정치성향	보수	108	3.63	3.47	3.94	4.12	3.50
	중도보수	257	3.58	3.75	3.99	3.84	3.61
	중도	327	3.74	4.00	4.12	3.85	3.77
	중도진보	293	3.88	4.11	4.26	3.92	3.82
	진보	65	3.74	3.94	4.17	3.60	3.91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3.70	3.68	4.00	4.06	3.62
	아파트	510	3.75	4.01	4.19	3.82	3.73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3.72	4.14	4.11	3.68	3.95
거주시군	천안시	170	3.92	4.05	4.11	3.76	3.78
	공주시	67	3.70	3.82	4.04	3.82	3.61
	보령시	66	3.74	3.79	4.14	3.97	3.91
	아산시	115	3.72	4.10	4.22	3.81	3.78
	서산시	85	3.67	3.78	4.15	3.95	3.80
	논산시	70	3.77	3.86	4.06	3.81	3.70
	계룡시	43	3.58	3.98	4.28	3.91	3.74
	당진시	83	3.77	4.02	4.14	3.98	3.83
	금산군	46	3.63	3.93	4.24	4.00	3.41
	부여군	52	3.65	3.88	4.12	3.90	3.63
	서천군	45	3.64	3.87	4.09	3.98	3.80
	청양군	36	3.56	3.64	4.00	3.94	3.72
	홍성군	64	3.58	3.80	3.89	3.89	3.59
	예산군	57	3.84	3.82	4.09	3.95	3.61
	태안군	51	3.67	3.84	4.06	3.84	3.69
거주행정 단위	읍	322	3.70	3.93	4.15	3.85	3.67
	면	284	3.74	3.74	4.00	4.04	3.68

	동	444	3.75	4.01	4.16	3.80	3.80
--	---	-----	------	------	------	------	------

〈표 89〉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

		(사례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6.1	32.1	38.2	23.6	3.79
성별	남 자	(553)	6.9	34.0	37.6	21.5	3.74
	여 자	(497)	5.2	30.0	38.8	26.0	3.86
결혼여부	기 혼	(778)	3.9	28.0	41.0	27.1	3.91
	미 혼	(272)	12.5	43.8	30.1	13.6	3.45
연령대	20대	(170)	14.7	44.1	23.5	17.6	3.44
	30대	(186)	8.1	39.8	36.6	15.6	3.60
	40대	(234)	6.4	38.9	36.3	18.4	3.67
	50대	(256)	2.7	29.3	44.5	23.4	3.89
	60대 이상	(204)	1.0	10.8	46.1	42.2	4.29
학력	중졸이하	(124)	0.8	9.7	49.2	40.3	4.29
	고졸	(454)	5.3	35.0	39.4	20.3	3.75
	전문대졸	(155)	9.7	31.6	36.8	21.9	3.71
	대졸이상	(317)	7.6	36.9	32.8	22.7	3.71
가구형태	1인	(111)	14.4	37.8	36.9	10.8	3.44
	2인	(265)	3.0	18.1	45.7	33.2	4.09
	3인	(360)	6.4	28.9	34.2	30.6	3.89
	4인 이상	(314)	5.4	45.5	36.9	12.1	3.56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5.9	15.7	52.9	25.5	3.98
	200-400만원 미만	(330)	4.8	33.0	37.9	24.2	3.82
	400-600만원대	(336)	8.6	35.4	36.0	19.9	3.67
	600만원 이상	(282)	4.6	33.0	35.8	26.6	3.84
직업	관리자	(36)	8.3	19.4	41.7	30.6	3.9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	28.1	40.6	28.1	3.94
	사무종사자	(174)	6.3	36.2	34.5	23.0	3.74
	서비스 종사자	(170)	10.6	30.0	38.8	20.6	3.69
	판매종사자	(157)	5.1	33.8	40.1	21.0	3.7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2.6	17.1	49.3	30.9	4.0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9	40.2	34.1	20.7	3.7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40.5	35.7	21.4	3.76

	단순노무 종사자	(29)		6.9	41.4	51.7	4.45
	주부	(81)		34.6	40.7	24.7	3.90
	학생	(63)	14.3	46.0	25.4	14.3	3.40
	무직	(32)	15.6	59.4	15.6	9.4	3.19
계층의식	하층	(99)	3.0	22.2	44.4	30.3	4.02
	중하층	(471)	2.8	30.1	39.5	27.6	3.92
	중층	(404)	9.4	38.1	35.1	17.3	3.60
	중상층	(76)	13.2	25.0	38.2	23.7	3.72
정치성향	보수	(108)	0.9	18.5	46.3	34.3	4.14
	중도보수	(257)	6.6	35.0	35.4	23.0	3.75
	중도	(327)	6.4	32.7	37.0	23.9	3.78
	중도진보	(293)	6.1	33.4	37.9	22.5	3.77
주택형태	진보	(65)	10.8	33.8	43.1	12.3	3.57
	단독주택	(371)	2.2	25.9	47.2	24.8	3.95
	아파트	(510)	6.7	33.5	33.7	26.1	3.79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13.0	41.4	32.0	13.6	3.46
거주시군	천안시	(170)	5.9	38.2	28.2	27.6	3.78
	공주시	(67)	6.0	32.8	38.8	22.4	3.78
	보령시	(66)	12.1	25.8	45.5	16.7	3.67
	아산시	(115)	5.2	27.0	42.6	25.2	3.88
	서산시	(85)	9.4	38.8	31.8	20.0	3.62
	논산시	(70)	7.1	28.6	34.3	30.0	3.87
	계룡시	(43)	4.7	37.2	41.9	16.3	3.70
	당진시	(83)	2.4	37.3	39.8	20.5	3.78
	금산군	(46)	8.7	26.1	34.8	30.4	3.87
	부여군	(52)	1.9	38.5	42.3	17.3	3.75
	서천군	(45)		22.2	53.3	24.4	4.02
	청양군	(36)	11.1	22.2	44.4	22.2	3.78
	홍성군	(64)	6.3	37.5	35.9	20.3	3.70
	예산군	(57)	3.5	21.1	45.6	29.8	4.02
	태안군	(51)	7.8	31.4	37.3	23.5	3.76
거주행정단위	읍	(322)	4.7	31.4	37.3	26.7	3.86
	면	(284)	5.6	25.4	43.7	25.4	3.89
	동	(444)	7.4	36.9	35.4	20.3	3.68

〈 표 90 〉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연금간 격차 완화

		(사례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1.7	20.9	48.2	29.2	4.05
성별	남 자	(553)	1.6	19.9	50.1	28.4	4.05
	여 자	(497)	1.8	21.9	46.1	30.2	4.05
결혼여부	기 혼	(778)	1.4	20.7	47.6	30.3	4.07
	미 혼	(272)	2.6	21.3	50.0	26.1	4.00
연령대	20대	(170)	4.1	17.1	52.4	26.5	4.01
	30대	(186)	0.5	19.4	47.8	32.3	4.12
	40대	(234)	0.9	21.4	49.6	28.2	4.05
	50대	(256)	1.6	21.1	49.6	27.7	4.04
	60대 이상	(204)	2.0	24.5	41.7	31.9	4.03
학력	중졸이하	(124)	2.4	25.0	41.9	30.6	4.01
	고졸	(454)	2.2	22.2	49.1	26.4	4.00
	전문대졸	(155)	0.6	21.3	48.4	29.7	4.07
	대졸이상	(317)	1.3	17.0	49.2	32.5	4.13
가구형태	1인	(111)	6.3	26.1	42.3	25.2	3.86
	2인	(265)	1.1	22.3	48.3	28.3	4.04
	3인	(360)	1.9	20.6	45.8	31.7	4.07
	4인 이상	(314)	0.3	18.2	52.9	28.7	4.10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4.9	27.5	36.3	31.4	3.94
	200-400만원 미만	(330)	1.5	23.3	46.4	28.8	4.02
	400-600만원대	(336)	2.1	22.6	51.5	23.8	3.97
	600만원 이상	(282)	0.4	13.5	50.7	35.5	4.21
직업	관리자	(36)		22.2	47.2	30.6	4.0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15.6	40.6	43.8	4.28
	사무종사자	(174)	1.7	14.4	48.9	35.1	4.17
	서비스 종사자	(170)	1.8	22.9	45.9	29.4	4.03
	판매종사자	(157)	0.6	21.7	54.1	23.6	4.0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2.6	26.3	43.4	27.6	3.9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4.4	50.0	25.6	4.0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11.9	64.3	23.8	4.12
	단순노무 종사자	(29)	3.4	10.3	44.8	41.4	4.24
	주부	(81)	1.2	22.2	43.2	33.3	4.09

	학생	(63)	4.8	15.9	49.2	30.2	4.05
	무직	(32)	6.3	37.5	46.9	9.4	3.59
계층의식	하층	(99)	4.0	23.2	38.4	34.3	4.03
	중하층	(471)	1.1	17.8	47.1	34.0	4.14
	중층	(404)	1.7	22.5	52.5	23.3	3.97
	중상층	(76)	2.6	27.6	44.7	25.0	3.92
	보수	(108)	0.9	13.9	46.3	38.9	4.23
정치성향	중도보수	(257)	3.1	27.2	45.5	24.1	3.91
	중도	(327)	0.9	23.9	48.3	26.9	4.01
	중도진보	(293)	0.7	13.7	53.6	32.1	4.17
	진보	(65)	6.2	24.6	36.9	32.3	3.95
	단독주택	(371)	1.3	23.5	46.4	28.8	4.03
주택형태	아파트	(510)	1.2	17.5	49.0	32.4	4.13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4.1	25.4	49.7	20.7	3.87
거주시군	천안시	(170)	1.2	15.9	44.7	38.2	4.20
	공주시	(67)	4.5	19.4	41.8	34.3	4.06
	보령시	(66)	1.5	21.2	51.5	25.8	4.02
	아산시	(115)	0.9	26.1	47.0	26.1	3.98
	서산시	(85)	4.7	15.3	43.5	36.5	4.12
	논산시	(70)	1.4	21.4	50.0	27.1	4.03
	계룡시	(43)		11.6	53.5	34.9	4.23
	당진시	(83)		19.3	56.6	24.1	4.05
	금산군	(46)		10.9	52.2	37.0	4.26
	부여군	(52)		28.8	51.9	19.2	3.90
	서천군	(45)		20.0	53.3	26.7	4.07
	청양군	(36)		33.3	38.9	27.8	3.94
	홍성군	(64)	6.3	25.0	45.3	23.4	3.86
	예산군	(57)		29.8	49.1	21.1	3.91
	태안군	(51)	3.9	23.5	51.0	21.6	3.90
거주행정 단위	읍	(322)	1.9	20.2	49.4	28.6	4.05
	면	(284)	2.5	23.2	44.7	29.6	4.01
	동	(444)	1.1	19.8	49.5	29.5	4.07

〈 표 91 〉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아동수당 확대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2.8	22.1	54.3	20.9	3.93
성별	남 자	(553)	2.2	22.8	52.6	22.4	3.95
	여 자	(497)	3.4	21.3	56.1	19.1	3.91
결혼여부	기 혼	(778)	3.2	24.0	53.0	19.8	3.89
	미 혼	(272)	1.5	16.5	58.1	23.9	4.04
연령대	20대	(170)	1.2	14.7	61.8	22.4	4.05
	30대	(186)	0.5	14.5	47.8	37.1	4.22
	40대	(234)	0.4	18.4	54.3	26.9	4.08
	50대	(256)	2.0	26.6	56.3	15.2	3.85
	60대 이상	(204)	9.8	33.8	51.5	4.9	3.51
학력	종졸이하	(124)	11.3	33.1	53.2	2.4	3.47
	고졸	(454)	2.2	23.3	54.0	20.5	3.93
	전문대졸	(155)	0.6	16.8	52.3	30.3	4.12
	대졸이상	(317)	1.3	18.6	56.2	24.0	4.03
가구형태	1인	(111)	4.5	16.2	51.4	27.9	4.03
	2인	(265)	5.3	28.7	56.6	9.4	3.70
	3인	(360)	1.9	18.6	54.2	25.3	4.03
	4인 이상	(314)	1.0	22.6	53.5	22.9	3.98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9.8	35.3	48.0	6.9	3.52
	200-400 만원 미만	(330)	2.7	19.7	57.6	20.0	3.95
	400-600 만원대	(336)	0.9	22.9	51.8	24.4	4.00
	600만원 이상	(282)	2.5	19.1	55.7	22.7	3.99
직업	관리자	(36)	2.8	33.3	44.4	19.4	3.8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21.9	68.8	9.4	3.88

	사무종사자	(174)	0.6	18.4	52.9	28.2	4.09
	서비스 종사자	(170)	2.4	19.4	56.5	21.8	3.98
	판매종사자	(157)	1.9	17.2	52.9	28.0	4.0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8.6	37.5	46.7	7.2	3.5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3.2	53.7	23.2	4.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9.5	64.3	23.8	4.10
	단순노무 종사자	(29)	3.4	34.5	51.7	10.3	3.69
	주부	(81)	3.7	14.8	59.3	22.2	4.00
	학생	(63)	1.6	25.4	52.4	20.6	3.92
	무직	(32)	3.1	9.4	71.9	15.6	4.00
계층의식	하층	(99)	5.1	23.2	53.5	18.2	3.85
	중하층	(471)	2.1	17.0	56.3	24.6	4.03
	중층	(404)	3.2	26.0	52.7	18.1	3.86
	중상층	(76)	1.3	31.6	51.3	15.8	3.82
정치성향	보수	(108)	5.6	33.3	55.6	5.6	3.61
	중도보수	(257)	5.8	31.1	46.3	16.7	3.74
	중도	(327)	1.5	20.2	60.6	17.7	3.94
	중도진보	(293)	0.7	10.6	54.9	33.8	4.22
	진보	(65)	1.5	29.2	49.2	20.0	3.88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5.7	24.5	55.3	14.6	3.79
	아파트	(510)	1.0	21.8	52.7	24.5	4.01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1.8	17.8	56.8	23.7	4.02
거주시군	천안시	(170)	1.8	18.8	56.5	22.9	4.01
	공주시	(67)	1.5	22.4	56.7	19.4	3.94
	보령시	(66)	4.5	25.8	45.5	24.2	3.89
	아산시	(115)	0.9	20.9	54.8	23.5	4.01
	서산시	(85)	4.7	17.6	54.1	23.5	3.96
	논산시	(70)		20.0	60.0	20.0	4.00
	계룡시	(43)	2.3	11.6	60.5	25.6	4.09
	당진시	(83)	1.2	25.3	54.2	19.3	3.92
	금산군	(46)		15.2	65.2	19.6	4.04
	부여군	(52)	3.8	25.0	51.9	19.2	3.87
	서천군	(45)	2.2	26.7	46.7	24.4	3.93
	청양군	(36)	11.1	27.8	44.4	16.7	3.67
	홍성군	(64)	6.3	31.3	46.9	15.6	3.72
	예산군	(57)	5.3	22.8	50.9	21.1	3.88
	태안군	(51)	2.0	27.5	60.8	9.8	3.78
거주행정단위	읍	(322)	2.5	20.5	54.3	22.7	3.97

	면	(284)	4.6	25.0	53.5	16.9	3.83
	동	(444)	1.8	21.4	54.7	22.1	3.97

〈 표 92 〉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전국민 상병(傷病)수당 지급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3.1	26.0	51.9	19.0	3.87
성별	남 자	(553)	2.0	25.9	53.0	19.2	3.89
	여 자	(497)	4.4	26.2	50.7	18.7	3.84
결혼여부	기 혼	(778)	4.0	27.0	50.1	18.9	3.84
	미 혼	(272)	0.7	23.2	57.0	19.1	3.94
연령대	20대	(170)		18.8	60.0	21.2	4.02
	30대	(186)	1.1	20.4	58.1	20.4	3.98
	40대	(234)	1.7	26.5	56.0	15.8	3.86
	50대	(256)	2.0	34.8	43.4	19.9	3.81
	60대 이상	(204)	10.8	25.5	45.6	18.1	3.71
학력	중졸이하	(124)	13.7	28.2	43.5	14.5	3.59
	고졸	(454)	2.9	24.9	51.8	20.5	3.90
	전문대졸	(155)		23.9	56.1	20.0	3.96
	대졸이상	(317)	0.9	27.8	53.3	18.0	3.88
가구형태	1인	(111)	4.5	23.4	53.2	18.9	3.86
	2인	(265)	6.8	26.4	49.4	17.4	3.77
	3인	(360)	1.7	27.8	54.4	16.1	3.85
	4인 이상	(314)	1.3	24.5	50.6	23.6	3.96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1.8	29.4	47.1	11.8	3.59
	200-400만원 미만	(330)	3.3	20.6	54.2	21.8	3.95
	400-600만원대	(336)	2.4	29.5	49.1	19.0	3.85
	600만원 이상	(282)	0.7	27.0	54.3	18.1	3.90
직업	관리자	(36)		47.2	41.7	11.1	3.6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	28.1	59.4	9.4	3.75
	사무종사자	(174)	0.6	23.0	54.6	21.8	3.98
	서비스 종사자	(170)	2.4	28.2	57.1	12.4	3.79
	판매종사자	(157)	3.2	25.5	49.7	21.7	3.9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0.5	30.3	41.4	17.8	3.6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35.4	46.3	18.3	3.8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23.8	54.8	19.0	3.90
	단순노무 종사자	(29)	3.4	13.8	51.7	31.0	4.10
	주부	(81)	4.9	12.3	53.1	29.6	4.07
	학생	(63)		22.2	58.7	19.0	3.97
	무직	(32)		18.8	68.8	12.5	3.94
계층의식	하층	(99)	8.1	33.3	50.5	8.1	3.59
	중하층	(471)	3.2	18.7	54.6	23.6	3.99

	중층	(404)	2.0	30.0	50.5	17.6	3.84
	중상층	(76)	2.6	40.8	44.7	11.8	3.66
정치성향	보수	(108)	6.5	23.1	43.5	26.9	3.91
	중도보수	(257)	7.0	31.9	46.3	14.8	3.69
	중도	(327)	1.5	27.2	53.5	17.7	3.87
	중도진보	(293)	1.0	19.8	58.4	20.8	3.99
	진보	(65)		29.2	50.8	20.0	3.91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6.2	25.1	46.4	22.4	3.85
	아파트	(510)	1.4	25.5	54.9	18.2	3.90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1.8	29.6	55.0	13.6	3.80
거주시군	천안시	(170)	1.8	21.8	61.2	15.3	3.90
	공주시	(67)	1.5	17.9	61.2	19.4	3.99
	보령시	(66)	7.6	21.2	57.6	13.6	3.77
	아산시	(115)	0.9	26.1	49.6	23.5	3.96
	서산시	(85)	2.4	22.4	52.9	22.4	3.95
	논산시	(70)		34.3	54.3	11.4	3.77
	계룡시	(43)	2.3	25.6	60.5	11.6	3.81
	당진시	(83)	2.4	28.9	48.2	20.5	3.87
	금산군	(46)		19.6	52.2	28.3	4.09
	부여군	(52)	3.8	28.8	50.0	17.3	3.81
	서천군	(45)	6.7	28.9	48.9	15.6	3.73
	청양군	(36)	8.3	30.6	38.9	22.2	3.75
	홍성군	(64)	7.8	28.1	42.2	21.9	3.78
	예산군	(57)	3.5	29.8	43.9	22.8	3.86
	태안군	(51)	5.9	37.3	35.3	21.6	3.73
거주행정 단위	읍	(322)	2.5	26.7	50.0	20.8	3.89
	면	(284)	6.3	27.8	48.9	16.9	3.76
	동	(444)	1.6	24.3	55.2	18.9	3.91

〈 표 93 〉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청년사회진출금 지급

		(사례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점)
[전체]		(1050)	6.8	51.0	36.9	5.3	3.41
성별	남 자	(553)	5.2	49.5	39.1	6.1	3.46
	여 자	(497)	8.5	52.7	34.4	4.4	3.35
결혼여부	기 혼	(778)	8.4	56.6	32.3	2.8	3.30
	미 혼	(272)	2.2	35.3	50.0	12.5	3.73
연령대	20대	(170)	1.8	28.2	55.9	14.1	3.82
	30대	(186)	4.8	46.8	39.8	8.6	3.52
	40대	(234)	5.6	54.7	36.8	3.0	3.37
	50대	(256)	7.4	54.7	34.8	3.1	3.34
	60대 이상	(204)	13.2	65.2	21.1	0.5	3.09
학력	중졸이하	(124)	15.3	63.7	20.2	0.8	3.06
	고졸	(454)	6.8	49.1	39.0	5.1	3.42
	전문대졸	(155)	4.5	49.0	43.2	3.2	3.45
	대졸이상	(317)	4.4	49.8	37.2	8.5	3.50
가구형태	1인	(111)	4.5	50.5	36.9	8.1	3.49
	2인	(265)	11.3	60.0	27.2	1.5	3.19
	3인	(360)	4.4	48.3	39.4	7.8	3.51
	4인 이상	(314)	6.4	46.8	42.0	4.8	3.45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0.8	64.7	23.5	1.0	3.15
	200~400만원 미만	(330)	7.9	52.4	34.5	5.2	3.37
	400~600만원대	(336)	6.0	46.7	42.6	4.8	3.46
	600만원 이상	(282)	5.0	49.6	37.6	7.8	3.48
직업	관리자	(36)	2.8	47.2	41.7	8.3	3.5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6.3	62.5	25.0	6.3	3.31
	사무종사자	(174)	3.4	48.9	39.1	8.6	3.53
	서비스 종사자	(170)	7.6	52.4	34.7	5.3	3.38
	판매종사자	(157)	7.0	50.3	38.9	3.8	3.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3.2	59.9	26.3	0.7	3.1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4	50.0	46.3	1.2	3.4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52.4	33.3	11.9	3.55
	단순노무 종사자	(29)	13.8	58.6	27.6		3.14
	주부	(81)	9.9	58.0	29.6	2.5	3.25
	학생	(63)	3.2	31.7	55.6	9.5	3.71
	무직	(32)	3.1	25.0	53.1	18.8	3.88

계층의식	하층	(99)	9.1	50.5	34.3	6.1	3.37
	중하층	(471)	5.9	50.7	38.2	5.1	3.42
	중층	(404)	7.7	52.0	34.7	5.7	3.38
	중상층	(76)	3.9	48.7	43.4	3.9	3.47
정치성향	보수	(108)	13.9	62.0	23.1	0.9	3.11
	중도보수	(257)	10.9	51.8	34.2	3.1	3.30
	중도	(327)	4.0	49.8	39.4	6.7	3.49
	중도진보	(293)	3.8	48.1	41.0	7.2	3.52
	진보	(65)	6.2	49.2	38.5	6.2	3.45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10.2	51.8	33.7	4.3	3.32
	아파트	(510)	5.7	50.8	37.8	5.7	3.44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2.4	50.3	40.8	6.5	3.51
거주시군	천안시	(170)	4.7	48.2	38.2	8.8	3.51
	공주시	(67)	3.0	56.7	38.8	1.5	3.39
	보령시	(66)	7.6	48.5	37.9	6.1	3.42
	아산시	(115)	2.6	44.3	52.2	0.9	3.51
	서산시	(85)	9.4	45.9	36.5	8.2	3.44
	논산시	(70)	5.7	55.7	31.4	7.1	3.40
	계룡시	(43)	2.3	60.5	34.9	2.3	3.37
	당진시	(83)	2.4	54.2	37.3	6.0	3.47
	금산군	(46)	6.5	54.3	34.8	4.3	3.37
	부여군	(52)	7.7	59.6	28.8	3.8	3.29
	서천군	(45)	6.7	48.9	35.6	8.9	3.47
	청양군	(36)	19.4	41.7	38.9		3.19
	홍성군	(64)	15.6	59.4	18.8	6.3	3.16
	예산군	(57)	5.3	52.6	38.6	3.5	3.40
	태안군	(51)	15.7	45.1	33.3	5.9	3.29
거주행정 단위	읍	(322)	7.8	51.2	35.7	5.3	3.39
	면	(284)	8.1	55.3	33.5	3.2	3.32
	동	(444)	5.2	48.2	39.9	6.8	3.48

〈표 94〉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 (6)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2.2	29.7	56.9	11.2	3.77
성별	남 자	(553)	2.0	27.3	57.3	13.4	3.82
	여 자	(497)	2.4	32.4	56.3	8.9	3.72
결혼여부	기 혼	(778)	2.8	32.0	56.2	9.0	3.71
	미 혼	(272)	0.4	23.2	58.8	17.6	3.94
연령대	20대	(170)	0.6	21.2	60.0	18.2	3.96
	30대	(186)		18.8	64.0	17.2	3.98
	40대	(234)	1.3	30.3	58.1	10.3	3.77
	50대	(256)	2.0	35.2	55.9	7.0	3.68
	60대 이상	(204)	6.9	39.2	47.5	6.4	3.53
학력	중졸이하	(124)	8.9	40.3	43.5	7.3	3.49
	고졸	(454)	2.0	25.6	61.5	11.0	3.81
	전문대졸	(155)		31.6	55.5	12.9	3.81
	대졸이상	(317)	0.9	30.6	56.2	12.3	3.80
가구형태	1인	(111)	5.4	20.7	55.0	18.9	3.87
	2인	(265)	3.0	35.1	54.3	7.5	3.66
	3인	(360)	1.7	34.4	53.9	10.0	3.72
	4인 이상	(314)	1.0	22.9	63.1	13.1	3.88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5.9	39.2	43.1	11.8	3.61
	200~400만원 미만	(330)	2.4	25.5	58.2	13.9	3.84
	400~600만원대	(336)	1.5	30.1	60.1	8.3	3.75
	600만원 이상	(282)	1.4	30.9	56.4	11.3	3.78
직업	관리자	(36)		55.6	36.1	8.3	3.5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	43.8	53.1		3.50
	사무종사자	(174)	1.7	25.3	60.3	12.6	3.84
	서비스 종사자	(170)	1.8	31.8	55.3	11.2	3.76
	판매종사자	(157)	2.5	26.8	59.9	10.8	3.7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5.9	37.5	46.7	9.9	3.6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8.0	57.3	14.6	3.8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38.1	50.0	11.9	3.74
	단순노무 종사자	(29)	3.4	17.2	65.5	13.8	3.90
	주부	(81)	2.5	23.5	65.4	8.6	3.80
	학생	(63)		14.3	68.3	17.5	4.03
	무직	(32)		28.1	62.5	9.4	3.81
계층의식	하층	(99)	4.0	33.3	52.5	10.1	3.69
	중하층	(471)	2.8	25.9	58.0	13.4	3.82

	중층	(404)	1.2	29.5	58.7	10.6	3.79
	중상층	(76)	1.3	50.0	46.1	2.6	3.50
정치성향	보수	(108)	5.6	25.9	60.2	8.3	3.71
	중도보수	(257)	5.1	33.1	50.2	11.7	3.68
	중도	(327)	0.9	33.3	56.3	9.5	3.74
	중도진보	(293)	0.3	25.3	60.8	13.7	3.88
	진보	(65)		24.6	63.1	12.3	3.88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4.0	30.5	53.9	11.6	3.73
	아파트	(510)	1.2	29.6	59.8	9.4	3.77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1.2	28.4	54.4	16.0	3.85
거주시군	천안시	(170)	1.2	24.7	60.0	14.1	3.87
	공주시	(67)		35.8	53.7	10.4	3.75
	보령시	(66)	3.0	18.2	66.7	12.1	3.88
	아산시	(115)		25.2	65.2	9.6	3.84
	서산시	(85)	1.2	23.5	64.7	10.6	3.85
	논산시	(70)	1.4	28.6	55.7	14.3	3.83
	계룡시	(43)	4.7	20.9	65.1	9.3	3.79
	당진시	(83)	2.4	28.9	62.7	6.0	3.72
	금산군	(46)		23.9	65.2	10.9	3.87
	부여군	(52)	1.9	50.0	32.7	15.4	3.62
	서천군	(45)	4.4	22.2	62.2	11.1	3.80
	청양군	(36)	5.6	30.6	41.7	22.2	3.81
	홍성군	(64)	6.3	51.6	28.1	14.1	3.50
	예산군	(57)	3.5	36.8	56.1	3.5	3.60
	태안군	(51)	3.9	39.2	51.0	5.9	3.59
거주행정 단위	읍	(322)	1.9	35.7	51.2	11.2	3.72
	면	(284)	3.2	33.5	51.4	12.0	3.72
	동	(444)	1.8	23.0	64.4	10.8	3.84

〈표 95〉 사회보장 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사례 수)	(1)기초 노령 연금 대폭 인상	(2) 연금간 격차 완화 (국민 연금, 공무원연 금, 교원 연금 등)	(3)아동 수당 확대	(4) 전국민 상병 (傷病) 수당 지급 (부상과 질환으로 일을 못할 경우 적정 수당지급)	(5)청년 사회 진출금 지급 (1억원 정도 일시 지급)	(6) 전국민 고용 보험제 실시 (임시직, 플랫폼노 동직, 농어민 등)
[전체]		1050	3.79	4.05	3.93	3.87	3.41	3.77
성별	남 자	553	3.74	4.05	3.95	3.89	3.46	3.82
	여 자	497	3.86	4.05	3.91	3.84	3.35	3.72
결혼여부	기 혼	778	3.91	4.07	3.89	3.84	3.30	3.71
	미 혼	272	3.45	4.00	4.04	3.94	3.73	3.94
연령대	20대	170	3.44	4.01	4.05	4.02	3.82	3.96
	30대	186	3.60	4.12	4.22	3.98	3.52	3.98
	40대	234	3.67	4.05	4.08	3.86	3.37	3.77
	50대	256	3.89	4.04	3.85	3.81	3.34	3.68
	60대 이상	204	4.29	4.03	3.51	3.71	3.09	3.53
학력	초졸이하	124	4.29	4.01	3.47	3.59	3.06	3.49
	고졸	454	3.75	4.00	3.93	3.90	3.42	3.81
	전문대졸	155	3.71	4.07	4.12	3.96	3.45	3.81
	대졸이상	317	3.71	4.13	4.03	3.88	3.50	3.80
가구형태	1인	111	3.44	3.86	4.03	3.86	3.49	3.87
	2인	265	4.09	4.04	3.70	3.77	3.19	3.66
	3인	360	3.89	4.07	4.03	3.85	3.51	3.72
	4인 이상	314	3.56	4.10	3.98	3.96	3.45	3.88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3.98	3.94	3.52	3.59	3.15	3.61
	200-400만원 미만	330	3.82	4.02	3.95	3.95	3.37	3.84
	400-600만원대	336	3.67	3.97	4.00	3.85	3.46	3.75
	600만원 이상	282	3.84	4.21	3.99	3.90	3.48	3.78
직업	관리자	36	3.94	4.08	3.81	3.64	3.56	3.5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94	4.28	3.88	3.75	3.31	3.50
	사무종사자	174	3.74	4.17	4.09	3.98	3.53	3.84
	서비스 종사자	170	3.69	4.03	3.98	3.79	3.38	3.76
	판매종사자	157	3.77	4.01	4.07	3.90	3.39	3.7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4.09	3.96	3.53	3.66	3.14	3.6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3.71	4.01	4.00	3.83	3.46	3.8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3.76	4.12	4.10	3.90	3.55	3.74
	단순노무종사자	29	4.45	4.24	3.69	4.10	3.14	3.90
	주부	81	3.90	4.09	4.00	4.07	3.25	3.80
	학생	63	3.40	4.05	3.92	3.97	3.71	4.03
	무직	32	3.19	3.59	4.00	3.94	3.88	3.81
계층의식	하층	99	4.02	4.03	3.85	3.59	3.37	3.69
	중하층	471	3.92	4.14	4.03	3.99	3.42	3.82
	중층	404	3.60	3.97	3.86	3.84	3.38	3.79
	중상층	76	3.72	3.92	3.82	3.66	3.47	3.50
정치성향	보수	108	4.14	4.23	3.61	3.91	3.11	3.71
	중도보수	257	3.75	3.91	3.74	3.69	3.30	3.68
	중도	327	3.78	4.01	3.94	3.87	3.49	3.74
	중도진보	293	3.77	4.17	4.22	3.99	3.52	3.88
	진보	65	3.57	3.95	3.88	3.91	3.45	3.88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3.95	4.03	3.79	3.85	3.32	3.73
	아파트	510	3.79	4.13	4.01	3.90	3.44	3.77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3.46	3.87	4.02	3.80	3.51	3.85
거주시군	천안시	170	3.78	4.20	4.01	3.90	3.51	3.87
	공주시	67	3.78	4.06	3.94	3.99	3.39	3.75
	보령시	66	3.67	4.02	3.89	3.77	3.42	3.88
	아산시	115	3.88	3.98	4.01	3.96	3.51	3.84
	서산시	85	3.62	4.12	3.96	3.95	3.44	3.85
	논산시	70	3.87	4.03	4.00	3.77	3.40	3.83
	계룡시	43	3.70	4.23	4.09	3.81	3.37	3.79
	당진시	83	3.78	4.05	3.92	3.87	3.47	3.72
	금산군	46	3.87	4.26	4.04	4.09	3.37	3.87
	부여군	52	3.75	3.90	3.87	3.81	3.29	3.62
	서천군	45	4.02	4.07	3.93	3.73	3.47	3.80
	청양군	36	3.78	3.94	3.67	3.75	3.19	3.81
	홍성군	64	3.70	3.86	3.72	3.78	3.16	3.50
	예산군	57	4.02	3.91	3.88	3.86	3.40	3.60
	태안군	51	3.76	3.90	3.78	3.73	3.29	3.59
거주행정 단위	읍	322	3.86	4.05	3.97	3.89	3.39	3.72
	면	284	3.89	4.01	3.83	3.76	3.32	3.72
	동	444	3.68	4.07	3.97	3.91	3.48	3.84

〈표 96〉 부동산/주거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토지보유세 강화

		(사례 수)	전혀 동의 않음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1	3.1	21.3	48.6	26.9	3.99
성별	남 자	(553)	0.2	3.6	20.1	50.6	25.5	3.98
	여 자	(497)	.	2.6	22.7	46.3	28.4	4.00
결혼여부	기 혼	(778)	0.1	3.9	23.7	48.2	24.2	3.92
	미 혼	(272)	.	1.1	14.7	49.6	34.6	4.18
연령대	20대	(170)	.	1.2	16.5	47.1	35.3	4.16
	30대	(186)	.	0.5	12.9	52.7	33.9	4.20
	40대	(234)	0.4	0.9	15.8	52.6	30.3	4.12
	50대	(256)	.	4.3	28.5	48.4	18.8	3.82
	60대 이상	(204)	.	8.3	30.4	41.7	19.6	3.73
학력	중졸이하	(124)	.	7.3	29.8	41.9	21.0	3.77
	고졸	(454)	.	3.3	22.9	51.3	22.5	3.93
	전문대졸	(155)	.	1.9	18.1	43.2	36.8	4.15
	대졸이상	(317)	0.3	1.9	17.4	49.8	30.6	4.09
가구형태	1인	(111)	.	3.6	16.2	45.9	34.2	4.11
	2인	(265)	.	7.2	24.5	47.9	20.4	3.82
	3인	(360)	0.3	1.7	21.7	45.6	30.8	4.05
	4인 이상	(314)	.	1.3	20.1	53.5	25.2	4.03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	8.8	30.4	48.0	12.7	3.65
	200~400만원 미만	(330)	.	3.6	18.2	48.2	30.0	4.05
	400~600만원대	(336)	.	2.4	22.0	50.3	25.3	3.99
	600만원 이상	(282)	0.4	1.4	20.9	47.2	30.1	4.05
직업	관리자	(36)	2.8	5.6	25.0	36.1	30.6	3.8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	3.1	37.5	34.4	25.0	3.81
	사무종사자	(174)	.	1.1	15.5	47.7	35.6	4.18
	서비스 종사자	(170)	.	1.2	21.8	51.2	25.9	4.02
	판매종사자	(157)	.	4.5	15.3	50.3	29.9	4.0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	7.2	32.2	46.1	14.5	3.6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	3.7	17.1	48.8	30.5	4.0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	2.4	16.7	54.8	26.2	4.05
	단순노무 종사자	(29)	.	3.4	3.4	62.1	31.0	4.21
	주부	(81)	.	1.2	32.1	44.4	22.2	3.88
	학생	(63)	.	1.6	14.3	52.4	31.7	4.14
	무직	(32)	.	3.1	28.1	53.1	15.6	3.81
계층의식	하층	(99)	.	6.1	18.2	53.5	22.2	3.92
	중하층	(471)	.	2.8	18.3	45.2	33.8	4.10

	중층	(404)	.	2.0	23.5	52.5	22.0	3.95
	중상층	(76)	1.3	7.9	32.9	42.1	15.8	3.63
정치성향	보수	(108)	.	2.8	22.2	51.9	23.1	3.95
	중도보수	(257)	0.4	7.0	27.2	44.0	21.4	3.79
	중도	(327)	.	2.8	19.0	49.5	28.7	4.04
	중도진보	(293)	.	0.3	17.4	50.9	31.4	4.13
	진보	(65)	.	3.1	26.2	46.2	24.6	3.92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0.3	5.7	24.5	48.5	21.0	3.84
	아파트	(510)	.	1.8	19.4	47.3	31.6	4.09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	1.8	20.1	52.7	25.4	4.02
거주시군	천안시	(170)	.	1.8	25.3	41.2	31.8	4.03
	공주시	(67)	.	9.0	17.9	43.3	29.9	3.94
	보령시	(66)	.	1.5	16.7	65.2	16.7	3.97
	아산시	(115)	.	5.2	14.8	53.0	27.0	4.02
	서산시	(85)	.	2.4	27.1	47.1	23.5	3.92
	논산시	(70)	.	8.6	22.9	42.9	25.7	3.86
	계룡시	(43)	.	2.3	14.0	44.2	39.5	4.21
	당진시	(83)	.	2.4	18.1	43.4	36.1	4.13
	금산군	(46)	2.2	.	17.4	52.2	28.3	4.04
	부여군	(52)	.	1.9	21.2	51.9	25.0	4.00
	서천군	(45)	.	2.2	15.6	55.6	26.7	4.07
	청양군	(36)	.	.	33.3	38.9	27.8	3.94
	홍성군	(64)	.	1.6	23.4	51.6	23.4	3.97
	예산군	(57)	.	3.5	24.6	56.1	15.8	3.84
	태안군	(51)	.	2.0	27.5	52.9	17.6	3.86
거주행정 단위	읍	(322)	0.3	1.6	24.5	45.0	28.6	4.00
	면	(284)	.	5.3	20.4	51.8	22.5	3.92
	동	(444)	.	2.9	19.6	49.1	28.4	4.03

〈표 97〉 부동산/주거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공공임대주택 확대

		(사례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점)
[전체]		(1050)	0.7	17.2	61.8	20.3	4.02
성별	남 자	(553)	0.2	18.6	60.2	21.0	4.02
	여 자	(497)	1.2	15.7	63.6	19.5	4.01
결혼여부	기 혼	(778)	0.6	18.0	60.3	21.1	4.02
	미 혼	(272)	0.7	15.1	66.2	18.0	4.01
연령대	20대	(170)	0.6	11.2	68.8	19.4	4.07
	30대	(186)	0.5	11.8	62.4	25.3	4.12
	40대	(234)		18.4	59.4	22.2	4.04
	50대	(256)	0.4	18.4	60.9	20.3	4.01
	60대 이상	(204)	2.0	24.5	59.3	14.2	3.86
학력	중졸이하	(124)	0.8	28.2	61.3	9.7	3.80
	고졸	(454)	1.1	13.4	65.6	19.8	4.04
	전문대졸	(155)	0.6	16.8	61.9	20.6	4.03
	대졸이상	(317)		18.6	56.5	24.9	4.06
가구형태	1인	(111)	2.7	23.4	60.4	13.5	3.85
	2인	(265)	1.1	22.3	58.9	17.7	3.93
	3인	(360)	0.3	15.6	60.3	23.9	4.08
	4인 이상	(314)		12.7	66.6	20.7	4.08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2.9	33.3	53.9	9.8	3.71
	200-400만원 미만	(330)	0.9	14.5	65.5	19.1	4.03
	400-600만원대	(336)	0.3	17.0	60.7	22.0	4.04
	600만원 이상	(282)		14.9	61.7	23.4	4.09
직업	관리자	(36)		22.2	63.9	13.9	3.9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28.1	53.1	18.8	3.91
	사무종사자	(174)		14.9	62.1	23.0	4.08
	서비스 종사자	(170)	0.6	15.9	63.5	20.0	4.03
	판매종사자	(157)	1.3	12.1	62.4	24.2	4.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0.7	28.9	59.2	11.2	3.8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4	25.6	48.8	23.2	3.93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8	66.7	28.6	4.24
	단순노무 종사자	(29)		10.3	65.5	24.1	4.14
	주부	(81)	1.2	7.4	69.1	22.2	4.12
	학생	(63)		11.1	71.4	17.5	4.06
	무직	(32)		28.1	53.1	18.8	3.91
계층의식	하층	(99)	2.0	29.3	48.5	20.2	3.87
	중하층	(471)	0.8	10.0	66.2	22.9	4.11

	중층	(404)	0.2	19.6	62.4	17.8	3.98
	중상층	(76)		34.2	48.7	17.1	3.83
정치성향	보수	(108)	1.9	16.7	60.2	21.3	4.01
	중도보수	(257)	1.6	28.8	55.6	14.0	3.82
	중도	(327)		15.3	64.8	19.9	4.05
	중도진보	(293)	0.3	8.5	63.8	27.3	4.18
	진보	(65)		21.5	64.6	13.8	3.92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1.3	18.1	64.2	16.4	3.96
	아파트	(510)		14.7	61.8	23.5	4.09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1.2	23.1	56.8	18.9	3.93
거주시군	천안시	(170)	0.6	15.9	60.0	23.5	4.06
	공주시	(67)	1.5	11.9	74.6	11.9	3.97
	보령시	(66)		18.2	59.1	22.7	4.05
	아산시	(115)		16.5	64.3	19.1	4.03
	서산시	(85)		10.6	65.9	23.5	4.13
	논산시	(70)		21.4	61.4	17.1	3.96
	계룡시	(43)		16.3	55.8	27.9	4.12
	당진시	(83)		18.1	49.4	32.5	4.14
	금산군	(46)		15.2	65.2	19.6	4.04
	부여군	(52)	1.9	13.5	69.2	15.4	3.98
	서천군	(45)	2.2	17.8	57.8	22.2	4.00
	청양군	(36)		16.7	66.7	16.7	4.00
	홍성군	(64)	1.6	21.9	65.6	10.9	3.86
	예산군	(57)	3.5	22.8	66.7	7.0	3.77
	태안군	(51)		27.5	47.1	25.5	3.98
거주행정 단위	읍	(322)	0.6	14.6	64.6	20.2	4.04
	면	(284)	1.4	20.8	59.9	18.0	3.94
	동	(444)	0.2	16.9	61.0	21.8	4.05

〈표 98〉 부동산/주거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③청년주택 확대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8	20.8	55.7	22.8	4.00
성별	남 자	(553)	0.7	21.9	54.6	22.8	3.99
	여 자	(497)	0.8	19.5	56.9	22.7	4.02
결혼여부	기 혼	(778)	1.0	22.9	57.8	18.3	3.93
	미 혼	(272)		14.7	49.6	35.7	4.21
연령대	20대	(170)		10.6	48.8	40.6	4.30
	30대	(186)	0.5	12.9	56.5	30.1	4.16
	40대	(234)	0.4	23.1	57.7	18.8	3.95
	50대	(256)		25.0	58.2	16.8	3.92
	60대 이상	(204)	2.9	28.4	55.4	13.2	3.79
학력	중졸이하	(124)	4.0	26.6	52.4	16.9	3.82
	고졸	(454)	0.4	18.9	55.7	24.9	4.05
	전문대졸	(155)		22.6	57.4	20.0	3.97
	대졸이상	(317)	0.3	20.2	56.2	23.3	4.03
가구형태	1인	(111)	0.9	20.7	54.1	24.3	4.02
	2인	(265)	1.5	24.9	57.7	15.8	3.88
	3인	(360)	0.6	20.3	57.5	21.7	4.00
	4인 이상	(314)	0.3	17.8	52.5	29.3	4.11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2.0	34.3	52.0	11.8	3.74
	200~400만원 미만	(330)	1.2	16.7	58.5	23.6	4.05
	400~600만원대	(336)	0.3	19.9	54.5	25.3	4.05
	600만원 이상	(282)	0.4	21.6	55.3	22.7	4.00
직업	관리자	(36)		33.3	58.3	8.3	3.7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3	56.3	12.5	3.81
	사무종사자	(174)		18.4	57.5	24.1	4.06
	서비스 종사자	(170)		20.6	54.7	24.7	4.04
	판매종사자	(157)	1.3	15.9	58.6	24.2	4.0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2.6	27.6	55.3	14.5	3.8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1.2	23.2	63.4	12.2	3.8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6.2	42.9	31.0	4.05
	단순노무종사자	(29)		13.8	72.4	13.8	4.00
	주부	(81)		19.8	55.6	24.7	4.05
	학생	(63)		12.7	46.0	41.3	4.29
	무직	(32)	3.1	12.5	37.5	46.9	4.28
계층의식	하층	(99)	2.0	25.3	53.5	19.2	3.90
	중하층	(471)	0.8	15.3	57.5	26.3	4.09
	중층	(404)	0.5	23.3	54.2	22.0	3.98
	중상층	(76)		35.5	55.3	9.2	3.74

정치성향	보수	(108)	3.7	17.6	59.3	19.4	3.94
	중도보수	(257)	0.8	34.2	52.5	12.5	3.77
	중도	(327)	0.6	20.5	55.0	23.9	4.02
	중도진보	(293)		10.9	57.7	31.4	4.20
	진보	(65)		18.5	56.9	24.6	4.06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1.3	20.5	56.6	21.6	3.98
	아파트	(510)	0.2	19.4	56.3	24.1	4.04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1.2	25.4	52.1	21.3	3.93
거주시군	천안시	(170)	0.6	18.8	53.5	27.1	4.07
	공주시	(67)	1.5	29.9	38.8	29.9	3.97
	보령시	(66)	1.5	24.2	47.0	27.3	4.00
	아산시	(115)		26.1	53.0	20.9	3.95
	서산시	(85)		10.6	71.8	17.6	4.07
	논산시	(70)		25.7	62.9	11.4	3.86
	계룡시	(43)		9.3	65.1	25.6	4.16
	당진시	(83)	2.4	15.7	67.5	14.5	3.94
	금산군	(46)		13.0	58.7	28.3	4.15
	부여군	(52)		23.1	51.9	25.0	4.02
	서천군	(45)	2.2	11.1	53.3	33.3	4.18
	청양군	(36)		25.0	44.4	30.6	4.06
	홍성군	(64)		34.4	45.3	20.3	3.86
	예산군	(57)		21.1	59.6	19.3	3.98
	태안군	(51)	3.9	19.6	58.8	17.6	3.90
거주행정 단위	읍	(322)	0.3	21.4	55.0	23.3	4.01
	면	(284)	1.4	21.1	56.0	21.5	3.98
	동	(444)	0.7	20.0	56.1	23.2	4.02

〈표 99〉 부동산/주거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사례 수)	(1)토지 보유세강화* (세율 인상 확대)	(2)공공임대주택 확대	(3)청년주택 확대 (청년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 등)
[전체]		1050	3.99	4.02	4.00
성별	남 자	553	3.98	4.02	3.99
	여 자	497	4.00	4.01	4.02
결혼여부	기 혼	778	3.92	4.02	3.93
	미 혼	272	4.18	4.01	4.21
연령대	20대	170	4.16	4.07	4.30
	30대	186	4.20	4.12	4.16
	40대	234	4.12	4.04	3.95
	50대	256	3.82	4.01	3.92
	60대 이상	204	3.73	3.86	3.79
학력	중졸이하	124	3.77	3.80	3.82
	고졸	454	3.93	4.04	4.05
	전문대졸	155	4.15	4.03	3.97
	대졸이상	317	4.09	4.06	4.03
가구형태	1인	111	4.11	3.85	4.02
	2인	265	3.82	3.93	3.88
	3인	360	4.05	4.08	4.00
	4인 이상	314	4.03	4.08	4.11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3.65	3.71	3.74
	200~400만원 미만	330	4.05	4.03	4.05
	400~600만원대	336	3.99	4.04	4.05
	600만원 이상	282	4.05	4.09	4.00
직업	관리자	36	3.86	3.92	3.7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81	3.91	3.81
	사무종사자	174	4.18	4.08	4.06
	서비스 종사자	170	4.02	4.03	4.04
	판매종사자	157	4.06	4.10	4.0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3.68	3.81	3.8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06	3.93	3.8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05	4.24	4.05
	단순노무종사자	29	4.21	4.14	4.00
	주부	81	3.88	4.12	4.05
	학생	63	4.14	4.06	4.29
	무직	32	3.81	3.91	4.28
계층의식	하층	99	3.92	3.87	3.90
	중하층	471	4.10	4.11	4.09
	중층	404	3.95	3.98	3.98
	중상층	76	3.63	3.83	3.74

정치성향	보수	108	3.95	4.01	3.94
	중도보수	257	3.79	3.82	3.77
	중도	327	4.04	4.05	4.02
	중도진보	293	4.13	4.18	4.20
	진보	65	3.92	3.92	4.06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3.84	3.96	3.98
	아파트	510	4.09	4.09	4.04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4.02	3.93	3.93
거주시군	천안시	170	4.03	4.06	4.07
	공주시	67	3.94	3.97	3.97
	보령시	66	3.97	4.05	4.00
	아산시	115	4.02	4.03	3.95
	서산시	85	3.92	4.13	4.07
	논산시	70	3.86	3.96	3.86
	계룡시	43	4.21	4.12	4.16
	당진시	83	4.13	4.14	3.94
	금산군	46	4.04	4.04	4.15
	부여군	52	4.00	3.98	4.02
	서천군	45	4.07	4.00	4.18
	청양군	36	3.94	4.00	4.06
	홍성군	64	3.97	3.86	3.86
	예산군	57	3.84	3.77	3.98
	태안군	51	3.86	3.98	3.90
거주행정 단위	읍	322	4.00	4.04	4.01
	면	284	3.92	3.94	3.98
	동	444	4.03	4.05	4.02

〈표 100〉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6	13.4	43.1	42.9	4.28
성별	남 자	(553)	0.5	13.9	43.4	42.1	4.27
	여 자	(497)	0.6	12.9	42.9	43.7	4.30
결혼여부	기 혼	(778)	0.6	15.0	45.6	38.7	4.22
	미 혼	(272)	0.4	8.8	36.0	54.8	4.45
연령대	20대	(170)	.	4.7	34.7	60.6	4.56
	30대	(186)	0.5	4.3	40.3	54.8	4.49
	40대	(234)	1.3	11.1	43.6	44.0	4.30
	50대	(256)	0.8	23.0	46.1	30.1	4.05
	60대 이상	(204)	.	19.6	48.5	31.9	4.12
학력	종졸이하	(124)	.	22.6	52.4	25.0	4.02
	고졸	(454)	0.9	10.1	45.4	43.6	4.32
	전문대졸	(155)	.	11.0	38.1	51.0	4.40
	대졸이상	(317)	0.6	15.8	38.8	44.8	4.28
가구형태	1인	(111)	.	13.5	48.6	37.8	4.24
	2인	(265)	0.8	15.8	49.4	34.0	4.17
	3인	(360)	0.3	13.9	36.4	49.4	4.35
	4인 이상	(314)	1.0	10.8	43.6	44.6	4.32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	23.5	52.9	23.5	4.00
	200-400만원 미만	(330)	.	9.4	46.4	44.2	4.35
	400-600만원대	(336)	1.2	11.3	42.6	44.9	4.31
	600만원 이상	(282)	0.7	17.0	36.5	45.7	4.27
직업	관리자	(36)	2.8	50.0	27.8	19.4	3.6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	28.1	34.4	34.4	4.00
	사무종사자	(174)	.	9.8	42.5	47.7	4.38
	서비스 종사자	(170)	.	11.2	41.8	47.1	4.36
	판매종사자	(157)	2.5	8.9	42.0	46.5	4.3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	21.7	52.0	26.3	4.0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	18.3	41.5	40.2	4.2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	4.8	35.7	59.5	4.55
	단순노무종사자	(29)	.	.	51.7	48.3	4.48
	주부	(81)	.	7.4	56.8	35.8	4.28
	학생	(63)	.	6.3	25.4	68.3	4.62
	무직	(32)	.	12.5	50.0	37.5	4.25
계층의식	하층	(99)	.	15.2	47.5	37.4	4.22
	중하층	(471)	.	7.2	42.9	49.9	4.43
	중층	(404)	0.7	16.6	43.6	39.1	4.21
	중상층	(76)	3.9	32.9	36.8	26.3	3.86

정치성향	보수	(108)	.	16.7	48.1	35.2	4.19
	중도보수	(257)	1.2	18.7	45.5	34.6	4.14
	중도	(327)	0.6	11.3	43.4	44.6	4.32
	중도진보	(293)	0.3	9.6	40.3	49.8	4.40
	진보	(65)	.	15.4	36.9	47.7	4.32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0.3	15.4	49.9	34.5	4.19
	아파트	(510)	1.0	11.8	38.2	49.0	4.35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	14.2	43.2	42.6	4.28
거주시군	천안시	(170)	.	15.9	34.7	49.4	4.34
	공주시	(67)	1.5	10.4	44.8	43.3	4.30
	보령시	(66)	3.0	9.1	53.0	34.8	4.20
	아산시	(115)	0.9	14.8	47.0	37.4	4.21
	서산시	(85)	.	10.6	42.4	47.1	4.36
	논산시	(70)	1.4	8.6	48.6	41.4	4.30
	계룡시	(43)	.	11.6	37.2	51.2	4.40
	당진시	(83)	.	18.1	33.7	48.2	4.30
	금산군	(46)	.	6.5	45.7	47.8	4.41
	부여군	(52)	.	9.6	40.4	50.0	4.40
	서천군	(45)	.	15.6	46.7	37.8	4.22
	청양군	(36)	.	25.0	44.4	30.6	4.06
	홍성군	(64)	1.6	17.2	48.4	32.8	4.13
	예산군	(57)	.	10.5	45.6	43.9	4.33
	태안군	(51)	.	15.7	49.0	35.3	4.20
거주행정 단위	읍	(322)	.	14.0	40.7	45.3	4.31
	면	(284)	1.1	13.4	48.9	36.6	4.21
	동	(444)	0.7	13.1	41.2	45.0	4.31

〈 표 101〉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5	23.3	51.5	24.7	4.00
성별	남 자	(553)	0.5	22.8	53.7	23.0	3.99
	여 자	(497)	0.4	23.9	49.1	26.6	4.02
결혼여부	기 혼	(778)	0.6	24.6	50.6	24.2	3.98
	미 혼	(272)		19.9	54.0	26.1	4.06
연령대	20대	(170)		18.8	52.4	28.8	4.10
	30대	(186)		17.7	55.4	26.9	4.09
	40대	(234)	0.9	24.4	50.4	24.4	3.98
	50대	(256)	0.8	20.7	56.6	21.9	4.00
	60대 이상	(204)	0.5	34.3	42.2	23.0	3.88
학력	종졸이하	(124)	0.8	37.9	38.7	22.6	3.83
	고졸	(454)	0.2	22.5	56.4	20.9	3.98
	전문대졸	(155)		21.3	51.0	27.7	4.06
	대졸이상	(317)	0.9	19.9	49.8	29.3	4.08
가구형태	1인	(111)		22.5	55.0	22.5	4.00
	2인	(265)		29.8	47.2	23.0	3.93
	3인	(360)	0.8	21.1	48.9	29.2	4.06
	4인 이상	(314)	0.6	20.7	57.0	21.7	4.00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39.2	43.1	17.6	3.78
	200-400만원 미만	(330)	0.3	21.2	53.9	24.5	4.03
	400-600만원대	(336)	0.6	22.3	53.6	23.5	4.00
	600만원 이상	(282)	0.7	21.3	49.3	28.7	4.06
직업	관리자	(36)	2.8	22.2	41.7	33.3	4.0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18.8	43.8	37.5	4.19
	사무종사자	(174)	0.6	17.8	53.4	28.2	4.09
	서비스 종사자	(170)	0.6	24.1	49.4	25.9	4.01
	판매종사자	(157)		20.4	52.2	27.4	4.0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0.7	33.6	47.4	18.4	3.8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9.3	52.4	18.3	3.8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19.0	59.5	21.4	4.02
	단순노무종사자	(29)		17.2	48.3	34.5	4.17
	주부	(81)		21.0	58.0	21.0	4.00
	학생	(63)		22.2	52.4	25.4	4.03
	무직	(32)	3.1	25.0	59.4	12.5	3.81
계층의식	하층	(99)	1.0	33.3	41.4	24.2	3.89
	중하층	(471)	0.2	19.3	52.4	28.0	4.08
	중층	(404)	0.2	24.0	55.0	20.8	3.96
	중상층	(76)	2.6	31.6	40.8	25.0	3.88

정치성향	보수	(108)	.	25.0	47.2	27.8	4.03
	중도보수	(257)	1.6	31.5	45.5	21.4	3.87
	중도	(327)	0.3	22.0	52.0	25.7	4.03
	중도진보	(293)	.	17.4	54.3	28.3	4.11
	진보	(65)	.	21.5	67.7	10.8	3.89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0.3	26.1	52.8	20.8	3.94
	아파트	(510)	0.6	22.4	48.2	28.8	4.05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0.6	20.1	58.6	20.7	3.99
거주시군	천안시	(170)	1.2	20.0	50.0	28.8	4.06
	공주시	(67)	1.5	16.4	61.2	20.9	4.01
	보령시	(66)	.	13.6	62.1	24.2	4.11
	아산시	(115)	0.9	26.1	40.9	32.2	4.04
	서산시	(85)	.	23.5	61.2	15.3	3.92
	논산시	(70)	.	27.1	52.9	20.0	3.93
	계룡시	(43)	.	18.6	55.8	25.6	4.07
	당진시	(83)	1.2	32.5	45.8	20.5	3.86
	금산군	(46)	.	23.9	52.2	23.9	4.00
	부여군	(52)	.	28.8	55.8	15.4	3.87
	서천군	(45)	.	24.4	51.1	24.4	4.00
	청양군	(36)	.	30.6	44.4	25.0	3.94
	홍성군	(64)	.	25.0	51.6	23.4	3.98
	예산군	(57)	.	21.1	56.1	22.8	4.02
	태안군	(51)	.	21.6	37.3	41.2	4.20
거주행정 단위	읍	(322)	0.3	25.5	49.4	24.8	3.99
	면	(284)	0.7	22.9	51.1	25.4	4.01
	동	(444)	0.5	22.1	53.4	24.1	4.01

〈표 102〉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주4일근무제 실시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3.8	25.2	51.7	19.2	3.86
성별	남 자	(553)	3.3	26.6	50.1	20.1	3.87
	여 자	(497)	4.4	23.7	53.5	18.3	3.86
결혼여부	기 혼	(778)	5.1	27.9	51.3	15.7	3.78
	미 혼	(272)		17.6	52.9	29.4	4.12
연령대	20대	(170)		15.9	51.2	32.9	4.17
	30대	(186)	0.5	19.9	56.5	23.1	4.02
	40대	(234)	3.4	20.9	62.0	13.7	3.86
	50대	(256)	3.1	32.0	47.7	17.2	3.79
	60대 이상	(204)	11.3	34.3	41.2	13.2	3.56
학력	종졸이하	(124)	13.7	39.5	33.9	12.9	3.46
	고졸	(454)	2.4	25.8	53.5	18.3	3.88
	전문대졸	(155)	4.5	23.9	54.2	17.4	3.85
	대졸이상	(317)	1.6	19.6	54.9	24.0	4.01
가구형태	1인	(111)	4.5	18.9	42.3	34.2	4.06
	2인	(265)	6.0	35.8	43.8	14.3	3.66
	3인	(360)	2.5	23.9	56.9	16.7	3.88
	4인 이상	(314)	3.2	20.1	55.7	21.0	3.95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0.8	35.3	34.3	19.6	3.63
	200~400만원 미만	(330)	3.0	26.4	52.1	18.5	3.86
	400~600만원대	(336)	3.9	25.9	53.0	17.3	3.84
	600만원 이상	(282)	2.1	19.5	56.0	22.3	3.99
직업	관리자	(36)	2.8	25.0	50.0	22.2	3.9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6.3	28.1	53.1	12.5	3.72
	사무종사자	(174)	1.1	16.1	55.7	27.0	4.09
	서비스 종사자	(170)	2.9	18.8	59.4	18.8	3.94
	판매종사자	(157)	3.2	24.8	54.1	17.8	3.8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2.5	42.1	36.2	9.2	3.4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9.3	46.3	24.4	3.9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8	23.8	59.5	11.9	3.79
	단순노무종사자	(29)		31.0	48.3	20.7	3.90
	주부	(81)	4.9	28.4	54.3	12.3	3.74
	학생	(63)		19.0	49.2	31.7	4.13
	무직	(32)		18.8	56.3	25.0	4.06
계층의식	하층	(99)	6.1	29.3	47.5	17.2	3.76
	중하층	(471)	4.0	23.1	52.7	20.2	3.89
	중층	(404)	2.5	25.7	51.7	20.0	3.89
	중상층	(76)	6.6	30.3	51.3	11.8	3.68

정치성향	보수	(108)	9.3	33.3	38.9	18.5	3.67
	중도보수	(257)	8.6	26.5	49.4	15.6	3.72
	중도	(327)	1.2	25.7	52.3	20.8	3.93
	중도진보	(293)	1.4	20.8	58.4	19.5	3.96
	진보	(65)		24.6	49.2	26.2	4.02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6.7	32.9	45.8	14.6	3.68
	아파트	(510)	2.5	20.4	56.3	20.8	3.95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1.2	23.1	50.9	24.9	3.99
거주시군	천안시	(170)	1.2	21.2	59.4	18.2	3.95
	공주시	(67)	4.5	22.4	50.7	22.4	3.91
	보령시	(66)	7.6	24.2	37.9	30.3	3.91
	아산시	(115)	1.7	17.4	53.0	27.8	4.07
	서산시	(85)	3.5	18.8	57.6	20.0	3.94
	논산시	(70)	1.4	34.3	51.4	12.9	3.76
	계룡시	(43)	4.7	14.0	67.4	14.0	3.91
	당진시	(83)	1.2	28.9	45.8	24.1	3.93
	금산군	(46)	6.5	19.6	60.9	13.0	3.80
	부여군	(52)	3.8	32.7	44.2	19.2	3.79
	서천군	(45)	11.1	37.8	44.4	6.7	3.47
	청양군	(36)	8.3	36.1	33.3	22.2	3.69
	홍성군	(64)	6.3	32.8	45.3	15.6	3.70
	예산군	(57)	3.5	33.3	47.4	15.8	3.75
	태안군	(51)	3.9	23.5	60.8	11.8	3.80
거주행정 단위	읍	(322)	4.3	27.0	50.6	18.0	3.82
	면	(284)	4.9	33.8	45.1	16.2	3.73
	동	(444)	2.7	18.5	56.8	22.1	3.98

〈 표 103 〉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사례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점)
[전체]		(1050)	0.1	17.7	50.4	31.8	4.14
성별	남 자	(553)	.	17.5	47.9	34.5	4.17
	여 자	(497)	0.2	17.9	53.1	28.8	4.10
결혼여부	기 혼	(778)	0.1	18.0	52.2	29.7	4.11
	미 혼	(272)	.	16.9	45.2	37.9	4.21
연령대	20대	(170)	.	13.5	44.1	42.4	4.29
	30대	(186)	.	14.0	49.5	36.6	4.23
	40대	(234)	.	17.5	51.7	30.8	4.13
	50대	(256)	.	22.7	50.8	26.6	4.04
	60대 이상	(204)	0.5	18.6	54.4	26.5	4.07
학력	중졸이하	(124)	0.8	18.5	60.5	20.2	4.00
	고졸	(454)	.	15.0	50.9	34.1	4.19
	전문대졸	(155)	.	18.1	49.7	32.3	4.14
	대졸이상	(317)	.	21.1	46.1	32.8	4.12
가구형태	1인	(111)	.	20.7	48.6	30.6	4.10
	2인	(265)	0.4	16.2	54.3	29.1	4.12
	3인	(360)	.	20.6	49.7	29.7	4.09
	4인 이상	(314)	.	14.6	48.4	36.9	4.22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	30.4	52.9	16.7	3.86
	200-400만원 미만	(330)	0.3	12.1	48.8	38.8	4.26
	400-600만원대	(336)	.	18.5	51.2	30.4	4.12
	600만원 이상	(282)	.	18.8	50.4	30.9	4.12
직업	관리자	(36)	.	33.3	50.0	16.7	3.8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	28.1	53.1	18.8	3.91
	사무종사자	(174)	.	14.4	49.4	36.2	4.22
	서비스 종사자	(170)	.	20.0	49.4	30.6	4.11
	판매종사자	(157)	.	15.3	47.1	37.6	4.2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0.7	17.8	57.2	24.3	4.0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	26.8	48.8	24.4	3.9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	14.3	50.0	35.7	4.21
	단순노무 종사자	(29)	.	3.4	51.7	44.8	4.41
	주부	(81)	.	12.3	58.0	29.6	4.17
	학생	(63)	.	12.7	41.3	46.0	4.33
	무직	(32)	.	25.0	43.8	31.3	4.06
계층의식	하층	(99)	.	24.2	54.5	21.2	3.97
	중하층	(471)	.	10.0	50.5	39.5	4.30

	중층	(404)	0.2	21.3	49.0	29.5	4.08
	중상층	(76)	.	38.2	51.3	10.5	3.72
정치성향	보수	(108)	.	21.3	50.9	27.8	4.06
	중도보수	(257)	.	19.5	50.6	30.0	4.11
	중도	(327)	.	19.3	49.2	31.5	4.12
	중도진보	(293)	0.3	11.3	54.3	34.1	4.22
	진보	(65)	.	26.2	36.9	36.9	4.11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0.3	14.0	54.2	31.5	4.17
	아파트	(510)	.	17.6	49.6	32.7	4.15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	26.0	44.4	29.6	4.04
거주시군	천안시	(170)	.	16.5	48.8	34.7	4.18
	공주시	(67)	.	19.4	50.7	29.9	4.10
	보령시	(66)	.	21.2	39.4	39.4	4.18
	아산시	(115)	.	15.7	60.9	23.5	4.08
	서산시	(85)	1.2	17.6	36.5	44.7	4.25
	논산시	(70)	.	14.3	54.3	31.4	4.17
	계룡시	(43)	.	11.6	48.8	39.5	4.28
	당진시	(83)	.	10.8	54.2	34.9	4.24
	금산군	(46)	.	8.7	45.7	45.7	4.37
	부여군	(52)	.	23.1	55.8	21.2	3.98
	서천군	(45)	.	22.2	51.1	26.7	4.04
	청양군	(36)	.	19.4	44.4	36.1	4.17
	홍성군	(64)	.	21.9	54.7	23.4	4.02
	예산군	(57)	.	24.6	50.9	24.6	4.00
	태안군	(51)	.	25.5	54.9	19.6	3.94
거주행정 단위	읍	(322)	.	19.9	53.1	27.0	4.07
	면	(284)	0.4	16.9	54.9	27.8	4.10
	동	(444)	.	16.7	45.5	37.8	4.21

〈 표 104 〉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4	37.5	53.6	8.5	3.70
성별	남 자	(553)	0.2	35.4	55.9	8.5	3.73
	여 자	(497)	0.6	39.8	51.1	8.5	3.67
결혼여부	기 혼	(778)	0.4	38.3	53.2	8.1	3.69
	미 혼	(272)	0.4	35.3	54.8	9.6	3.74
연령대	20대	(170)	0.6	36.5	54.1	8.8	3.71
	30대	(186)		31.2	59.7	9.1	3.78
	40대	(234)	0.4	38.5	50.4	10.7	3.71
	50대	(256)	0.4	36.3	54.7	8.6	3.71
	60대 이상	(204)	0.5	44.6	50.0	4.9	3.59
학력	중졸이하	(124)	0.8	41.9	54.0	3.2	3.60
	고졸	(454)	0.2	37.9	52.9	9.0	3.71
	전문대졸	(155)		34.8	54.8	10.3	3.75
	대졸이상	(317)	0.6	36.6	53.9	8.8	3.71
가구형태	1인	(111)		33.3	58.6	8.1	3.75
	2인	(265)	0.4	40.0	53.6	6.0	3.65
	3인	(360)	0.3	38.6	50.6	10.6	3.71
	4인 이상	(314)	0.6	35.7	55.4	8.3	3.71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48.0	47.1	4.9	3.57
	200-400만원 미만	(330)	0.3	35.8	56.4	7.6	3.71
	400-600만원대	(336)	0.3	38.7	50.0	11.0	3.72
	600만원 이상	(282)	0.7	34.4	57.1	7.8	3.72
직업	관리자	(36)	2.8	38.9	50.0	8.3	3.6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46.9	43.8	9.4	3.63
	사무종사자	(174)	0.6	34.5	55.2	9.8	3.74
	서비스 종사자	(170)		39.4	53.5	7.1	3.68
	판매종사자	(157)	0.6	33.8	56.7	8.9	3.7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0.7	40.8	49.3	9.2	3.6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1.5	54.9	3.7	3.6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35.7	52.4	11.9	3.76
	단순노무종사자	(29)		41.4	55.2	3.4	3.62
	주부	(81)		34.6	56.8	8.6	3.74
	학생	(63)		38.1	50.8	11.1	3.73
	무직	(32)		31.3	59.4	9.4	3.78
계층의식	하층	(99)		42.4	46.5	11.1	3.69
	중하층	(471)		35.2	55.6	9.1	3.74
	중층	(404)	0.5	37.9	54.2	7.4	3.69
	중상층	(76)	2.6	43.4	47.4	6.6	3.58
정치성향	보수	(108)		37.0	53.7	9.3	3.72

	중도보수	(257)	0.4	45.5	51.0	3.1	3.57
	중도	(327)	0.3	37.0	52.6	10.1	3.72
	중도진보	(293)	0.7	34.5	53.6	11.3	3.75
	진보	(65)	.	23.1	69.2	7.7	3.85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0.3	39.4	52.6	7.8	3.68
	아파트	(510)	0.6	36.3	53.3	9.8	3.72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	37.3	56.8	5.9	3.69
거주시군	천안시	(170)	.	34.7	61.8	3.5	3.69
	공주시	(67)	1.5	44.8	47.8	6.0	3.58
	보령시	(66)	1.5	25.8	56.1	16.7	3.88
	아산시	(115)	.	30.4	65.2	4.3	3.74
	서산시	(85)	1.2	35.3	58.8	4.7	3.67
	논산시	(70)	.	51.4	47.1	1.4	3.50
	계룡시	(43)	.	37.2	55.8	7.0	3.70
	당진시	(83)	.	26.5	55.4	18.1	3.92
	금산군	(46)	.	39.1	58.7	2.2	3.63
	부여군	(52)	.	48.1	40.4	11.5	3.63
	서천군	(45)	.	35.6	53.3	11.1	3.76
	청양군	(36)	.	30.6	52.8	16.7	3.86
	홍성군	(64)	1.6	53.1	34.4	10.9	3.55
	예산군	(57)	.	40.4	45.6	14.0	3.74
	태안군	(51)	.	43.1	43.1	13.7	3.71
거주행정 단위	읍	(322)	0.3	41.6	48.4	9.6	3.67
	면	(284)	0.4	40.1	52.1	7.4	3.67
	동	(444)	0.5	32.9	58.3	8.3	3.75

〈 표 105 〉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6)경제적 회생 지원 확대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4	40.7	51.9	7.0	3.66
성별	남 자	(553)	0.2	38.7	54.1	7.1	3.68
	여 자	(497)	0.6	42.9	49.5	7.0	3.63
결혼여부	기 혼	(778)	0.1	43.4	49.9	6.6	3.63
	미 혼	(272)	1.1	32.7	57.7	8.5	3.74
연령대	20대	(170)	1.2	31.8	58.8	8.2	3.74
	30대	(186)	0.5	35.5	58.6	5.4	3.69
	40대	(234)	0.4	43.6	45.7	10.3	3.66
	50대	(256)		40.6	53.5	5.9	3.65
	60대 이상	(204)		49.5	45.1	5.4	3.56
학력	종졸이하	(124)		52.4	41.1	6.5	3.54
	고졸	(454)		35.5	57.9	6.6	3.71
	전문대졸	(155)	1.9	38.1	51.0	9.0	3.67
	대졸이상	(317)	0.3	44.8	47.9	6.9	3.62
가구형태	1인	(111)	1.8	32.4	60.4	5.4	3.69
	2인	(265)		43.8	50.6	5.7	3.62
	3인	(360)	0.3	43.3	48.9	7.5	3.64
	4인 이상	(314)	0.3	37.9	53.5	8.3	3.70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0	51.0	45.1	2.9	3.50
	200~400만원 미만	(330)	0.3	34.2	59.1	6.4	3.72
	400~600만원대	(336)		41.4	49.1	9.5	3.68
	600만원 이상	(282)	0.7	43.6	49.3	6.4	3.61
직업	관리자	(36)	2.8	52.8	36.1	8.3	3.5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62.5	34.4	3.1	3.41
	사무종사자	(174)	1.1	39.7	52.9	6.3	3.64
	서비스 종사자	(170)	0.6	44.1	48.8	6.5	3.61
	판매종사자	(157)		38.2	51.0	10.8	3.7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48.0	48.0	3.9	3.5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35.4	59.8	4.9	3.7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2.9	47.6	9.5	3.67
	단순노무 종사자	(29)		24.1	62.1	13.8	3.90
	주부	(81)		35.8	60.5	3.7	3.68
	학생	(63)		28.6	61.9	9.5	3.81
	무직	(32)		31.3	56.3	12.5	3.81
계층의식	하층	(99)	1.0	43.4	47.5	8.1	3.63
	중하층	(471)	0.4	34.8	57.1	7.6	3.72

	중층	(404)	.	43.3	49.8	6.9	3.64
	중상층	(76)	1.3	59.2	36.8	2.6	3.41
정치성향	보수	(108)	.	42.6	50.0	7.4	3.65
	중도보수	(257)	0.8	45.5	48.2	5.4	3.58
	중도	(327)	0.3	40.4	50.8	8.6	3.68
	중도진보	(293)	0.3	38.2	54.3	7.2	3.68
	진보	(65)	.	30.8	64.6	4.6	3.74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0.3	40.4	52.8	6.5	3.65
	아파트	(510)	0.2	42.5	49.2	8.0	3.65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1.2	35.5	58.0	5.3	3.67
거주시군	천안시	(170)	0.6	35.3	58.8	5.3	3.69
	공주시	(67)	.	47.8	50.7	1.5	3.54
	보령시	(66)	3.0	28.8	57.6	10.6	3.76
	아산시	(115)	0.9	32.2	62.6	4.3	3.70
	서산시	(85)	.	52.9	44.7	2.4	3.49
	논산시	(70)	.	48.6	47.1	4.3	3.56
	계룡시	(43)	.	51.2	44.2	4.7	3.53
	당진시	(83)	.	33.7	54.2	12.0	3.78
	금산군	(46)	.	32.6	65.2	2.2	3.70
	부여군	(52)	.	44.2	48.1	7.7	3.63
	서천군	(45)	.	40.0	53.3	6.7	3.67
	청양군	(36)	.	47.2	44.4	8.3	3.61
	홍성군	(64)	.	50.0	35.9	14.1	3.64
	예산군	(57)	.	38.6	47.4	14.0	3.75
	태안군	(51)	.	45.1	41.2	13.7	3.69
거주행정 단위	읍	(322)	0.9	42.5	48.1	8.4	3.64
	면	(284)	0.4	43.3	49.6	6.7	3.63
	동	(444)	.	37.6	56.1	6.3	3.69

〈 표 106 〉 일자리/사회혁신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사 례 수)	(1) 비정규 직의 정규직 전환	(2)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강화	(3)주4 일근무 제 실시 (일자리 나눔 목적등)	(4) 공공 부문 일 자리 확대	(5) 주민공 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6) 경제적 회생 지원 확대 (취약계 층 부채 탕감)
[전체]		1050	4.28	4.00	3.86	4.14	3.70	3.66
성별	남 자	553	4.27	3.99	3.87	4.17	3.73	3.68
	여 자	497	4.30	4.02	3.86	4.10	3.67	3.63
결혼여부	기 혼	778	4.22	3.98	3.78	4.11	3.69	3.63
	미 혼	272	4.45	4.06	4.12	4.21	3.74	3.74
연령대	20대	170	4.56	4.10	4.17	4.29	3.71	3.74
	30대	186	4.49	4.09	4.02	4.23	3.78	3.69
	40대	234	4.30	3.98	3.86	4.13	3.71	3.66
	50대	256	4.05	4.00	3.79	4.04	3.71	3.65
	60대 이상	204	4.12	3.88	3.56	4.07	3.59	3.56
학력	중졸이하	124	4.02	3.83	3.46	4.00	3.60	3.54
	고졸	454	4.32	3.98	3.88	4.19	3.71	3.71
	전문대졸	155	4.40	4.06	3.85	4.14	3.75	3.67
	대졸이상	317	4.28	4.08	4.01	4.12	3.71	3.62
가구형태	1인	111	4.24	4.00	4.06	4.10	3.75	3.69
	2인	265	4.17	3.93	3.66	4.12	3.65	3.62
	3인	360	4.35	4.06	3.88	4.09	3.71	3.64
	4인 이상	314	4.32	4.00	3.95	4.22	3.71	3.70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4.00	3.78	3.63	3.86	3.57	3.50
	200-400만원 미만	330	4.35	4.03	3.86	4.26	3.71	3.72
	400-600만원대	336	4.31	4.00	3.84	4.12	3.72	3.68
	600만원 이상	282	4.27	4.06	3.99	4.12	3.72	3.61
직업	관리자	36	3.64	4.06	3.92	3.83	3.64	3.5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4.00	4.19	3.72	3.91	3.63	3.41
	사무종사자	174	4.38	4.09	4.09	4.22	3.74	3.64
	서비스 종사자	170	4.36	4.01	3.94	4.11	3.68	3.61
	판매종사자	157	4.32	4.07	3.87	4.22	3.74	3.7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4.05	3.84	3.42	4.05	3.67	3.5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22	3.89	3.95	3.98	3.62	3.7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55	4.02	3.79	4.21	3.76	3.67
	단순노무종사자	29	4.48	4.17	3.90	4.41	3.62	3.90
	주부	81	4.28	4.00	3.74	4.17	3.74	3.68
	학생	63	4.62	4.03	4.13	4.33	3.73	3.81
	무직	32	4.25	3.81	4.06	4.06	3.78	3.81

계층의식	하층	99	4.22	3.89	3.76	3.97	3.69	3.63
	중하층	471	4.43	4.08	3.89	4.30	3.74	3.72
	중층	404	4.21	3.96	3.89	4.08	3.69	3.64
	중상층	76	3.86	3.88	3.68	3.72	3.58	3.41
정치성향	보수	108	4.19	4.03	3.67	4.06	3.72	3.65
	중도보수	257	4.14	3.87	3.72	4.11	3.57	3.58
	중도	327	4.32	4.03	3.93	4.12	3.72	3.68
	중도진보	293	4.40	4.11	3.96	4.22	3.75	3.68
	진보	65	4.32	3.89	4.02	4.11	3.85	3.74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4.19	3.94	3.68	4.17	3.68	3.65
	아파트	510	4.35	4.05	3.95	4.15	3.72	3.65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4.28	3.99	3.99	4.04	3.69	3.67
거주시군	천안시	170	4.34	4.06	3.95	4.18	3.69	3.69
	공주시	67	4.30	4.01	3.91	4.10	3.58	3.54
	보령시	66	4.20	4.11	3.91	4.18	3.88	3.76
	아산시	115	4.21	4.04	4.07	4.08	3.74	3.70
	서산시	85	4.36	3.92	3.94	4.25	3.67	3.49
	논산시	70	4.30	3.93	3.76	4.17	3.50	3.56
	계룡시	43	4.40	4.07	3.91	4.28	3.70	3.53
	당진시	83	4.30	3.86	3.93	4.24	3.92	3.78
	금산군	46	4.41	4.00	3.80	4.37	3.63	3.70
	부여군	52	4.40	3.87	3.79	3.98	3.63	3.63
	서천군	45	4.22	4.00	3.47	4.04	3.76	3.67
	청양군	36	4.06	3.94	3.69	4.17	3.86	3.61
	홍성군	64	4.13	3.98	3.70	4.02	3.55	3.64
	예산군	57	4.33	4.02	3.75	4.00	3.74	3.75
	태안군	51	4.20	4.20	3.80	3.94	3.71	3.69
거주행정 단위	읍	322	4.31	3.99	3.82	4.07	3.67	3.64
	면	284	4.21	4.01	3.73	4.10	3.67	3.63
	동	444	4.31	4.01	3.98	4.21	3.75	3.69

〈 표 107 〉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3	12.2	55.6	31.9	4.19
성별	남 자	(553)		12.8	56.1	31.1	4.18
	여 자	(497)	0.6	11.5	55.1	32.8	4.20
결혼여부	기 혼	(778)	0.3	13.0	56.9	29.8	4.16
	미 혼	(272)	0.4	9.9	51.8	37.9	4.27
연령대	20대	(170)		6.5	48.8	44.7	4.38
	30대	(186)	0.5	7.5	54.8	37.1	4.28
	40대	(234)		9.8	64.1	26.1	4.16
	50대	(256)		16.0	55.5	28.5	4.13
	60대 이상	(204)	1.0	19.1	52.5	27.5	4.06
학력	종졸이하	(124)		17.7	54.0	28.2	4.10
	고졸	(454)	0.7	12.6	59.7	27.1	4.13
	전문대졸	(155)		11.0	55.5	33.5	4.23
	대졸이상	(317)		10.1	50.5	39.4	4.29
가구형태	1인	(111)	0.9	15.3	56.8	27.0	4.10
	2인	(265)		18.5	54.0	27.5	4.09
	3인	(360)	0.6	10.6	46.1	42.8	4.31
	4인 이상	(314)		7.6	67.5	24.8	4.17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0	22.5	57.8	18.6	3.94
	200-400만원 미만	(330)	0.3	13.0	55.2	31.5	4.18
	400-600만원대	(336)		11.0	58.0	31.0	4.20
	600만원 이상	(282)	0.4	8.9	52.5	38.3	4.29
직업	관리자	(36)		16.7	38.9	44.4	4.2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12.5	43.8	43.8	4.31
	사무종사자	(174)		6.9	52.9	40.2	4.33
	서비스 종사자	(170)	0.6	13.5	52.4	33.5	4.19
	판매종사자	(157)	1.3	8.3	63.7	26.8	4.1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21.1	55.3	23.7	4.0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14.6	56.1	29.3	4.1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16.7	57.1	26.2	4.10
	단순노무종사자	(29)		10.3	55.2	34.5	4.24
	주부	(81)		9.9	65.4	24.7	4.15
	학생	(63)		4.8	44.4	50.8	4.46
	무직	(32)		15.6	75.0	9.4	3.94
계층의식	하층	(99)		20.2	47.5	32.3	4.12
	중하층	(471)	0.4	7.0	56.5	36.1	4.28
	중층	(404)	0.2	14.9	58.9	26.0	4.11
	중상층	(76)		19.7	43.4	36.8	4.17
정치성향	보수	(108)	0.9	18.5	51.9	28.7	4.08
	중도보수	(257)	0.4	17.1	58.0	24.5	4.07

	중도	(327)	0.3	11.6	52.6	35.5	4.23
	중도진보	(293)	.	5.5	60.8	33.8	4.28
	진보	(65)	.	15.4	44.6	40.0	4.25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0.3	15.6	57.7	26.4	4.10
	아파트	(510)	.	9.8	52.0	38.2	4.28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1.2	11.8	62.1	24.9	4.11
거주시군	천안시	(170)	.	7.1	57.1	35.9	4.29
	공주시	(67)	.	11.9	58.2	29.9	4.18
	보령시	(66)	.	19.7	66.7	13.6	3.94
	아산시	(115)	0.9	7.0	59.1	33.0	4.24
	서산시	(85)	.	14.1	57.6	28.2	4.14
	논산시	(70)	.	10.0	48.6	41.4	4.31
	계룡시	(43)	.	16.3	53.5	30.2	4.14
	당진시	(83)	.	7.2	56.6	36.1	4.29
	금산군	(46)	.	10.9	52.2	37.0	4.26
	부여군	(52)	.	11.5	57.7	30.8	4.19
	서천군	(45)	.	15.6	44.4	40.0	4.24
	청양군	(36)	2.8	19.4	52.8	25.0	4.00
	홍성군	(64)	.	18.8	45.3	35.9	4.17
	예산군	(57)	1.8	19.3	49.1	29.8	4.07
	태안군	(51)	.	13.7	64.7	21.6	4.08
거주행정 단위	읍	(322)	0.3	11.2	51.9	36.6	4.25
	면	(284)	0.4	16.2	54.6	28.9	4.12
	동	(444)	0.2	10.4	59.0	30.4	4.20

〈 표 108 〉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1	11.3	52.9	35.7	4.24
성별	남 자	(553)	0.2	11.8	53.0	35.1	4.23
	여 자	(497)		10.9	52.7	36.4	4.26
결혼여부	기 혼	(778)		12.1	51.5	36.4	4.24
	미 혼	(272)	0.4	9.2	56.6	33.8	4.24
연령대	20대	(170)	0.6	4.7	55.9	38.8	4.33
	30대	(186)		9.1	48.9	41.9	4.33
	40대	(234)		10.3	53.0	36.8	4.26
	50대	(256)		14.8	52.7	32.4	4.18
	60대 이상	(204)		15.7	53.9	30.4	4.15
학력	중졸이하	(124)		12.9	59.7	27.4	4.15
	고졸	(454)	0.2	10.8	52.2	36.8	4.26
	전문대졸	(155)		9.7	52.3	38.1	4.28
	대졸이상	(317)		12.3	51.4	36.3	4.24
가구형태	1인	(111)	0.9	10.8	56.8	31.5	4.19
	2인	(265)		13.6	57.0	29.4	4.16
	3인	(360)		11.1	46.9	41.9	4.31
	4인 이상	(314)		9.9	54.8	35.4	4.25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3.7	63.7	22.5	4.09
	200-400만원 미만	(330)	0.3	11.2	51.2	37.3	4.25
	400-600만원대	(336)		9.8	54.8	35.4	4.26
	600만원 이상	(282)		12.4	48.6	39.0	4.27
직업	관리자	(36)		13.9	52.8	33.3	4.1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3	37.5	31.3	4.00
	사무종사자	(174)	0.6	10.3	48.3	40.8	4.29
	서비스 종사자	(170)		10.6	52.9	36.5	4.26
	판매종사자	(157)		11.5	50.3	38.2	4.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2.5	60.5	27.0	4.1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11.0	53.7	35.4	4.2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8	54.8	40.5	4.36
	단순노무종사자	(29)		10.3	55.2	34.5	4.24
	주부	(81)		11.1	48.1	40.7	4.30
	학생	(63)		4.8	52.4	42.9	4.38
	무직	(32)		15.6	75.0	9.4	3.94
계층의식	하층	(99)		15.2	59.6	25.3	4.10
	중하층	(471)	0.2	5.9	48.6	45.2	4.39
	중층	(404)		13.9	57.7	28.5	4.15
	중상층	(76)		26.3	44.7	28.9	4.03
정치성향	보수	(108)		13.0	57.4	29.6	4.17

	중도보수	(257)	0.4	16.0	51.4	32.3	4.16
	중도	(327)	.	11.6	51.4	37.0	4.25
	중도진보	(293)	.	6.1	53.6	40.3	4.34
	진보	(65)	.	12.3	55.4	32.3	4.20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	11.6	58.5	29.9	4.18
	아파트	(510)	.	10.4	47.5	42.2	4.32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0.6	13.6	56.8	29.0	4.14
거주시군	천안시	(170)	0.6	13.5	49.4	36.5	4.22
	공주시	(67)	.	17.9	52.2	29.9	4.12
	보령시	(66)	.	10.6	60.6	28.8	4.18
	아산시	(115)	.	12.2	49.6	38.3	4.26
	서산시	(85)	.	8.2	49.4	42.4	4.34
	논산시	(70)	.	7.1	51.4	41.4	4.34
	계룡시	(43)	.	4.7	53.5	41.9	4.37
	당진시	(83)	.	7.2	62.7	30.1	4.23
	금산군	(46)	.	4.3	47.8	47.8	4.43
	부여군	(52)	.	7.7	50.0	42.3	4.35
	서천군	(45)	.	6.7	57.8	35.6	4.29
	청양군	(36)	.	19.4	50.0	30.6	4.11
	홍성군	(64)	.	20.3	51.6	28.1	4.08
	예산군	(57)	.	8.8	59.6	31.6	4.23
	태안군	(51)	.	17.6	52.9	29.4	4.12
거주행정 단위	읍	(322)	.	10.2	51.2	38.5	4.28
	면	(284)	.	12.0	54.9	33.1	4.21
	동	(444)	0.2	11.7	52.7	35.4	4.23

〈 표 109 〉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사례 수)	(1) 대학등록 금 면제 또는대폭 감면	(2) 방과후 학교국가 책임제	(3)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4)농어 촌학교 지원확대	(5) 문화여가 기회제공 확대	(6) 문화예술 인 지원 확대
[전체]		1050	4.19	4.24	4.20	4.01	3.99	3.52
성별	남 자	553	4.18	4.23	4.23	4.03	4.00	3.54
	여 자	497	4.20	4.26	4.18	3.99	3.97	3.51
결혼여부	기 혼	778	4.16	4.24	4.18	4.03	3.98	3.51
	미 혼	272	4.27	4.24	4.27	3.94	4.01	3.56
연령대	20대	170	4.38	4.33	4.31	3.96	4.06	3.63
	30대	186	4.28	4.33	4.28	3.96	4.07	3.50
	40대	234	4.16	4.26	4.24	3.97	4.02	3.51
	50대	256	4.13	4.18	4.10	4.04	3.96	3.56
	60대 이상	204	4.06	4.15	4.14	4.09	3.84	3.43
학력	중졸이하	124	4.10	4.15	4.10	4.07	3.81	3.41
	고졸	454	4.13	4.26	4.24	4.04	4.08	3.57
	전문대졸	155	4.23	4.28	4.16	4.05	3.98	3.48
	대졸이상	317	4.29	4.24	4.22	3.91	3.91	3.52
가구형태	1인	111	4.10	4.19	4.31	3.91	3.96	3.56
	2인	265	4.09	4.16	4.17	4.06	3.89	3.44
	3인	360	4.31	4.31	4.15	3.96	3.93	3.49
	4인 이상	314	4.17	4.25	4.26	4.06	4.13	3.62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3.94	4.09	4.06	3.97	3.80	3.42
	200~400만원 미만	330	4.18	4.25	4.26	4.06	4.01	3.51
	400~600만원대	336	4.20	4.26	4.18	3.99	4.05	3.52
	600만원 이상	282	4.29	4.27	4.22	3.98	3.95	3.57
직업	관리자	36	4.28	4.19	4.06	4.03	3.69	3.5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4.31	4.00	4.25	3.94	3.81	3.53
	사무종사자	174	4.33	4.29	4.24	4.00	3.96	3.60
	서비스 종사자	170	4.19	4.26	4.12	3.89	3.99	3.56
	판매종사자	157	4.16	4.27	4.27	4.00	4.06	3.4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4.03	4.14	4.12	4.19	3.86	3.3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15	4.24	4.09	3.89	3.98	3.5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10	4.36	4.36	4.07	4.02	3.50
	단순노무 종사자	29	4.24	4.24	4.28	4.07	3.93	3.38
	주부	81	4.15	4.30	4.31	4.07	4.21	3.64
	학생	63	4.46	4.38	4.40	4.02	4.03	3.68

	무직	32	3.94	3.94	4.06	3.94	4.16	3.53
계층의식	하층	99	4.12	4.10	4.07	3.98	3.81	3.49
	중하층	471	4.28	4.39	4.35	4.12	4.05	3.53
	중층	404	4.11	4.15	4.12	3.93	4.02	3.53
	중상층	76	4.17	4.03	3.93	3.79	3.63	3.53
	보수	108	4.08	4.17	4.14	4.16	3.99	3.53
정치성향	중도보수	257	4.07	4.16	4.12	3.96	3.96	3.46
	중도	327	4.23	4.25	4.17	3.99	3.94	3.54
	중도진보	293	4.28	4.34	4.28	4.04	4.05	3.56
	진보	65	4.25	4.20	4.46	3.89	4.00	3.55
	단독주택	371	4.10	4.18	4.23	4.15	4.02	3.52
주택형태	아파트	510	4.28	4.32	4.22	3.95	3.97	3.50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4.11	4.14	4.12	3.88	3.96	3.60
거주시군	천안시	170	4.29	4.22	4.22	3.98	3.94	3.54
	공주시	67	4.18	4.12	4.22	3.99	4.03	3.46
	보령시	66	3.94	4.18	4.41	4.20	4.05	3.62
	아산시	115	4.24	4.26	4.24	3.93	3.90	3.58
	서산시	85	4.14	4.34	4.18	4.07	4.07	3.48
	논산시	70	4.31	4.34	4.16	3.93	4.06	3.51
	계룡시	43	4.14	4.37	4.35	4.07	4.09	3.51
	당진시	83	4.29	4.23	4.17	4.10	4.14	3.61
	금산군	46	4.26	4.43	4.24	4.13	4.17	3.61
	부여군	52	4.19	4.35	4.15	4.10	3.92	3.46
	서천군	45	4.24	4.29	3.96	3.84	4.04	3.42
	청양군	36	4.00	4.11	4.25	3.97	3.92	3.33
	홍성군	64	4.17	4.08	4.00	3.84	3.81	3.45
	예산군	57	4.07	4.23	4.16	3.93	3.91	3.53
	태안군	51	4.08	4.12	4.35	4.18	3.80	3.53
거주행정 단위	읍	322	4.25	4.28	4.21	4.04	3.96	3.52
	면	284	4.12	4.21	4.16	4.04	3.90	3.45
	동	444	4.20	4.23	4.23	3.97	4.06	3.58

〈 표 110 〉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4	12.7	53.0	33.9	4.20
성별	남 자	(553)	0.2	11.4	54.1	34.4	4.23
	여 자	(497)	0.6	14.1	51.9	33.4	4.18
결혼여부	기 혼	(778)	0.4	13.2	54.2	32.1	4.18
	미 혼	(272)	0.4	11.0	49.6	39.0	4.27
연령대	20대	(170)	.	5.9	57.6	36.5	4.31
	30대	(186)	0.5	12.4	45.7	41.4	4.28
	40대	(234)	0.4	12.0	50.4	37.2	4.24
	50대	(256)	0.4	18.4	52.0	29.3	4.10
	60대 이상	(204)	0.5	12.3	60.3	27.0	4.14
학력	중졸이하	(124)	0.8	12.1	63.7	23.4	4.10
	고졸	(454)	0.2	10.4	55.1	34.4	4.24
	전문대졸	(155)	0.6	16.8	48.4	34.2	4.16
	대졸이상	(317)	0.3	14.2	48.3	37.2	4.22
가구형태	1인	(111)	.	13.5	42.3	44.1	4.31
	2인	(265)	0.4	12.5	57.4	29.8	4.17
	3인	(360)	.	14.4	55.8	29.7	4.15
	4인 이상	(314)	1.0	10.5	50.0	38.5	4.26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0	18.6	53.9	26.5	4.06
	200~400만원 미만	(330)	.	8.5	56.7	34.8	4.26
	400~600만원대	(336)	0.9	14.9	50.0	34.2	4.18
	600만원 이상	(282)	.	12.8	52.1	35.1	4.22
직업	관리자	(36)	.	25.0	44.4	30.6	4.0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	15.6	43.8	40.6	4.25
	사무종사자	(174)	.	13.2	49.4	37.4	4.24
	서비스 종사자	(170)	1.2	15.9	52.4	30.6	4.12
	판매종사자	(157)	0.6	12.1	47.1	40.1	4.2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0.7	13.2	59.9	26.3	4.1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	18.3	54.9	26.8	4.0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	2.4	59.5	38.1	4.36
	단순노무종사자	(29)	.	10.3	51.7	37.9	4.28
	주부	(81)	.	4.9	59.3	35.8	4.31
	학생	(63)	.	1.6	57.1	41.3	4.40
	무직	(32)	.	18.8	56.3	25.0	4.06
계층의식	하층	(99)	1.0	17.2	55.6	26.3	4.07
	중하층	(471)	.	4.2	56.3	39.5	4.35
	중층	(404)	0.7	18.1	50.0	31.2	4.12
	중상층	(76)	.	30.3	46.1	23.7	3.93
정치성향	보수	(108)	.	13.9	58.3	27.8	4.14

	중도보수	(257)	0.8	17.9	50.2	31.1	4.12
	중도	(327)	0.3	12.5	56.6	30.6	4.17
	중도진보	(293)	0.3	9.6	51.5	38.6	4.28
	진보	(65)	.	4.6	44.6	50.8	4.46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0.3	10.2	56.1	33.4	4.23
	아파트	(510)	0.4	12.4	52.4	34.9	4.22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0.6	18.9	48.5	32.0	4.12
거주시군	천안시	(170)	.	11.2	55.9	32.9	4.22
	공주시	(67)	.	17.9	41.8	40.3	4.22
	보령시	(66)	1.5	7.6	39.4	51.5	4.41
	아산시	(115)	0.9	11.3	50.4	37.4	4.24
	서산시	(85)	.	16.5	49.4	34.1	4.18
	논산시	(70)	1.4	8.6	62.9	27.1	4.16
	계룡시	(43)	.	2.3	60.5	37.2	4.35
	당진시	(83)	1.2	13.3	53.0	32.5	4.17
	금산군	(46)	.	15.2	45.7	39.1	4.24
	부여군	(52)	.	19.2	46.2	34.6	4.15
	서천군	(45)	.	20.0	64.4	15.6	3.96
	청양군	(36)	.	8.3	58.3	33.3	4.25
	홍성군	(64)	.	18.8	62.5	18.8	4.00
	예산군	(57)	.	12.3	59.6	28.1	4.16
	태안군	(51)	.	7.8	49.0	43.1	4.35
거주행정 단위	읍	(322)	.	11.8	55.0	33.2	4.21
	면	(284)	0.4	15.1	52.8	31.7	4.16
	동	(444)	0.7	11.7	51.8	35.8	4.23

〈 표 111 〉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3	20.0	58.2	21.5	4.01
성별	남 자	(553)		19.3	58.6	22.1	4.03
	여 자	(497)	0.6	20.7	57.7	20.9	3.99
결혼여부	기 혼	(778)	0.3	19.5	56.8	23.4	4.03
	미 혼	(272)	0.4	21.3	62.1	16.2	3.94
연령대	20대	(170)	0.6	19.4	63.5	16.5	3.96
	30대	(186)		21.0	61.8	17.2	3.96
	40대	(234)	0.4	23.1	55.1	21.4	3.97
	50대	(256)	0.4	17.6	59.4	22.7	4.04
	60대 이상	(204)		19.1	52.5	28.4	4.09
학력	중졸이하	(124)		20.2	52.4	27.4	4.07
	고졸	(454)	0.7	16.1	61.5	21.8	4.04
	전문대졸	(155)		20.6	53.5	25.8	4.05
	대졸이상	(317)		25.2	58.0	16.7	3.91
가구형태	1인	(111)	0.9	23.4	59.5	16.2	3.91
	2인	(265)	0.4	20.4	52.5	26.8	4.06
	3인	(360)		21.9	59.7	18.3	3.96
	4인 이상	(314)	0.3	16.2	60.8	22.6	4.06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0	23.5	52.9	22.5	3.97
	200-400만원 미만	(330)	0.3	18.2	56.7	24.8	4.06
	400-600만원대	(336)	0.3	20.8	58.0	20.8	3.99
	600만원 이상	(282)		19.9	62.1	18.1	3.98
직업	관리자	(36)		27.8	41.7	30.6	4.0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21.9	62.5	15.6	3.94
	사무종사자	(174)		19.5	60.9	19.5	4.00
	서비스 종사자	(170)	0.6	22.4	64.7	12.4	3.89
	판매종사자	(157)	0.6	17.2	63.7	18.5	4.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7.1	46.7	36.2	4.1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9.3	52.4	18.3	3.89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14.3	64.3	21.4	4.07
	단순노무종사자	(29)		13.8	65.5	20.7	4.07
	주부	(81)		19.8	53.1	27.2	4.07
	학생	(63)	1.6	17.5	58.7	22.2	4.02
	무직	(32)		21.9	62.5	15.6	3.94
계층의식	하층	(99)	1.0	17.2	64.6	17.2	3.98
	중하층	(471)		15.7	56.7	27.6	4.12
	중층	(404)	0.5	23.8	57.9	17.8	3.93
	중상층	(76)		30.3	60.5	9.2	3.79
정치성향	보수	(108)		16.7	50.9	32.4	4.16

	중도보수	(257)	0.4	21.0	61.1	17.5	3.96
	중도	(327)	0.3	19.6	60.6	19.6	3.99
	중도진보	(293)	.	19.1	57.3	23.5	4.04
	진보	(65)	1.5	27.7	50.8	20.0	3.89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	14.3	56.6	29.1	4.15
	아파트	(510)	0.4	22.2	59.4	18.0	3.95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0.6	26.0	58.0	15.4	3.88
거주시군	천안시	(170)	.	18.8	64.7	16.5	3.98
	공주시	(67)	3.0	20.9	50.7	25.4	3.99
	보령시	(66)	1.5	9.1	57.6	31.8	4.20
	아산시	(115)	.	27.0	53.0	20.0	3.93
	서산시	(85)	.	17.6	57.6	24.7	4.07
	논산시	(70)	.	22.9	61.4	15.7	3.93
	계룡시	(43)	.	14.0	65.1	20.9	4.07
	당진시	(83)	.	14.5	61.4	24.1	4.10
	금산군	(46)	.	15.2	56.5	28.3	4.13
	부여군	(52)	.	13.5	63.5	23.1	4.10
	서천군	(45)	.	22.2	71.1	6.7	3.84
	청양군	(36)	.	30.6	41.7	27.8	3.97
	홍성군	(64)	.	28.1	59.4	12.5	3.84
	예산군	(57)	.	28.1	50.9	21.1	3.93
	태안군	(51)	.	17.6	47.1	35.3	4.18
거주행정 단위	읍	(322)	.	20.2	55.9	23.9	4.04
	면	(284)	.	20.1	56.3	23.6	4.04
	동	(444)	0.7	19.8	61.0	18.5	3.97

〈 표 112 〉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사례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1	23.4	54.3	22.2	3.99
성별	남 자	(553)	0.2	21.9	56.1	21.9	4.00
	여 자	(497)		25.2	52.3	22.5	3.97
결혼여부	기 혼	(778)	0.1	24.3	53.3	22.2	3.98
	미 혼	(272)		21.0	57.0	22.1	4.01
연령대	20대	(170)		18.8	56.5	24.7	4.06
	30대	(186)		19.9	53.2	26.9	4.07
	40대	(234)		20.5	57.3	22.2	4.02
	50대	(256)	0.4	26.2	50.4	23.0	3.96
	60대 이상	(204)		30.4	54.9	14.7	3.84
학력	중졸이하	(124)		32.3	54.0	13.7	3.81
	고졸	(454)		17.2	57.3	25.6	4.08
	전문대졸	(155)		27.1	47.7	25.2	3.98
	대졸이상	(317)	0.3	27.1	53.3	19.2	3.91
가구형태	1인	(111)		20.7	62.2	17.1	3.96
	2인	(265)		27.5	55.5	17.0	3.89
	3인	(360)	0.3	26.7	52.8	20.3	3.93
	4인 이상	(314)		17.2	52.2	30.6	4.13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32.4	54.9	12.7	3.80
	200-400만원 미만	(330)		21.2	57.0	21.8	4.01
	400-600만원대	(336)		20.8	53.6	25.6	4.05
	600만원 이상	(282)	0.4	25.9	51.8	22.0	3.95
직업	관리자	(36)	2.8	41.7	38.9	16.7	3.69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4.4	50.0	15.6	3.81
	사무종사자	(174)		25.9	52.3	21.8	3.96
	서비스 종사자	(170)		20.6	59.4	20.0	3.99
	판매종사자	(157)		19.1	55.4	25.5	4.0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30.3	53.3	16.4	3.86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6.8	48.8	24.4	3.9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19.0	59.5	21.4	4.02
	단순노무종사자	(29)		20.7	65.5	13.8	3.93
	주부	(81)		17.3	44.4	38.3	4.21
	학생	(63)		15.9	65.1	19.0	4.03
	무직	(32)		12.5	59.4	28.1	4.16
계층의식	하층	(99)		32.3	54.5	13.1	3.81
	중하층	(471)		18.7	57.3	24.0	4.05
	중층	(404)		23.5	51.2	25.2	4.02
	중상층	(76)	1.3	40.8	51.3	6.6	3.63
정치성향	보수	(108)		21.3	58.3	20.4	3.99
	중도보수	(257)		24.9	53.7	21.4	3.96
	중도	(327)	0.3	28.1	48.9	22.6	3.94

	중도진보	(293)	.	17.4	60.1	22.5	4.05
	진보	(65)	.	24.6	50.8	24.6	4.00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	22.4	53.4	24.3	4.02
	아파트	(510)	0.2	24.9	52.5	22.4	3.97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	21.3	61.5	17.2	3.96
거주시군	천안시	(170)	.	22.4	61.2	16.5	3.94
	공주시	(67)	1.5	20.9	50.7	26.9	4.03
	보령시	(66)	.	18.2	59.1	22.7	4.05
	아산시	(115)	.	25.2	60.0	14.8	3.90
	서산시	(85)	.	20.0	52.9	27.1	4.07
	논산시	(70)	.	20.0	54.3	25.7	4.06
	계룡시	(43)	.	18.6	53.5	27.9	4.09
	당진시	(83)	.	15.7	54.2	30.1	4.14
	금산군	(46)	.	15.2	52.2	32.6	4.17
	부여군	(52)	.	30.8	46.2	23.1	3.92
	서천군	(45)	.	22.2	51.1	26.7	4.04
	청양군	(36)	.	27.8	52.8	19.4	3.92
	홍성군	(64)	.	35.9	46.9	17.2	3.81
	예산군	(57)	.	31.6	45.6	22.8	3.91
	태안군	(51)	.	33.3	52.9	13.7	3.80
거주행정 단위	읍	(322)	.	25.2	53.4	21.4	3.96
	면	(284)	.	28.2	53.5	18.3	3.90
	동	(444)	0.2	19.1	55.4	25.2	4.06

〈 표 113 〉 교육/문화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6)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사례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2.3	45.0	50.9	1.9	3.52
성별	남 자	(553)	2.0	44.7	51.0	2.4	3.54
	여 자	(497)	2.6	45.3	50.7	1.4	3.51
결혼여부	기 혼	(778)	2.4	45.8	50.0	1.8	3.51
	미 혼	(272)	1.8	42.6	53.3	2.2	3.56
연령대	20대	(170)	0.6	37.6	60.0	1.8	3.63
	30대	(186)	1.6	49.5	46.2	2.7	3.50
	40대	(234)	2.6	45.3	50.9	1.3	3.51
	50대	(256)	1.6	44.1	50.8	3.5	3.56
	60대 이상	(204)	4.9	47.5	47.5		3.43
학력	종졸이하	(124)	4.0	51.6	43.5	0.8	3.41
	고졸	(454)	3.1	37.9	57.7	1.3	3.57
	전문대졸	(155)	1.3	49.7	49.0		3.48
	대졸이상	(317)	0.9	50.2	44.8	4.1	3.52
가구형태	1인	(111)	1.8	43.2	52.3	2.7	3.56
	2인	(265)	4.5	46.8	48.7		3.44
	3인	(360)	2.5	48.9	45.6	3.1	3.49
	4인 이상	(314)	0.3	39.5	58.3	1.9	3.62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4.9	48.0	47.1		3.42
	200-400만원 미만	(330)	3.0	44.2	51.2	1.5	3.51
	400-600만원대	(336)	1.8	45.2	51.8	1.2	3.52
	600만원 이상	(282)	1.1	44.3	50.7	3.9	3.57
직업	관리자	(36)		55.6	33.3	11.1	3.5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46.9	53.1		3.53
	사무종사자	(174)		46.0	48.3	5.7	3.60
	서비스 종사자	(170)		45.9	52.4	1.8	3.56
	판매종사자	(157)	5.7	43.3	51.0		3.4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5.9	50.0	44.1		3.3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4	45.1	52.4		3.5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50.0	50.0		3.50
	단순노무종사자	(29)	6.9	48.3	44.8		3.38
	주부	(81)		38.3	59.3	2.5	3.64
	학생	(63)		33.3	65.1	1.6	3.68
	무직	(32)	6.3	34.4	59.4		3.53
계층의식	하층	(99)	3.0	46.5	48.5	2.0	3.49
	중하층	(471)	1.9	45.2	51.2	1.7	3.53
	중층	(404)	3.0	43.1	52.2	1.7	3.53
	중상층	(76)		51.3	44.7	3.9	3.53
정치성향	보수	(108)	0.9	46.3	51.9	0.9	3.53

	중도보수	(257)	4.3	47.5	45.9	2.3	3.46
	중도	(327)	2.4	44.0	51.1	2.4	3.54
	중도진보	(293)	0.7	44.4	53.6	1.4	3.56
	진보	(65)	3.1	40.0	55.4	1.5	3.55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3.5	42.3	52.8	1.3	3.52
	아파트	(510)	1.6	48.8	47.5	2.2	3.50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1.8	39.1	56.8	2.4	3.60
거주시군	천안시	(170)	1.8	44.1	52.4	1.8	3.54
	공주시	(67)	3.0	47.8	49.3		3.46
	보령시	(66)	3.0	34.8	59.1	3.0	3.62
	아산시	(115)	1.7	40.0	56.5	1.7	3.58
	서산시	(85)	1.2	49.4	49.4		3.48
	논산시	(70)	2.9	45.7	48.6	2.9	3.51
	계룡시	(43)		51.2	46.5	2.3	3.51
	당진시	(83)	1.2	41.0	53.0	4.8	3.61
	금산군	(46)	2.2	37.0	58.7	2.2	3.61
	부여군	(52)	3.8	48.1	46.2	1.9	3.46
	서천군	(45)	2.2	53.3	44.4		3.42
	청양군	(36)	8.3	50.0	41.7		3.33
	홍성군	(64)	3.1	51.6	42.2	3.1	3.45
	예산군	(57)	1.8	43.9	54.4		3.53
	태안군	(51)	2.0	47.1	47.1	3.9	3.53
거주행정 단위	읍	(322)	1.6	46.9	49.7	1.9	3.52
	면	(284)	4.6	47.2	47.2	1.1	3.45
	동	(444)	1.4	42.1	54.1	2.5	3.58

〈 표 114 〉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1)국회·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8	12.2	53.1	33.9	4.20
성별	남 자	(553)	0.9	13.2	50.8	35.1	4.20
	여 자	(497)	0.6	11.1	55.7	32.6	4.20
결혼여부	기 혼	(778)	0.5	12.5	52.1	35.0	4.21
	미 혼	(272)	1.5	11.4	56.3	30.9	4.17
연령대	20대	(170)	1.2	8.8	55.3	34.7	4.24
	30대	(186)	0.5	12.4	52.2	34.9	4.22
	40대	(234)	1.3	12.0	54.3	32.5	4.18
	50대	(256)	0.8	14.5	48.4	36.3	4.20
	60대 이상	(204)		12.3	56.9	30.9	4.19
학력	초졸이하	(124)		11.3	60.5	28.2	4.17
	고졸	(454)	1.1	11.5	55.1	32.4	4.19
	전문대졸	(155)	0.6	11.0	53.5	34.8	4.23
	대졸이상	(317)	0.6	14.2	47.3	37.9	4.22
가구형태	1인	(111)	2.7	14.4	51.4	31.5	4.12
	2인	(265)	0.4	12.8	56.2	30.6	4.17
	3인	(360)	0.8	11.7	47.8	39.7	4.26
	4인 이상	(314)	0.3	11.5	57.3	30.9	4.19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2.0	17.6	54.9	25.5	4.04
	200-400만원 미만	(330)	0.6	10.0	54.2	35.2	4.24
	400-600만원대	(336)	0.9	13.7	53.0	32.4	4.17
	600만원 이상	(282)	0.4	11.0	51.4	37.2	4.26
직업	관리자	(36)		27.8	36.1	36.1	4.0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	21.9	31.3	43.8	4.16
	사무종사자	(174)		8.6	54.6	36.8	4.28
	서비스 종사자	(170)	1.8	14.1	48.2	35.9	4.18
	판매종사자	(157)	0.6	7.6	52.9	38.9	4.3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1.8	57.9	30.3	4.1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4	15.9	51.2	30.5	4.1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8	64.3	31.0	4.26
	단순노무종사자	(29)		6.9	55.2	37.9	4.31
	주부	(81)		12.3	63.0	24.7	4.12
	학생	(63)	1.6	11.1	49.2	38.1	4.24
	무직	(32)		25.0	62.5	12.5	3.88
계층의식	하층	(99)	2.0	18.2	48.5	31.3	4.09
	중하층	(471)		6.2	54.6	39.3	4.33
	중층	(404)	1.0	14.1	56.2	28.7	4.13
	중상층	(76)	2.6	31.6	34.2	31.6	3.95

정치성향	보수	(108)	.	6.5	57.4	36.1	4.30
	중도보수	(257)	1.6	18.7	51.4	28.4	4.07
	중도	(327)	1.2	14.1	50.8	33.9	4.17
	중도진보	(293)	.	5.5	56.3	38.2	4.33
	진보	(65)	.	16.9	50.8	32.3	4.15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	11.9	56.9	31.3	4.19
	아파트	(510)	0.6	10.6	50.4	38.4	4.27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3.0	17.8	53.3	26.0	4.02
거주시군	천안시	(170)	.	13.5	43.5	42.9	4.29
	공주시	(67)	1.5	9.0	52.2	37.3	4.25
	보령시	(66)	3.0	12.1	62.1	22.7	4.05
	아산시	(115)	.	11.3	53.0	35.7	4.24
	서산시	(85)	3.5	11.8	44.7	40.0	4.21
	논산시	(70)	1.4	15.7	50.0	32.9	4.14
	계룡시	(43)	.	7.0	72.1	20.9	4.14
	당진시	(83)	.	10.8	59.0	30.1	4.19
	금산군	(46)	.	13.0	41.3	45.7	4.33
	부여군	(52)	.	13.5	51.9	34.6	4.21
	서천군	(45)	.	11.1	62.2	26.7	4.16
	청양군	(36)	.	22.2	47.2	30.6	4.08
	홍성군	(64)	1.6	12.5	60.9	25.0	4.09
	예산군	(57)	.	19.3	59.6	21.1	4.02
	태안군	(51)	.	.	58.8	41.2	4.41
거주행정 단위	읍	(322)	.	10.6	54.0	35.4	4.25
	면	(284)	1.1	13.7	54.2	31.0	4.15
	동	(444)	1.1	12.4	51.8	34.7	4.20

〈 표 115 〉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2)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3	12.4	47.4	39.9	4.27
성별	남 자	(553)	0.4	11.9	48.3	39.4	4.27
	여 자	(497)	0.2	12.9	46.5	40.4	4.27
결혼여부	기 혼	(778)	0.4	12.6	48.8	38.2	4.25
	미 혼	(272)		11.8	43.4	44.9	4.33
연령대	20대	(170)		10.0	42.4	47.6	4.38
	30대	(186)		8.1	46.2	45.7	4.38
	40대	(234)	0.4	10.3	52.6	36.8	4.26
	50대	(256)	0.8	13.7	46.5	39.1	4.24
	60대 이상	(204)		19.1	48.0	32.8	4.14
학력	중졸이하	(124)		17.7	50.0	32.3	4.15
	고졸	(454)		12.8	46.0	41.2	4.28
	전문대졸	(155)	0.6	8.4	49.0	41.9	4.32
	대졸이상	(317)	0.6	11.7	47.6	40.1	4.27
가구형태	1인	(111)		16.2	45.9	37.8	4.22
	2인	(265)	0.4	18.1	44.9	36.6	4.18
	3인	(360)	0.3	9.7	52.5	37.5	4.27
	4인 이상	(314)	0.3	9.2	44.3	46.2	4.36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30.4	48.0	21.6	3.91
	200-400만원 미만	(330)		10.6	46.1	43.3	4.33
	400-600만원대	(336)	0.6	10.4	49.4	39.6	4.28
	600만원 이상	(282)	0.4	10.3	46.5	42.9	4.32
직업	관리자	(36)		19.4	47.2	33.3	4.1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25.0	43.8	31.3	4.06
	사무종사자	(174)		6.3	50.6	43.1	4.37
	서비스 종사자	(170)	0.6	12.9	45.3	41.2	4.27
	판매종사자	(157)		8.9	49.0	42.0	4.3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19.1	46.7	34.2	4.15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4	11.0	53.7	32.9	4.1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8	52.4	42.9	4.38
	단순노무종사자	(29)		10.3	51.7	37.9	4.28
	주부	(81)		16.0	44.4	39.5	4.23
	학생	(63)		11.1	34.9	54.0	4.43
	무직	(32)		15.6	46.9	37.5	4.22
계층의식	하층	(99)		22.2	48.5	29.3	4.07
	중하층	(471)		6.2	45.4	48.4	4.42
	중층	(404)	0.5	14.9	48.5	36.1	4.20
	중상층	(76)	1.3	25.0	52.6	21.1	3.93

정치성향	보수	(108)	.	10.2	44.4	45.4	4.35
	중도보수	(257)	.	19.1	44.4	36.6	4.18
	중도	(327)	0.9	12.5	44.6	41.9	4.28
	중도진보	(293)	.	6.5	53.6	39.9	4.33
	진보	(65)	.	15.4	50.8	33.8	4.18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0.3	12.4	46.9	40.4	4.27
	아파트	(510)	0.4	10.2	47.3	42.2	4.31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	18.9	49.1	32.0	4.13
거주시군	천안시	(170)	.	15.3	41.2	43.5	4.28
	공주시	(67)	.	11.9	49.3	38.8	4.27
	보령시	(66)	.	16.7	48.5	34.8	4.18
	아산시	(115)	.	10.4	51.3	38.3	4.28
	서산시	(85)	2.4	8.2	43.5	45.9	4.33
	논산시	(70)	.	11.4	50.0	38.6	4.27
	계룡시	(43)	.	4.7	58.1	37.2	4.33
	당진시	(83)	.	4.8	50.6	44.6	4.40
	금산군	(46)	.	15.2	41.3	43.5	4.28
	부여군	(52)	.	15.4	48.1	36.5	4.21
	서천군	(45)	2.2	13.3	37.8	46.7	4.29
	청양군	(36)	.	19.4	38.9	41.7	4.22
	홍성군	(64)	.	15.6	50.0	34.4	4.19
	예산군	(57)	.	15.8	54.4	29.8	4.14
	태안군	(51)	.	9.8	52.9	37.3	4.27
거주행정 단위	읍	(322)	0.3	11.8	46.0	41.9	4.30
	면	(284)	.	14.4	47.9	37.7	4.23
	동	(444)	0.5	11.5	48.2	39.9	4.27

〈 표 116 〉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3)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8	25.5	52.4	21.3	3.94
성별	남 자	(553)	0.5	25.0	52.1	22.4	3.96
	여 자	(497)	1.0	26.2	52.7	20.1	3.92
결혼여부	기 혼	(778)	0.9	26.1	52.3	20.7	3.93
	미 혼	(272)	0.4	23.9	52.6	23.2	3.99
연령대	20대	(170)		22.4	52.9	24.7	4.02
	30대	(186)	1.6	19.4	52.2	26.9	4.04
	40대	(234)	0.4	25.6	51.7	22.2	3.96
	50대	(256)	0.8	28.5	51.6	19.1	3.89
	60대 이상	(204)	1.0	29.9	53.9	15.2	3.83
학력	중졸이하	(124)	0.8	29.8	54.0	15.3	3.84
	고졸	(454)	0.9	28.9	50.9	19.4	3.89
	전문대졸	(155)		21.3	53.5	25.2	4.04
	대졸이상	(317)	0.9	21.1	53.3	24.6	4.02
가구형태	1인	(111)		30.6	49.5	19.8	3.89
	2인	(265)	1.5	31.3	50.2	17.0	3.83
	3인	(360)	0.3	24.4	51.9	23.3	3.98
	4인 이상	(314)	1.0	20.1	55.7	23.2	4.01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0	33.3	52.0	13.7	3.78
	200-400만원 미만	(330)	0.6	27.9	53.3	18.2	3.89
	400-600만원대	(336)	1.2	25.6	49.4	23.8	3.96
	600만원 이상	(282)	0.4	19.9	55.0	24.8	4.04
직업	관리자	(36)	2.8	19.4	50.0	27.8	4.0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15.6	59.4	25.0	4.09
	사무종사자	(174)		23.0	54.0	23.0	4.00
	서비스 종사자	(170)	1.2	26.5	57.1	15.3	3.86
	판매종사자	(157)	0.6	25.5	51.6	22.3	3.9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0.7	35.5	49.3	14.5	3.7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4.4	48.8	26.8	4.0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8.6	42.9	28.6	4.00
	단순노무종사자	(29)		17.2	58.6	24.1	4.07
	주부	(81)	3.7	24.7	46.9	24.7	3.93
	학생	(63)		23.8	49.2	27.0	4.03
	무직	(32)		15.6	68.8	15.6	4.00

계층의식	하층	(99)	2.0	26.3	58.6	13.1	3.83
	중하층	(471)	0.2	22.7	51.4	25.7	4.03
	중층	(404)	0.7	30.0	50.2	19.1	3.88
	중상층	(76)	2.6	18.4	61.8	17.1	3.93
정치성향	보수	(108)	1.9	28.7	55.6	13.9	3.81
	중도보수	(257)	0.4	31.5	52.1	16.0	3.84
	중도	(327)	0.9	24.8	53.8	20.5	3.94
	중도진보	(293)	0.7	18.4	50.5	30.4	4.11
	진보	(65)		32.3	49.2	18.5	3.86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0.5	27.5	52.3	19.7	3.91
	아파트	(510)	0.8	21.4	53.5	24.3	4.01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1.2	33.7	49.1	16.0	3.80
거주시군	천안시	(170)		17.1	55.9	27.1	4.10
	공주시	(67)	1.5	19.4	59.7	19.4	3.97
	보령시	(66)		36.4	42.4	21.2	3.85
	아산시	(115)	1.7	14.8	56.5	27.0	4.09
	서산시	(85)		25.9	50.6	23.5	3.98
	논산시	(70)	1.4	22.9	65.7	10.0	3.84
	계룡시	(43)		16.3	51.2	32.6	4.16
	당진시	(83)		28.9	49.4	21.7	3.93
	금산군	(46)	4.3	26.1	45.7	23.9	3.89
	부여군	(52)		36.5	53.8	9.6	3.73
	서천군	(45)	2.2	22.2	62.2	13.3	3.87
	청양군	(36)	2.8	36.1	38.9	22.2	3.81
	홍성군	(64)		37.5	45.3	17.2	3.80
	예산군	(57)		29.8	50.9	19.3	3.89
	태안군	(51)		41.2	41.2	17.6	3.76
거주행정단위	읍	(322)	0.9	29.8	51.9	17.4	3.86
	면	(284)	0.7	31.0	46.8	21.5	3.89
	동	(444)	0.7	18.9	56.3	24.1	4.04

〈 표 117 〉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4)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8	20.4	52.5	26.4	4.04
성별	남 자	(553)	0.5	21.3	49.0	29.1	4.07
	여 자	(497)	1.0	19.3	56.3	23.3	4.02
결혼여부	기 혼	(778)	0.6	20.3	52.6	26.5	4.05
	미 혼	(272)	1.1	20.6	52.2	26.1	4.03
연령대	20대	(170)	0.6	20.0	54.1	25.3	4.04
	30대	(186)	0.5	17.2	59.1	23.1	4.05
	40대	(234)		23.5	48.3	28.2	4.05
	50대	(256)	1.2	18.0	53.9	27.0	4.07
	60대 이상	(204)	1.5	23.0	48.0	27.5	4.01
학력	중졸이하	(124)	0.8	25.0	47.6	26.6	4.00
	고졸	(454)	1.1	16.7	57.9	24.2	4.05
	전문대졸	(155)	0.6	20.6	50.3	28.4	4.06
	대졸이상	(317)	0.3	23.7	47.6	28.4	4.04
가구형태	1인	(111)	0.9	21.6	51.4	26.1	4.03
	2인	(265)	2.3	21.5	52.1	24.2	3.98
	3인	(360)	0.3	23.6	50.6	25.6	4.01
	4인 이상	(314)		15.3	55.4	29.3	4.14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2.9	31.4	42.2	23.5	3.86
	200-400만원 미만	(330)	0.9	16.4	56.7	26.1	4.08
	400-600만원대	(336)	0.6	20.2	53.0	26.2	4.05
	600만원 이상	(282)		21.3	50.7	28.0	4.07
직업	관리자	(36)		27.8	41.7	30.6	4.0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7.5	53.1	9.4	3.72
	사무종사자	(174)		16.7	50.6	32.8	4.16
	서비스 종사자	(170)	1.2	24.7	54.7	19.4	3.92
	판매종사자	(157)	0.6	15.3	56.7	27.4	4.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2.0	19.1	49.3	29.6	4.0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1.2	23.2	47.6	28.0	4.0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1.4	50.0	28.6	4.07
	단순노무종사자	(29)		20.7	51.7	27.6	4.07
	주부	(81)		11.1	63.0	25.9	4.15
	학생	(63)	1.6	20.6	52.4	25.4	4.02
	무직	(32)		37.5	46.9	15.6	3.78
계층의식	하층	(99)	2.0	32.3	47.5	18.2	3.82
	중하층	(471)	0.2	13.6	54.6	31.6	4.18

	중층	(404)	1.2	21.8	52.2	24.8	4.00
	중상층	(76)		39.5	47.4	13.2	3.74
정치성향	보수	(108)		23.1	38.9	38.0	4.15
	중도보수	(257)	0.8	21.4	55.6	22.2	3.99
	중도	(327)	1.5	22.6	50.8	25.1	3.99
	중도진보	(293)		16.0	56.7	27.3	4.11
	진보	(65)	1.5	20.0	52.3	26.2	4.03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0.8	18.1	49.3	31.8	4.12
	아파트	(510)	0.6	19.0	54.5	25.9	4.06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1.2	29.6	53.3	16.0	3.84
거주시군	천안시	(170)		22.4	55.3	22.4	4.00
	공주시	(67)	1.5	23.9	52.2	22.4	3.96
	보령시	(66)	3.0	9.1	57.6	30.3	4.15
	아산시	(115)		18.3	65.2	16.5	3.98
	서산시	(85)	1.2	18.8	54.1	25.9	4.05
	논산시	(70)	2.9	15.7	40.0	41.4	4.20
	계룡시	(43)		16.3	58.1	25.6	4.09
	당진시	(83)		14.5	54.2	31.3	4.17
	금산군	(46)	4.3	23.9	56.5	15.2	3.83
	부여군	(52)		30.8	44.2	25.0	3.94
	서천군	(45)		13.3	48.9	37.8	4.24
	청양군	(36)		16.7	36.1	47.2	4.31
	홍성군	(64)		25.0	42.2	32.8	4.08
	예산군	(57)		26.3	54.4	19.3	3.93
	태안군	(51)		33.3	45.1	21.6	3.88
거주행정 단위	읍	(322)	0.3	22.4	51.2	26.1	4.03
	면	(284)	1.1	21.5	48.9	28.5	4.05
	동	(444)	0.9	18.2	55.6	25.2	4.05

〈 표 118 〉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_(5)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사례 수)	2	보통	4	아주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0.2	29.0	54.4	16.4	3.87
성별	남 자	(553)	0.4	28.6	53.3	17.7	3.88
	여 자	(497)		29.6	55.5	14.9	3.85
결혼여부	기 혼	(778)	0.1	28.5	53.5	17.9	3.89
	미 혼	(272)	0.4	30.5	57.0	12.1	3.81
연령대	20대	(170)	0.6	29.4	58.2	11.8	3.81
	30대	(186)		29.6	57.0	13.4	3.84
	40대	(234)		34.2	55.1	10.7	3.76
	50대	(256)	0.4	28.1	55.1	16.4	3.88
	60대 이상	(204)		23.5	47.1	29.4	4.06
학력	중졸이하	(124)		24.2	44.4	31.5	4.07
	고졸	(454)		22.2	60.8	17.0	3.95
	전문대졸	(155)	0.6	33.5	52.9	12.9	3.78
	대졸이상	(317)	0.3	38.5	49.8	11.4	3.72
가구형태	1인	(111)		29.7	49.5	20.7	3.91
	2인	(265)		25.7	49.8	24.5	3.99
	3인	(360)	0.6	33.1	53.3	13.1	3.79
	4인 이상	(314)		27.1	61.1	11.8	3.85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31.4	39.2	29.4	3.98
	200-400만원 미만	(330)		23.0	54.8	22.1	3.99
	400-600만원대	(336)	0.6	29.5	58.6	11.3	3.81
	600만원 이상	(282)		34.8	54.3	11.0	3.76
직업	관리자	(36)		52.8	30.6	16.7	3.6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56.3	37.5	6.3	3.50
	사무종사자	(174)		29.9	57.5	12.6	3.83
	서비스 종사자	(170)		34.7	55.3	10.0	3.75
	판매종사자	(157)		27.4	60.5	12.1	3.8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21.1	38.2	40.8	4.2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1.2	31.7	51.2	15.9	3.8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3.8	64.3	11.9	3.88
	단순노무종사자	(29)		10.3	79.3	10.3	4.00
	주부	(81)		24.7	59.3	16.0	3.91
	학생	(63)		22.2	63.5	14.3	3.92
	무직	(32)	3.1	28.1	65.6	3.1	3.69
계층의식	하층	(99)		31.3	48.5	20.2	3.89
	중하층	(471)		21.4	57.3	21.2	4.00
	중층	(404)	0.5	31.9	55.7	11.9	3.79
	중상층	(76)		57.9	36.8	5.3	3.47

정치성향	보수	(108)	.	20.4	51.9	27.8	4.07
	중도보수	(257)	.	31.1	53.3	15.6	3.84
	중도	(327)	0.3	31.8	53.5	14.4	3.82
	중도진보	(293)	0.3	25.9	57.0	16.7	3.90
	진보	(65)	.	35.4	55.4	9.2	3.74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	22.4	53.6	24.0	4.02
	아파트	(510)	0.4	31.8	56.1	11.8	3.79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	35.5	50.9	13.6	3.78
거주시군	천안시	(170)	.	32.4	57.1	10.6	3.78
	공주시	(67)	.	29.9	58.2	11.9	3.82
	보령시	(66)	.	19.7	59.1	21.2	4.02
	아산시	(115)	.	33.0	60.0	7.0	3.74
	서산시	(85)	1.2	22.4	55.3	21.2	3.96
	논산시	(70)	.	37.1	48.6	14.3	3.77
	계룡시	(43)	2.3	30.2	48.8	18.6	3.84
	당진시	(83)	.	20.5	44.6	34.9	4.14
	금산군	(46)	.	21.7	71.7	6.5	3.85
	부여군	(52)	.	28.8	51.9	19.2	3.90
	서천군	(45)	.	24.4	60.0	15.6	3.91
	청양군	(36)	.	19.4	52.8	27.8	4.08
	홍성군	(64)	.	39.1	46.9	14.1	3.75
	예산군	(57)	.	28.1	50.9	21.1	3.93
	태안군	(51)	.	39.2	45.1	15.7	3.76
거주행정단위	읍	(322)	.	30.7	52.2	17.1	3.86
	면	(284)	.	28.5	49.3	22.2	3.94
	동	(444)	0.5	28.2	59.2	12.2	3.83

〈 표 119 〉 지역균형발전부분 사회양극화 해소정책(평균 table)

		(사례 수)	(1) 국회·공공 기관 지방 이전	(2) 지방 거점 대학 지원 강화	(3) 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4)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5) 농어촌 주민 기본 소득제 도입 (월510만원)
[전체]		1050	4.20	4.27	3.94	4.04	3.87
성별	남 자	553	4.20	4.27	3.96	4.07	3.88
	여 자	497	4.20	4.27	3.92	4.02	3.85
결혼여부	기 혼	778	4.21	4.25	3.93	4.05	3.89
	미 혼	272	4.17	4.33	3.99	4.03	3.81
연령대	20대	170	4.24	4.38	4.02	4.04	3.81
	30대	186	4.22	4.38	4.04	4.05	3.84
	40대	234	4.18	4.26	3.96	4.05	3.76
	50대	256	4.20	4.24	3.89	4.07	3.88
	60대 이상	204	4.19	4.14	3.83	4.01	4.06
학력	중졸이하	124	4.17	4.15	3.84	4.00	4.07
	고졸	454	4.19	4.28	3.89	4.05	3.95
	전문대졸	155	4.23	4.32	4.04	4.06	3.78
	대졸이상	317	4.22	4.27	4.02	4.04	3.72
가구형태	1인	111	4.12	4.22	3.89	4.03	3.91
	2인	265	4.17	4.18	3.83	3.98	3.99
	3인	360	4.26	4.27	3.98	4.01	3.79
	4인 이상	314	4.19	4.36	4.01	4.14	3.85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4.04	3.91	3.78	3.86	3.98
	200-400만원 미만	330	4.24	4.33	3.89	4.08	3.99
	400-600만원대	336	4.17	4.28	3.96	4.05	3.81
	600만원 이상	282	4.26	4.32	4.04	4.07	3.76
직업	관리자	36	4.08	4.14	4.03	4.03	3.6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4.16	4.06	4.09	3.72	3.50
	사무종사자	174	4.28	4.37	4.00	4.16	3.83
	서비스 종사자	170	4.18	4.27	3.86	3.92	3.75
	판매종사자	157	4.30	4.33	3.96	4.11	3.8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4.18	4.15	3.78	4.07	4.2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10	4.17	4.02	4.02	3.8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26	4.38	4.00	4.07	3.88
	단순노무종사자	29	4.31	4.28	4.07	4.07	4.00
	주부	81	4.12	4.23	3.93	4.15	3.91
	학생	63	4.24	4.43	4.03	4.02	3.92
	무직	32	3.88	4.22	4.00	3.78	3.69

계층의식	하층	99	4.09	4.07	3.83	3.82	3.89
	중하층	471	4.33	4.42	4.03	4.18	4.00
	중층	404	4.13	4.20	3.88	4.00	3.79
	중상층	76	3.95	3.93	3.93	3.74	3.47
정치성향	보수	108	4.30	4.35	3.81	4.15	4.07
	중도보수	257	4.07	4.18	3.84	3.99	3.84
	중도	327	4.17	4.28	3.94	3.99	3.82
	중도진보	293	4.33	4.33	4.11	4.11	3.90
	진보	65	4.15	4.18	3.86	4.03	3.74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4.19	4.27	3.91	4.12	4.02
	아파트	510	4.27	4.31	4.01	4.06	3.79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4.02	4.13	3.80	3.84	3.78
거주시군	천안시	170	4.29	4.28	4.10	4.00	3.78
	공주시	67	4.25	4.27	3.97	3.96	3.82
	보령시	66	4.05	4.18	3.85	4.15	4.02
	아산시	115	4.24	4.28	4.09	3.98	3.74
	서산시	85	4.21	4.33	3.98	4.05	3.96
	논산시	70	4.14	4.27	3.84	4.20	3.77
	계룡시	43	4.14	4.33	4.16	4.09	3.84
	당진시	83	4.19	4.40	3.93	4.17	4.14
	금산군	46	4.33	4.28	3.89	3.83	3.85
	부여군	52	4.21	4.21	3.73	3.94	3.90
	서천군	45	4.16	4.29	3.87	4.24	3.91
	청양군	36	4.08	4.22	3.81	4.31	4.08
	홍성군	64	4.09	4.19	3.80	4.08	3.75
	예산군	57	4.02	4.14	3.89	3.93	3.93
	태안군	51	4.41	4.27	3.76	3.88	3.76
거주행정단위	읍	322	4.25	4.30	3.86	4.03	3.86
	면	284	4.15	4.23	3.89	4.05	3.94
	동	444	4.20	4.27	4.04	4.05	3.83

〈 표 120 〉 사회양극화 해소위해 중앙정부 가장 먼저 해야할 일 (복수응답)

		(사례 수)	임금격차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자에 대한 누진세 강화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강화	부동산과 세 강화	공공일자리 확대	교육기회의 균등	수도권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도시와 농촌 간 격차 완화	문화불균형 해소 강화/ 문화혜택 강화
[전체]		(1050)	36.7	26.0	30.5	15.0	21.0	11.3	11.7	22.5	25.1	0.1
성별	남 자	(553)	34.0	27.3	29.8	15.6	20.3	11.9	11.8	23.9	25.5	
	여 자	(497)	39.6	24.5	31.2	14.5	21.9	10.7	11.7	20.9	24.7	0.2
결혼여부	기 혼	(778)	35.7	22.2	30.8	15.8	20.4	10.3	11.4	24.0	29.0	0.1
	미 혼	(272)	39.3	36.8	29.4	12.9	22.8	14.3	12.5	18.0	14.0	
연령대	20대	(170)	40.6	39.4	24.7	10.6	22.4	14.7	14.1	20.0	13.5	
	30대	(186)	40.3	34.4	34.9	15.1	18.8	12.4	10.8	17.7	15.6	
	40대	(234)	38.0	26.5	32.5	14.1	23.5	8.1	14.5	18.8	23.9	
	50대	(256)	40.6	23.4	28.5	18.4	17.2	9.0	7.4	27.3	27.7	0.4
	60대 이상	(204)	23.5	9.8	31.4	15.7	24.0	14.2	12.7	27.0	41.7	
학력	종졸이하	(124)	23.4	8.9	27.4	12.1	25.8	12.9	13.7	27.4	48.4	
	고졸	(454)	37.0	26.7	31.7	16.7	20.0	11.9	10.8	20.5	24.4	0.2
	전문대졸	(155)	43.9	28.4	29.0	12.3	19.4	9.0	11.6	21.9	24.5	
	대졸이상	(317)	37.9	30.6	30.6	15.1	21.5	11.0	12.3	23.7	17.4	
가구형태	1인	(111)	41.4	30.6	32.4	12.6	25.2	13.5	7.2	17.1	19.8	
	2인	(265)	30.6	15.1	29.1	15.8	23.0	12.5	11.3	23.8	38.9	
	3인	(360)	31.9	31.9	29.7	16.7	18.3	11.1	15.3	25.8	19.2	
	4인 이상	(314)	45.5	26.8	31.8	13.4	21.0	9.9	9.6	19.4	22.3	0.3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23.5	13.7	33.3	15.7	23.5	13.7	10.8	29.4	36.3	
	200-400만원 미만	(330)	40.0	23.0	30.3	16.4	21.8	11.8	10.0	18.2	28.5	
	400-600만원대	(336)	34.2	31.3	29.8	12.5	21.7	10.4	12.8	21.7	25.3	0.3
	600만원 이상	(282)	40.4	27.7	30.5	16.3	18.4	11.0	12.8	25.9	17.0	
직업	관리자	(36)	25.0	11.1	30.6	27.8	25.0	11.1	13.9	36.1	19.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4.4	15.6	28.1	25.0	15.6	3.1	15.6	40.6	21.9	
	사무종사자	(174)	42.0	36.2	33.3	10.9	21.8	10.3	9.2	21.8	14.4	
	서비스 종사자	(170)	37.1	33.5	25.3	17.1	20.6	10.0	11.8	20.6	24.1	
	판매종사자	(157)	43.9	26.8	35.7	9.6	19.1	9.6	13.4	21.0	21.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23.7	11.8	27.0	16.4	19.7	9.2	14.5	27.6	5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2)	35.4	24.4	35.4	15.9	19.5	11.0	15.9	22.0	20.7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42.9	38.1	21.4	11.9	28.6	14.3	9.5	14.3	19.0	
	단순노무종사자	(29)	34.5	17.2	27.6	13.8	34.5	13.8	3.4	17.2	37.9	
	주부	(81)	45.7	13.6	34.6	24.7	18.5	11.1	6.2	17.3	27.2	1.2
	학생	(63)	30.2	34.9	31.7	14.3	20.6	19.0	11.1	22.2	15.9	
	무직	(32)	34.4	31.3	25.0	3.1	25.0	31.3	12.5	15.6	21.9	
계층의식	하층	(99)	34.3	20.2	30.3	18.2	26.3	16.2	10.1	20.2	24.2	
	중하층	(471)	38.9	25.1	31.8	11.9	19.7	10.8	13.4	22.1	26.3	
	중층	(404)	37.4	29.2	28.7	15.8	20.0	11.1	9.7	22.0	25.7	0.2
	중상층	(76)	22.4	22.4	31.6	26.3	27.6	9.2	14.5	30.3	15.8	
정치성향	보수	(108)	30.6	11.1	36.1	9.3	28.7	10.2	7.4	21.3	45.4	
	중도보수	(257)	32.7	22.6	26.1	22.2	16.7	14.0	12.5	24.9	28.4	
	중도	(327)	39.1	28.1	32.4	14.1	22.0	10.1	13.1	18.0	22.6	0.3
	중도진보	(293)	40.6	32.8	29.7	11.6	19.1	11.6	11.9	25.3	17.4	
주택형태	진보	(65)	32.3	23.1	32.3	16.9	29.2	7.7	7.7	24.6	26.2	
	단독주택	(371)	33.4	19.1	26.4	13.7	22.9	11.3	12.9	22.1	38.0	
	아파트	(510)	37.8	29.6	33.3	14.9	18.6	10.6	12.9	24.1	17.8	0.2
거주시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40.2	30.2	30.8	18.3	24.3	13.6	5.3	18.3	18.9	
	천안시	(170)	41.8	33.5	39.4	17.1	15.9	9.4	8.8	19.4	14.7	
	공주시	(67)	28.4	14.9	37.3	16.4	17.9	13.4	11.9	28.4	31.3	
	보령시	(66)	40.9	27.3	30.3	18.2	18.2	9.1	6.1	25.8	24.2	
	아산시	(115)	49.6	30.4	25.2	11.3	22.6	16.5	7.8	23.5	12.2	0.9
	서산시	(85)	34.1	23.5	37.6	18.8	15.3	9.4	17.6	18.8	24.7	
	논산시	(70)	32.9	22.9	37.1	14.3	17.1	21.4	11.4	25.7	17.1	
	계룡시	(43)	27.9	18.6	30.2	32.6	18.6	18.6	18.6	20.9	14.0	
	당진시	(83)	26.5	32.5	25.3	14.5	25.3	12.0	10.8	20.5	32.5	
	금산군	(46)	34.8	26.1	17.4	19.6	23.9	15.2	17.4	19.6	26.1	
	부여군	(52)	34.6	15.4	25.0	17.3	26.9	9.6	13.5	19.2	38.5	
	서천군	(45)	33.3	26.7	40.0	8.9	17.8	2.2	11.1	17.8	42.2	
	청양군	(36)	22.2	13.9	27.8	13.9	33.3	5.6	8.3	25.0	50.0	
	홍성군	(64)	37.5	26.6	15.6	10.9	26.6	6.3	9.4	21.9	45.3	
	예산군	(57)	38.6	26.3	26.3	5.3	21.1	8.8	10.5	35.1	28.1	
	태안군	(51)	43.1	25.5	25.5	7.8	31.4	7.8	23.5	19.6	15.7	
거주행정 단위	읍	(322)	40.4	25.5	27.0	10.6	23.9	8.1	12.7	25.8	26.1	
	면	(284)	29.2	22.9	29.2	16.5	20.1	10.9	14.4	21.5	35.2	
	동	(444)	38.7	28.4	33.8	17.3	19.6	14.0	9.2	20.7	18.0	0.2

〈 표 121〉 사회양극화 해소위해 충남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_(복수응답)

		(사 례 수)	청년 및 신혼 부부 주택 비 지원	중소 자영 업자 지원 강화	취약 계층 돌봄 서비스 확대	농 어민 수당 확대	취약 계층 학생 학습 비 지원	공공 일자 리 확대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영세 자영 업자 보험 료 지원	충남 남부 지역 산업 발전
[전체]		(1000)	22.8	23.7	28.3	14.0	22.0	37.2	16.1	17.3	18.5
성별	남 자	(553)	23.5	24.6	25.9	13.7	20.4	38.0	16.3	17.5	19.9
	여 자	(497)	21.9	22.7	31.0	14.3	23.7	36.4	15.9	17.1	16.9
결혼 여부	기 혼	(778)	15.0	25.3	28.1	17.6	22.4	36.8	14.4	21.1	19.2
	미 혼	(272)	44.9	19.1	28.7	3.7	21.0	38.6	21.0	6.6	16.5
연령 대	20대	(170)	53.5	14.1	24.1	2.4	19.4	40.6	23.5	5.3	17.1
	30대	(186)	37.1	22.6	30.6	4.8	23.1	33.3	23.7	11.3	13.4
	40대	(234)	13.7	28.6	35.5	7.7	20.9	38.5	15.4	24.8	15.0
	50대	(256)	11.3	30.1	29.3	14.8	23.4	34.0	12.9	21.5	22.7
	60대 이상	(204)	8.8	19.1	20.1	38.2	22.5	40.7	7.8	19.1	23.0
학력	중졸이하	(124)	7.3	13.7	17.7	46.8	20.2	46.8	8.1	14.5	24.2
	고졸	(454)	25.8	23.6	26.4	13.0	20.5	35.5	15.9	22.5	17.0
	전문대졸	(155)	22.6	27.7	28.4	6.5	25.2	32.3	20.0	16.8	20.6
	대졸이상	(317)	24.6	25.9	35.0	6.3	23.3	38.5	17.7	11.4	17.4
가구 형태	1인	(111)	33.3	22.5	32.4	16.2	19.8	34.2	14.4	8.1	18.0
	2인	(265)	12.5	20.4	23.0	29.8	25.3	39.2	9.4	17.7	22.6
	3인	(360)	24.2	27.2	28.9	8.1	25.6	33.6	18.1	16.7	17.8
	4인 이상	(314)	26.1	22.9	30.6	6.7	15.9	40.8	20.1	21.0	15.9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17.6	21.6	19.6	42.2	23.5	33.3	9.8	8.8	22.5
	200-400만원 미만	(330)	22.1	21.5	27.0	19.1	20.9	39.1	14.5	17.9	17.9
	400-600만원대	(336)	25.9	27.1	28.9	6.5	22.0	37.2	17.3	18.5	16.7
	600만원 이상	(282)	21.6	23.0	32.3	6.7	22.7	36.5	18.8	18.4	19.9
직업	관리자	(36)	8.3	27.8	41.7	16.7	27.8	30.6	8.3	8.3	30.6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9.4	31.3	37.5	6.3	28.1	37.5	25.0	15.6	9.4
	사무종사자	(174)	27.0	22.4	31.6	8.0	21.8	39.7	21.3	8.0	20.1
	서비스 종사자	(170)	25.9	31.8	27.6	3.5	23.5	31.2	21.8	25.9	8.8
	판매종사자	(157)	17.2	31.2	26.1	7.0	17.8	35.0	11.5	39.5	14.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7.2	13.8	14.5	55.3	23.0	32.9	4.6	19.7	28.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22.0	26.8	40.2	8.5	26.8	31.7	13.4	8.5	22.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31.0	14.3	31.0	9.5	16.7	45.2	23.8	11.9	16.7
	단순노무종사자	(29)		17.2	24.1	13.8	20.7	82.8	13.8	6.9	20.7
	주부	(81)	24.7	24.7	35.8	8.6	22.2	33.3	21.0	9.9	19.8
	학생	(63)	55.6	14.3	23.8	1.6	22.2	42.9	15.9	3.2	20.6

	무직	(32)	56.3	12.5	25.0	3.1	12.5	56.3	21.9		12.5
계층 의식	하층	(99)	24.2	24.2	22.2	27.3	23.2	32.3	16.2	15.2	14.1
	중하층	(471)	24.2	19.3	25.9	15.9	20.0	42.3	16.6	16.1	19.7
	중층	(404)	21.3	27.2	30.4	9.2	21.8	33.9	16.6	21.0	18.6
	중상층	(76)	19.7	31.6	39.5	10.5	34.2	30.3	10.5	7.9	15.8
	보수	(108)	9.3	16.7	17.6	31.5	21.3	39.8	13.9	25.9	23.1
정치 성향	중도보수	(257)	21.4	24.9	29.2	18.7	21.4	34.6	10.9	17.1	21.8
	중도	(327)	21.4	27.5	31.8	11.3	24.8	36.1	16.2	14.4	16.5
	중도진보	(293)	28.0	22.2	26.3	7.2	19.5	38.6	20.8	20.1	17.4
	진보	(65)	33.8	18.5	33.8	10.8	23.1	43.1	18.5	6.2	12.3
	단독주택	(371)	18.3	19.1	23.7	27.2	18.6	37.2	14.8	18.1	22.6
주택 형태	아파트	(510)	23.5	25.5	29.0	5.3	24.5	39.6	16.3	19.0	17.3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30.2	28.4	36.1	11.2	21.9	30.2	18.3	10.7	13.0
거주 시군	천안시	(170)	28.2	30.0	34.1	7.1	14.7	40.0	20.6	15.3	10.0
	공주시	(67)	20.9	26.9	26.9	17.9	29.9	20.9	19.4	19.4	17.9
	보령시	(66)	16.7	25.8	30.3	18.2	21.2	19.7	19.7	24.2	24.2
	아산시	(115)	28.7	19.1	31.3	7.8	29.6	41.7	13.9	15.7	12.2
	서산시	(85)	18.8	16.5	34.1	16.5	29.4	31.8	18.8	18.8	15.3
	논산시	(70)	20.0	15.7	18.6	12.9	27.1	48.6	12.9	22.9	21.4
	계룡시	(43)	23.3	25.6	25.6	7.0	25.6	37.2	23.3	14.0	18.6
	당진시	(83)	19.3	19.3	27.7	19.3	20.5	42.2	20.5	12.0	19.3
	금산군	(46)	15.2	34.8	26.1	15.2	10.9	54.3	10.9	26.1	6.5
	부여군	(52)	23.1	30.8	30.8	13.5	23.1	40.4	9.6	17.3	11.5
	서천군	(45)	17.8	24.4	24.4	11.1	20.0	44.4	17.8	22.2	17.8
	청양군	(36)	19.4	16.7	27.8	27.8	13.9	50.0	2.8	11.1	30.6
	홍성군	(64)	26.6	21.9	32.8	15.6	20.3	23.4	7.8	18.8	32.8
	예산군	(57)	22.8	29.8	19.3	21.1	10.5	33.3	14.0	12.3	35.1
	태안군	(51)	25.5	17.6	15.7	17.6	31.4	35.3	15.7	13.7	27.5
거주 행정 단위	읍	(322)	23.0	24.8	26.4	12.1	19.9	39.4	14.9	17.4	22.0
	면	(284)	18.3	21.8	25.0	27.5	25.4	34.2	12.3	15.5	19.7
	동	(444)	25.5	24.1	31.8	6.8	21.4	37.6	19.4	18.5	15.1

〈 표 122 〉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 가능성

		(사례수)	전혀 없음	없음	잘 모름	약간 있음	매우 많음	평균 (점)
[전체]		(1050)	1.8	52.7	25.8	19.0	0.7	2.64
성별	남 자	(553)	1.3	55.0	23.3	19.9	0.5	2.63
	여 자	(497)	2.4	50.1	28.6	18.1	0.8	2.65
결혼여부	기 혼	(778)	1.5	44.9	28.4	24.7	0.5	2.78
	미 혼	(272)	2.6	75.0	18.4	2.9	1.1	2.25
연령대	20대	(170)	2.4	74.1	18.2	3.5	1.8	2.28
	30대	(186)	3.8	81.7	12.9	1.1	0.5	2.13
	40대	(234)	1.3	69.7	26.5	2.1	0.4	2.31
	50대	(256)	0.8	15.6	30.9	52.3	0.4	3.36
	60대 이상	(204)	1.5	35.3	36.8	26.0	0.5	2.89
학력	중졸이하	(124)	1.6	39.5	37.1	21.8		2.79
	고졸	(454)	2.2	46.7	26.2	24.7	0.2	2.74
	전문대졸	(155)		62.6	21.9	14.2	1.3	2.54
	대졸이상	(317)	2.2	61.5	22.7	12.3	1.3	2.49
가구형태	1인	(111)	3.6	76.6	15.3	4.5		2.21
	2인	(265)	0.8	41.1	32.1	26.0		2.83
	3인	(360)	1.4	54.7	23.3	19.4	1.1	2.64
	4인 이상	(314)	2.5	51.6	27.1	17.8	1.0	2.63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2.0	54.9	32.4	10.8		2.52
	200~400만원 미만	(330)	3.3	60.3	23.3	13.0		2.46
	400~600만원대	(336)	1.2	49.1	25.3	23.5	0.9	2.74
	600만원 이상	(282)	0.7	47.2	27.0	23.8	1.4	2.78
직업	관리자	(36)	2.8	22.2	33.3	38.9	2.8	3.1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7.5	34.4	28.1		2.91
	사무종사자	(174)	1.1	70.7	19.0	8.6	0.6	2.37
	서비스 종사자	(170)	1.2	51.2	25.9	21.2	0.6	2.69
	판매종사자	(157)	3.2	46.5	28.7	21.0	0.6	2.6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0.7	47.4	31.6	20.4		2.7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1.2	51.2	24.4	23.2		2.7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57.1	19.0	21.4	2.4	2.69
	단순노무종사자	(29)		31.0	34.5	34.5		3.03
	주부	(81)	3.7	46.9	27.2	21.0	1.2	2.69
	학생	(63)	1.6	77.8	15.9	4.8		2.24
	무직	(32)	9.4	50.0	25.0	12.5	3.1	2.50

계층의식	하층	(99)	5.1	53.5	30.3	9.1	2.0	2.49
	중하층	(471)	2.1	58.2	23.8	15.5	0.4	2.54
	중층	(404)	1.0	47.3	26.7	24.8	0.2	2.76
	중상층	(76)		46.1	27.6	23.7	2.6	2.83
정치성향	보수	(108)	1.9	38.9	35.2	23.1	0.9	2.82
	중도보수	(257)	1.6	50.6	26.8	21.0		2.67
	중도	(327)	1.5	52.3	26.6	19.6		2.64
	중도진보	(293)	2.4	58.0	21.2	16.4	2.0	2.58
	진보	(65)	1.5	61.5	23.1	13.8		2.49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1.9	45.3	31.0	21.8		2.73
	아파트	(510)	1.2	51.6	25.3	20.8	1.2	2.69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3.6	72.2	16.0	7.7	0.6	2.30
거주시군	천안시	(170)	2.4	54.1	25.9	16.5	1.2	2.60
	공주시	(67)		40.3	25.4	34.3		2.94
	보령시	(66)		47.0	25.8	25.8	1.5	2.82
	아산시	(115)	0.9	59.1	18.3	20.9	0.9	2.62
	서산시	(85)	2.4	51.8	25.9	20.0		2.64
	논산시	(70)	2.9	64.3	15.7	17.1		2.47
	계룡시	(43)		55.8	27.9	14.0	2.3	2.63
	당진시	(83)	3.6	55.4	24.1	14.5	2.4	2.57
	금산군	(46)	2.2	52.2	17.4	28.3		2.72
	부여군	(52)	5.8	42.3	44.2	7.7		2.54
	서천군	(45)	2.2	40.0	37.8	20.0		2.76
	청양군	(36)		55.6	33.3	11.1		2.56
	홍성군	(64)	1.6	51.6	35.9	10.9		2.56
	예산군	(57)	1.8	43.9	31.6	22.8		2.75
	태안군	(51)		66.7	11.8	21.6		2.55
거주행정단 위	읍	(322)	1.6	54.7	29.2	14.0	0.6	2.57
	면	(284)	2.1	50.7	26.1	21.1		2.66
	동	(444)	1.8	52.5	23.2	21.4	1.1	2.68

〈 표 123 〉 양극화 해소위해 증세 필요성 동의정도

		(사례수)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동의	완전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1.7	32.0	25.5	39.6	1.1	3.06
성별	남 자	(553)	2.0	36.2	21.3	39.1	1.4	3.02
	여 자	(497)	1.4	27.4	30.2	40.2	0.8	3.12
결혼여부	기 혼	(778)	1.8	34.7	24.9	37.4	1.2	3.01
	미 혼	(272)	1.5	24.3	27.2	46.0	1.1	3.21
연령대	20대	(170)	2.4	19.4	31.8	45.3	1.2	3.24
	30대	(186)		27.4	21.5	50.0	1.1	3.25
	40대	(234)	0.9	26.1	29.5	42.3	1.3	3.17
	50대	(256)	1.6	34.0	23.8	39.1	1.6	3.05
	60대 이상	(204)	3.9	51.0	21.6	23.0	0.5	2.65
학력	중졸이하	(124)	0.8	57.3	21.0	21.0		2.62
	고졸	(454)	2.2	30.4	28.4	38.5	0.4	3.05
	전문대졸	(155)	1.3	27.7	28.4	40.6	1.9	3.14
	대졸이상	(317)	1.6	26.5	21.8	47.9	2.2	3.23
가구형태	1인	(111)	1.8	33.3	26.1	38.7		3.02
	2인	(265)	3.0	40.8	20.0	35.1	1.1	2.91
	3인	(360)	1.1	29.4	30.3	37.5	1.7	3.09
	4인 이상	(314)	1.3	27.1	24.5	46.2	1.0	3.18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3.9	52.0	21.6	21.6	1.0	2.64
	200-400만 원 미만	(330)	1.8	35.2	23.9	38.5	0.6	3.01
	400-600만원대	(336)	1.5	27.7	25.6	44.0	1.2	3.16
	600만원 이상	(282)	1.1	26.2	28.7	42.2	1.8	3.17
직업	관리자	(36)	2.8	36.1	11.1	44.4	5.6	3.1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3.1	40.6	15.6	40.6		2.94
	사무종사자	(174)		24.7	24.1	49.4	1.7	3.28
	서비스 종사자	(170)	1.2	28.2	26.5	42.9	1.2	3.15
	판매종사자	(157)	2.5	29.9	29.3	36.9	1.3	3.0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3.3	46.1	20.4	29.6	0.7	2.7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35.4	31.7	32.9		2.9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3.8	31.0	42.9	2.4	3.24
	단순노무 종사자	(29)		44.8	24.1	31.0		2.86

	주부	(81)	2.5	28.4	28.4	40.7		3.07
	학생	(63)	1.6	27.0	33.3	38.1		3.08
	무직	(32)	6.3	31.3	15.6	43.8	3.1	3.06
계층의식	하층	(99)	2.0	40.4	22.2	34.3	1.0	2.92
	중하층	(471)	0.8	30.8	27.6	39.7	1.1	3.09
	중층	(404)	2.7	29.0	24.5	42.6	1.2	3.11
	중상층	(76)	1.3	44.7	22.4	30.3	1.3	2.86
정치성향	보수	(108)	7.4	59.3	13.9	18.5	0.9	2.46
	중도보수	(257)	1.9	50.2	28.4	19.5		2.65
	중도	(327)	1.5	25.4	35.5	37.0	0.6	3.10
	중도진보	(293)		15.0	18.4	64.2	2.4	3.54
	진보	(65)		24.6	15.4	56.9	3.1	3.38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1.9	39.6	22.1	35.6	0.8	2.94
	아파트	(510)	1.6	25.9	28.4	42.4	1.8	3.17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1.8	33.7	24.3	40.2		3.03
거주시군	천안시	(170)	1.8	27.1	32.9	36.5	1.8	3.09
	공주시	(67)	3.0	31.3	20.9	43.3	1.5	3.09
	보령시	(66)	1.5	33.3	24.2	39.4	1.5	3.06
	아산시	(115)	0.9	30.4	31.3	36.5	0.9	3.06
	서산시	(85)	2.4	28.2	28.2	41.2		3.08
	논산시	(70)	4.3	31.4	20.0	42.9	1.4	3.06
	계룡시	(43)		18.6	37.2	39.5	4.7	3.30
	당진시	(83)		32.5	25.3	42.2		3.10
	금산군	(46)	4.3	34.8	17.4	43.5		3.00
	부여군	(52)	3.8	46.2	15.4	34.6		2.81
	서천군	(45)	4.4	51.1	11.1	33.3		2.73
	청양군	(36)		38.9	25.0	36.1		2.97
	홍성군	(64)		34.4	21.9	40.6	3.1	3.13
	예산군	(57)		31.6	24.6	43.9		3.12
	태안군	(51)		27.5	25.5	45.1	2.0	3.22
거주행정 단위	읍	(322)	1.6	31.1	24.2	41.6	1.6	3.11
	면	(284)	1.8	38.4	22.2	37.0	0.7	2.96
	동	(444)	1.8	28.6	28.6	39.9	1.1	3.10

〈 표 124 〉 (중세 동의 시) 자신이 다소 손해 보더라도 양극화 해소위해 증세한다면 동의정도

		(사례 수)	동의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동의	완전 동의함	평균 (점)
[전체]		(696)	17.1	43.7	38.4	0.9	3.23
성별	남 자	(342)	17.0	41.2	40.4	1.5	3.26
	여 자	(354)	17.2	46.0	36.4	0.3	3.20
결혼여부	기 혼	(494)	15.8	44.1	39.3	0.8	3.25
	미 혼	(202)	20.3	42.6	36.1	1.0	3.18
연령대	20대	(133)	20.3	42.9	35.3	1.5	3.18
	30대	(135)	16.3	37.8	45.9		3.30
	40대	(171)	13.5	46.2	39.2	1.2	3.28
	50대	(165)	16.4	46.1	37.0	0.6	3.22
	60대 이상	(92)	21.7	44.6	32.6	1.1	3.13
학력	중졸이하	(52)	17.3	51.9	30.8		3.13
	고졸	(306)	18.6	46.1	34.6	0.7	3.17
	전문대졸	(110)	15.5	41.8	42.7		3.27
	대졸이상	(228)	15.8	39.5	43.0	1.8	3.31
가구형태	1인	(72)	16.7	47.2	36.1		3.19
	2인	(149)	22.1	43.0	33.6	1.3	3.14
	3인	(250)	15.6	40.0	43.2	1.2	3.30
	4인 이상	(225)	15.6	47.1	36.9	0.4	3.22
월 소득	200만원 미만	(45)	17.8	55.6	24.4	2.2	3.11
	200-400만원 미만	(208)	19.7	42.8	37.5		3.18
	400-600만원대	(238)	17.2	39.9	42.0	0.8	3.26
	600만원 이상	(205)	14.1	46.3	38.0	1.5	3.27
직업	관리자	(22)	18.2	36.4	45.5		3.2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8)	5.6	27.8	61.1	5.6	3.67
	사무종사자	(131)	13.0	44.3	42.0	0.8	3.31
	서비스 종사자	(120)	14.2	48.3	37.5		3.23
	판매종사자	(106)	18.9	41.5	39.6		3.2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7)	20.8	39.0	39.0	1.3	3.2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53)	24.5	45.3	30.2		3.06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2)	12.5	50.0	31.3	6.3	3.31
	단순노무종사자	(16)	18.8	31.3	50.0		3.31
	주부	(56)	12.5	50.0	37.5		3.25
	학생	(45)	28.9	33.3	37.8		3.09
	무직	(20)	20.0	65.0	10.0	5.0	3.00
계층의식	하층	(57)	15.8	45.6	36.8	1.8	3.25
	중하층	(322)	16.5	39.8	43.2	0.6	3.28
	중층	(276)	18.5	46.0	34.8	0.7	3.18
	중상층	(41)	14.6	56.1	26.8	2.4	3.17

정치성향	보수	(36)	19.4	33.3	44.4	2.8	3.31
	중도보수	(123)	24.4	50.4	25.2	.	3.01
	중도	(239)	22.6	47.3	30.1	.	3.08
	중도진보	(249)	9.2	39.0	50.2	1.6	3.44
	진보	(49)	10.2	40.8	46.9	2.0	3.41
주택형태	단독주택	(217)	17.5	38.2	42.4	1.8	3.29
	아파트	(370)	16.2	46.5	36.8	0.5	3.22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09)	19.3	45.0	35.8	.	3.17
거주시군	천안시	(121)	15.7	52.1	29.8	2.5	3.19
	공주시	(44)	22.7	43.2	31.8	2.3	3.14
	보령시	(43)	11.6	55.8	32.6	.	3.21
	아산시	(79)	24.1	38.0	38.0	.	3.14
	서산시	(59)	23.7	44.1	30.5	1.7	3.10
	논산시	(45)	24.4	28.9	46.7	.	3.22
	계룡시	(35)	20.0	42.9	37.1	.	3.17
	당진시	(56)	19.6	32.1	48.2	.	3.29
	금산군	(28)	17.9	46.4	35.7	.	3.18
	부여군	(26)	19.2	30.8	50.0	.	3.31
	서천군	(20)	10.0	55.0	35.0	.	3.25
	청양군	(22)	13.6	50.0	36.4	.	3.23
	홍성군	(42)	14.3	40.5	42.9	2.4	3.33
	예산군	(39)	2.6	51.3	46.2	.	3.44
	태안군	(37)	2.7	43.2	54.1	.	3.51
거주행정단위	읍	(217)	14.7	44.7	39.2	1.4	3.27
	면	(170)	15.9	42.4	40.6	1.2	3.27
	동	(309)	19.4	43.7	36.6	0.3	3.18

〈 표 125 〉 심각한 양극화 해소위해 가장 많이 양보해야 할 계층

		(사례 수)	기업인 (대기업, 중견 기업)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종사자 (교원 포함)	전문직	종교인	정치인 (선출직 공무원)
[전체]		(1050)	50.4	16.1	7.9	3.9	21.7
성별	남 자	(553)	50.8	16.3	8.1	3.1	21.7
	여 자	(497)	49.9	15.9	7.6	4.8	21.7
결혼여부	기 혼	(778)	47.9	16.6	8.1	4.6	22.8
	미 혼	(272)	57.4	14.7	7.4	1.8	18.8
연령대	20대	(170)	61.2	12.4	3.5	3.5	19.4
	30대	(186)	51.1	15.6	12.4	1.6	19.4
	40대	(234)	50.9	16.2	8.1	6.4	18.4
	50대	(256)	49.2	19.9	6.6	2.3	21.9
	60대 이상	(204)	41.7	14.7	8.8	5.4	29.4
학력	중졸이하	(124)	37.9	15.3	9.7	7.3	29.8
	고졸	(454)	51.1	15.9	7.5	4.6	20.9
	전문대졸	(155)	52.3	16.1	9.7	1.9	20.0
	대졸이상	(317)	53.3	16.7	6.9	2.5	20.5
가구형태	1인	(111)	60.4	16.2	6.3	0.9	16.2
	2인	(265)	42.6	16.2	9.4	6.0	25.7
	3인	(360)	51.9	17.8	8.1	3.1	19.2
	4인 이상	(314)	51.6	14.0	7.0	4.1	23.2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44.1	20.6	7.8	4.9	22.5
	200-400만원 미만	(330)	47.9	14.5	9.4	4.5	23.6
	400-600만원대	(336)	52.7	16.4	8.6	3.9	18.5
	600만원 이상	(282)	52.8	16.0	5.3	2.8	23.0
직업	관리자	(36)	41.7	19.4	2.8		36.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59.4	18.8		3.1	18.8
	사무종사자	(174)	56.3	16.7	8.0	2.3	16.7
	서비스 종사자	(170)	48.2	18.2	8.2	4.7	20.6
	판매종사자	(157)	50.3	15.3	8.3	3.2	22.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40.1	20.4	6.6	6.6	26.3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47.6	22.0	9.8	3.7	17.1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64.3	7.1	11.9		16.7
	단순노무종사자	(29)	44.8	13.8	6.9	6.9	27.6
	주부	(81)	45.7	7.4	14.8	4.9	27.2

	학생	(63)	65.1	7.9	3.2	4.8	19.0
	무직	(32)	56.3	15.6	6.3	3.1	18.8
계층의식	하층	(99)	50.5	20.2	7.1	3.0	19.2
	중하층	(471)	50.3	11.3	10.2	5.1	23.1
	중층	(404)	48.8	20.0	6.4	3.2	21.5
	중상층	(76)	59.2	19.7	2.6	1.3	17.1
	보수	(108)	33.3	14.8	7.4	4.6	39.8
정치성향	중도보수	(257)	48.6	18.3	9.3	1.6	22.2
	중도	(327)	53.2	15.6	7.0	4.9	19.3
	중도진보	(293)	54.6	14.7	8.2	4.8	17.7
	진보	(65)	52.3	18.5	6.2	3.1	20.0
	단독주택	(371)	46.4	17.5	7.0	4.9	24.3
주택형태	아파트	(510)	52.2	14.5	8.4	3.3	21.6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53.8	17.8	8.3	3.6	16.6
거주시군	천안시	(170)	58.2	10.6	8.2	4.1	18.8
	공주시	(67)	58.2	14.9	4.5	3.0	19.4
	보령시	(66)	45.5	15.2	13.6	1.5	24.2
	아산시	(115)	52.2	15.7	11.3	4.3	16.5
	서산시	(85)	56.5	11.8	3.5	1.2	27.1
	논산시	(70)	47.1	20.0	11.4	1.4	20.0
	계룡시	(43)	48.8	11.6	14.0	4.7	20.9
	당진시	(83)	44.6	20.5	8.4	3.6	22.9
	금산군	(46)	50.0	21.7	6.5	6.5	15.2
	부여군	(52)	46.2	17.3	1.9	7.7	26.9
	서천군	(45)	48.9	20.0	4.4	2.2	24.4
	청양군	(36)	50.0	19.4	2.8	8.3	19.4
	홍성군	(64)	45.3	17.2	6.3	4.7	26.6
	예산군	(57)	42.1	17.5	8.8	3.5	28.1
	태안군	(51)	43.1	21.6	7.8	5.9	21.6
거주행정 단위	읍	(322)	50.9	14.6	5.9	5.0	23.6
	면	(284)	44.4	19.7	7.4	3.9	24.6
	동	(444)	53.8	14.9	9.7	3.2	18.5

〈표126〉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수익 일부를 기(초과이익공유제)해 지역상생기금으로 활용에 동의정도

		(사례수)	동의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동의	완전 동의함	평균 (점)
[전체]		(1050)	4.9	8.5	76.2	10.5	3.92
성별	남 자	(553)	4.9	9.9	74.0	11.2	3.92
	여 자	(497)	4.8	6.8	78.7	9.7	3.93
결혼여부	기 혼	(778)	4.9	10.0	77.0	8.1	3.88
	미 혼	(272)	4.8	4.0	73.9	17.3	4.04
연령대	20대	(170)	5.3	2.9	71.8	20.0	4.06
	30대	(186)	4.3	5.9	78.5	11.3	3.97
	40대	(234)	3.4	5.6	79.9	11.1	3.99
	50대	(256)	3.9	12.9	75.8	7.4	3.87
	60대 이상	(204)	7.8	13.2	74.0	4.9	3.76
학력	중졸이하	(124)	7.3	12.1	78.2	2.4	3.76
	고졸	(454)	3.7	7.5	76.9	11.9	3.97
	전문대졸	(155)	7.1	5.2	76.1	11.6	3.92
	대졸이상	(317)	4.4	10.1	74.4	11.0	3.92
가구형태	1인	(111)	0.9	2.7	77.5	18.9	4.14
	2인	(265)	6.0	9.8	77.7	6.4	3.85
	3인	(360)	6.9	9.7	75.0	8.3	3.85
	4인 이상	(314)	2.9	8.0	75.8	13.4	4.00
월 소득	200만원 미만	(102)	4.9	8.8	82.4	3.9	3.85
	200-400만원 미만	(330)	3.3	7.6	76.7	12.4	3.98
	400-600만원대	(336)	5.7	6.5	76.2	11.6	3.94
	600만원 이상	(282)	5.7	11.7	73.4	9.2	3.86
직업	관리자	(36)	8.3	30.6	55.6	5.6	3.5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2)	6.3	18.8	71.9	3.1	3.72
	사무종사자	(174)	2.9	5.7	81.0	10.3	3.99
	서비스 종사자	(170)	5.9	5.3	75.3	13.5	3.96
	판매종사자	(157)	3.8	9.6	77.1	9.6	3.9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2)	5.9	14.5	75.0	4.6	3.78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82)	9.8	8.5	72.0	9.8	3.82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2)		2.4	83.3	14.3	4.12
	단순노무종사자	(29)	3.4	6.9	82.8	6.9	3.93
	주부	(81)	3.7	6.2	79.0	11.1	3.98
	학생	(63)	4.8	1.6	77.8	15.9	4.05
	무직	(32)	3.1		68.8	28.1	4.22
계층의식	하층	(99)	7.1	6.1	77.8	9.1	3.89
	중하층	(471)	4.2	7.9	76.2	11.7	3.95
	중층	(404)	4.0	9.2	76.7	10.1	3.93
	중상층	(76)	10.5	11.8	71.1	6.6	3.74

정치성향	보수	(108)	5.6	8.3	82.4	3.7	3.84
	중도보수	(257)	6.2	12.1	75.9	5.8	3.81
	중도	(327)	4.6	8.3	76.8	10.4	3.93
	중도진보	(293)	4.4	5.5	75.1	15.0	4.01
	진보	(65)	1.5	9.2	69.2	20.0	4.08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4.3	10.2	76.3	9.2	3.90
	아파트	(510)	5.1	9.0	75.1	10.8	3.92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169)	5.3	3.0	79.3	12.4	3.99
거주시군	천안시	(170)	2.9	10.0	74.7	12.4	3.96
	공주시	(67)	4.5	7.5	70.1	17.9	4.01
	보령시	(66)	12.1	7.6	68.2	12.1	3.80
	아산시	(115)	4.3	9.6	74.8	11.3	3.93
	서산시	(85)	3.5	10.6	74.1	11.8	3.94
	논산시	(70)	2.9	4.3	82.9	10.0	4.00
	계룡시	(43)	4.7	16.3	58.1	20.9	3.95
	당진시	(83)	6.0	10.8	74.7	8.4	3.86
	금산군	(46)	8.7	4.3	73.9	13.0	3.91
	부여군	(52)	5.8	3.8	82.7	7.7	3.92
	서천군	(45)	6.7	11.1	75.6	6.7	3.82
	청양군	(36)	2.8		94.4	2.8	3.97
	홍성군	(64)	6.3	6.3	79.7	7.8	3.89
	예산군	(57)	1.8	10.5	82.5	5.3	3.91
	태안군	(51)	3.9	7.8	86.3	2.0	3.86
거주행정 단위	읍	(322)	4.0	7.8	80.1	8.1	3.92
	면	(284)	7.4	10.2	75.0	7.4	3.82
	동	(444)	3.8	7.9	74.1	14.2	3.99

부록5. 사회양극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사회보장 및 소득보장 전문가 의견

1) 소득보장정책 부문

(1)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구분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예: 개인별 월 30만원)
정책설명	불평등과 양극화, 일자리 감소,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조건부 찬성] 보편적 소득보장으로서 전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의 전면 시행은 재원조달, 중복 지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 소득보장정책의 정비 등이 전제되어야함. 전국민 기본소득제의 시행을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별로 접근 필요. 즉 부분 기본소득제(예, 청년기본소득) 도입부터 시작</p> <p>②찬성 (현재의 불평등 위기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 방식의 제도 도입이 가장 최선. 현행 사회보장제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 및 자산의 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한계가 많음)</p> <p>③찬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소득단절로 인한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 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지역화폐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건인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p> <p>④불평등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p> <p>⑤찬성 보편적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평등한 기본소득 보장</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전국민 기본소득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주제임 충남도 차원에서는 대상별, 예를 들어 농어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소득방안 도입</p> <p>②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은 조세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함.</p>

	<p>③전 국민 기본소득제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운 계층이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핀셋 지원이 바람직함</p> <p>④재난기본소득이나 농민기본소득 등 부분 기본소득부터 시행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좋겠음</p> <p>⑤재원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부분적 실행방안으로서 1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만원,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소득지원방안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지역경제 활성화)</p>
<p>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p>	<p>①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논의 불가피</p> <p>①소득보장정책의 조정, 또는 연계,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할 필요가 있음</p> <p>②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조건적 방식의 기본소득은 범주형 기본소득임</p> <p>③기본소득제의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충남처럼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은 기본소득제의 재정설계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p> <p>④기존 복지제도와 병행여부가 쟁점이 되겠지만 건강보험 같은 현물형 복지제도는 유지하고 생계급여 등의 현금형 복지제도와 통합한다면 가능함</p> <p>⑤재원조달이 가장 큰 어려움</p> <p>⑤해결방안은 부가증세</p> <p>⑤지원근거 법률 (조례)필요</p>

(2) 청년기본소득 지급

구분	청년기본소득 지급 (예: 월 10만 원)
정책설명	청년실업과 불안한 일자리, 세대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통해 재정적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지급 필요</p> <p>②찬성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소득이 가장 최선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청년기본소득은 차선택이 될 것임)</p> <p>③반대 청년은 소득에 대한 보장보다는 일자리에 대한 지원 등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정책이 바람직 함</p> <p>④전국민 기본소득제가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부분 기본소득제의 하나로 가능함</p> <p>⑤찬성 청년세대 기본소득 및 자립생활보장</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충남도 차원에서 제도 도입</p> <p>②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 연령이나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p> <p>③충남도 차원에서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청년이 취업 혹은 창업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p> <p>④경기도나 성남처럼 특정 연령대에 시범 실시한다면 그리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p> <p>⑤소득수준이 다소 낮음. 충남도 차원에서는 30만 원 정도로 높여서 지원하는 방안 (청년연령 : 19세~35세 정도)</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방식 등의 구체적인 지급계획, 재원마련 방법 강구</p> <p>②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범주형 기본소득을 실시할 수 있음.</p> <p>③청년취업이나 창업을 충남의 공적재원투자로 추진할 경우 일반 시장에서의 교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이나 창업 직종이나 업종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필요</p> <p>④소비성향이 강한 청년층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음</p> <p>⑤조세정책으로 재원충당</p>

(3) 근로장려금 확대

구분	근로장려금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 지급)
정책설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와 중소기업 취업 촉진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조건부 찬성] 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 지급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장려 및 격차 완화. 중소기업의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접근 필요</p> <p>②반대 (근로장려금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임금격차 완화 기능이 크지 않고, 대기업의 비정규직(하청, 일용 등)도 받음. 자산조사를 수반하는 근로장려금보다는 기본소득 도입이 더 바람직함)</p> <p>③찬성 충남과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대도시 보다는 중소기업이 지역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충남의 지역산업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정책 개발 필요</p> <p>④중소기업 장려금 지급은 해당 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매우 도움이 됨</p> <p>⑤찬성 중소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의 임금격차 완화 지원</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중소기업 취업자의 규모에 따라 충남도 자체적으로 재원마련의 어려움 예상되어 전면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p> <p>①현행 직업계 고3 학생이 중소기업 취업 시 일시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에 추가 지급하는 안을 도입논의 필요</p> <p>②현재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임금 보조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 실효성이 크지 못함.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p> <p>③충남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 분야를 특정하여 취업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p> <p>⑤바우처로 지급</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근로장려금(EITC)은 가구원구성,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시 지급 → 용어정리</p> <p>①중소기업 취업자 장려금을 위한 재원조달 문제</p> <p>③취업자장려금 지원제도 계획 시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p> <p>⑤재원조달의 어려움</p> <p>⑤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 필요</p>

(4) 농어민기본소득 확대

구분	농어민기본소득 확대 (예: 월 10~20만 원)
정책설명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어민의 생활안정 보장을 통해 농어촌의 지속성 보장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❶[찬성] 농어민에 일정소득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조성과 생활 안정 도모</p> <p>❷찬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촌 마을 자체가 살아야 함. 농어민 기본소득보다는 농촌기본소득이 더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국가 단위에서는 부분 기본소득(충분하지는 않으나 모든 사회구성원 대상)을 도입하고, 추가로 직불제 개선 등을 통한 농어민기본소득 혹은 참여소득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함.)</p> <p>❸찬성 충남과 같은 농도의 경우 농업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어민의 기본소득제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불가피</p> <p>❹농어업은 단순한 사업보다 사회공익적 가치가 높음. 이런 시장에서 보상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는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보상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함</p> <p>❺찬성 농어민 기본소득 보장</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❶현행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수당과의 관계설정</p> <p>❶농어민수당을 농어민기본소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방안 모색</p> <p>❷국가 단위에서 농어민 참여소득 등의 정책이 도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충청남도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p> <p>❸농어민기본소득은 농가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보다는 모든 농어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농어민기본소득의 취지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p> <p>❹10만 원 적정</p> <p>❹농어민은 식료품비 등 자금자족 가능하므로 10만원 바우처로 지급</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❶현행 농어민수당은 비정기적 지급을 기본소득으로 월 별 지급</p> <p>❶지급대상 및 규모 산정방식, 지급단위 결정(가구 VS 개인)</p> <p>❶재원확보방안 마련</p> <p>❶재원부담비율(도:시군비) 합의</p> <p>❹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 필요</p>

(5) 최저임금 인상

구분	최저임금 인상 (1시간당 1만 원 이상)
정책설명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추진 필요</p> <p>②찬성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추가적인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 있어야 할 것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몫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최저임금 인상에서부터 비롯될 것임.)</p> <p>③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정책적 측면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반드시 1만 원으로 확대 필요</p> <p>④현 정부의 공약대로 우선 상징적으로 1만원까지 올리고 향후 몇 년간 동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p> <p>⑤찬성 물가상승, 주택가격 상승, 사교육비 상승 등으로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필요</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최저임금의 인상은 법적 사항이며, 중앙정부에서 시행할 사항으로 충남도는 불가능함</p> <p>①현재 시행되고 있는 충남 생활임금의 대상 확대와 점진적 인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③최저임금의 인상은 국가단위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지역차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유지의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p> <p>④일정 매출 이하의 중소 사업장에 실시할 수 있음</p> <p>⑤바우처로 지급</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의 합의 과정이 중요</p> <p>①충남 생활임금의 점진적 인상 및 적용대상의 확대를 위한 재원마련</p> <p>③최저임금 인상 시 중소상공인은 종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p> <p>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 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책적 반대에 대응한 지역차원의 추가적인 정책지원방안 모색 필요(지방세 등의 감면 등 조치)</p> <p>⑤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 필요</p>

2) 사회보장정책부문

(1) 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

구분	기초노령연금 대폭 인상 (예: 월 30만원→50만원)
정책설명	빈곤과 질병, 일자리 부족 문제 등에 대응해 안정적 소득을 보장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조건부 찬성]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점진적 인상 검토</p> <p>②중립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부분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p> <p>③찬성 노인빈곤율이 OECD의 최고인 40%에 육박하고 있는 등 노후빈곤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기초연금의 확대 필요</p> <p>④노후보장은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하고 국민연금과 중층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음</p> <p>⑤반대 노인대상 기초노령연금 이외에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다양함. 주택연금제도 등 빈곤노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 주거급여 등)</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기초연금은 법률에 의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은 충남도 차원에서 실행 불가능함</p> <p>①기초연금 외에 노인대상으로 연금추가지급 또는 수당신설은 사회보장제도협의 조정 대상으로 용이하지 않음</p> <p>②부분기본소득이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주형 기본소득 방식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확장하는 방식도 바람직할 것임.</p> <p>③충청남도에서는 노인의 약 80%가 지원받는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별도의 안정적인 소득원 지원 필요(지역 맞춤형 노인일자리 확대 등)</p> <p>④지역차원의 대상이 아님</p> <p>⑤소득지원보다 여가, 문화지원 등이 바람직</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용어수정: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p> <p>③기초연금 등의 노인 재정지원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막대한 재정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을 초기부터 대규모로 확대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p>

(2) 연금간 격차완화

구분	연금간 격차완화(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등)
정책설명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교원연금 등) 간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동등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공적연금제도의 주된 목적은 노후생활보장에 있음. 따라서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보장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며, 격차완화로 위화감 해소필요성 대두. 그러나 제도 간 연계 및 통일을 위한 사전 법적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해결이 전제되어야 실현가능성이 있음</p> <p>②찬성 (현행 사회보험이 근로연령대의 경제적 격차를 노후에도 반영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은 기여율이 9%이고, 공무원연금은 18%임. 기여 대비 급여인 연금수수는 공무원연금이 더 낮음. 연금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연금의 기여율을 대폭 올리는 것임.)</p> <p>③찬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격차완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저부담 저급여수준을 중부담 중급여 수준으로 확대 필요</p> <p>④연금간 격차완화보다 특수직역 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의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함</p> <p>⑤찬성 은퇴와 동시에 노인소득이 대폭 감소함 연금종류별로 생기는 소득격차 보전방안 필요</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각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법률 개정사항으로 충남도 차원의 실행으로는 불가능함</p> <p>②사회보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음.</p> <p>③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보장의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이 불가피함</p> <p>③하지만 국민연금 등 5대 사회보험을 사실상 준조세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은 다수 국민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p> <p>④지역차원의 대상이 아님</p> <p>⑤연금을 받기 이전(61세에서 65세, 67세 등)의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방안 (퇴직연금 등) 필요</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공적연금제도간 격차완화를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운영요소(보험료, 가입기간, 급여산식 등)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기존 가입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임</p> <p>①공적연금개혁에 대한 장기플랜과 실행방안을 통해 연계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p> <p>①용어수정: 교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p> <p>⑤사회적 합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음. 개인기여(연금납부)를 토대로 연금수준이 결정되기 때문</p>

(3) 아동수당 확대

구분	아동수당 확대 (예: 월 10만원→30만원)
정책설명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양육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조건부 찬성] 아동수당의 확대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급액보다는 적용대상의 확대가 우선되어야함. 현행 아동수당의 적용대상은 만 7세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연령 상향을 추진</p> <p>②중립 (아동을 포함하여 전체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30만원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아동수당이 올라가는 것과 동일한 효과. 아동과 노인에게만 수당을 확대하는 방식보다 전체 사회구성원의 소득을 상향시키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p> <p>③찬성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아동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이 필요함</p> <p>④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보편수당제도인 아동수당을 현실화하여 보편복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p> <p>⑤반대 아동수당은 이미 보편적 수당으로 충분히 지급되며, 저출생 지원정책이 충분함</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아동수당 확대는 충남도 차원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문제임. 보육 및 아동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서비스 확충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p> <p>②부분기본소득이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주형 기본소득 방식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급여를 확장하는 방식도 바람직할 것임.</p> <p>③충남도에서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보다는 빈곤아동이나 다문화아동 등 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재정지원이 필요함</p> <p>④지역차원의 대상이 아님</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아동수당 지급액의 확대는 재원마련대책이 강구되어야할 사항임</p>

(4) 전국민 상병(傷病)수당 지급

구분	전국민 상병(傷病)수당 지급
정책설명	부상과 질환으로 일을 못할 경우 적절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보장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소득손실로 생활보장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도 상병수당도입 논의 필요</p> <p>②찬성 (현재 사회보험에서 상병수당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만 국한되어 있고, 산재 인정률이나 신청률이 낮아 포괄범위가 매우 낮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도입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 사료됨)</p> <p>④공적의료보험을 실시하는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병수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p> <p>⑤반대 고용보험 등의 제도가 있고,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음</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충남도 차원에서 실행할 문제가 아니며, 중앙정부차원의 건강보험제도에서 상병수당 도입논의가 실효성이 있음</p> <p>②상병수당은 사회보험 방식이든 일반조세 방식이든(국가마다 매우 다양) 국가 차원에서 해야 가능한 일이지는 하지만,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서울시가 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음.</p> <p>④지역차원의 대상이 아님</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건강보험법의 개정사항이며,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함</p>

(5) 청년사회진출금 지급

구분	청년사회진출금 지급 (1억 원 정도 일시 지급)
정책설명	세대 간 심각한 자산격차 문제를 해소해 계급사다리를 이어줌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❶찬성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자산격차해소를 위해 자산형성지원제도로써 제도신설의 필요. 그러나 일시 지급 시 대상규모, 성과 등에 관한 관리방안 구체화</p> <p>❷중립 기본소득 없이 기초자산 제도는 생활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기본소득과 함께 도입하는 기초자산 제도는 가능함</p> <p>❸찬성 최근 부동산 값 폭등 등으로 인해 자산형성의 어려움이 있는 청년세대를 위해서는 청년사회진출금 지원이 필요함</p> <p>❹기본소득제와 병행하여 실시된다면 찬성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반대함</p> <p>❺반대(현금 지급) 현금을 주는 것보다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도덕적 해이(현금 준다면, 자동차 구입 등 할 위험이 있음)</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❶청년사회진출금 일시지급제도 신설 외에 청년사회진출을 위한 활동비 지원정책 (월정액)도 검토(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과는 다르게 충남도의 청년사회진출 지원제도 신설)</p> <p>❷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연령대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할 수 있음. 각 지자체의 특성과 욕구를 살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p> <p>❸충남도 차원에서는 청년사회진출금 지원 대상을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보편적 급여로 할 것인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 필요</p> <p>❹지역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귀농인에게 부분적으로 시행은 고려할 만함</p> <p>❺바우처, 지역화폐 등</p> <p>❻30년 임대 18평 아파트 지급 등</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❶적용대상, 자격요건, 지급액 활용의 성과측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p> <p>❷적용대상의 규모와 관련하여 재원조달방안의 실효성 확보 필요</p> <p>❸청년사회진출 지원금의 지급방식을 1회 전액 지원할 것인지 시기의 차이를 두고 단계별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p>

(6)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구분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시
정책설명	임시직, 플랫폼노동직, 농어업 종사자 등 전 국민 고용보험제 실시로 생활안정과 직업전환 기회 제공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완화 및 고용불안정 해소에 기여</p> <p>②찬성 (전국민고용보험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나,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는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성’에 근거한 방식이 아니라 소득보험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할 것임.)</p> <p>③찬성 고용보험은 실업이나 장애로 인한 소득의 단절 시에 안정적인소득원을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p> <p>④특히 현대사회의 플랫폼 노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 실제로는 노동자이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하여 꼭 필요함</p> <p>⑤찬성 기본소득 차원에서 바람직함</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중앙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시범실시 등 단계적 적용을 논의 중임. 충남도 차원에서 제도적 시행은 불가능. 단, 충남도 차원의 고용불안정 계층 규모 또는 대상별로 단계적으로 실업부조적 성격의 수당제도 도입</p> <p>②지자체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할 수는 없으나, 국가가 하지 못하는 고용보험의 역할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시도할 수 있음. 물론 이것이 사회보험 방식으로서는 불가능하겠지만, 지자체의 수당을 도입할 수는 있을 것임.</p> <p>③충남도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취약한 산업부문을 특정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함</p> <p>④지역차원의 대상이 아님</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고용보험료 산정의 합리적 기준 선정 또는 재원조달방식의 형평성 제고</p> <p>⑤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 필요</p>

2. 일자리 사회혁신 및 교육 문화 전문가 의견

1)일자리 및 사회혁신정책 부문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설명	고용과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 생활을 보장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❶찬성 대체로 기업 또는 기관의 일자리를 담보로 갑질의 상황이 많아 사회양극화에 부정적 영향</p> <p>❷원론적으로 찬성, 하지만 다양한 고용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서 맞춤형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을 하여서 공정성 논란과 실질적인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작용 발생</p> <p>❸일률적인 비정규직 전환은 반대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각 조직의 직무 구조와 이와 연관된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합당한 직무가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p> <p>❹(찬) 부문별한 비정규직 양상을 막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개선을 위해 필요</p> <p>❺찬성.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 고용과 복지,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❶순차적 실행 1.도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부터 줄여나가는 방법. 2.기업 정규직 등 확대 조치</p> <p>❷공공기관 중심이 아니라 기업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임.</p> <p>❸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직무 구조 및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비정규직 임금 상승을 위한 공공조달에 있어서 생활임금 조건 강화</p> <p>❹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기준의 명료화 등의 선행 작업이 필요</p> <p>❺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업무에 대한 명확한 상정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손쉬운 업무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자격 소지에 대한 일종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후자의 경우 오히려 고용안정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노사가 우선협상을 통해 자율적 전환을 시도하고 필요시 지자체 단위의 노사정 구조 구축, 협의 하에 매년 정규직 전환 가능한 업종과 인원수를 의무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방법을 고안하고 실행될 경우 인센티브 제공)</p>

	<p>⑤채용시 정규직 채용 확대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들의 업무를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장려. 기 채용된 이들에 대해서는 기간을 설정하고 정규직 전환, 신규필요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p>
<p>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p>	<p>②특수 고용직 노동자의 범위 설정(도급노동자),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성 강화(정규직 의미가 없음), 공정성 확보 방안(경쟁을 통한 선발)</p> <p>③공공조달을 통해 민간 기업 비정규직 임금 인상 및 정규직 축소를 위해서 공공조달법 개정 필요-->사회적가치 공공조달법 도입</p> <p>⑤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자체에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음. 정책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 지자체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근로자에 정규직 전환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기업에 요구하고(이로서 지자체는 안정적 세원을 확보), 거주자는 거주하는 동안 혜택을 누림. 지자체는 지자체 단위에서 줄 수 있는 세제혜택을 고안에 기업에 제안. 정규직 전환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정부에서 세제 혜택 또는 우선 구매 등의 형태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 도입이 필요</p> <p>⑤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역량강화(해당 업무에 대한 기술축적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를 위한 평생교육지원</p>

(2)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구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정책설명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선순환경제를 도모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가진 기업들의 자립을 돕는 일은 장기적으로 공공 및 행정서비스 비용의 절감도..</p> <p>②찬성, 하지만 이미 사회적 경제 관련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차별화된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추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임, 특히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거리를 찾은 사회적 기업가를 찾아야 실제 효과가 있음</p> <p>③찬성함. 사회적경제 조직을 국정과 도정의 동반자로 설정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좋은 공급자'로서 활용할 필요</p> <p>④(찬)특히 산업기반이 약한 충남남부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p> <p>⑤찬성 설립취지를 볼 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함.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실현 하는 기업으로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자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공간 및 초기 경영 시 사회적기업 개척(안착)활동가(가칭)의 파견을 통해 경험이 있는 인력 결합으로 초기 어려움 극복 필요.</p> <p>②지역 특화 사회적 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부분적인 접근임. 사회적 기업의 실패요인인 경영관리 능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사회적기업도 고려할만함.</p> <p>③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금융 활성화</p> <p>④단, 사회적경제 기업이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목적에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목적 하에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p> <p>⑤사회적경제기업 대상 R&D 지원사업 연계 (개별 기업이 R&D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함. 지속적인 상품개발을 고민하고 실험할 수는 있으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기업 R&D는 불가. 공공투자 연구원에 의무 할당제, 또는 각 기업에 적합한 연구기관과 연계를 통해 R&D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p> <p>⑥공공부문 진입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g2b 경쟁시 제한 경쟁이나 가산점 부여 필요.</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개척활동가의 발굴 및 양성 예산, 그들의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예산 문제 등 어려움.</p> <p>②정부가 서비스를 할 경우 비용과 효과와 사회적 기업을 통한 경우에 비교가 필요함, 특히 지속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p> <p>③사회적경제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규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예외 조항 신설 필요-->협동조합 공제기금 허용</p> <p>⑤일반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성과를 분명히 하고 사회적가치 측정을 통해 정량, 정성적 사회기여에 대한 당위성 마련이 필요.</p>

(3) 주4일근무제 실시

구분	주4일근무제 실시
정책설명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나눔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여가를 통해 상상과 창의, 경험치와 정보습득의 기회로 일자리 나눔 뿐 아니라 노동시간 내 집중력&창의적 부가가치 활동 생산.</p> <p>②반대. 유한김벌리와 같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 시장여건, 근로자 숙련 등이 잘 맞아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필요 없음</p> <p>③찬성, 하지만 노동생산성 향상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p> <p>④(반)주4일근무제는 기업운영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정책임.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도 안정적인 일자리 유형이 아니기 때문임</p> <p>⑤조건부 찬성. 주 4일 근무는 준비과정을 거쳐 제도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 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생각됨</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남는 시간에 대한 여가 활동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부분에 대한 지향 및 사례, 모델 등의 제시 필요.</p> <p>②이를 실현하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우수 사례로 만들고 기업 스스로 확산하도록 해야 할 것임, 기업이 규제로 인식할 경우 충남도에서 기업을 쫓아내는 역효과를 만들 수 있음</p> <p>③주4일 전 단계로 기업별 근로시간계좌 저축제 도입</p> <p>⑤제도화 된다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에 경영 상태를 반영한 점진적 적용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주 4일제가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의 대상 근로자 임금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폭을 근로시간 조정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소득 개념에서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지역화폐(상품권 포함)로 보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함, 생산성 향상을 통해 당기 순이익과 연동하여 탄력적 임금 보전책 운영 가능)</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주 4일제 근무가 자칫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자리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속적 이해와 배려의 설득 필요.</p> <p>②중소 중견기업 중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은 정책이 아니더라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임. 경쟁력도 없는 중소기업에 이를 억지로 추진하게 하면 큰 역효과가 있을 것임</p> <p>③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무 규정 삭제 필요</p> <p>⑤주4일근무제는 급여와 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97%가 찬성한다는 조사가 있었을 정도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기업은 수용할 수 없는 현실임. 생산성이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해 실증된 결과는 한정적임. 이런 상황에서 주4일제가 실행된다면 임금 및 노동시간이 조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근무하는 4일 동안 노동강도가 증가하는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p> <p>⑤노사뿐만 아니라 지역 노사정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와 대책마련, 의결과 실행의 구조가 필요</p>

(4)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구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설명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 기회의 확대 및 복지서비스 향상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특히 공동체+통합돌봄 활동가들의 육성 및 배치를 통한 사회적자본의 확대 필요.</p> <p>②반대. 현재 정부는 충분히 공공일자리 확대를 해왔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새로 하는 것은 불필요, 다만 현재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역 맞춤형 접근은 필요함</p> <p>③찬성. 질문이 약간 중복적임.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구분해야 함</p> <p>④(반)공공부문의 단기적인 일자리 확대로 인한 일자리창출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p> <p>⑤찬성.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필요함. 특히 취약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 운영되어야 함</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시범 실시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및 문화사무장, 평생학습코디, 마을자치사무장 등의 확대</p> <p>②공공일자리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와 상쇄효과가 있을 수 있음.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검토필요.</p> <p>③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공공 일자리 사업 개편 필요--> 충남형 사회적 일자리 전달체계 구축 필요(생활임금 보장)</p> <p>⑤세대간의 공감과 사회참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등하교 도우미, 보육서비스 지원, 지역 환경미화, 자율순찰 지원, 도슨트 활동, 취약계층 방과 후 지원, 어린이 복지시설 및 기관 지원 등등 50+ 무직 세대를 위한 기초생활 영유용 일자리 확대 필요)</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예산상으로는 일용직 일자리사업 등의 예산에 대한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데, 생각이 다른 정치 집단 간 힘겨루기 예상.</p> <p>②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권 교체 시 상당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p> <p>③지역 주민들의 원하는 사회서비스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체계 구축 필요</p> <p>⑤정규직은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 안정권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으로 해결</p> <p>⑤취약계층과 저소득 노인층을 우선 선발할 수는 있으나 직업군의 특성상 전문자격 보유자를 우선 선발 할 수 있음</p> <p>⑤65세 이상의 노인 대상</p>

(5)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구분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설명	공동육아, 마을돌봄 등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공익적 기여 활동에 대한 공공부문의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일자리확대와 연계된 부분으로 1인 가구 및 사회적 돌봄의 필요증가에 따른 지원확대는 당연</p> <p>②찬성. 인구감소를 대비하여 기본적인 지역주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p> <p>③찬성. 지역 주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며 보상이 주어지는 공동체 일자리 필요</p> <p>④(찬)사회혁신을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기반이 축진되어 하기 때문에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이라 생각됨</p> <p>⑤찬성. 사회 주산업의 노동연령 감소와 맞벌이 확대에 따른 지역적, 공동체적 대응 필요.</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기존의 택배식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의 자발적 고민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촉진하는 정책 필요.</p> <p>②농업 기계작업 대행업체의 사례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 하지만 소득사업으로 추진은 지양해야함</p> <p>③자원봉사적 공동체 활동에 자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남형 참여소득 제도 도입 고려--> 자원봉사 1시간 당 1 지역화폐 포인트 지급</p> <p>⑤기존의 어린이 교육 및 보육기관 종사자의 노동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위 기관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영역(시간이나 공간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별, 마을별 어린이 케어 거점을 운영 (마을회관, 작은 도서관, 마을 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등을 거점으로 가칭 '놀이 이모', 'WE 그랜마', '우리동네 우리회관' 등)</p> <p>⑤소규모 마을축제 활성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성 축제 기획보다는 마을주민의 중심의 생활형 축제 기획)</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제도적 뒷받침 필요. - 자치법, 공동체법 등</p> <p>①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을 듯함. - 사회공론화 부족</p> <p>②공동체에서 필요한 서비스 혹은 사업 내용과 내부에 활용 가능한 자원과 지원이 필요한 자원을 찾아내어 유형화하고 이를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유연하지만 기본 틀이 있는 사업 구상이 필요</p> <p>③참여소득 재원 마련</p>

(6) 회생 지원 확대

구분	경제적 회생 지원 확대
정책설명	사업실패 또는 신용불량 취약계층에 대해 부채 탕감(감면) 등 경제적 회생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가능성과 기회의 보장 => 잃은 자들의 희망. -> 복지, 인권적 차원 사회적으로도 투자 대비 이익</p> <p>②부분적 찬성. 사업실패 시 불행한 노후를 막을 수 있는 정책과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은 구분이 필요함</p> <p>③찬성. 악성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지원책 필요</p> <p>⑤찬성. 신용보증센터 역할 증대, 신용보증기금과의 사업연계도 필요시 고려</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지역 신탁과 새마을금고, 농협 등과 연계하는 금융상품등의 개발 등</p> <p>②청년 귀농인 중에서 과도한 투자와 관리 능력 부족으로 많은 부채에 시달리는 경우에 지원하면 효과가 있을 것임. 하지만 생계비 대출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한 경우는 회생</p> <p>지원대상에서 구분하여서 복지에서 해야 함</p> <p>③충남형 주빌리은행 운영</p> <p>⑤재도전 업체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하고 컨설팅이 가능한 “(가칭)리 스타트 업” 사업 운영 필요 (단순 자금지원이 아니라 기금과 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재도전의 성공을 위한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업체와 기관이 함께 소생시킨다는 관점이 필요)</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②경제적 회생과 복지적 회생을 잘 구분하여 사업에 반영되어야함,</p> <p>③주빌리은행 재원 마련</p> <p>⑤재도전시 업체의 개성과 특성에 대한 제재나 시정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음.</p>

2) 교육·문화정책 부문

(1)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감면

구분	대학등록금 면제 또는 대폭 감면
정책설명	대학등록금의 면제 또는 대폭 감면을 통해 가계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 보장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정책 찬성 출산율 감소의 상당 부분은 교육비에 대한 심리 또는 가계의 실질적 부담임.</p> <p>②반대. 현재 70% 이상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1위 수준으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거나 질 낮은 일자리를 찾고 있고, 10년째 그대로인 등록금 때문에 대학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대학을 더 많이 가더라도 소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p> <p>③반대. 적성과 관계없이 대학 진학을 하는 인원이 확대되어 현재의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악화될 수 있음</p> <p>④(반) 현재 국가장학금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충남도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됨</p> <p>⑤찬성. 사립학교 등록금 부담이 너무 큼</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순차적 적용을 통해 1차적으로 충남도내 대학 진학을 우선적 적용해 급박한 지방 대학 위기 극복과 연계 제언.</p> <p>②지역내 대학의 재정문제해결 혹은 교육의질 제고를 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대학 교육과 취업과 소득 향상의 선순환 고리를 회복할 수 있음. 기업과 취업 연계형학과 운영 등 일자리와 교육을 연결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 국내 대학이 아닌 일자리가 많고 사업 기회가 많은 개도국 대학에 진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p> <p>③노력에 대한 보상 원칙에 따라 일률적인 대학 등록금 면제 보다는 장학금+청년수당+교통 및 주거 무료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p> <p>④충남도에서 진행한다면 충남고교출신자가 충남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한하여 인구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p> <p>⑤도립대학 지원폭 확대</p> <p>⑤지역내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p> <p>⑤지역내 사립대 업무협약</p> <p>⑤지자체 출연 지자체 장학금 도입 (전반적으로 지역내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연계강화가 필요, 등록금도 문제지만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문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강화” 지원과 연계하여 R&D 부분 지역대학 활용 필요)</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②지역 내 대학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교육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대학도 입학생수 감소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대학의 양적인 감소 속에서 질적인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찾아야 함, 충남도에서 지역 대학 졸업자 채용을 많이 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함</p> <p>⑤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지자체 장학금을 받는 학생, 또는 지원 대상이 되는 학교의 경우 공공서비스, 사회적 서비스 강화로 지역사회에 우수인력의 활동이 환원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방과후나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등과 연계</p>

(2) 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

구분	방과후 학교 국가책임제
정책설명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안정적 노동 및 생활여건을 보장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조건부 찬성, 방과후 과정의 목표는 돌봄과 과도한 사교육문제(국,영,수 보습) 해결 - 교사의 정규직 보장</p> <p>②부분적 찬성. 국가책임제가 아닌 충남 책임제가 적절. 사교육 문제는 온라인 과외의 확산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p> <p>③반대. 방과 후 학교 돌봄 확대는 찬성하나 사교육 문제 해결은 국가 책임제로 해결이 되지 않음</p> <p>④(찬) 시군 혹은 학교별로 격차가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국가책임제로 운영할 경우 안정적인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음</p> <p>⑤찬성. 다만 양질의 프로그램 기획과 전문가 확보가 문제</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일반인들도 수강이 가능한 형식의 느슨한 학습구조로 지역평생학습 또는 문화 예술 교육 연계도 가능. 사례도 있음.</p> <p>②지금도 방과후 학교 활동은 충분함, 하지만 교사의 질적 문제를 해결 할 필요가 있음. 교사가 오랜 기간 학교에 있으면 교사의 자녀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 학교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이를 분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p> <p>③방과후 돌봄을 교육청 소관에서 지자체 소관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사교육 문제는 충남 자체적인 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고려</p> <p>⑤방과 후 시스템 재설계 필요 (‘학교+지역사회’ 연계방안 수립 필요. 즉 교육복지와 지역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하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통합된 시스템 운영이 필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주민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프로그램과 연계 필요)</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 및 예산분담. 관련근거 마련 등 해결 필요.</p> <p>③중앙정부와 협의 필요</p> <p>④면단위 소규모 학교의 경우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밀접하게 관여 되어 진행되는 곳이 있으므로 역할재조정이 필요</p> <p>⑤대상 학생은 신청자에 한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p>

(3) 취약계층 교육 기회 확대

구분	취약계층 교육 기회 확대
정책설명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 보장을 위해 취약 및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교육기본법이 보장하는 고른 교육의 기회.</p> <p>②원론적 찬성,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기 어려움</p> <p>③찬성. 온라인 교육 접근성 향상 및 멘토링 강화</p> <p>④(찬) 사회계층별로 불평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교육기회 확대에 대해 찬성함. 다만, 학령기에 있는 대상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라도 취약 및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함</p> <p>⑤찬성.</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지근거리의 학습멘토제 결합 필요. 산발적 1회성 교육사업들을 엮고 체계적으로 코디 또는 멘토링 해 줄 수 있는 사람의 필요.</p> <p>②현재 교육부의 예산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관련 정책이 상당히 많음. 이와는 차별화된 사업을 구상해야함</p> <p>③높은 수준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고려, 혹은 온라인 학원 교육 수강료 지원 고려</p> <p>⑤일자리 및 사회혁신정책 부문과 연계</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②비슷한 사업의 중첩성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임</p>

(4)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구분	농어촌학교 지원 확대
정책설명	‘인구소멸’로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단 지역현실에 맞게 적용 작은 학교지원과 농어촌학교지원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함</p> <p>②찬성.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연관이 되어야 할 것임. 현재와 같이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교육지원 확대가 의미가 없음</p> <p>③찬성</p> <p>④(찬) 교육환경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농어촌 지역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p> <p>⑤찬성</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극소화된 작은 농촌학교의 경우 - 지역 평생교육과 전략적 결합 및 문해교실 등의 편입 등 마을학교 형식 전환</p> <p>②질 좋은 교육을 귀촌 혹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시작하여서 사람을 끌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p> <p>⑤일자리 및 사회혁신정책 부문과 연계</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교육당국의 학령기 의무교육 등에서의 고유성 침해 등의 여지를 설득하는 부분이 관건</p> <p>②모든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 보다는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충분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함</p>

(5) 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구분	문화·여가 기회 제공 확대
정책설명	사회적 기본권 차원에서 문화와 여가 활동에 대한 기회 제공 확대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주4일 근무와 연계된 내용으로 자아실현과 상상, 창작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생산도 가능. 개인 정서 안정-사회 안정 직결</p> <p>②찬성. 농촌 학교 지원과 같은 맥락에서 매력있는 마을만들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p> <p>③찬성</p> <p>④(반) 바우처, 생활SOC시설 마련,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p> <p>⑤찬성.</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기존의 생애전환, 생활예술지원 등에 아울러 직장 및 시장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현장으로 찾아가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필요 (예:구내식당 게릴라콘서트, 직장복도 갤러리 등)</p> <p>②사람을 농촌 혹은 지역사회에 끌 수 있는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임</p> <p>⑤일자리 및 사회혁신정책 부문과 연계</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공공영역 문화공간 다수 확보 및 확대 중이나 운영 주체 및 예산 마련의 어려움 있음.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위치 및 역할 고민도 일부 필요 .</p> <p>②도시의 문화여가 기회를 카피해서는 효과가 없음. 농촌에 적합한 문화와 여가 기회를 제대로 정의하고 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도시의 삶을 그대로 농촌에 이식한다고 해서 작동하지 않을 것임</p>

(6)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구분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정책설명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소득 지원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특수상황으로 평소보다 더욱 열악한 현실임</p> <p>②찬성. 기회를 잃어 버렸기 때문에 자영업자 혹은 어민 피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단, 코로나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비교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지 정책제로 모두에서 같이 주는 방식은 해서는 안 됨</p> <p>③찬성</p> <p>④(반) 문화예술 분야 보다는 생명, 안전 등 기본권과 관련된 부문의 종사자에 대한 소득지원에 대한 검토 필요</p> <p>⑤찬성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다만 당위성을 가지고 공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할 제도적 방법이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함</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가능하다면 소득활동보다는 창작활동지원 개념과 온택트 관련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 결합 필요.</p> <p>②이미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경우의 상당수가 문화 예술 관련이라서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구체화 할 수 있어야 함</p> <p>⑤지역 기반 공공예술 프로젝트 운영 (지역의 예술가를 활용한 지자체별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도민의 삶 속에 예술이 스며들도록 기획하고 도민 참여 속에 운영. 기존의 미술 장르에 한정된 예술의 영역을 타 장르에까지 확장, 적용함으로 참여 예술가 대상을 넓힐 필요 있음)</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②문화예술인의 실질 소득을 잘 파악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는 지원을 축소하는 등 실태파악이 필요함. 실제로 입사과외 레슨을 하는 경우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음</p> <p>③재원 마련 문제</p> <p>④문화예술인 기본소득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필요</p> <p>④문화예술인의 명확한 범위나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p>

(7)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견

<p>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견</p>	<p>①농촌지역의 경우 - 정보가 빠른 기존 기득권 부농 및 사업화영농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정책이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정보전달 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하기 힘든 소농이나 고령농의 경우 복지정책 이외에 마땅한 정책 지원이 없다고 봄. 이런 분들에게 농촌살이에 특히 부족한 부분인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 - 코로나 상황에서 겨울철 난방비, 농촌사회 대중교통 등의 해결, 현재 운용되는 공공재의 활용 인센티브(마을버스+스쿨버스의 대중교통 결합 / 유희공간의 어르신사업장 / 전통시장 내 취약 계층에 대한 판매 공간 임대 등) 특히 지역 내 신규 에너지 사업 등예의 지분참여 기회 부여 및 이동 가능한 태양광 패널 등으로 작은 규모라도 스스로 쓸 수 있는 에너지농사를 짓게 하는 정책이 추진되면 좋겠음.</p> <p>②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이번 연구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됨.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해 취업 혹은 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데 있음. 앞에서 제시한 모든 정책도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때 작동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판단됨. 교육이 엘리트를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으면 양극화가 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정책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책은 더 이상 확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의 기본적인 역할과 메카니즘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p> <p>③코로나19 시기 더욱 확대된 플랫폼 경제에 대응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협동조합 활성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득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타임뱅크 제도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p> <p>⑤개별 사안들에 대해 각각의 기관과 부서에 논의하고 설계하여 추진하는 단계에서 발전된 사회문제 해결(또는 사회혁신) 플랫폼을 구성 운영 필요. 사안의 특성상 다부처, 다기관 연계가 불가피해 보이며 이에 대해 “논의-의제 발굴-숙의 및 숙성-정책제안” 등을 추진할 체계가 필요</p>
--------------------------	--

3. 주거 부동산 및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의견

1) 부동산 및 주거정책 부문

(1) 토지보유세 강화

구분	토지보유세 강화
정책설명	토지보유에 대한 누진세 도입을 통해 심각한 부동산 소유 격차 완화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투기방지. 자산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로소득 징수는 노동가치를 높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임</p> <p>②찬성: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자산의 격차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p> <p>③찬성: 토지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이고, 이를 통해 부동산이 초래한 불평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음</p> <p>④토지보유에 따른 지대의 공유는 자산불평등의 해법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p> <p>⑤찬성: 토지보유세 강화라는 하나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는 어려우나, 일관된 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임</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절대농지는 제외하여 농업의 규모화 유도</p> <p>①도시민소유,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지방정부역할은 재산세(부동산관련)의 누진 세율체계 강화</p> <p>①영농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농지에 대한 과세비율상향(농업인에게 매도 시 양도세 감면조치 필요)</p> <p>②지금도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율의 누진성 강화를 중앙정부에 건의 할 수 있음.</p> <p>③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조세이므로 충남도에서만 실현하기는 불가능</p> <p>④토지보유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조율에 있어 보유세 강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사회 유익이 되는 소유-운영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 고려 필요</p> <p>⑤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음</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 경쟁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p> <p>①농업인에 대한 역차별문제 상존(도시지역 부동산이 폭등하는 가운데, 농지가격이 하락 혹은 정체될 가능성이 많아 고령영농인의 노후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음.)</p> <p>②지금도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는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에 이를 더 강화하자라는 것인데 최근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됨</p> <p>보유세 강화는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임. 그렇다고 지방세인 재산세 세율결정의 자율성을 달라고 하기에는 지방정부들이 세율인하 경쟁을 할 우려가 있어서 부적절함</p> <p>③보유세는 토지(부동산) 보유자의 조세저항이라는 파고를 넘기가 힘들. 비토지소유자는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심지어 저항하는 형국.</p> <p>④공통자산에 대한 가치공유 차원에서 지역적 공유를 구현할 수 있는 세제정책이 필요하나 국세 중심의 보유세 강화 기조가 갖는 한계 극복 필요</p>

(2) 공공임대주택 확대

구분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설명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공공비축물량이 많아야 집값 안정이 가능 주거비용이 감소하면 노동소득 증가율이 큰 의미가 없어 임금상승억제, 저축률 증가, 소비 진작으로 경제적 활력이 제고될 것임</p> <p>②찬성: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여 더 넓은 계층의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함.</p> <p>③찬성/2019년 3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4.3%에 불과. 재정을 투입하여 계속 늘려야 함.</p> <p>④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지속적 확대 필요</p> <p>⑤찬성.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형편이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20-30%대에 달하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경기도의 따복주택 사례분석 필요</p> <p>①프랑스의 '임대주택쿼터제'를 지역별 사회주택비율을 할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p> <p>①농어촌지역의 경우 대체농지확보를 위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p> <p>②행복주택과 같은 기존 정책을 활용하여 충남도에서 더 주도적으로 투자하여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p> <p>③충청남도개발공사 자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p> <p>④충남도 차원에서는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하여 공실율을 낮추고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야 함</p> <p>⑤충청남도의 경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자나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나간다면, 주거안정과 지역분산,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증가</p> <p>①임대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유입, 지방세 세수감소로 이어져 재정적 부담의 가속화 우려</p> <p>①아울러, 저소득층 증가로 복지비용이 증가되어, Peterson이 말한 도시한계론을 논거로 보면 부유층의 외부유출 가능성 상존</p> <p>②질 좋고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주체에게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므로(공급할수록 손해) 도비가 많이 들며, 국비 유치 노력도 필요함.</p> <p>③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운영은 기본적으로 적자임으로 충청남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p> <p>④중앙주도형 공급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 및 사회주택 등과 같은 대안적 주택공급 주체들의 등장을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함</p> <p>⑤충청남도과 각 시.군이 매칭펀드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지자체 차원의 예산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결국 지역에서 사례를 만들고,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채택되어 국가재정이 투입되게 해야 함</p>

(3) 청년주택 확대

구분	청년주택 확대
정책설명	임대료 감면(지원)과 중장기 임대 보장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와 생활 안정 보장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❶ 절대 찬성 희망과 미래가 없는 세대임. 기득권층과 기성층이 이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음. 경제확장기 시기에 성장한 중장년층과 수축시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기득권층의 경험과 눈높이로 평가해서는 안 됨. 부와 행복의 세대 간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함.</p> <p>❷ 찬성: 청년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수요계층별 주거복지 강화라는 국가 정책방향과도 일치함.</p> <p>❸ 찬성/청년주택은 특히 역세권 및 핵심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p> <p>❹ 청년계층의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청년주택 지원책은 확대되어야 함</p> <p>❺ 찬성. 특히 귀농귀촌하려는 청년들에게 농촌지역의 면소재지 정도에서 장기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❶ 도시지역의 경우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고려해볼 수 있음. 농촌지역은 빈집의 활용을 적극권장하고 청년수당을 지급하여 농촌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함.</p> <p>❷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도 차원의 투자가 필요함</p> <p>❸ 신기술 공법으로 기차역 혹은 전철역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필요</p> <p>❹ 충남의 청년주택 수요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수혜자로서의 위치를 넘어 주택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가는 Co-creator로서의 청년주체 형성 필요</p> <p>❺ 충청남도의 경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자들이나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나간다면, 주거안정과 지역분산, 농촌지역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❶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나 사회적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은 당위성이 있어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됨</p> <p>❷ 어떤 청년들이 수혜 대상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듯. 모든 청년으로 하면 대상은 청년기본소득과 차이가 없는데, 실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청년들도 생길 수 있는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는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p> <p>❸ 도비 등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는 점도 극복해야 함</p> <p>❹ 재정 투입이 필요하므로 우선적 예산 배정이라는 정치적 결단 필요</p> <p>❺ 청년주택문제는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 지역사회에 포용되는 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함</p> <p>❻ 충청남도과 각 시.군이 매칭펀드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지자체 차원의 예산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결국 지역에서 사례를 만들고,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채택되어 국가재정이 투입되게 해야 함</p>

2) 지역균형발전정책 부문

(1) 국회·공공기관 지방 이전

구분	국회·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설명	국회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도모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권력이 장시간 한곳에 집중되면 부패함.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임. 집중에 의한 도시불경제, 과소화에 의한 지방의 불경제를 해소할 수 있음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있어야 청년층이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음</p> <p>②찬성: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국가적 정책 방향과 일치함</p> <p>③찬성: 국회만 이전되어도 수도권 중심성은 상당히 극복될 수 있음.</p> <p>④지역 자립과 자주성 차원에서 공공기관이전형 균형발전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음</p> <p>⑤찬성: 서울 일극 중심을 완화하는 효과가 일정정도는 있을 것임. 그리고 전면적인 균형발전의 그림 속에서 추진되어야만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컨셉이 없음. 수도권으로의 출퇴근 기능을 제외하면 내세울만한 것이 별로 없음</p> <p>①이미 이전한 1차 공공기관과 독립된 업무의 성격이 강하고, 충남도의 지역 발전전략과 유사성이 높은 기관의 유치노력이 필요</p> <p>①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 가령 지원금을 준대해도 양질의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인구를 유치할 수 있으면 경제적 이득이 더 큼</p> <p>②충남도 차원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포신도시 등과 같은 신도시 여건 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p> <p>④확대방안 부정적</p> <p>⑤국가적인 결정사항이므로 충남도에서는 여론형성 정도를 할 수 있을 것임.</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1차 공공기관 이전 시 주요한 공기업들이 위치한 지역에 관련된 2차 이주대상 공공기관이 이주할 가능성이 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할 수 있는 논거가 많지 않음.</p> <p>②아직 약속된 국회이전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치적 또는 그 밖의 다양한 저항이 예상됨. 많은 예산을 들여 신도시 여건을 개선한다고 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보장이 없어 과잉투자 논란이 있을 수 있음.</p> <p>⑤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전체적인 균형발전의 밑그림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p>

(2) 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

구분	지방거점대학 지원 강화
정책설명	지역의 거점 대학(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지역 인재 유출 방지 및 지역발전 도모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른 현실에서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육성에 애로 대학은 교육기능 뿐 아니라 학생정주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문화컨텐츠,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함. 또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과 협력기능을 갖고 있음. 만일 지역대학이 사라지면 위에서 언급한 기능들의 약화가 우려되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됨.</p> <p>②찬성: 수도권 집중의 큰 이유 중 하나가 교육문제이므로, 지역 거점대학을 지원하여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p> <p>③찬성/학문에 열정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 남아 있는 것이 중요.</p> <p>④지방 거점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은 필요함</p> <p>⑤대학내부의 혁신 노력과 병행되어야만 지원정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임.</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지역 내 기업들의 필요한 인력수요파악과 대학교육 과정 매칭을 위한 연계고리가 되어주어야 함. 대학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기업들과 협력에 한계가 있어 가교역할이 필요함.</p> <p>①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창구 마련이 필요. 지역거버넌스 육성, 지역 내 주민민원 해결 등에 대학 내 인재활용방안 검토.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학 등의 평생교육협력방안 마련 등이 필요.</p> <p>①외지에서 온 학생들의 주거, 복지 등의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함. 학생들로 인한 지역활성화 기여도를 고려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음.</p> <p>②충남대와 같은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다양한 지원 필요. 도립대도 지원이 필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선 국립이라도 거점대학의 성장이 필요함. 특히 졸업생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p> <p>③해당 지역 국립대학출신에게 고시(공무원) 선발 할당제 실시</p> <p>④대학타운 형성을 통하여 인재육성, 청년일자리 창출, 주거문제 해결 등의 복합적 솔루션 도입 필요</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학벌위주 사회, 대학의 서열화를 타계할 방법이 없으면 어떠한 지원책도 한계가 있을 것임.</p> <p>①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면 정책적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p> <p>②거점대학을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것은 예산만 투입해서는 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임. 졸업생 취업을 위한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어려움</p> <p>③‘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가 가능</p> <p>④지방소멸 흐름 속에서 거점대학의 유입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 자체만이 아니라 타운 자체의 매력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 필요</p>

(3) 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구분	수도권 기업 투자 규제
정책설명	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 규제를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 방지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의 지역거주가 가능함. 아무리 많은 균형발전정책과 예산이 투입되어도 지방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책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수도권과 지방의 불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 인재유출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지역 상실감 해소.</p> <p>②반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통제하던 규제들이 오랜 기간을 통해 거의 해제된 상태에서 다시 규제를 하자는 주장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큼. 특히 기업 투자를 지금 수준보다 더 규제하는 것은 논란만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됨</p> <p>④수도권 기업의 지방화는 지역의 수용력과 균형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함</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배후도시의 개발권을 주어 이전재원의 확보와 이익을 누리게 해주는 것도 방법임.</p> <p>①중소기업 이전의 가장 큰 애로는 숙소임.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통합기숙사의 마련과 제공도 필요함. (중소기업의 임금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이전으로 인한 별도의 주거비 지출은 직장을 그만두는 원인으로 기업차원에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임)</p> <p>①이전을 확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 및 기업부동산을 충남도가 우선 매입하여 이전비용문제 해결지원. 충남도는 구득한 부동산의 개발과 매각으로 재원 투자효과 발생.</p> <p>④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유익이 되는 기업 유치가 필요</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기업이 수도권에 있어야 기업의 인재확보, 혁신, 협력이 원활한 상황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p> <p>①그 외 금융과 세제지원, 관련규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p> <p>②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정치경제의 중심이 수도권인데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앞세운 방법은 반발을 불러일으켜 실현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을 위주로 시행해야 함</p> <p>④수도권투자규제(억제책)을 넘어 지역투자를 권장하는 정책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p>

(5)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구분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 간 격차 해소
정책설명	천안, 아산, 당진 등 충남 북부권에 치우친 경제 불균형 문제 해소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찬성 충남도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도시중심의 정책개발과 지향으로 인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외발생가능</p> <p>②찬성: 지역 내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p> <p>④지역 내 불균형 문제 해결은 필요한 정책임</p> <p>⑤북부권과 남부권이 과연 어떤 격차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함. 북부권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함.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임</p> <p>⑤충남 남부권이 충남 북부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기는 어려움. 남부권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내발적 발전전략을 아래로부터(읍.면으로부터)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는 에너지자급과 농업.먹거리를 중심에 놓은 지역 발전전략이 필요함.</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충남도 내륙으로의 개발효과가 발생하지 주요한 원인은 개발에 의한 파급효과를 연결해줄 지역과 도시(징검다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큼.</p> <p>①공주 역사 주변 혹은 내륙별 거점지를 집중육성 할 정책마련이 필요.</p> <p>②남부권 시군들 스스로 차별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하는 방법이 현실적임.</p> <p>④충남 이남권 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방안 필요</p> <p>⑤남부권의 시.군이 아래로부터의 내발적 발전전략을 수립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충남연구원과 같은 기관의 지원역할도 필요할 것임.</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공주역사 주변은 입지의 여건도 양호할 수 있음. 개발재원은 개발로 인한 이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 공주역사 주변의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한 상황임</p> <p>②도 차원의 지역별 규제나 인센티브 등 차별적 정책은 시군별로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눈에 띄는 적극적인 정책은 펼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p> <p>④지역내부에서 격차해소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산업 흐름을 담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p>

(6)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월 5~10만원)

구분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월 5~10만원)
정책설명	농어촌주민에게 일정한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 주민 간 소득 격차 완화
정책에 대한 찬반과 그 이유	<p>①절대 찬성 헌법에 명시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리자로서 대응역할의 강화 산업화로 인한 농업, 농촌 주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 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세대 내 형평성 제고 필요) 부유한 일부계층의 소비는 내수시장 진작에 큰 효과가 없음. 작은 돈이라도 다수의 사람에 의해 소비될 경우 그 액수는 증가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며 지역경제도 활성화됨.</p> <p>②반대: 농어촌 주민이 도시 근로자보다 저소득이라는 증거가 필요하고, 농어촌 주민 누구(농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p> <p>③찬성/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했을 때 농민들에게 기본소득 지급은 정당함.</p> <p>④기본소득을 통한 격차해소 전략 필요</p> <p>⑤찬성. 농어촌주민들에 대한 기본소득지급을 지역화폐로 한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임.</p>
충남도 차원의 실행/확대 방안 (전체 혹은 부분적 실행 방안)	<p>①헌법에 명시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중 농촌에 근거하여 다원적 기능의 명료화 및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p> <p>①이를 바탕으로 한 조례제정이 필요.</p> <p>④지역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때에는 기본자산 형성에 대한 전략이 같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p> <p>⑤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역할이 필요할 것임. 도청과 시·군청의 매칭펀드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것임.</p>
예상되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정책관계, 예산, 법률, 조직 등)	<p>①재원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p> <p>①재정의 이중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시민에 대한 역차별문제 제기 발생가능</p> <p>②기본소득이라기엔 금액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현재 있는 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도 대안이 될 수 있음</p> <p>③농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농지투기의 가능성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전용부담금을 강화할 필요. 농촌 기본소득 지급과 농지전용부담금 강화는 동행해야 함</p> <p>④시혜적 기본소득은 정책적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음. 충남기본자산 형성에 따른 충남기본소득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함</p>

(7)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견

<p>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견</p>	<p>①양극화는 산업 간 경쟁력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음. 충남도 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남도 자체의 혁신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p> <p>①무엇보다 소득양극화가 중요한 문제임. 사회통합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의 쇠퇴를 가져와 경기회복지연과 침체로 이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 취약계층은 당연하고 청년들의 소득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p> <p>①농업인과 농촌주민의 경우 부채문제가 심각.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매칭펀드(가령, 10만원 저축하면 공공부문에서 10만원 적립)를 부채상황의 경우에도 적용해줄 필요가 있음. 청년농, 귀농자의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귀농창업이 어려울뿐더러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 어렵기 때문임</p> <p>②기본소득이라기엔 금액이 너무 작아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현재 있는 복지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도 대안이 될 수 있음</p> <p>②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연구임. 다만 부동산 분야는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무엇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정책은 돈이 많이 들어 의미있는 수준으로 공급하기 쉽지 않아 보임.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작더라도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음</p> <p>④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중앙정부 주도형 불평등완화 정책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 지역기반의 충남형 양극화해소 방안을 창의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도 필요해보임. 기본자산 형성을 토대로 기본소득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오너십에 기반 한 경제적 파급력 증대, 지역의 발전역량 강화, 지역투자 확대 등과 같은 지역자산화전략(Community Wealth Building)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p> <p>⑤현재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한 상황에서 부동산불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수도권집중을 완화한다면 지방대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을 펴면, 오히려 지방대도시의 부동산가격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농촌을 중심에 둔 균형발전정책을 펴면서, 인구분산을 통해 주거, 일자리 문제 해결을 꾀하는 것이 현실적임. 그럴 경우 농촌지역에서부터 공공성이 있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p>
----------------------	---

■ 집 필 자 ■

연구책임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진	김용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고승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임다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21-12 · 충청남도 사회양극화 정책평가 및 대응과제 연구

글쓴이 · 박경철, 김용현, 전지훈, 고승희, 임다정

발행자 · 유동훈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1년 12월 31일 / 발행 · 2021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99(대표)

ISBN · 978-89-6124-568-5

<http://www.cni.re.kr>

© 2021.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FAX: 041)840-1159

TEL: 041)840-1114

충청남도 문화유적 조사연구 13-59

WWW.CUI.IG.KI

ISBN:

978-89-6124-568-5